

# 나라살림 「예산개요」

Summary of Budget for FY 2025



# CONTENTS

## 1부

### 2025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및 제안설명

- 제1장**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출에 즈음한  
대통령 시정연설 07
- 제2장**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에 대한  
기획재정부 장관의 제안설명 33

## 2부

### 2025년도 나라살림

- 제1장** 2025년도 나라살림 종합 49
- 1. 재정운용 여건 51
  - 2. 세입 규모 52
  - 3. 지출 규모 58
  - 4. 재정수지 및 국가채무 62
- 제2장** 재정운용 방향 67
- 1. 자원배분 방향 69
  - 2. 중점 추진과제 74
  - 3. 주요 분야별 자원배분 124
- 제3장** 분야별 투자계획 125
- 1. 보건·복지·고용 분야 127
  - 2. 교육 분야 151
  - 3. 문화·체육·관광 분야 158
  - 4. 환경 분야 173
  - 5. R&D 분야 185

6.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	192
7. SOC 분야	205
8. 농림·수산·식품 분야	215
9. 국방 분야	226
10. 외교·통일 분야	232
11.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240
12. 일반·지방행정 분야	253

## 3부

## 2025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b>제1장</b>	<b>2025년도 예산</b>	<b>263</b>
1.	2025년도 예산총칙	265
2.	일반회계 (General Accounts)	270
3.	특별회계규모 및 개요 (Special Accounts)	304
4.	계속비 (Multiyear Expenditure)	306
5.	명시이월비 (Authorized Carryover Expenses)	307
6.	국고채무부담행위 (Debts from National Treasury)	308
<b>제2장</b>	<b>2025년도 기금운용계획</b>	<b>309</b>
1.	기금요약 (Summary of Funds)	311
2.	기금운용규모 및 조성규모 (Size of Fund Management)	313
3.	기금 수입 (Fund Revenues)	314
4.	기금 지출 (Fund Expenditures)	318
<b>별첨</b>	<b>작성자 및 편집자 명단</b>	<b>323</b>
	작성자 및 편집자 명단	325

2025

## 나라살림 「예산개요」



Summary of Budget for FY 2025

# 제 1 부

## 2025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및 제안설명

### | 제1장 |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출에 즈음한  
대통령 시정연설

### | 제2장 |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에 대한  
기획재정부 장관의 제안설명

2025

나라살림 「예산개요」

# 제 1 장

#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출에 즈음한 대통령 시정연설



2025

나라살림 「예산개요」

##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출에 즈음한 대통령 시정연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새롭게 구성된 22대 국회의  
첫 예산 심사를 맞아,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저는 정부의 국정운영 기조와  
그동안의 정책 추진 상황을 말씀드리고,  
이를 토대로 수립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정부 출범 이후 지난 2년 반,  
하루도 마음 편한 날이 없을 정도로  
나라 안팎의 어려움이 컸습니다.

무엇보다, 글로벌 복합 위기로 인해  
우리 경제가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지역 분쟁은  
글로벌 공급망 교란과  
원자재 가격 상승을 불러왔습니다.

국제적인 고금리와 고물가,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지속됐고,  
주요 국가들의 경기 둔화는  
우리의 수출 부진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러한 글로벌 복합 위기는  
우리 민생에 큰 타격이 됐습니다.

정부 출범 당시 물가 상승률이  
6%대까지 치솟았습니다.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은  
물가 상승과 금리 인상으로 인해,  
코로나 팬데믹 시절 못지않게 힘들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대내외의 위기에 맞서,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회복하고  
민생의 어려움을 풀기 위해,  
2년 반을 쉴 틈 없이 달려왔습니다.

시장경제와 건전재정 기초를 정착시키고,  
우리 경제의 체질을 민간주도 성장으로  
바꾸는 데 역량을 집중했습니다.

국가채무를 안정적으로 관리해서  
국가신인도를 지켰고,  
과감하게 규제를 혁파해서  
국가의 성장동력을 되살렸습니다.

징벌적 과세를 완화하여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했고,  
무너진 원전 생태계도 복원했습니다.

또한, 전방위적인 세일즈 외교를 통해  
우리 기업의 운동장을 넓히고  
우리의 경제영토를 확장해 왔습니다.

그 결과, 이제 우리 경제가 위기 극복을 넘어  
새로운 도약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반도체, 자동차를 비롯한  
주력산업의 수출이 살아나면서,  
올해 수출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경상수지 흑자도  
700억 달러 초과 달성이 예상됩니다.

외국인 직접 투자는  
2022년에 최초로 300억 달러를 돌파했고,  
작년 2023년에는 327억 달러를 기록해서  
2년 연속 최대 투자유치 기록을 세웠습니다.

올해도 역대 최대 규모의  
외국인 투자유치가 기대됩니다.

## 제1부

2025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및 제언실명

## 제2부

2025년도 나라살림

## 제3부

2025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중동 빅3 투자유치와 대규모 수주,  
체코 원전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역대 최대 규모의 방산 수출 등  
눈부신 성과도 이어졌습니다.

이에 힘입어 작년 우리의 1인당 국민소득이  
처음으로 일본을 앞섰고,

국제신용평가사 스탠다드앳퍼어스는  
2026년 우리의 1인당 GDP가  
4만 달러를 넘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지난 10월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 결정은,  
우리 경제가 살아나고 있음을 보여주는 확실한 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처럼 경제가 다시 살아나고 있지만,  
민생의 회복 속도는  
기대에 못 미치는 것이 사실입니다.

정부는 국민의 삶 구석구석까지  
경기 회복의 온기를 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물가를 잡기 위해 특단의 대책을 펼쳐서,  
물가 상승률을 2%대에서  
이제 1%대로 안정시켰습니다.

주택시장을 안정시켜서  
주거비 부담을 덜어드리고 있습니다.

기업의 역동성을 높이고  
노사법치와 노동약자 보호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결과,  
일자리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작년 15세에서 64세 평균 고용률은  
69.2%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고,  
실업률 역시 2.7%로  
역대 최저를 달성했습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국민들의 자산 형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금투세 폐지, 증시 밸류업 프로그램 등  
금융시장 활성화 정책들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다양한 금융 지원과 함께  
재기 지원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미래의 주역인 청년 세대가  
마음껏 공부하고 일하며  
꿈을 이뤄갈 수 있도록,  
교육과 주거를 비롯한 계층이동의 사다리를  
한층 내실 있게 보강하고 있습니다.

제1부

2025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및 제안설명

제2부

2025년도 나라살림

제3부

2025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어려운 분들의 삶을 돌보는 약자복지도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노인과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돌봄 국가책임제를, 역대 어느 정부보다  
폭넓고 두텁게 실현해 가고 있습니다.

민생 회복의 지름길인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여는 데도,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기회발전특구, 교육발전특구,  
도심융합특구, 문화특구의  
‘지방시대 4대 특구’를 도입해서,

대규모 투자유치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 정주 여건 개선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민생을 최우선에 두고,  
경기 회복의 온기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정부는 우리 외교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데도 힘을 쏟아왔습니다.

무엇보다, 흔들리던 한미동맹을 바로 세워  
글로벌 포괄 전략동맹을 구축했습니다.

또, 작년 4월의 워싱턴 선언을 토대로  
한미 일체형 확장억제 시스템을 가동해  
대북 핵억지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했습니다.

무너진 한일관계를 복원하고,  
이를 바탕으로 역사적인  
한미일 캠프 데이비드 협력 시대를  
열었습니다.

한미 연합연습을 정상화하고  
한국형 3축체계를 구축하여,  
강력한 힘에 의한 평화를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출범 이후  
세계의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외교를 펼쳐왔습니다.

한반도와 동북아 외교를 넘어,  
외교의 지평을 글로벌 차원으로 확장했습니다.

앞으로 정부는 굳건한 한미동맹과  
긴밀한 한미일 삼각 협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을  
실현해 나갈 것입니다.

기후 위기, 개발, 디지털 분야의  
국가 간,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역할과 기여를 강화하겠습니다.

최근의 국제 안보 상황과  
북한과 러시아의 불법 군사 공조는  
우리 안보에 큰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모든 가능성을 점검해서  
철저하게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안심하시도록,  
더욱 튼튼하고 강력하게  
안보를 지켜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의 번영을 계속 이어가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열어가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우리 사회의 구조개혁입니다.  
특히, 우리는 지금 저출생 고령화라는  
미증유의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생산인구가 감소하고  
노동 공급 축소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구조개혁을 통해  
사회 전반의 생산성을 높여야만 합니다.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연금개혁, 노동개혁, 교육개혁, 의료개혁의  
4대 개혁은, 국가의 생존을 위해

당장 하지 않으면 안되는  
절체절명의 과제들입니다.

정부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4대 개혁을 반드시 완수해 낼 것입니다.

먼저,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에 온 힘을 쏟고 있습니다.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등  
의료개혁 4대 과제를 마련했습니다.

당면한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과  
「비급여·실손보험 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는 한편,

향후 5년간 30조 원 이상을 투입하여  
의료개혁 과제를 차질 없이 뒷받침하고,  
‘지역완결적 필수의료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연금개혁은 현재 세대와 미래세대,  
모두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민생 과제입니다.

정부는 세대별 간담회, 방문 인터뷰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국민의 의견을 충실히 수렴하여,  
지난 9월 정부 차원의 단일한 연금개혁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정부 案은 논의의 시작이자 기준점입니다.

국회 논의 구조가 조속히 마련되어  
빠른 시일 내에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고,  
법제화가 되길 기대합니다.

노동개혁의 속도도 높일 것입니다.

정부는 출범 이후  
노사법치를 일관되게 확립하여  
노동시장의 체질을 개선하였습니다.

대규모 불법파업이 사라졌고,  
근로손실일수가  
역대 정부의 1/3 수준으로 줄어들었으며,  
노조회계공시를 통해 투명성을 높였습니다.

이제, 국민의 일자리 기회를 넓히는  
노동제도 유연화에 박차를 가해야 합니다.

연공서열에서 직무와 성과 중심으로  
임금체계를 개선해 나가고,  
개인별로 다양한 근무 형태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노동약자보호법’ ‘공정채용법’과 같은 노동개혁 입법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교육개혁도 내실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이들과 학부모들의 만족도가 높은  
늘봄학교를, 올해 2학기부터  
전국 초등학교 1학년으로 확대했습니다.  
내년에 초등학교 2학년으로 확대하는 등  
단계별로 6학년까지 대상을 넓혀서,  
아이 돌봄을 국가가 책임지는  
‘퍼블릭케어 시대’를 완성하겠습니다.

AI 디지털교과서, 지역 혁신 중심 대학지원체계 (RISE) 등  
융합형 미래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노력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이러한 4대 개혁과 함께,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과제가 있습니다.

바로, 인구 위기 극복입니다.

제1부

2025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및 제안설명

제2부

2025년도 나라살림

제3부

2025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정부는 지난 6월 인구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청년들이 원하는  
일-가정 양립, 양육, 주거  
3대 핵심 어젠다를 중심으로  
‘저출생 추세 반전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정부 역량을 총결집하기 위해  
대통령실에 저출생수석실을 신설하고,  
인구 위기 대응 컨트롤타워가 될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반전의 희망이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8월 출생아 수가 같은 달 기준으로  
14년 만에 최대 증가율을 기록했고,  
혼인 건수도 1981년 통계 작성 이래  
8월 기준 최대 증가율을 기록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청신호가  
확실한 추세 전환으로 자리 잡도록  
더욱 힘을 쏟겠습니다.

실효성 높은 현장 맞춤형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시행하는 한편,

과잉 경쟁을 해소하고 지방시대를 열어,  
우리 사회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바꾸나갈 것입니다.

추세 반전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지금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정부와 국회, 국민이 한마음이 되어  
일치된 노력을 펼쳐야만,  
인구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인구전략기획부가 신속히 출범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정부조직법 등 관련 법안들을  
조속히 처리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고령화로 인한 인구 구조 변화와  
대내외 환경의 불확실성 등으로,  
앞으로 재정 운용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하지만, 준비된 난관은  
충분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예상되는 어려움에 대비하여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에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

정부의 건전재정은 단순히 허리띠를 졸라매자는 뜻이 아닙니다.

느슨했던 부분, 불필요한 낭비는  
과감히 줄이고,  
민생 회복과 미래 준비라는  
국가 본연의 역할에  
제대로 투자하자는 것입니다.

정부는 흔들림 없는 건전재정 기조 아래,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치열하게 고민하여  
내년도 예산안을 마련했습니다.

2025년도 총지출 규모는  
올해보다 3.2% 증가한 677조 원으로,  
관리재정수지 적지규모는  
정부가 추진 중인 재정준칙 범위 내입니다. (GDP 대비  $\Delta 2.9\%$ )

국가채무비율은 48.3%로 전년 대비 0.8%p  
소폭 증가하는 수준으로 억제하였습니다.

재정사업 전반의 타당성과 효과성을 재검증하여 총 24조 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했습니다.  
이를 통해 마련된 재원은  
약자복지, 미래대비 투자 등  
국가가 해야 할 일에  
집중적으로 투입했습니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을 통해  
첫째, 맞춤형 약자복지 확충,  
둘째, 경제활력 확산,

셋째, 미래 준비를 위한 경제 체질 개선,  
넷째, 안전한 사회와 글로벌 중추 외교 등 4대 분야를 중점 지원할 것입니다.

먼저, 모든 복지사업 지원의 기준이 되는 중위소득을 내년에도  
역대 최대인  
6.4% 올려서, 약자복지 확충 기초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우리 정부는 생계급여를  
연평균 8.3%로 대폭 인상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도 4인 가구 생계급여액은  
올해보다 월 12만 원이 늘어납니다.

우리 정부 3년 동안 생계급여가  
월 41만 5천 원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양육비 미이행으로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 가정을 돕기 위해,  
‘양육비 국가 先지급제’를 도입하여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을  
최장 18년간 지원하겠습니다.

1천만 어르신에 대해 역대 최대인 110만개의 일자리를 공급하는 등  
어르신들의 안정적 노후생활을 뒷받침하겠습니다.

국가장학금을 올해보다 50만 명 늘어난 150만 명에게 지원하고,  
원거리 진학 저소득 대학생에 대해 주거안정 장학금 월 20만 원을 신설하여,

우리 청년들이 돈 걱정 없이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임대주택, 분양주택 등 공공주택을  
역대 최대인 25만 2천호 공급하여  
서민층 주거 안정도  
튼튼하게 뒷받침하겠습니다.

우리 경제의 활력을 높이는 노력도  
더욱 적극적으로 펼쳐가겠습니다.

누적된 고금리, 고물가로 힘들어하시는  
소상공인들께, 사업 여건에 따른  
전주기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정책자금 상환기간을 최대 5년까지 연장하고, 영세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연간 30만 원의 배달비를 지원하여  
경영 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

유망 소상공인들이 소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스케일업 자금  
5천억 원을 새롭게 지원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채무 조정에 쓰이는 새출발기금을 40조 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폐업과 취업 준비, 구직까지 아우르는 단계별 특화 취업프로그램을 통해,  
재도전을 적극 뒷받침할 것입니다.

아울러, 온누리상품권을

역대 최대인 5조 5천억 원 발행하여, 소상공인의 매출 기반을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농어민의 소득안정을 위해

내년부터 수입안정보험을  
전면 도입하겠습니다.

산지와 소비자 간 온라인 거래를

활성화해서, 농수산물 물가를 안정시키고  
농가 소득도 늘리겠습니다.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미래 대비 투자도 중점 지원하겠습니다.

R&D 투자를 선도형으로 전면 개편하고, AI, 바이오, 양자 등

3대게임체인저와 12대 전략기술을 중심으로 역대 최대인  
29조 6천억 원을 투입하겠습니다.

대통령 과학장학금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한국형 스타이펜드(stipend)’를 도입하여,  
청년 연구자들의 안정적 연구 환경을 뒷받침하겠습니다.

국가전략산업이자 안보 자산인

반도체 산업 투자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저리 대출 4조 3천억 원을 제공하고,

제1부

2025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및 제안설명

제2부

2025년도 나라살림

제3부

2025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도로와 용수 등 관련 기반 시설을  
적기에 확충하여,  
반도체 초격차 확보에 앞장서겠습니다.

‘원전산업 성장펀드’를 조성하여  
원전 생태계의 복원과 도약을 이끌고,

방산 수출의 모멘텀을 키우는  
‘K-방산 수출펀드’도 조성하겠습니다.

우리가 직면한 구조적 문제 해결에도  
재정의 역할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우선, 저출생 추세 반등을 위해  
재정지원 패러다임을  
전면적으로 혁신하겠습니다.

그간의 단순한 현금성 지원에서 벗어나,  
실제 육아 현장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양립, 돌봄, 주거의  
3대 핵심 분야를 중점 지원하겠습니다.

필요한 시기에 충분히 육아에  
시간을 할애할 수 있도록,  
배우자 출산휴가를 20일로 늘리겠습니다.

육아휴직 급여를 대폭 인상하고,  
동료 업무 분담 지원금도 신설하겠습니다.

갑작스럽게 아이가 아프거나 해서  
긴급하게 도움이 필요한 경우,  
65개 상생형 어린이집을 통해  
긴급 돌봄서비스도 제공할 것입니다.

아울러, 신혼부부와 출산 부부의  
주거 부담 완화를 위해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요건을  
2억 5천만 원으로 상향하겠습니다.  
보건의료는 국방, 치안, 재해예방과 같이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국가의 필수 기능입니다.

우리 국민이  
대한민국 어느 지역에 살더라도  
양질의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필수의료 확충, 지역의료 복원에  
재정의 역할을 강화하겠습니다.

의료인력 확충, 필수진료 제공,  
지역의료 육성,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필수의료 R&D 등  
5대 분야를 중심으로  
재정을 집중투자하여,

지역의료와 필수의료를 살리고  
미래 의료수요에 철저히 대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금년 8천억 원 수준의 재정 지원을  
내년 2조 원 수준으로 대폭 확대하고,

향후 5년간 국가 재정 10조 원을 포함하여,  
총 30조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청년들의 미래를 위한 투자도  
더욱 과감하게 늘릴 것입니다.

청년들의 헌신이 자긍심이 되도록  
내년부터는 사병의 봉급을  
병장 기준 월 205만 원으로 인상하겠습니다.

초급간부 수당 등 각종 처우를 개선하고,  
장병들의 복무 환경도 꼼꼼히 살피겠습니다.

청년 일자리를 늘리는 데도  
관심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청년 ‘일경험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특화 취업 지원, 일자리 도약 장려금, 기술 연수의 3종 패키지를 신설해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글로벌 중추국가 외교를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겠습니다.

내년 경주에서 APEC 정상회의가  
개최됩니다.

20년 만에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APEC이  
큰 성과로 이어지도록,  
전방위적인 지원을 펼치겠습니다.

또한, 내년도 공적개발원조(ODA)를  
6조 7천억 원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아프리카, 중앙아시아 등 성장 잠재력이 높은 주요 국가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해외 긴급구호와 식량원조 지원을 통해 글로벌 현안 해결에 기여함으로써,

글로벌 중추국가 외교 실현의  
디딤돌이 되게 할 것입니다.

공급망 확보를 비롯해서,  
우리의 경제 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주요 국가와의 전략적 협력 기반도 강화하겠습니다.

국내 기업과 청년들의 해외 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우리 경제영토도 더욱 확장하겠습니다.

목숨을 걸고 자유 대한민국을 찾아온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보호와 지원도 획기적으로 강화할 것입니다.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금을  
50% 인상하고, 탈북민 자녀들의  
교육과 취업을 세심하게 지원하겠습니다.

북한인권 국제회의 개최를 비롯하여,  
북한인권에 대한 국내외 공감대 확산에도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자유 통일 대한민국 비전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감대와 지지를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국민들께서 언제 어디서나 마음 편히 생활하실 수 있도록,  
안전한 생활환경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극한 호우와 같은 재난에 대비하여  
풍수해 종합정비사업을 확대하고,  
전기차 배터리 화재를 막는  
스마트제어 충전기 보급도 늘리겠습니다.  
또한, 최근 청소년들까지 확산되고 있는  
마약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관련 예산을 올해보다 20% 이상 늘렸습니다.

단속을 보다 강화하는 것은 물론,  
치료, 재활, 예방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첨단 탐지 장비를 확대하고,  
국제공조를 강화해서,  
마약 유입을 원천 차단하겠습니다.

딥페이크, 보이스피싱과 같은  
첨단, 지능 범죄 대응 역량도  
더욱 강화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정부가 마련한 내년 예산안은  
민생 지원을 최우선에 두고,  
미래 도약을 위한 체질 개선과 구조개혁에 중점을 두어 편성했습니다.

내년 예산이 적기에 집행되어  
국민께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법정시한 내에 예산안을 확정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정부는 빈틈 없이 집행을 준비하여,  
민생 현장에 온기를 전달하고  
우리 사회가 직면한 위기를 극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11월 4일

대통령 윤석열

제1부

2025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및 제안설명

제2부

2025년도 나라살림

제3부

2025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2025

나라살림 「예산개요」

# 제 2 장

#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에 대한 기획재정부 장관의 제안설명



2025

나라살림 「예산개요」

##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에 대한 기획재정부 장관의 제안설명

존경하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정 위원장님과 더불어민주당 허영 간사님,  
국민의힘 구자근 간사님을 비롯한  
예결위 위원님 여러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입니다.

오늘 저는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서민 생활 안정과  
대한민국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한 투자에  
최우선 가치를 두었습니다.

최근 우리 경제는  
그간 어려웠던 내수가  
설비투자과 소비를 중심으로 회복되고 있으나,

상반기 회복을 견인했던 수출의 일시적인 조정과  
건설부문의 누적된 수주 감소 영향으로  
기대했던 성장강도에는 미치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앞으로 고물가와 고금리 완화, 실질소득 증가가  
내수 여건을 뒷받침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소상공인, 저소득층 등 취약부문의 어려움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으며,

주요국 경기여건 및 중동 사태와 함께  
미국 대선 결과에 따른  
금융·외환시장 변동, 국제 통상환경 재편,  
국내기업 산업환경 불확실성에도  
빈틈없는 대응이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하지만 위기(危機)는  
위험(危險)과 기회(機會)가 합쳐진 말이라고 합니다.

정부는 최근의 대내·외 경기 불확실성이  
우리 경제에 위협요인이 아닌  
훗날 변화와 성장의 기회로 평가될 수 있도록

어려운 취약부문을 먼저 챙기고  
대외 여건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가는 한편,  
새로운 성장 기반 구축에도 힘쓰겠습니다.

### 【 내년 예산안의 주요 특징 】

이를 실현하기 위한 내년 예산안의 특징은  
다음 3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내년 예산안은 민생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필요한 분에게 필요한 방식으로 지원하는  
“책임있는 민생해결”을 지향하며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층에게는 두터운 소득안전망을,  
청년에게는 일자리와 교육·주거 사다리를 제공합니다.  
소상공인에게는 경영부담 경감과 제도약을 지원하고,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공공주택을 역대 최대 수준으로 공급하겠습니다.

둘째,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 제고와  
구조개혁을 전폭적으로 지원합니다.

우리 경제의 예인선 역할을 하는  
반도체 등 첨단·주력산업과 수출이  
경제 성장을 지속 견인할 수 있도록 경쟁력을 강화하고,  
미래도전형 R&D 투자 확대를 통해  
경제의 근본적 성장 기반도 확충하겠습니다.

저출생 대응 및 필수·지역의료 복원과 같은  
우리 사회가 당면한 구조적 문제 해결에 필요한 예산도  
과감히 확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재정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면서도  
국가채무 증가 속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등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 노력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국가채무 증가는

제1부

2025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및 제안설명

제2부

2025년도 나라살림

제3부

2025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미래세대에 빛을 넘기고  
우리 경제의 대외신인도를 떨어뜨려  
국가 경쟁력을 후퇴시키기 때문입니다.

재정 운용 방식을 효율화하기 위해  
전 부처가 머리를 맞대고  
성과가 낮은 사업은 과감하게 정비하여  
절감된 재원을  
필요한 곳에 아낌없이 투자하였습니다.

이러한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 노력은  
지난 10월 세계 3대 채권지수인 세계국채지수(WGBI)에  
편입되는 성과로 이어진 바 있으며,  
앞으로도 국제기구와 신용평가사에서 높이 평가하는  
우리 경제의 강점이 되어줄 것입니다.

\* 무디스 국가신용등급 국제 총괄(24. 10월).

“한국의 재정건전화 정책을 높게 평가하고, 최근의 세계 국채지수(WGBI) 편입도 한국의 이러한 노력이 반영된 결과”

## 【 재정 총량 및 4대 투자중점 】

이제 내년도 예산안 상세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 총지출은  
전년대비 3.2% 증가한 677조 4천억 원으로,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금년  $\Delta 3.6\%$ 에서 내년  $\Delta 2.9\%$ 로 축소되었으며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48.3%로  
전년대비 0.8%p 증가한 안정적 수준으로 유지될 예정입니다.

4대 투자 중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더 나은 내일을 위한 약자복지입니다.

우선,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더 두터운 보호를 위해  
연간 생계급여액을 141만 원 인상합니다.  
그 결과 최근 3년간 연평균 인상액은 166만 원으로,  
지난 정부 연평균 인상액 47만 원의 3배 이상이 됩니다.

노인 지원 예산은 24조 4천억 원을 투입합니다.  
노인인구 1천만 시대를 맞아  
노인일 자리를 역대 최대 규모인 110만 개로 확대하고,  
평생교육 바우처를 8천 명에게 새롭게 지원하겠습니다.

장애인 지원 예산은 6조 8천억 원을 투입합니다.  
최중증 발달 장애인에 대한 긴급돌봄센터를 신설하고,  
장애인이 일을 통해 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고용장려금을 75만 6천 명까지 확대하겠습니다.

양육비를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가정을 위해서는  
양육비 국가 선지급제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우리 사회의 복지가  
일회성 지출이 아닌  
지속가능한 자립의 기반이 되도록  
사회이동 사다리 구축에도 힘썼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자립을 돕기 위해  
최대 150만 원의 자활성공금을 지급하고,  
저소득층이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희망저축계좌의  
정부 지원금을 2배 확대(월평균 10→20만 원)하겠습니다.

교육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국가장학금을 100만 명에서 150만 명으로,  
근로장학금을 14만 명에서 20만 명으로 확대하고,  
연간 최대 240만 원의 주거안정장학금을  
4만 2천 명 대상으로 새롭게 지원합니다.  
서민 주거생활 안정을 통해  
더 나은 내일을 설계할 수 있도록  
공공주택도 역대 최대 수준인 25만 2천 호 공급하겠습니다.

둘째, 경제활력 확산 뒷받침입니다.

글로벌 경쟁 구도가 치열해지고 있는  
인공지능(AI), 바이오(Bio), 반도체(Chips) 등  
이른바 ABC+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에  
6조 2천억 원을 투입합니다.

특히, 시장수요 전환기에 직면한 반도체 산업이  
흔들림없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내년 반도체 저리대출, 도로 등 핵심 인프라 구축,  
팹리스 특성화대학 2개소 육성 등을 포함하는  
1조 7천억 원의 재정지원을 시작으로,  
26조 원 규모의 금융·세제·재정·인프라 지원

종합 대책을 차질없이 이행하겠습니다.

차세대 AI 생태계 선점을 위해  
핵심 원천기술 등 초격차 기술 개발과  
1,000억 원 규모의 AI 혁신펀드 조성을 지원하는 한편,  
바이오 분야에서도 기초-임상-상용화에 이르는  
전주기·임무형 기술개발을 확대합니다.

국가 연구개발(R&D) 예산은  
AI반도체, 양자, 첨단바이오 등 3대 게임체인저와  
12대 전략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역대 최대인 29조 6천억 원을 투자하여  
우리 경제의 성장 동력을 한층 더 높ی겠습니다.

수출과 건설부문의 조속한 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한 예산도 확충하였습니다.

새로운 수출동력 확충을 위해  
1,000억 원 규모의 원전산업펀드와  
400억 원 규모의 방산수출펀드를 조성하고,  
EU 탄소무역 장벽 등에 대응한 녹색금융 공급 규모도  
6조 4천억 원에서 8조 9천억 원으로 확대합니다.

지역 건설투자 활성화를 위해  
미분양 우려가 있는 PF 사업장을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공공지원 민간임대 리츠 물량을  
1만 호에서 1만 5천 호로 확대하고,  
하수도·농촌정비 등 소규모 건설 인프라에도

7조 3천억 원을 투입합니다.

아울러 건설업계 핵심 애로사항인  
공공부문 공사비 기준을 합리화하고,  
민간투자도 향후 5년간 30조 원 더 확대하겠습니다.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소상공인 지원 예산도  
역대 최대인 5조 9천억 원으로 확대합니다.

경영여건 진단을 토대로  
경영비용 부담이 큰 소상공인에게  
금융지원 3종 세트와 배달·택배비 30만 원을 지원하고,  
유망 소상공인이 소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5천억 원의 스케일업 자금을 신설하겠습니다.

또한 그간 누적된 채무를 조정할 수 있도록  
새출발기금을 30조 원에서 40조 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재도전을 위한 특화 취업 프로그램을 신설하는 한편,  
점포 정리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철거비용도 인상하여 지원하겠습니다.

자연재해 속에서도 농가 소득이 안정될 수 있도록  
내년부터 수입안정보험을 전면 도입하고,  
농업직불금 관련 예산도  
역대 최대규모인 3조 4천억 원까지 확대하겠습니다.

셋째, 미래를 준비하는 체질개선입니다.

정부가 저출생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한 가운데  
지난 18개월 연속 감소하던 출생아 수가  
금년 7월부터 2개월 연속 증가로 반전된 것은  
희망적인 소식입니다.

이러한 추세가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는 저출생의 핵심 요인으로 꼽히는  
일·가정 양립, 양육·돌봄, 주거  
3대 핵심 분야를 획기적으로 지원하여  
젊은 세대가 안정적으로 가정을 꾸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육아휴직 급여 상한을  
150만 원에서 최대 250만 원으로 인상하고,  
아이돌봄서비스 지원기준 및 지원비율을 확대하며,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요건을  
1억 3천만 원에서 2억 5천만 원 이하로 완화하겠습니다.

향후 인구전략기획부 출범과 연계하여  
저출생 사업의 범주를 재정립하고,  
성과가 높은 사업에 재정투자를 더욱 집중하겠습니다.

또한, 미래세대 주역인 청년들이  
더 높은 곳을 향해 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 하겠습니다.  
자산형성과 일자리에 관심이 많은 청년층을 위해

분양가의 80%까지 저리로 대출하는  
청년 주택드림 대출을 새로 출시하고,  
목돈 마련을 위한 청년도약계좌의 정부 매칭한도를  
소득에 관계없이 월 70만 원까지 확대하였으며,  
청년 일경험 규모도 5만 8천 명까지 확대하였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어디에서나  
질 높은 의료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향후 5년간 국가재정 10조 원과 건강보험을 합쳐  
총 30조 원 이상을 의료개혁에 투입하겠습니다.

우수한 의료인력 양성을 위해  
의대 교육환경 개선 및 교육 발전프로그램에도  
4천억 원을 투입하고,

필수과목 전공의 수련비용 및 수당에 4천억 원,  
필수의료 시설·장비 확충에 2천억 원 등  
재정 투자를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17개 권역책임의료기관과 35개 지방의료원의  
의료 인프라 개선에도 3천억 원을 투입하여  
지방에서도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역의료를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안전한 사회와 글로벌 중추 외교입니다.

첨단·지능형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민생범죄 근절에 4천억 원을 투입합니다.

딥페이크 대응 예산을 전년대비 40% 확대하고,  
보이스피싱 사건에 10분 내로 대응할 수 있도록  
조기경보시스템을 도입하겠습니다.

자연재해 대응에도 5조 2천억 원을 투입합니다.  
특히, 35개 풍수해 종합정비 사업 구역에 대해서는  
관계부처가 동시에 일괄·집중 투자하는 방식을  
새롭게 도입하여  
재난에 대한 효율적 예방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군 처우개선에도 6조 2천억 원을 투입합니다.  
군 복무가 청년의 자긍심이 되도록  
병 봉급을 내년부터 월 205만 원으로 인상하고,  
간부 처우개선을 위해 내후년까지 모든 간부에게  
1인 1실 숙소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또한 보수규정을 개정하여 내년에도  
초급간부 봉급을 3년 연속 추가 인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적개발원조(ODA) 예산도  
역대 최대인 6조 7천억 원까지 확대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을 높이겠습니다.

### 【마무리 발언】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내년은 우리 경제의 회복 흐름을 안착시켜

민생과 내수 각 부문에 체감되는 온기가 돌게 하고,  
역동경제와 구조개혁 본격화로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제고해야하는  
중요한 시기가 될 것입니다.

내년 예산안에 반영된 민생·경제 사업들이  
조속히 집행되어 미래세대에게 희망을 전하고  
경제 회복을 가속화 할 수 있도록  
법정 기한까지 내년도 예산안을 확정해주시기를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

정부 역시 국회가 확정해주신 예산이  
내년 1월 초부터 신속히 현장에 전달될 수 있도록  
집행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재정과 금융·규제개혁 등 모든 정책수단을 총동원하여  
민생 안정과 경제 성장에 힘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11월 6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최 상 목**

# 제 2 부

## 2025년도 나라살림

### | 제1장 |

2025년도 나라살림 종합

### | 제2장 |

재정운용 방향

### | 제3장 |

분야별 투자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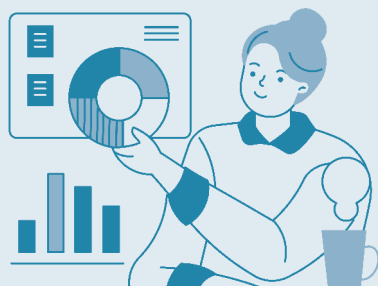
2025

나라살림 「예산개요」

# 제 1 장

# 2025년도 나라살림 종합

1. 재정운용 여건
2. 세입 규모
3. 지출 규모
4. 재정수지 및 국가채무



2025

나라살림 「예산개요」

01

재정운용 여건



2025년 세계경제는 주요국의 통화긴축 기조가 완화됨에 따라 완만한 성장세가 예상된다. 다만, 미국 신정부 출범에 따른 정책전환 이후 주요국의 통상·산업정책, 글로벌 교역·공급망 환경 변화 등이 세계 성장·교역경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표 1-1] 세계경제 성장률 추이와 전망

(단위: 연간, %)

	세계	선진국				신흥국			
			미국	유로	일본		중국	브라질	러시아
2023년	3.3	1.7	2.9	0.4	1.7	4.4	5.2	8.2	3.6
2024년	3.2	1.8	2.8	0.8	0.3	4.2	4.8	7.0	3.6
2025년	3.2	1.8	2.2	1.2	1.1	4.2	4.5	6.5	1.3

자료 : IMF(2024, 10.)

금년 우리경제는 내수를 중심으로 고물가·고금리 등 제약요인이 완화됨에 따라 점차 개선 소지가 있으나, 건설경기 회복 시점과 국내 정치상황에 따른 가계·기업심리 영향 등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다. 수출은 반도체 업사이클 조정, 경쟁 심화, 향후 통상환경 불확실성 확대 등 감안 시, 2024년보다 증가폭이 둔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표 1-2] 2025년 경제 전망

(단위: 연간, %)

	2023년	2024년 <sup>o</sup>	2025년 <sup>o</sup>
경제성장률(%)	1.4	2.1	1.8
소비자물가(%)	3.6	2.3	1.8

자료 : 2024~2025년 경제전망(기획재정부 경제정책방향)

## 02 | 세입 규모



### 2-1 총수입 : 2024년 대비 6.4% 증가한 651.6조원

예산과 기금을 합한 나라전체 총수입은 2024년 보다 6.4% 증가한 651.6조원으로 전망된다.

예산수입은 2024년(395.5조원) 대비 5.9% 증가한 418.7조원 수준이다. 예산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국세수입은 2024년(367.3조원) 대비 4.1% 증가한 382.4조원 수준으로 예상된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수입이 390.5조원, 특별회계 수입이 28.2조원으로 전망된다.

기금수입은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사회보장성기금 수입 확대 등에 따라 2024년(216.7조원) 대비 7.4% 증가한 232.8조원으로 예상된다.

[표 2-1] 2025년 총수입 전망

(단위: 조원, %)

구 분	2024년 (A)	2025년 (B)	증감률
			(B-A)/A
총 수 입	612.2	651.6	6.4
■ 예 산	395.5	418.7	5.9
(국 세)	(367.3)	(382.4)	(4.1)
• 일반회계	367.3	390.5	6.3
• 특별회계	28.2	28.2	0.1
■ 기 금	216.7	232.8	7.4
(사회보장성기금) <sup>1)</sup>	123.8	135.6	9.6

1) 국민연금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고용보험기금,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 참고

## 총수입이란 ?

재정수입은 회계·기금별로 독립적으로 설명할 수도 있고, 회계·기금을 모두 합한 총수입으로 설명할 수도 있다.

우리나라의 중앙재정은 1개의 일반회계, 5개의 기업특별회계, 16개의 기타특별회계 및 67개 기금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모든 회계와 기금의 수입을 단순합산할 경우 회계간 전출입 금액 등을 중복계상하여 실제의 재정수입 전체보다 커지는 문제가 발생한다. 총수입은 중앙재정의 실제 수입규모를 파악하기 위해 회계·기금간 내부거래 등을 제외하고 산출하는 것으로 사실상 IMF가 국제적 비교를 위한 공통 기준으로 제시하는 통합재정 작성방식과 거의 같은 개념이다.

$$\text{총수입} = \text{일반회계수입} + \text{특별회계수입} + \text{기금수입} - \text{내부거래} - \text{보전거래}$$

여러 기업으로 구성된 그룹이 그룹전체의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 기업간 내부거래를 제외한 연결재무제표를 만드는 것과 유사하다고 이해할 수 있다. 즉, 각각의 회계, 기금을 개별기업의 재무제표로 본다면 총수입은 그룹 전체의 연결재무제표와 같다고 볼 수 있다.

내부거래 등을 제외하는 이유를 보다 상세히 설명하면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수입을 단순 합계할 경우 정부 내부거래를 중복 계상하여 실제 수입보다 과대 계상된다. 예를 들면, 100원의 조세수입을 일반회계에 계상하고 이를 기금으로 전출하는 경우, 일반회계 세입은 100원, 기금 수입도 100원이지만 총수입은 내부거래(100원)을 제외한 100원만 계상하여야 실질적인 정부 수입을 정확히 나타낼 수가 있다.

또한 국채발행 수입·차입금 등도 총수입 계산시 제외된다. 국채발행 수입 등은 정부의 수입과 지출의 차(재정수지)를 보전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실질적인 정부수입으로 보기 힘들기 때문이다.

본 장에서는 정부 전체 수입규모를 종합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총수입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고 따라서 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 수입은 내부거래 등을 제외한 것이다. 제3부에서는 회계·기금별로 독립된 규모를 설명하기 위해 내부거래 등을 포함한 총계 개념으로 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 수입을 나타내고 있다.

## 2-2 예산 수입 : 2024년 대비 5.9% 증가한 418.7조원

예산 수입은 회계별로 일반회계 세입, 특별회계 세입으로 나뉘고, 수입 원천별로는 소득세·법인세 등 조세를 기반으로 하는 국세수입과 벌금·부담금 등 세외수입으로 구분할 수 있다.

### 일반회계 세입 : 2024년 대비 6.3% 증가한 390.5조원

일반회계 세입은 일반회계 국세수입과 일반회계 세외수입으로 구성된다. 2024년 일반회계 국세수입은 2024년(356.1조원) 대비 4.4% 증가한 371.8조원으로 전망되며, 일반회계 세외수입은 2024년(11.2조원) 대비 67.1% 증가한 18.7조원 수준으로 예상된다.

2025년 일반회계 국세수입은 2024년 대비 4.4% 증가한 371.8조원으로 전망된다. 국세수입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내국세 수입은 2024년 대비 5.1% 증가한 338.1조원으로 전망된다.

일반회계 세외수입은 경상이전수입(벌금·가산금 등) 및 재산수입(출자배당수입 등) 등 정상적인 국세 외 수입으로서, 2024년 대비 67.1% 증가한 18.7조원으로 예상된다.

[표 2-2] 2025년 일반회계 세입 전망

(단위: 조원 %)

구 분	2024년 (A)	2025년 (B)	증감률
			(B-A)/A
합 계(Ⅰ+Ⅱ)	367.3	390.5	6.3
■ 국세(Ⅰ)	356.1	371.8	4.4
• 내국세 <sup>1)</sup>	321.6	338.1	5.1
• 관세	8.9	8.4	△5.6
• 교통·에너지·환경세	15.3	15.1	△1.4
• 교육세	6.2	6.0	△2.0
• 종합부동산세	4.1	4.1	0.3
■ 세외수입(Ⅱ)	11.2	18.7	67.1

1) 소득세·법인세·상속증여세·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증권거래세·인지세 등

특별회계 세입 : 2024년 대비 0.1% 증가한 28.2조원

2025년 특별회계 세입은 2024년(28.2조원) 대비 0.1% 증가한 28.2조원으로 전망된다.

특별회계 세입은 주세·농어촌특별세 등 국세와 융자회수·부담금 등 자체수입으로 구성된다. 2024년 특별회계 세입 중 국세는 2024년(11.2조원) 대비 △5.1% 감소한 10.6조원으로 전망되며, 자체수입은 2024년(17.0조원) 대비 3.6% 증가한 17.6조원으로 전망된다.

[표 2-3] 2025년 특별회계 세입 전망

(단위: 조원, %)

구 분	2024년 (A)	2025년 (B)	증감률
			(B-A)/A
합 계(Ⅰ+Ⅱ)	28.2	28.2	0.1
■ 국세(Ⅰ) <sup>1)</sup>	11.2	10.6	△5.1
■ 자체수입(Ⅱ) <sup>2)</sup>	17.0	17.6	3.6

1) 주세·농어촌특별세 / 2) 각종 부담금(환경개선부담금 등), 융자회수, 수수료 등

2-3 기금 수입 : 2024년 대비 7.4% 증가한 232.8조원

2025년 기금 수입은 2024년 대비 7.4% 증가한 232.8조원으로 전망된다. 이 중에서 사회보장기여금은 4.6% 증가한 96.5조원, 융자원금 회수는 9.6% 증가한 37.0조원, 이자수입 등 기타수입은 9.6% 증가한 99.3조원에 이를 전망이다.

기금 수입은 크게 사회보장기여금, 융자원금 회수, 기타수입으로 구분할 수 있다.

국민·사학연금의 연금기여금과 고용·산재보험 보험료로 구성되는 사회보장기여금은 2024년 대비 4.5% 증가한 96.5조원으로 전망된다.

중소기업 등에 융자한 자금을 만기에 회수하는 융자원금 회수규모는 2024년 대비 9.6% 증가한 37.0조원으로 예상되며, 이자수입 등 기타수입은 재정지출 확대에 따른 적자성 채무 증가, 금리인상 등으로 인해 2024년 대비 9.6% 증가한 99.3조원에 이를 전망이다.

[표 2-4] 2025년 기금수입 전망

(단위: 조원 %)

구 분	2024년	2025년	증감률
합 계(Ⅰ+Ⅱ+Ⅲ)	216.7	232.8	7.4
■ 사회보장기여금(Ⅰ)	92.3	96.5	4.5
■ 융자원금 회수(Ⅱ)	33.8	37.0	9.6
■ 이자수입 등 기타(Ⅲ)	90.6	99.3	9.6

기금 유형별로는 사업성 기금은 주택도시기금 및 중소벤처기업창업및진흥기금 만기도래 융자원금회수 증가 등으로 2024년 대비 5.2% 증가한 61.0조원, 사회보험성 기금은 국민연금기금의 기타재산이자수입 증가 등으로 8.9% 증가한 159.6조원, 계정성 기금은 복권기금의 복권판매수입 증가 등으로 0.5% 증가한 12.2조원 수준으로 전망된다.

[표 2-5] 2025년 기금유형별 수입 전망

(단위: 조원 %)

구 분	2024년	2025년	증감률
합 계(58개)	216.7	232.8	7.4
■ 사업성 기금(48개)	58.0	61.0	5.2
■ 사회보험성 기금(6개) <sup>1)</sup>	146.6	159.6	8.9
■ 계정성 기금(4개) <sup>2)</sup>	12.1	12.2	0.5

1) 국민연금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고용보험기금,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공무원연금기금, 군인연금기금

2) 양곡증권정리기금, 공적자금상환기금, 복권기금, 공공자금관리기금

참고로 앞서 설명한 기금 수입 232.8조원은 통합재정 관점에서의 기금 수입으로서, 국회에서 확정된 67개 전체 기금의 수입(기금운용규모) 955.0조원과는 차이가 있다. 이러한 차이의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금운용계획상의 수입에는 회계·기금 등 정부 내부간 거래, 민간차입금, 이미 기금으로 전입되어 여유자금으로 운용되던 것을 회수하는 여유자금회수 등 실질적인 의미에서의 수입으로 보기 어려운 항목들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제외한 자체수입만을 반영한다.

둘째, 금융성 기금 및 외국환평형기금은 순수한 재정활동이라기보다는 금융활동으로 분류하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통합재정 관점에서의 총수입에서는 제외한다.

따라서 통합재정 관점에서 예산과 기금을 합한 정부전체의 총수입을 산정할 때에는 58개 기금의 자체수입만을 포함한다.

## 03 | 지출 규모



### 3-1 총지출 규모 : 2024년 대비 2.5% 증가한 673.3조원

2025년도 총지출은 673.3조원으로 2024년 본예산 대비 2.5% 증가한 규모이다.

2025년 총지출은 2024년 예산 대비 2.5% 증가한 673.3조원이다. 민생안정과 우리 경제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꼭 필요한 분야에는 집중 투자하면서도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지출효율화를 병행하였다.

예산 총지출은 447.4조원으로 2024년(438.3조원) 대비 2.1% 증가하였다. 이 중 일반회계는 2.5% 증가한 365.3조원, 특별회계는 0.4% 증가한 82.1조원이다.

기금 총지출은 2024년 대비 3.5% 증가한 225.9조원이다.

[표 3-1] 2025년 총지출 규모

(단위: 조원 %)

구 분	2024년 (A)	2025년 (B)	증감률
			(B-A)/A
총 지 출	656.6	673.3	2.5
■ 예 산	438.3	447.4	2.1
• 일반회계	356.5	365.3	2.5
• 특별회계	81.7	82.1	0.4
■ 기 금	218.4	225.9	3.5



## 참고

## 총지출 규모란 ?

정부의 재정규모는 포괄범위 및 회계기준에 따라 ① 통합재정규모(IMF 기준), ② 총지출 규모, ③ 일반정부 재정규모 등으로 정의될 수 있다.

통합재정규모는 예산·기금 등 정부부문 지출규모에서 채무상환 등을 차감한 순수한 재정활동의 규모를 말한다.

☞ **통합재정규모 = 경상지출 + 자본지출 + 순융자(융자지출 - 융자수입)**

총지출 규모는 국민의 입장에서 느끼는 정부의 지출규모를 뜻하며, 2005년부터 재정운용계획 수립시 우리 정부의 재정규모 통계로 사용하고 있다.

총지출 개념은 국제적으로 재정규모를 분석하기 위한 보조지표로 활용되고 있으며 국민의 입장에서 재정을 이해하기 쉽다는 점에서 도입하여 사용하고 있다. 즉, 정부가 국민에 대해 재정적 측면에서 미치는 영향을 여과 없이 전달할 수 있는 개념인 것이다.

총지출 규모는 통합재정규모가 순수한 재정활동 규모를 측정하기 위하여 융자거래와 기업특별회계를 순계 개념으로 파악하는 것과 달리 총계 개념으로 파악하므로 통합재정규모보다는 항상 규모가 크다.

일반정부 재정규모는 중앙정부·지방정부 및 비영리공공기관의 모든 재정활동을 포함하는 것으로 각국은 국민계정 작성기준 (System of National Accounts)에 따라 작성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한국은행이 통계를 작성하고 있으며, OECD에서 각국의 공식적인 통계를 취합·발표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기존에 한국은행이 1993 SNA 기준에 따라 자체적으로 일반정부 통계를 작성해 왔으나, 재정통계 개편안을 마련(2011.9월 국무회의)하여 정부의 국제기구 제출용 재정통계와 한국은행 통계기준을 일치시켰다. 개편안에 따르면 정부 포괄범위는 일반정부가 기준이 되며, 제도단위 여부\*와 시장성 기준\*\*등에 따라 정부기능을 수행하는 민간관리기금과 비영리공공기관이 포함된다.

\* 제도단위 : 자율적인 의사결정체계 및 독립적 자금운용계정 보유

\*\* 원가보상률(판매액÷생산원가)이 50% 이하이면 일반정부, 초과하면 공기업으로 분류

### 3-2 예산지출 규모 : 2024년 대비 2.1% 증가한 447.4조원

2025년 예산지출 규모는 2024년 대비 2.1% 증가한 447.4조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2.5% 증가한 365.3조원, 특별회계는 0.4% 증가한 82.1조원이다.

일반회계는 어려운 세입여건에도 생계급여 인상, 노인일자리 확대 등 약자복지에 중점 투자하여 2024년 예산 대비 2.5% 증가한 365.3조원 규모로 편성하였다.

특별회계는 기타특별회계 16개와 기업특별회계 5개의 총 21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2024년 예산 대비 0.4% 증가한 82.1조원이다.

예산의 경우 총지출 개념과는 별도로 예산총계에서 예산회계 내부 간 및 계정 간 거래를 제외한 예산순계 개념을 사용하기도 한다. 예산순계의 2024년 예산 대비 지출증가율은 4.4%이다.

[표 3-2] 2025년 예산지출 규모

(단위: 조원 %)

구 분	2024년 (A)	2025년 (B)	증감률
			(B-A)/A
■ 예산지출	438.3	447.4	2.1
• 일반회계	356.5	365.3	2.5
• 특별회계	81.7	82.1	0.4
■ 예산순계	488.6	510.1	4.4

3-3 기금지출 규모 : 2025년 대비 3.5% 증가한 225.9조원

2025년 기금지출 규모는 2024년 대비 3.5% 증가한 225.9조원으로 이 중 사회보장지출은 9.1% 증가한 83.5조원이다.

기금사업비는 2024년 대비 2.6% 증가한 196.6조원이고, 이 중 사회보험성 기금사업비는 수급자 증가에 따른 국민연금 급여지출 확대 등으로 2024년 대비 8.6% 증가한 114.9조원이다.

한편, 기금운영비는 2024년 대비 2.1% 증가한 1.9조원이고, 차입금이자상환은 2024년 대비 10.3% 증가한 27.4조원이다.

[표 3-3] 2025년 기금지출 규모

(단위: 조원, %)

구 분	2024년 (A)	2025년 (B)	증감률
			(B-A)/A
합 계(59개) (사회보장지출 <sup>1)</sup> )	218.4 (76.6)	225.9 (83.5)	3.5 (9.1)
■ 사업비	191.7	196.6	2.6
• 사업성 기금(49개)	78.0	76.2	△2.4
• 사회보험성 기금(6개) <sup>2</sup>	105.9	114.9	8.6
• 계정성 기금(4개) <sup>3</sup>	7.8	5.5	△29.3
■ 기금운영비	1.8	1.9	2.1
■ 차입금이자상환	24.9	27.4	10.3

1) 사회보장성기금(국민연금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고용보험기금,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의 지출  
2) 국민연금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고용보험기금,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공무원연금기금, 군인연금기금  
3) 양곡증권정리기금, 공적자금상환기금, 복권기금, 공공자금관리기금

## 04

## 재정수지 및 국가채무



## 4-1 재정수지

일반회계·특별회계 및 기금을 포함한 2025년 통합재정수지는  $\Delta 21.7$ 조원의 적자가 예상되며, 사회보장성 기금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Delta 73.9$ 조원 적자로 전망된다.

2025년 통합재정수지는 GDP 대비  $\Delta 0.8\%$  수준( $\Delta 21.7$ 조원) 적자이고 사회보장성 기금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GDP 대비  $\Delta 2.8\%$ ( $\Delta 73.9$ 조원) 적자로 예상되어, 2024년 통합재정수지  $\Delta 1.8\%$ ( $\Delta 44.4$ 조원) 및 관리재정수지  $\Delta 3.6\%$ ( $\Delta 91.6$ 조원)에 비해 개선되었다.

정부는 약자복지, 경제활력 확산, 미래대비 체질개선, 국민안전 등 재정의 필수적 역할은 지속하면서도,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한 재정건전성 관리노력을 병행해 나갈 계획이다.

[표 4-1] 재정수지

(단위: 조원)

구 분	2024년 (A)	2025년 (B)	증감
			(B-A)
■ 통합재정수지(Ⅰ)	$\Delta 44.4$	$\Delta 21.7$	22.7
(GDP 대비, %, %p)	$\Delta 1.8$	$\Delta 0.8$	0.9
• 사회보장성기금 수지(Ⅱ)	47.2	52.1	4.9
■ 관리재정수지(Ⅰ-Ⅱ)	$\Delta 91.6$	$\Delta 73.9$	17.8
(GDP 대비, %, %p)	$\Delta 3.6$	$\Delta 2.8$	0.8

**참고****관리재정수지란 ?**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 중 사회보장성기금수지를 제외한 재정수지를 말한다. 사회보장성기금은 국민연금, 사학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기금과 고용보험기금을 포함한다.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사회보장성기금의 흑자는 연금 등 장래 지급에 대비하여 적립되고 있으므로 재정의 건전성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수지를 제외할 필요가 있게 되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국민연금 등이 시행 초기단계로 구조적으로 대규모 흑자를 실현하고 있으며, 실제 국가채무 증가와의 연관성 등을 감안할 때 관리재정수지가 재정건전성을 측정하는 지표로서 유용성이 인정된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02년부터 통합재정수지와 함께 관리재정수지를 발표하고 있다.

## 4-2 국가채무

2025년 국가채무는 1,273.3조원(GDP 대비 48.1%)으로 추정된다. 이는 주로 일반회계 적자보전용 국채 증가(82.8조원) 등에 기인한다.

2025년 예산의 국가채무 전망치 1,273.3조원 중에서 향후 국민들의 부담으로 상환해야 하는 적자성 채무는 69.1% 수준인 879.5조원이며, 나머지 30.9% 수준인 393.9조원은 채무에 상응하는 외화자산, 용자채권 등 자산을 보유한 금융성 채무이다.

적자성 채무는 향후 조세 등 실질적 국민부담으로 상환해야 하므로 총지출 관리 등을 통해 발행규모 및 상환일정을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증가 속도를 완화시켜 나갈 계획이다.

금융성 채무는 외평기금과 주택기금의 채무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외평기금 채무는 외환시장 안정용 국채로서 현재 외화표시 외평채와 국고채로 구성된 자금에 의한 채무로 구분되며, 한국은행 예치금, 외화위탁자산 등 대응자산을 보유하고 있어 순수하게 국민부담으로 돌아가는 적자성 채무와는 그 성격이 다르다.

주택도시기금 채무는 서민주거 안정용 국민주택채를 발행하고, 대출금 형태의 대출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점에서 금융성채무로 구분된다. 정부는 금융성채무에 대해서도 재정의 추가부담을 최소화 하면서 채무 상환이 가능하도록 대응자산 관리 노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표 4-2] 국가채무\*

(단위: 조원, %)

구 분	2023년 결산	2024년 본예산	2025년 본예산
■ 국가채무 (GDP대비, %)	1,126.8 (46.9)	1,195.8 (47.4)	1,273.3 (48.1)
① 적자성 채무	726.4	792.3	879.5
• 일반회계 적자보전	660.1	733.3	824.6
• 공적자금 국채전환 등	66.4	59.0	54.8
② 금융성 채무	400.3	403.5	393.9
• 외환시장 안정용	251.0	253.4	238.2
• 서민주거 안정용 등	149.4	150.1	155.7

\* 2024년, 2025년 본예산 국회 확정 기준

2025년 예산의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48.1%이며, 정부는 지출혁신, 세입기반 확충 등을 통해 2028년말까지 50%대 초반 수준을 목표로 관리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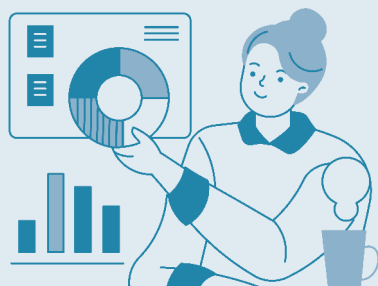
2025

나라살림 「예산개요」

# 제 2 장

## 재정운용 방향

1. 자원배분 방향
2. 중점 추진과제
3. 주요 분야별 자원배분



2025

나라살림 「예산개요」

# 01 | 자원배분 방향



2025년 예산은 (1) 더 나은 내일을 위한 약자복지, (2) 경제활력 확산, (3) 미래를 준비하는 체질개선, (4) 안전한 사회 및 글로벌 중추외교 네 가지 정책분야에 중점을 두었다.

## 1-1 더 나은 내일을 위한 약자복지

먼저, 더 두텁고 더 넓은 기초생활보장을 위해 기준중위소득을 3년 연속 역대 최대인 +6.42% 인상한다. 생계급여액은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11만 8천원, 연간으로 환산시 +141만원을 인상한다. 또한, 의료급여 보장성 강화를 위해 건강생활유지비를 월 6천원에서 1만 2천원으로 2배 확대하며, '20년 이후 동결된 주거급여 수선유지비도 전년대비 29% 대폭 인상한다.

장애인 지원예산은 2024년 6.4조원에서 2025년 6.8조원으로 확대한다. 가족들의 부담을 덜고 국가책임을 높일 수 있도록 최중증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도 2개소 신설한다. 뿐만 아니라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원인원을 63.3만명에서 75.6만명으로 확대하여 근로기회도 늘린다.

노인 일자리는 노인 인구의 10% 이상으로 확대하여 역대 최대인 110만개를 공급한다. 경로당 냉난방비와 양곡비 지원 단가도 각각 6만원, 21만원씩 인상해 돌봄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활기찬 노후생활을 위한 노인 전용 평생교육바우처(연 35만원)도 신설한다.

저소득층 등 고용취약계층의 일자리 지원도 강화한다. 자활근로 인원을 확대하고 급여도 3.7% 인상하는 한편, 탈수급시 최대 150만원의 자활성공금도 지급할 계획이다. 저소득층 대상 희망저축계좌 정부지원금도 월평균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하여 취약계층의 자산형성도 보다 두텁게 지원한다.

교육·주거사다리를 구축하고 문화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장거리 통학 기초·차상위 대학생 대상으로 월 20만원의 주거안정장학금을 신설하고, 저소득 대학생 대상 근로장학금 지원인원도 14만명에서 20만명으로 확대한다. 공공주택은 역대 최대인 25.2만호 공급하여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지원한다. 취약계층의 통합문화이용권을 기존 13만원에서 14만원으로 확대하고, 문화소외지역 대상 박물관·미술관 지역순회도 지원하여 문화격차도 해소할 계획이다.

## 1-2 경제활력 확산

소상공인 대상으로 그간 누적되었던 금융부담 완화를 위한 2조원 규모 전환보증 중도상환 수수료 지원, 대환대출 프로그램 지원, 정책자금 상환연장제도 지원대상 및 연장기간 확대 등 금융 3종 세트를 지원한다. 영세 소상공인의 배달·택배비 최대 30만원 지원을 신설하고, 소상공인들의 매출신장을 위해 온누리상품권도 5.5조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로 발행한다. 취약 소상공인들의 재기 지원을 위한 새출발기금 규모도 30조원에서 40조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점포철거비 지원단가도 25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인상한다.

농어민들의 소득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수입안정보험을 전면 도입하고, 면적직불금 단가를 제도 도입 이후 최초로 인상(+5%)하는 등 직불금 예산을 3.1조원에서 3.4조원으로 대폭 확대한다. 농어촌 경쟁력 제고를 위한 스마트팜 등을 신규 지원하고, 농촌공간정비를 통해 정주여건도 개선한다. 또한, 농수산물 물가안정을 위해 농산물 비축 물량을 28.6만톤에서 33.4만톤으로 확대하고, 농산물 직거래 용자도 70억원 확대한다.

선도형 R&D개혁과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 R&D시스템을 개편한다. AI·바이오·양자 등 3대 게임체인저에 대한 기술주권 확립을 위한 예산을 2.7조원에서 3.4조원으로 대폭 확대하고, 젊은 연구자 지원을 위해 석박사를 지원하는 한국형 Stipend도 신설한다. 연 500만원의 이공계 석사 장학금 도입 및 연구장려금 지원대상 확대를 통해 R&D 신진연구자 지원을 확대한다.

우리경제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ABC+ 첨단산업 지원도 강화한다. AI 혁신펀드를 1천억원 규모로 신규 조성하고, 보건 난제 해결을 위해 한국형 ARPA-H 지원규모도 495억원에서 632억원으로 확대한다. 반도체·이차전지 등 첨단전략산업 초격차 유지·확보를 위해 저리대출 4.3조원을 신규 공급하고, 인프라를 신속지원한다. 이차전지 특화단지 기반시설 구축지원을 신규 반영하고, 배터리·디스플레이 아카데미 등을 통한 인력양성도 지원할 계획이다.

원전·방산·콘텐츠 관련 수출지원 및 중소벤처기업 지원도 강화한다. 원전산업 성장펀드 1천억원 규모 신설 및 K-방산 수출펀드 400억원 규모 신설을 통해 원전·방산 수출 확산을 촉진한다. K-콘텐츠 및 연계상품 수출을 위해 대규모 한류콘서트(80억원) 및 1,000억원 규모 글로벌리그펀드 조성도 신규 지원한다. 또한, 중소기업 점프업을 위해 유망 중소기업 100개사 대상 패키지 지원을 신설하고, 지역혁신벤처펀드 출자 규모를 1,000억원에서 역대 최대인 2,000억원으로 확대하여 벤처기업 지원도 강화한다.

### 1-3 미래를 준비하는 체질개선

저출생 대응을 위해 일가정양립·돌봄·주거 지원 등 3대 핵심분야 지원을 확대한다. 육아휴직급여 상한을 월 150만원에서 최대 250만원으로 대폭 인상하고,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원도 5일에서 20일로 확대한다. 아이돌봄 서비스 정부지원 기준과 비율을 기준중위소득 150%에서 200% 이하로 대폭 확대하고, 신혼·출산부부 대상 저금리 주거자금 지원을 위해 신생아특례 대출 소득요건도 기존 1억 3천만원 이하에서 2억 5천만원 이하로 완화한다.

필수의료 확충 및 지역의료 복원을 위한 지원도 확대한다. 의대 증원에 따른 교수·교육시설 확충을 위해 4천억원을 신규 지원하고, 전공의 수련비용 관련 2,332억원을 신규 지원한다. 권역책임 및 지역거점 병원의 시설 현대화를 위해 3천억원을 지원하고, 지역에 장기 근무하는 의사를 위해 수당 등을 지급하는 지역필수의사제를 신규 도입한다.

청년의 미래도약을 위해 일자리·교육·자산형성 지원 등을 강화한다.

일경험 확대, 구직단념청년 지원 등을 통해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과 미스매치 해소를 촉진한다. 국가장학금 지원대상도 대폭 확대하여 9구간까지 지원하는 등 기존 100만명에서 150만명으로 확대지원한다. 청년주택청약 당첨시 분양가의 80%까지 저리(최저 2.2%)로 대출해주는 청년주택드림대출도 3.3조원 규모로 신규 지원한다.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위해 청년도약계좌 정부 매칭지원 한도도 기존 월40~70만원에서 일괄 70만원으로 확대한다.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뒷받침을 위해 인재·산업·교통 혁신을 지원한다. 지자체와 지역대학이 주도적으로 지역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인재를 양성하는 RISE 사업을 기존 1.2조원에서 2.0조원으로 확대하여 본격 시행한다. 지역 주력산업 중소기업 R&D 지원에 신규로 216억원을 투자하고, 지역거점 교통혁신을 위한 8개 도시철도 노선 및 8개 신공항에 대한 투자도 지원할 계획이다.

#### 1-4 안전한 사회, 글로벌 중추 외교

재해·재난에 대한 체계적 예방과 대응을 강화한다. 전기차 화재 예방을 위해 전기차 스마트 제어 충전기를 2.3만기에서 9.5만기로 확대 보급하고, 화학사고 대응을 위한 고위험 사업장 500개소 대상 화학물질 관리 컨설팅을 신설한다. 수해예방을 위해 지역단위 인프라 구축을 기존 18개소에서 35개소로 대폭 확대하고, 폭염예방설비도 3천개소에서 5천 4백개소로 확대한다.

첨단·과학수사와 국민 권리구제도 강화한다. 민생범죄 근절을 위해 다크웹·가상자산 계좌분석을 8건에서 36건 지원으로 확대하여 마약·첨단지능범죄 수사를 강화한다. 2차 범죄 피해 우려자에 대한 밀착경호 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 지원하고, 피해자 생계비 지원한도도 기존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확대한다.

군 장병 처우개선과 군 첨단전력 육성도 지원한다. 병 봉급을 165만원에서 205만원으로 인상하여 병 봉급 약속을 이행하고, 군인 가족을 고려한 국민평형 관사(전용 85㎡, 484세대)와 초급간부를 위한 풀옵션 1인 1실 간부숙소(2,267실) 신규 보급에 집중 투자한다. 더 나아가, 여성 화장실·탈의실 등 여군 기본시설도 확충(750개 부대, 417억원)한다. 군 전력증강을 위해 KF-21 예산을 2천억원에서 1조 1천억원으로 확대하여 KF-21을 본격 양산할 계획이다. 중거리 자폭드론 신규 지원(50억원) 및 레이저 대공무기 지원 확대(15→706억원)를 통해 첨단전력도 강화한다.

전략적 외교와 ODA를 통한 국익 창출도 지원한다. 2025년 APEC 정상회의 성공개최를 지원하고, 유·무상 연계로 기업 진출을 지원하는 다부처 협업 ODA 6개 프로젝트(1,447억원)를 신규 지원하고, 청년교류를 위한 해외봉사단도 1,000여명 확대 지원한다. 이를 통해 우리 기업과 청년들의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 02 | 중점 추진과제



### 1. 더 나은 내일을 위한 약자복지

#### 1-1 더 두텁고 더 넓은 기초생활보장

##### 1) 저소득층(19.7→20.8조원)

##### 기초생활보장제도

기초생활보장제도 4대 급여(생계, 의료, 주거, 교육)의 예산 규모는 2024년 19.4조원에서 2024년 20.8조원으로 확대된다. 수급자가 받는 급여액을 대폭 인상하고,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는 등 저소득층을 더욱 두텁게 보호한다.

우선 생계급여는 기준중위소득을 3년 연속 역대 최고 수준인 6.42%를 인상하여 4인가구 기준 연간 최대 생계급여액을 2,200만원에서 2,341만원으로 141만원 확대한다. 또한, 부양의무자 예외 적용 기준 완화(소득 1.0→1.3억원, 재산 9→12억원), 노인근로소득 공제 확대(30%→20만원 + 30%), 일반재산 환산율을 적용하는 자동 기준을 완화하여 3만가구를 추가로 지원한다.

기준중위소득 4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의료비를 지원하는 의료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를 통해 저소득층의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지원한다. 부양의무자의 소득 중 수급자에 소득으로 이전된다고 간주하는 비율인 부양비를 15~30%에서 10%로 인하하여 0.3만명에게 신규로 의료급여를 지원한다. 한편, 외래 이용시 활용 가능한 건강생활유지비를 월 6,000원에서 월 12,000원으로 상향한다.

주거급여의 경우 임차 가구에 대해서는 기준임대료를 지역·가구별 3.2~7.8% 수준 인상하고, 자가 수급자의 경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20년 이후 동결된 수선유지급여를 29% 수준 대폭 인상한다.

교육급여는 저소득층의 교육 기회 보장과 실질적 교육비 경감을 위해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으며, 2025년 교육활동지원비는 초·중·고 평균 5.0% 인상된다.

〈 기준중위소득 및 급여별 선정기준(원) 〉

구분		'24년	'25년	증가율	비고
■ 기준중위소득(4인 가구)		5,729,913	6,097,773	+6.42%	
(1인 가구)		(2,228,445)	(2,392,013)	(+7.34%)	
4인 가구	생계급여 (기준중위소득 32%)	1,833,572	1,951,287	+6.42%	선정기준 = 월 최대급여액
	의료급여 (기준중위소득 40%)	2,291,965	2,439,109	+6.42%	건강생활유지비 0.6→1.2만원/월
	주거급여 (기준중위소득 48%)	2,750,358	2,926,931	+6.42%	기준임대료 4인 (1급지): 52.7→ 54.5만원/월
	교육급여 (기준중위소득 50%)	2,864,956	3,048,887	+6.42%	고교생 교육활동지원비: 72.7→76.8만원

 바우처

취약계층의 영양보충 지원을 위해 그간 시범사업 형태로 시행되어 오던 농식품바우처 사업을 본사업으로 전환하여 2025년부터 전국으로 확대('24년 기준 24개 시·군·구) 시행한다. 이에 관련 예산도 2024년 148억원에서 2025년 381억원(+157%)으로 대폭 증액하였다.

구체적으로 생계급여 지원대상 가구 중 영양취약계층(임산부·영유아·초중고생)이 포함된 가구를 대상으로 선별 지원하며, 지원기간을 2024년 6개월에서 2025년 10개월로 확대하고, 2024년 대비 가구별 지원단가도 인상(예: 4인 가구 기준 8만원→10만원/월)한다. 또한,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환경민감계층(어린이·노인·임산부) 1만명을 대상으로 아토피 등 환경성 질환 치료에 이용 가능한 환경보건이용권을 신규로 지급한다.

## 1-2 노인·장애인·취약아동 맞춤형 보호

### 1) 장애인(6.4→6.8조원)

#### 돌봄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위한 긴급돌봄센터가 신설(2개소)되어 보호자 부재시 안심 돌봄을 제공한다. 또한 장애인 활동지원 바우처의 이용 시간(131→135시간)과 지원인원(12.4→13.3만명)을 확대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가족의 돌봄 부담을 줄인다.

아울러 미등록 장애아동에게 제공하는 발달재활 서비스를 기존 6세에서 9세까지 상향하여 성장기 장애아동의 행동 발달을 지원한다. 또한, 24시간 의료지원이 필요한 최중증 장애인에게 간호인력과 의료장비가 도입된 맞춤형 의료집중형 거주시설도 신규 지원한다.

#### 일자리

취업성공패키지(1.3→1.4만명) 및 장애인고용장려금(63.3→75.6만명)을 확대하여 장애인의 민간취업을 촉진하고 조기취업수당을 통해 장애인의 취업욕구를 고취시킨다. 또한 고용 취약 계층에 대해서도 일자리(3.2→3.4만명)를 확대한다. 장애인이 선호하고 추가고용 여력이 있는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확대하기 위해 도약지원형 표준사업장을 신설하고, 시설투자 한도도 확대(10→15억원)하여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유도한다.

 **일상생활**

장애인이 개인별 이용계획에 따라 활동지원액의 일부(20%)를 일상생활에 필요한 재화·서비스를 선택해 활용할 수 있는 개인예산제 시범사업을 전국으로 확대(8→17개 시도)한다. 또한, 온·오프라인 동시 신원확인이 가능한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을 도입하여 생활 편의성을 대폭 강화한다.

[표 2-1] 장애인 지원 주요 변동 내역

(단위: 억원)

구 분	'24년	'25년	비고
장애인활동지원	22,846	25,323	인원(12.4→13.3만명), 시간(131→135시간)
발달장애인지원	3,577	4,030	발달장애인 돌봄 확대(2.1→2.3만명) 최중증 긴급돌봄센터 2개소 신설
장애아동가족지원	1,940	2,327	미등록 장애아 지원 확대(6세→9세이하)
장애인고용장려금	3,234	3,774	고용장려금 인원 확대(63.3→75.6만명)
장애인일자리 지원	2,227	2,345	직접일자리 공급 확대(3.2→3.4만명)
모바일 장애인 등록증	—	68	모바일장애인등록증 신규 도입

**2) 노인(25.6→27.5조원)**

 **소득**

노인 상대적 빈곤율\*을 고려하여 노인인구의 10% 이상으로 일자리를 확대(103→110만명)한다. 또한 65세 이상 노인의 70%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기초연금 단가를 인상(33.4→34.4만원)하고 지원대상도 701만명에서 736만명으로 늘려 노인 소득보장을 지원한다.

\* 노인 상대적 빈곤율(%) : ('19) 43.2 ('20) 40.4 ('21) 39.3 ('22) 39.7

## 활력

고령화에 대응하여 노인의 평생교육과 다양한 사회 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노인 평생교육바우처(+18억원)를 신설한다. 현장·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지원·관리를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중심이 되어 사업을 운영한다. 또한, 노인의 건강을 관리하고 사회활동 증진을 위해 시니어친화형 국민체육센터를 8개소에서 20개소로 확대한다.

## 돌봄

고령자 복지주택을 연 1천호에서 3천호 수준으로 대폭 확대하여 저소득 무주택 노인의 주거안정을 지원한다. 고령자 복지주택은 안전손잡이, 미닫이 욕실문 등 무장애 설계가 적용된 임대주택으로 사회복지시설과 연계하여 노인에게 양질의 주거서비스를 제공한다. 기존에는 고령자 복지주택을 ‘건설형’으로 지원하였으나, 매입임대, 노후 공공임대 리모델링 등의 방식으로 다변화하여 입주자 맞춤형으로 공급체계를 개편한다.

[표 2-2] 노인 지원 주요 변동 내역

(단위: 억원)

구분	'24년	'25년	비고
기초연금지급	202,015	218,146	기초연금 단가 인상(33.4→34.4만원)
노인일자리	20,264	21,847	노인일자리 확대(103→110만개)
노인 평생교육바우처	—	18	노인 평생교육바우처 신설(8천명)
시니어형 국민체육센터	56	116	시니어형 국민체육센터 건립 확대(11→31개소)
고령자 복지주택	470	1,418	고령자복지주택 공급 확대(연1→3천호)

3) 한부모·아동(0.5→0.6조원)

 한부모 가족

취약계층인 한부모 가족의 안정적인 양육 환경 조성 및 양육부담 경감을 위해 양육비 미이행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구에 국가가 양육비를 선지급하는 양육비 선지급제(자녀 1인당 월 20만원 지원)\*를 도입하고,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단가를 월 21만원에서 23만원으로 인상 지원한다.

\* 국가가 양육비를 선지급하고 추후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회수

〈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 후 변화 된 모습 〉

구분	현재의 모습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	달라진 모습 (양육비 선지급제)
대상	중위소득 75% 이하 + 질병, 장애, 경제적 어려움 등		중위소득 150%이하
지원내용	월20만원, 최대 1년		월20만원, 성년이 될때까지

 취약아동

취약아동·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위기임신보호출산법」 시행(’24. 7월)을 고려하여 보호출산아동\*이 안전하게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긴급 위탁보호비(1인당 월 100만원)를 신규 지원(300명)한다.

\* 보호출산제: 아이를 키우기 어려운 상황의 임산부가 가명으로 출산·출생신고

또한, 보호시설 퇴소에도 가정 복귀가 곤란한 청소년의 안정적인 자립지원을 위해 성폭력 보호시설 퇴소 피해아동에 퇴소자립지원수당(월 50만원)을 신규로 지원하고, 청소년 보호시설 퇴소 청소년 자립지원 수당을 월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 지원한다.

### 1-3 일자리를 통한 취약계층 도약 지원

#### 1) 저소득층(0.9→1.0조원)

##### 자활근로

기초수급자의 근로를 통한 자립을 뒷받침하기 위해 자활근로 인원을 6.9만명에서 7.2만명으로 확대한다. 자활근로 지원단가도 '24년 보다 높은 3.7% 인상하여 시장진입형 기준 일 급여액이 6.2만원에서 6.4만원으로 늘어난다. 자활근로 참여자의 맞춤형 관리를 위한 자활사례관리사도 모든 지역자활센터(250개소)에 1명씩 배치될 수 있도록 125명을 추가 증원한다. 한편, 자활근로 참여 후 민간 취·창업을 통해 기초수급자에서 벗어날 경우 최대 150만원(탈수급 후 6개월 근속시 50만원, 1년 경과시 100만원 지원)의 자활성공금을 신규로 지원하여 저소득층의 탈수급도 촉진한다.

##### 자산형성 지원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의 자립을 위한 목돈마련을 지원하는 희망저축계좌Ⅱ 유형의 정부 매칭지원을 2배 수준 확대한다. 수급자의 지속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현재 월 10만원 균등 지원에서, 1년차 월 10만원, 2년차 월 20만원, 3년차 월 30만원으로 차등지원하는 방향으로 개편한다. 지원금 확대로 만기수령액은 720만원에서 1,080만원으로 늘어난다. 한편, 취약계층 아동의 사회진출 초기 목돈 마련을 위한 '디딤씨앗통장'의 지원범위도 확대한다. 기초수급가구 아동 뿐만 아니라 차상위계층 아동까지 넓힌다. 이에 따라 지원인원은 2024년 20.6만명에서 2025년 27.3만명으로 6.7만명 증가한다.

##### 자금지원

취약 청년의 자립 지원을 뒷받침하기 위해 자금지원도 병행한다. '청년 자립자금'을 신설하여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자활근로자 등 사회적배려계층 약 1.3만명을 대상으로 총 400억원의 생활자금을 지원한다. 취약청년이 금융애로 없이 취업준비 등 자립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이차보전을 통해 기존 햇살론유스(3.6%)보다 1.6%p 낮은 2.0%의 금리로 대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 2) 고용취약계층(0.4→0.5조원)

중장년, 경력단절 여성, 노무제공자 및 일용근로자 등 고용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통한 사회이동성 제고를 뒷받침한다.

### 중장년

중장년층이 주된 일자리 퇴직 후 양질의 일자리에 재취업할 수 있도록 고용서비스, 직업훈련 등 지원을 강화한다. 중장년 내일센터를 확충하고(35→38개소) 생애경력설계, 전직스쿨 등 내일패키지 인원을 확대하여(6.1→6.5만명) 준비된 은퇴를 지원한다. 중장년 구직자의 역량강화를 위해서는 폴리텍 신중년 특화학과 개편(신규 5개과), 뿌리산업교육센터 구축(신규 3개소), 중장년 인턴제 신설(910명) 등을 통해 특화 직업훈련·직무경험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아울러, 중장년 근로자가 정년 도달 이후에도 일자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계속고용장려금 지원 요건을 완화한다. 기존에는 계속고용 희망자 전원을 재고용해야 계속고용장려금을 받을 수 있었으나, 정년 도달 근로자 중 일부만 재고용한 경우에도 장려금을 지원하여 계속고용 제도의 자율적 확산을 촉진한다.

### 경단여성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 촉진을 위해 여성새로일하기센터(새일센터) 직업훈련 과정 참여시 최대 40만원(총 4개월, 월 10만원)의 참여수당을 신규 지원하고, 새일여성인턴의 취업 및 고용유지를 위해 고용유지장려금을 80만원 추가 지원(총 380→460만원)\* 한다.

\* ('24년) 인턴채용지원금 240만원(3개월간) 및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고용유지 시 고용유지장려금 140만원 지원  
( '25년) 12개월 고용유지 시 고용유지장려금 80만원 추가 지원

## 취약근로자

노무제공자, 일용근로자 등 취약근로자가 안정적 일자리로 상향 이동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확충한다. 소득이 불안정해 상시근로자로 전환을 희망하는 노무제공자에 대한 맞춤형 교육 및 취업알선 프로그램(“노무제공자 스텝업 프로그램”)을 근로자 이음센터에 신설한다(350명). 또한, 기간제, 파견, 일용근로자 등 취약계층의 내일배움카드 한도를 상향 조정하여(400→500만원) 적극적인 직업훈련을 통한 직무 전환을 유도한다.

## 3) 노동약자(1.0→1.2조원)

근로기준법 사각지대에 있어 임금·복지 등이 열악한 영세사업장 근로자, 고용 불안정 및 안전사고에 노출되기 쉬운 노무제공자, 임금체불 근로자 등 소외된 노동약자를 국가가 적극적으로 책임지고 보호하고, 대기업·원청의 중소·하청업체에 대한 상생협력 투자 지원을 대폭 확대하여 능동적인 상생 생태계를 조성한다.

## 약자보호

영세사업장 근로자 및 노무제공자의 권익 증진을 위해 노동약자지원 사업을 신설하고(160억원), 근로자 이음센터를 확대하여(6→10개소)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근로자 이음센터 내에 변호사 등 전문가로 구성된 분쟁조정협의회를 신설 운영하고, 맞춤형 특화 교육프로그램을 확충한다. 또한, 건설업 불황 등으로 인한 임금체불 증가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대지급금(8.8→10.5만명) 및 체불청산 용자(0.6→0.9만명) 지원 인원을 대폭 확대한다. 저소득 근로자의 수요가 높은 생활안정자금 용자는 이차보전 트랙을 신규 도입함으로써 지원 인원을 기존의 두 배 이상으로 늘린다(1.6→3.6만명).

## 이중구조 개선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개선을 위해 대·중소기업, 원·하청 간의 자발적 상생협력 노력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한다. 대기업·원청이 중소·하청업체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해 조성하는 공동근로복지기금(86→154개)과 2·3차 협력사 근로자 복지를 위한 상생협력 복지증진기금(3→4개 업종) 지원을 늘린다. 또한, 중소·하청업체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 컨설팅, 안전보건 물품보급 등 상생활동 비용을 지원하는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 사업을 확대하고(3.6→3.8천개), 지자체 주도로 지역주력 산업 원·하청 상생협력시 복지·안전 관련 패키지 지원하는 지역주도 이중구조 개선지원 대상 지역도 추가로 늘린다(2→3개 지역).

## 1-4 교육·주거사다리 구축 및 문화격차 해소

### 1) 교육기회(9.3→9.5조원)

#### 교육·돌봄의 국가책임 강화

유보통합 및 늘봄학교 지원 등을 통해 만 0~5세의 영유아 대상 국가의 교육·돌봄 책임을 강화한다. 특히, 복지부에서 교육부로의 교육·보육예산 이관 및 지원으로 유보통합을 뒷받침하는 한편, 초중고 학생 등中等교육 부분 지원 강화를 위해 17개 부처 및 대학을 통한 늘봄학교 프로그램 개발 비용을 신규 지원(+320억원)한다. 꿈사다리 장학금(월 15~35만원) 지원 대상을 기존 중·고등학생에서 초등학생(5~6학년)까지 확대함으로써 저소득 우수학생을 대상으로 교육기회 제공을 확대한다.

#### 학자금·생활비 등 지원을 통한 경제적 부담 완화

저소득 대학생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교육기회 확보를 위해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학비(수업료) 외 생활비 지원을 위해 근로장학금 지원 인원을 (2024년) 14만명→(2025년) 20만명으로 확대(+1,583억원)하고,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교육환경 제공을 위해 원거리를 통학하는 기초·차상위 대학생 4.2만명을 대상으로 월 20만원을 지원하는 주거안정장학금 사업을 신설(+344억원)한다.

## 집중교육과정을 통한 AI·디지털 역량 강화 추진

평생·직업교육 지원 관련 성인 학습자 대상 디지털 역량강화 등을 제공하기 위해 평생교육바우처를 확대(연 35만원, 8→11.5만명)하고, 17개 시도별 거점 대학을 대상으로 신규 AI·Digital 집중교육과정을 신설하여 성인 디지털 직무역량 함양을 적극 지원한다.

## 2) 주거(20.5→25.2만호)

### 공공주택 역대최대 수준인 25.2만호 공급

서민층 주거안정 및 내집마련 지원을 위해 공공주택 공급물량을 '24년 11.5만호에서 '25년 25.2만호(공공임대 15.2만호 + 공공분양 10.0만호)로 대폭 확대하여 역대 최대규모를 공급한다. 공공임대의 경우,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해 건설, 매입, 전세 각 유형별로 공급을 확대했으며 특히 비아파트 시장 침체를 고려하여 매입임대 물량을 '24년 4.0만호에서 '25년 6.7만호로 대폭 확대했다.

공공분양은 서민층 내집마련 지원을 위해 '24년 9.0만호에서 '25년 10.0만호로 공급을 확대했으며, 특히 6년 임대 후 분양여부를 선택하는 뉴:홈 선택형을 1.8만호에서 3.0만호로 확대했다.

### 소득·계층별 빈틈없는 주거복지

청년, 신혼부부, 고령층 등 지원 대상별로 맞춤형 주거복지정책을 추진한다. 청년층 내집마련 및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청년주택드림 대출을 출시한다.(3.3조원 규모) 청년주택드림대출은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과 연계해 청약당첨 시 분양가의 80%까지 최저 2.2% 금리로 주택구입자금을 대출한다. 또한, 출산가구 주거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신생아특례대출 소득요건을 1.3억원에서 2.5억으로 상향해 보다 많은 가구에게 주거금융지원을 확대한다. 거동이 불편한 고령층 대상 임대주택과 복지서비스를 연계한 고령자복지주택을 연 1천호에서 3천호로 대폭 확대한다.

### 📌 획기적인 공급개선으로 주택 공급속도 제고

공사비 인상으로 공급실적이 저조한 상황에서 주택 공급속도 제고를 위한 지원도 추진한다. 우선 수도권 공공택지 대상 22조원 규모의 미분양 매입확약을 신설해 '25년 조기착공을 지원한다. 또한, 3기신도시 공급속도 제고를 위해 민간이 참여하는 신도시리츠를 신규 조성하며, 노후 저층주거지 환경개선과 주택정비사업을 연계한 뉴:빌리지도 신규 추진한다.(30개소, 930억원)

## 3) 문화(0.8→1.0조원)

### 📌 계층간 문화격차 해소: 취약계층 문화·체육 향유기회 확대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 대상 통합문화이용권 지원단가를 1인당 13만원에서 14만원으로 인상하고, 지원인원도 '24년 258만명에서 '25년 264만명으로 확대한다. 또한, 취약계층 유·청소년 및 장애인 대상 프로스포츠 경기관람권 지원 인원도 '24년 1만명에서 1.75만명으로 확대하고, 지원단가도 1.5만원에서 2만원으로 인상한다.

새로운 사회문제 대응을 위한 인문문화·예술 투자 및 계층별 맞춤형 문화예술 향유 프로그램도 확대한다. 최근 SNS 확산에 따른 혐오·고립·비교문화 등 사회문제 해소를 위해 디지털과몰입·고립은둔 청소년 및 노숙인·재소자 대상 인문예술치유 지원을 신설하고, 생애주기·장애유형별 발달장애(ADHD 등) 특화 독서프로그램도 신규로 추진한다. 장애예술인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창작 아카데미도 전국 1개소에서 3개소로 확충하고, 한부모가정 등 위기가정 부모·아동 대상 예술교육도 전국 40개소에서 신규로 추진한다.

### 📌 지역별 문화격차 해소: 지역의 문화·관광·체육 자생력 확보

지역 고유의 문화자원을 활용한 자율적 콘텐츠 발굴·투자를 촉진하고 이를 통해 지역민들의 생활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대한민국 문화도시'를 13개소 신규로 선정하고,

3년간 200억원(국비 100억원)의 대규모 재정을 집중 투입한다. 또한, 다양한 공연예술 장르별 거점도시를 5개소 선정하여 관광객 유치 및 해외진출까지 가능하도록 스케일업을 지원한다. 또한, 지역 기초예술(공연·시각예술, 문학) 우수작품 및 활동을 후속 연계 지원하는 지역예술도약 지원을 신설한다.

지역의 관광 경쟁력 강화를 위해 부처간 협업을 통한 크루즈 관광 활성화, 전적지 등 지역 고유의 자원과 스토리를 활용한 관광상품 개발 및 자전거 관광 등 테마별 지역관광을 활성화한다. 스포츠 측면에서는 이스포츠 지역 연고팀 창단 및 지역리그 출범을 8개 지역을 시작으로 최초로 지원하고, 국민체육센터도 유아 3→9개, 시니어 8→20개로 확대한다.

### 세대간 문화격차 해소: 아동·청소년과 신진예술인 성장 지원

아동·청소년의 문화향유권을 증진하고 진로탐색·정서함양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예술교육 사업도 확대하였다. 취약계층 아동 중심으로 문화예술교육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꿈의 예술단’ 사업을 시각예술까지 확대한 ‘꿈의 스튜디오’를 신규 지원(전국 10개소)하고, 어린이청소년 극단 신설, 소극장 ‘학전’ 재대관 지원을 통해 아동·청소년의 예술 접근성을 향상한다. 또한, 신진예술인의 성장기회 확충을 위해 시장성·예술성을 모두 갖춘 중예산 영화 제작 지원(연 10편)을 신설하고 국립예술단체 청년교육단원도 확대(350→600명) 지원한다.

체육 분야에서는 청소년 선수(1,000→1,210명), 꿈나무 선수(942→1,030명) 등 양성 지원을 확대하여 우수 체육인재들의 성장사다리를 구축한다.

## 2. 경제활력 확산

### 2-1 소상공인 전주기 맞춤형 지원

#### 비용경감

고금리 기조가 지속되면서 소상공인들의 자금 애로가 여전한 만큼 소상공인 정책융자 규모를 올해보다 약 600억원 늘린 3.8조원 규모로 편성한다. 대환대출(7% 이상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대환)은 2025년에도 지원되며,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경영 애로를 겪는 소상공인도 2025년부터 일시적 경영애로자금을 지원 받는다. 또한, 시중 소상공인 대출에 대한 43조원 규모의 지역신용보증에 가능한 재보증 예산을 편성하며, 기존 보증의 상환기간을 연장하는 전환보증 중도상환 수수료 예산도 함께 반영한다.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경영 비용 부담을 완화한다. 최근 외식업, 밀키트 등을 제조하는 제조업, 꽃·과일 등을 배달하는 도·소매업 등 대부분의 업종에서 배달과 배송이 확대되면서 고정비 성격의 배달·택배비 지출이 소상공인들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다. 이에 영세 소상공인에 한하여 배달·택배비를 한시적으로 지원한다.

(단위: 억원)

사업명	'24년	'25년	비고
■ 소상공인지원(융자)	37,100	37,700	
■ 지역신용보증재단재보증	1,254	2,109	
- 지역신용보증재단재보증	1,254	2,035	'25년 보증규모 43.3조원
- 전환보증 중도상환 수수료 지원	-	74	'25년 공급규모 2.5조원
■ 배달택배비 지원	-	2,037	

## 매출신장

소상공인이 성장할 수 있는 스케일업 기반 마련에 집중한다. 성장 역량을 갖춘 혁신 소상공인을 성장 단계별로 지원하는 기업가형 소상공인 예산을 확대((2024년) 524→(2025년) 834억원)한다. 특히, 민간 투자자의 투자를 받은 기업가형 소상공인에게 사업화 자금을 매칭하는 투자 연계 지원(300억원)을 새롭게 포함하였다. 또한, 유망 소상공인 3천개사를 민간이 직접 발굴하고, 1:1로 밀착 지원하는 브랜드 소상공인 육성 예산(150억원)을 신규로 반영하여 소상공인들의 디지털 역량 강화 기회를 높일 계획이다.

지역 골목 상권과 전통시장의 소비 촉진을 돕는다. 지역과 민간이 상권 활력 회복에 주도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민간 주도 상권기획 예산을 확대((2024년) 21→(2025년) 44억원)하였다. 특히, 민간 상권기획자가 주도적으로 기획하고, 지자체, 관계부처 등이 함께 지원하는 협업 구조로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2025년 온누리상품권 예산은 운영 경비 소요, 수수료 등은 절감한 반면, 할인 관련 예산은 2024년보다 늘려 온누리상품권을 약 5.5조원 발행할 계획이다.

(단위: 억원)

사업명	'24년	'25년	비고
■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	524	834	
- 혁신 소상공인 창업 지원	196	193	교육 및 멘토링 규모 등 확대
- 혁신 소상공인 도약 지원	328	341	강한 소상공인(협업트랙) 지원규모 확대
- 혁신 소상공인 투자연계 지원	—	300	기업가형 소상공인 300개사 지원
■ 브랜드 소상공인 육성	—	150	
■ 지역상권기획 및 역량강화	21	44	
■ 온누리상품권 발행	3,513	3,907	

 재기지원

위기 소상공인의 폐업부터 재취업·재창업을 지원한다. 개인 사업자 폐업이 '23년도에 급격히 증가하는 등 최근 폐업 위기에 내몰리는 소상공인들이 늘고 있다. 이에 원활한 폐업부터 재취업·재창업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희망리턴패키지 예산을 대폭 확대((2024년) 1,513→(2025년) 2,450억원)한다. 2025년 점포 철거비 지원을 최대 400만원(기존 250만원)까지 확대하고, 국민취업지원제도와 연계한 특화 취업 프로그램, 재창업 전담 PM 밀착 지원 등을 새롭게 담는다.

취약 소상공인에 대한 채무조정 지원도 강화한다. 새출발기금 전체 지원규모를 40조원 이상으로 확대(기존 30조원)함과 동시에,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감면율도 상향한다. 한편 폐업 소상공인의 재기 지원을 위해 재취업·창업 교육 이수 시 원금감면율을 상향하는 등의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단위: 억원)

구 분	'24년	'25년	비고
희망리턴패키지	1,513	2,450	
소상공인 채무조정	3,300	5,000	

**2-2 농어민 소득 확충 및 농수산물 물가 안정**

**1) 농어민 지원**

 공익직불제도 확대

공익직불제 도입 이후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 단가를 최초로 5% 수준 인상하였다. 비진흥지역의 쌀 지급단가는 비진흥지역 논의 80% 수준까지 상향하여 농업인의 기초 소득안전망을 강화한다. 선택직불제도 대폭 확대한다. 밀과 하계조사료의 지급단가를 인상하는 등 전략작물직불제를 확대(1,865억원→2,440억원)한다. 친환경농업직불 논

지급단가를 인상(70만원/ha→95만원)하고, 유기인증 6년차 이상 농가에 지급하는 지속직불 지원율도 상향(50%→60%)한다. 아울러, 저탄소농업 프로그램을 확대(90억원→33억원)하고 가을갈이, 가축분뇨처리방식 개선을 직불금 지원 대상활동에 추가하여 환경친화적 영농활동을 적극 지원한다.

### 수입안정보험 전면 도입

농가소득 안정을 위한 수입안정보험 본사업을 추진한다. 수입안정보험은 자연재해·시장가격 하락 등으로 농가의 소득 하락시, 농가 평년 소득의 일정수준(60~85%)까지 보전 해주는 상품으로 정부는 보험료의 50%를 지원해준다. '24년 시범사업 중인 9품목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신규 6개 품목은 시범사업 추진 예정이다. 지원대상 면적은 품목별 재배면적의 1% 수준에서 최대 25% 수준으로 확대(81억원→2,078억원)한다. 한편 수입안정보험 확대에 따라 일부 역할이 중복되는 채소가격안정제 사업 개편 사업 개편으로 재정의 효율성을 제고할 예정이다. 채소가격안정제의 가격차 보전 기능은 수입안정보험으로 이관하고 수급조절 기능 중심 개편 예정이다.

### 농업인 경영안정 도모

농업 재해예방 대응능력을 높이기 위한 재해대응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를 강화한다. 상습침수지역에 대한 배수시설을 조기 준공하고 노후 수리시설에 대한 안정성 개선 등을 위해 투자를 확대(11,996억원→12,469억원)한다. 또한 재해복구비 단가를 높이고 복구비 지원에서 배제되었던 농기계와 축사·시설하우스 내 설비를 지원대상에 포함하여 재해로부터 농업인을 보다 두텁게 보호한다. 축산농가의 사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사료구매자금 1조원을 지속 지원하고 한우가격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는 한육우 농가가 2025년 내 상환해야하는 사료구매자금 6,387억원은 상환을 1년 유예한다. 일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농업인에게 지원되는 경영회생자금을 15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2배 확대하고 담보력이 부족한 농업인에게 안정적으로 자금을 공급하기 위해 농신보 출연을 대폭 확대(300억원→1,500억원)한다. 공공형 계절근로를 70개소에서 90개소로 확대하여 농업인력 부족문제 해소를 지원한다.

## 📌 농촌소멸 대응 및 공간재생

농촌공간계획에 따라 농촌지역을 재구조화하는 농촌공간정비를 대폭 확대한다(98개소, 680억원→128개소, 1,045억원). 농촌지역 내 빈집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빈집실태조사를 강화하고, 빈집밀집지역 내 빈집은 리모델링하여 주민 공동이용 시설 등으로 재활용한다(신규 3개소, 3년간 19억원). 농촌 생활인구 유치를 위해 주거, 영농체험공간 및 지역주민과의 교류 프로그램을 갖춘 체류형 복합단지를 신규로 조성할 계획이다(신규 3개소, 3년간 45억원). 농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청년들이 농촌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해 창업할 수 있도록 창업자금, 네트워크 등을 신규 지원한다(9개소, 10억원). 또한, 지역 내 선도 민간기업을 중심으로 전후방산업을 연계하는 농산업 혁신벨트 1개소를 새로 조성한다. 농촌 취약지역 주민들의 기본적인 정주여건 보장을 위한 안전·위생인프라 개선을 지속(1,045억원)하고, 버스·택시 등을 활용하여 대중교통이 열악한 지역 대상 교통서비스를 지원(81개 군, 249억원→82개 군, 266억원)한다.

## 2) 농수산물 물가

### 📌 과수 수급 안정

과수 수급안정을 위해 생산성이 높고, 재해예방시설을 갖춘 스마트 과수원 특화단지를 3개소 신규로 조성(13억원)한다. 냉해예방을 위해 농기계임대사업소에 이동형 열풍방사팬을 구비, 농가에 지원할 계획이다(신규, 11억원). 과수 계약재배를 확대(631억원→926억원)하고, 사과는 출하처·출하시기까지 관리할 수 있는 지정출하물량을 시범 운영(2만톤, 258억원)한다.

### 📌 선제적 수급관리시스템 구축

사전적 수급안정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실측조사 품목을 확대(5품목→7품목)하는 등 농업관측을 강화한다. 아울러, 일시적 수급불안에 대비해 농산물 비축을 확대(7,249억원→8,125억원)하고, 장비구니 물가부담 경감을 위한 할인지원에도 1,080억원을 투입한다.

## 📌 온라인 도매시장 활성화

온라인도매시장 활성화를 위해 거래 인센티브 제공 등 지원을 확대(104억원→149억원) 하고, 소매판매자가 소분·재포장없이 바로 판매할 수 있도록 전용상품 개발을 지원하는 등 소매시장과의 연계를 강화한다. 산지유통의 규모화·효율화를 위해 스마트 산지유통센터를 30개소에서 60개소로 확대하고, 공동선별비 지원을 확대(86억원→129억원)하는 등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투자를 확대한다.

## 📌 쌀 수급 안정

쌀 수급을 안정화하기 위해 2025년에도 정부양곡 비축물량을 45만톤으로 유지하는 한편(17,322억원), 쌀의 해외원조 물량을 10만톤에서 15만톤으로 확대(1,120억원→1,901억원)한다. 전략작물 재배를 활성화하기 위해 전문생산단지 육성을 405개소에서 440개소로 확대하고, 전략작물 생산량 확대에 대응하여 제품화·판로확보·가공 지원도 늘린다(453억원→533억원).

## 2-3 선도형 R&D 개혁과 첨단산업 육성

### 1) R&D 시스템 개편

신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신성장 분야 R&D 투자를 확대한다. 이를 위해 미래도전형 분야인 3대 게임체인저(AI반도체·첨단바이오·양자)와 이차전지, 통신, 차세대원전, 우주, 수소, 사이버보안 등 국가전략 분야를 중심으로 집중 투자하여,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한다. 인공지능 분야는 AI반도체를 활용한 K-클라우드 개발(2025년 366억원)을 추진하고, 차세대 범용AI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투자를 확대((2024년) 40억원→(2025년) 180억원)한다. 첨단 바이오 분야는 전주기 차원에서 협업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한 지원을 확대((2024년) 1,873억원→(2025년) 2,832억원)한다.

최고 수준의 기초연구를 위해 수월성 중심으로 기초연구 지원체계를 개편하고, 전략성과 도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기초연구 투자를 확대((2024년) 2.6조원→(2025년) 2.9조원)한다. 이를 위해 국가아젠다 트랙을 신설하여 전략형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신중·난제 해결을 위한 개척연구와 우수성과 이어달리기를 위한 도약연구를 신설하여 기초연구의 혁신·도전성을 강화한다.

젊은 연구자의 창의·도전적 연구 지원을 위해 한국형 Stipend인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 사업을 신설하여 석·박사 연구인력의 안정된 지원을 강화(월 기준 박사 110만원, 석사 80만원)한다. 또한 이공계 대상 장학금(1,000명, 연 500만원)을 도입하고 연구장려금을 확대(2,472→5,131명)하여, 더 많은 연구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강화한다.

## 2) ABC+ 첨단산업 육성

### AI인공지능

R&D, 인프라, 인재양성 등 투자 확대를 통한 역동적인 AI 생태계 구현으로 세계 3대 AI 강국(G3)으로 도약한다. 차세대 AI 반도체(NPU) 생태계 선점을 위한 기술투자를 확대하고, 컴퓨팅 인프라의 국산화·규모화를 추진한다. ((2024년) 1.4→(2025년) 1.8조원)

### BIO바이오

글로벌 바이오 강국으로 도약한다. 의료혁신·제조혁신·디지털융합 등을 통한 전주기 산업 육성 집중 투자를 통해 글로벌 바이오 강국으로 도약한다. 세계 최초·최고 의료연구 도전 지원, AI·로봇 기술 접목 바이오 파운드리 구축, 국가 바이오 디지털 플랫폼 구축 등에 집중 투자한다. ((2024년) 2.0→(2025년) 2.3조원)

## Chips 반도체

금융, R&D, 인력, 사업화·인프라 등 26조원 규모의 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을 뒷받침한다. 반도체 저리대출 및 생태계 펀드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첨단패키징 기술 등 첨단반도체 관련 기술경쟁력을 확보한다. 팹리스 실증화 및 기반시설 지원을 확대한다. ((2024년) 1.3→(2025년) 1.7조원)

## Plus+ 전략산업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모빌리티 등 전략산업 지원에 집중 투자한다. 이차전지 특화단지 기반시설을 지원하고, 디스플레이 아카데미를 신설한다. UAM 도심지 실증시설을 확충하고, 자율주행차 시범 운행지구 운영도 확대한다.

## 2-4 수출 모멘텀 확산과 중소·벤처기업 스케일업

### 1) 수출 모멘텀 확산

수출 플러스 전환을 위해 범부처 수출 지원사업을 (2024년) 2.1조원→(2025년) 2.9조원으로 확대한다.

우선, 체코 원전을 계기로 수출붐 확산을 위해 원전산업 성장펀드를 1천억원 규모로 조성하고, 원전생태계 용자를 1,500억원 공급하는 한편, 원전 R&D를 0.3조원 규모에서 0.4조원 규모로 확대한다.

방산 수출 규모 확대에 맞추어 K-방산 수출펀드를 400억원 규모로 신규 조성하고, 방산 수출보증을 위한 무역보험기금 출연금 400억원도 신규로 반영한다.

또한, 대규모 한류콘서트 Beyond-K Festa 개최를 위한 예산 80억원을 신규로 반영하고, 0.1조원 규모 글로벌리그 펀드 조성으로 K-콘텐츠 및 연계 수출을 지원한다.

대규모 해외 수주를 위한 수출입은행 출자금 1,000억원을 반영하고, 글로벌 PIS펀드 규모를 200→300억원 규모로 확대한다. 아울러, 국내 조선사의 선박 수출에 필수적인 RG 특례보증을 신규 2,000억원 공급한다.

더불어, 수출 중소·중견기업의 현장 요구가 큰 수출바우처 지원규모를 3,984→4,505개사로 확대하고, 현장수요가 충분한 해외전시회 지원규모도 4,201→4,460개사로 확대하여 수출현장 애로 해소를 뒷받침한다.

(단위: 억원)

구 분	'24년	'25년	비고
원전산업 성장펀드	—	350	1,000억원 규모 펀드 조성
K-방산 수출펀드	—	200	연간 약 20개 기업, 약 20억원 투자자금
수출입은행출자	—	1,000	대규모 해외수주, 전략산업 중소·중견 지원
무역보험기금출연	450	800	RG특례보증(400억원), 방산수출보증(400억원)
K-콘텐츠 펀드	—	400	해외VC 국내 운용가능 펀드 조성(0.1조원)

2) 중소벤처

글로벌 기업들과 인재들이 모여드는 국내 창업 생태계를 만들 계획이다. 2023년 발표한 「스타트업코리아 추진전략」 핵심 과제였던 글로벌 창업허브 구축 예산을 증액((2024년) 15→(2025년) 319억원)한다. 글로벌 창업허브는 기술 스타트업, 인근 우수 대학, 외국 인재들이 모여있는 서울 홍대 권역에 조성한다. 2025년부터 공사를 진행할 계획이며, 딥테크 스타트업들이 입주하고, 글로벌 빅테크 기업, 국내·외 투자자들이 모여드는 글로벌 인프라로 키울 계획이다.

세계를 선도하는 글로벌 대기업들과의 개방형 혁신을 확대한다. 글로벌 대기업과 K-스타트업의 오픈 이노베이션을 지원하는 글로벌 기업 협업 프로그램 예산을 확대((2024년) 430→(2025년) 530억원)한다. 2025년에는 확대된 예산을 통해 협업 글로벌 대기업을 추가로 발굴하여 유망 신산업 분야로 협업 영역을 확장할 계획이다.

차세대 성장 동력인 AI, 반도체 등에서 글로벌 유니콘으로 성장할 딥테크 스타트업 육성에 박차를 가한다. 중기부는 초격차 10대 분야 스타트업을 선발하여 지원하는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의 지원대상을 2025년에는 500개사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글로벌 우위 선점 경쟁이 치열한 AI, 시스템 반도체(팹리스) 분야는 맞춤형 특화 지원 프로그램을 별도 신설하고, 국내·외 대기업 등과 협업하는 별도 지원을 새롭게 추진한다.

민간 역량을 활용한 개방형 혁신을 강화한다. 민간 대·중견기업, 공공기관의 지원 역량(사업화, 실증, 판로 지원 등)과 연계한 민·관 협력 오픈 이노베이션 지원을 확대((2024년) 111→(2025년) 200억원)한다. 특히, 투자 유치 등 시장에서 유망성을 검증 받은 딥테크 스타트업들과 대기업들을 매칭하는 밸류업 프로그램(70억원)도 별도 신설한다.

혁신 생태계로 민간 자본의 유입을 촉진한다. 모태펀드 정부 출자 예산 규모를 5천억원 수준으로 높여 스타트업코리아, 글로벌, M&A 등 핵심 출자 분야의 혁신 스타트업 투자를 확대한다. 특히, 지역 분야는 역대 최대 규모로 출자하여 지역 스타트업의 성장 동력을 확충한다.

'24년 5월에 발표한 「기업 성장사다리 구축방안」에 담긴 유망 중소기업의 Jump-Up 프로그램(299억원)을 신규 예산으로 반영하여 민간 전문가 매칭, 기업 자율형 오픈 바우처, 정책자금 연계 등 스케일업 전주기 과정을 지원한다. 또한, 일시적 위기 상태인 중소기업의 신속한 정상화를 지원하는 선제적 구조 개선 프로그램 예산도 확대((2024년) 23→(2025년) 32억원)한다. 민간 금융권과 함께 성장 잠재력이 있는 중소기업을 공동 발굴하고, 구조개선계획 수립과 정책자금 지원을 뒷받침한다.

(단위: 억원)

구 분	'24년	'25년	비고
■ K-글로벌 스타트업	445	849	
- 글로벌 창업허브 구축	15	319	글로벌 창업 인프라 조성(서울 홍대 권역)
- 글로벌기업 협업 프로그램	430	530	협업 글로벌 대기업 추가 발굴
■ 딥테크 스타트업 육성	1,142	1,510	
- 초격차스타트업 1000+	1,031	1,310	팍리스·시 스타트업 맞춤형 사업화 지원
- 민관협력오픈이노베이션	111	200	딥테크 스타트업 밸류업 프로그램 신설(70억원)
■ 민간 중심 벤처투자	4,540	5,000	
- 중소기업모태조출자	4,540	5,000	스타트업코리아, 글로벌 등 분야 투자 확대
■ 기업 성장 사다리 구축	4,414	5,905	
- 사업전환촉진	73	372	점프업 프로그램 신규 편성(299억원)
- 사업전환자금	3,125	3,500	융자규모 확대(+375억원)
- 구조개선촉진	23	32	선제적 구조 개선 프로그램 예산 확대
- 구조개선전용자금	1,193	2,001	융자규모 확대(+808억원)

### 3) 녹색전환 · 무역장벽

녹색전환을 통한 국내 제조업 등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유망 환경기업육성 및 스케일업 등을 위해 탄소저감설비 도입 촉진을 위해 녹색전환보증을 확대한다.(1.0→1.5조원)

또한, 녹색인프라 수출펀드(300→600억원) 및 녹색정책금융 지원(융자 4.8→6.8조원)도 강화하였으며, 녹색유동화 증권 발행(150개사) 및 녹색채권 발행(25→27개사)을 지원할 예정이다.

바이오가스, 사용 후 배터리 등 미래를 선도할 녹색 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순환경제 사회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유기성 폐자원 바이오가스화 시설(7→15개소) 확대 및 LFP배터리 재활용체계 구축 예산도 신규로 반영(66억원)하였다.

한편, '26년부터 의무화되는 EU CBAM 등 국제규범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범정부 탄소무역규제대응 TF를 구성(산업부·환경부·중기부 등)하고 중소기업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 CBAM 컨설팅·검증 지원을 확대(110→185개사) 하였으며, 기후공시·공급망실사 심층진단(신규 600개사)을 신설하고, 기업 안내 헬프데스크(무역협회)도 운영한다.

(단위: 억원)

구 분	'24년	'25년	비고
■ 녹색금융	4,828	5,666	
녹색전환보증	840	1,400	기후대위보증 840→1,000억원, 녹색기술산업보증 400억원(신규)
녹색정책금융활성화	319	540	이차보전 융자규모 4.8→6.8조원
녹색인프라 수출펀드	300	600	지원규모 2배 확대
■ 자원순환	2,618	3,173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	174	160	계속 7개소, 신규 8개소
자원순환클러스터	239	248	LFP배터리 재활용 체계 구축 신규반영
■ 탄소무역규제 대응	202	261	
국제 탄소무역 규제대응	164	198	CBAM 컨설팅·검증 110→185개사, 기후공시·공급망실사 심층진단 600개사
LCI DB 구축	38	63	국가 LCI DB 구축 150→250개

### 3. 미래를 준비하는 체질개선

#### 3-1 일·가정양립·돌봄·주거 지원으로 저출생 대응

##### 1) 일·가정 양립

육아기 소득 감소, 여성중심 육아, 경직적 근로환경 등 일·가정 병행이 어려운 여건으로 저출생 문제가 심화됨에 대응하여 일·가정 양립 투자를 역대 최대규모로 확대 ((2024년) 2.7조원→(2025년) 4.4조원)한다.

필요한 시기에 충분한 육아시간을 보장하도록 육아휴직급여 상한을 월 최대 100만원 인상(월 150만원→1~3개월 250, 4~6개월 200, 이후160만원)하고, 어린이집·유치원 임시 휴원, 초1 신학기 등 단기 육아기 돌봄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단기 육아휴직을 도입한다. 신생아기 맞돌봄 확대를 위해 중소기업 근로자의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지원 기간도 5→20일로 확대한다. 중소기업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 사용 장려를 위해 남성 육아휴직 미사용 중소기업에서 남성 육아휴직 사용시 세 번째 사례까지 월 추가 10만원을 지원하는 남성육아휴직인센티브제도를 신설한다.

육아휴직 등 일·가정양립에 따른 업무공백 해소 등 일·육아 병행제도의 실질적 현장활용 여건 개선을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을 재신설하고 파견근로자의 경우에도 허용하며 월 지급 단가도 80→120만원으로 확대한다. 대체인력채용이 어려운 기업 근로자의 육아휴직 사용에 따른 동료 부담 경감을 위해 사업주가 업무대행자에게 인센티브 지급시 지원금을 월 20만원 지급하는 육아휴직 동료업무 분담지원금을 신설한다.

## 2) 돌봄

돌봄서비스 이용 부담을 완화하도록 아이돌봄 서비스 정부지원 대상을 기존 중위소득 150% 이하에서 200% 이하까지 확대하고, 정부지원율을 소득 구간별로 5~10%p 인상한다.

### 〈 2025년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

2024년					➡	2025년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정부지원 비율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정부지원 비율		
		1자녀		다자녀				1자녀		다자녀
		0~5세	6~12세					0~5세	6~12세	
가	75% 이하	85%	75%	본인 부담금의 10% 추가 지원	가	75% 이하	85%	75%	본인 부담금의 10% 추가 지원	
나	75%~120%	60%	30%		나	75%~120%	60%	40%		
다	120%~150%	20%	15%		다	120%~150%	30%	20%		
라	150% 초과	—	—	—	라	150%~200%	15%	10%	—	
					마	200% 초과	—	—	—	

또한 맞벌이 가정 등에서 근로자 자녀의 돌봄 공백이 발생한 경우(예: 일시돌봄, 병원동행, 하원지도 등)에 대응하여 직장어린이집을 통해 긴급돌봄서비스를 제공(65개소, 13억원)한다.

## 3) 주거지원 등

### 신혼·출산가구 주거안정 지원

저출생 대응을 위해 신혼·출산가구에 대한 주거안정 지원도 확대한다. 우선 2년내 출산한 가구 대상으로 저리의 구입·전세 자금대출을 공급하는 신생아 특례대출의 소득요건을 부부합산 연소득 1.3억원 이하에서 2.5억원 이하로 상향하여 보다 많은 가구를 지원한다.

또한, 시세 대비 저렴한 비아파트 든든전세 주택 3만호를 신규 공급하여, 신생아·다자녀 가구의 주거안정을 지원한다. 든든전세는 무주택 가구 대상 안전한 비아파트 전세주택을 공급하여 주거안정 사다리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시세 90% 수준 보증금의 전세주택을 신생아·다자녀 가구 대상 우선 공급하여 결혼·출산 여건을 개선한다.

### 다자녀 가구 지원

다자녀 가구 양육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다자녀 가구 대상 전기차 구매보조금 지원 한도를 기존 4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확대한다. 또한, K-패스 다자녀 유형은 신설해서 2자녀 가구 30%, 3자녀 이상 가구 50%로 할인율을 확대한다.

## 3-2 필수의료 확충·지역의료 복원(0.8→1.9조원)

붕괴 위기에 처한 필수·지역의료를 복원하고, 고령화 등 미래 대비를 위해 의료인력 양성, 필수·지역의료 인프라 확충 등을 포함한 의료개혁 4대 과제를 중심으로 2024년 대비 2배 이상 확대된 1.9조원을 집중 투자한다.

### 1) 전공의·의대(277억원→0.7조원)

필수의료분야 전공의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하고, 의대증원에 따른 의대 시설·장비 등을 지원하여 필수의료에 대한 전공의 유입 및 양질의 의료인력 양성을 추진한다.

필수의료 분야 전공의 수련을 위한 지도전문의 수당 등을 포함한 수련비용(전공의 정원 9천명 대상) 지원 및 수련병원(192개소)에 대한 시설개선을 위해 총 2,332억원을 신규로 지원하여, 전공의 수련교육의 질을 제고하는 한편 역량 있는 전문의를 체계적으로 양성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또한, 기존 소아청소년과에만 지급하던 수당지원(월 100만원)을 8개 필수과목 전공의 전체로 확대하고 전임의 수당 지원대상도 소아 청소년과에서 분만 전임의까지 확대하여 필수의료 분야 의료진에 대한 보상을 강화한다.

의대 증원이 의대 교육의 질 저하로 이어지지 않도록 의대 교육 여건 개선 및 교육혁신을 적극 지원한다. 의과대학을 보유한 9개 거점 국립대학을 대상으로 시설개선 및 실험실습 기자재 확충에 사용할 수 있도록 2025년 1,508억원을 신규로 지원하고, 사립대학에는 교육환경 개선 비용 충당이 가능하도록 기존 융자사업에 우대금리(1.5%)를 적용하여 지원한다. 한편, 정원이 증원된 32개 의과대학을 대상으로 대학별 특화 프로그램 개발 지원을 통해 의대 교육혁신을 촉진한다.

## 2) 필수의료(0.2조원→0.3조원)

소아·응급·분만·암 등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시설·장비 등 인프라투자를 확대하고, 운영비를 지원하여 국민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 기반 및 역량을 강화한다.

아이가 언제 어디서든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를 확충(12개소→14개소)하고, 소아환자 야간휴일진료센터(달빛어린이병원)도 2배 확대(45개소→93개소) 지원한다.

중증 응급환자를 살리기 위해 꼭 필요한 응급의료 전용헬기를 추가 도입(9대→10대)하는 한편 의료진의 출동 수당(1회 출동 시 30만원)도 신설하여 헬기 탑승 의료인력에 대한 인건비 지원도 강화한다. 한편, 각 소방서마다 1대씩 배치 예정인 특수목적 음압구급차는 14대에서 역대 가장 많은 56대로 대폭 확대된다.

지역암센터 지원을 2024년 1개소에서 2025년 3개소로 확대하고, 소아암센터(5개소)에 대한 최신 시설·장비비 25억원을 신규로 지원한다. 아울러, 양성자 암치료를 신규로 도입(179억원)하여 암 치료 고도화도 지원할 계획이다.

### 3) 지역의료(0.4조원→0.6조원)

권역책임의료기관 및 지방거점공공병원에 대한 인프라를 대폭 확충하고, 지역필수 의사제를 도입하는 등 지역 간 의료격차 불균형을 해소하도록 지원하며, 가까운 곳에서도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역완결적 의료체계를 구축한다.

지역의료를 총괄하는 권역책임의료기관(17개소)의 수술실 인프라첨단화 및 중환자실 시설·장비 개선에 815억원을 신규 지원하여 권역책임의료기관의 중증·고난도 질환에 대한 최종치료 역량을 강화한다. 지역거점공공병원(지방의료원 35개소, 적십자병원 6개소)에 대해서도 총 1,784억원을 투입하여 시설·장비 현대화 및 운영비 지원 등 지역주민들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인프라 지원을 강화한다.

심뇌혈관질환·외상·고위험 산모-신생아에 대한 중앙, 권역, 지역센터 간 협진을 위해 운영비 903억원을 지원하고, 중환자실 원격 협진을 위한 시스템 구축을 신규(2개 권역)로 추진한다. 또한, 취약지에 위치한 의료기관(응급·분만·소아청소년과·인공신장실)에 대해서도 시설·장비·운영비 등 총 446억원을 지원한다.

한편, 필수의료분야 전문의가 지역에서 장기간 근무할 수 있도록 지역근무 수당(4개 시도, 96명 대상, 월 4백만원)을 신설 등 지역 필수의료사업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 4) 안전망·R&D(0.2조원→0.3조원)

무과실 분만사고 보상한도 확대 및 필수의료 분야 의료진에 대한 책임보험료 지원 신설 등 의료사고 부담을 완화는 한편, 환자 대변인제 시범사업 추진 등 의료사고 피해자의 구제 절차도 강화한다. 또한 의료 R&D를 대폭 확대하여 현장 의료수요와 연계한 필수·지역의료 연구를 강화한다.

무과실 분만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금 한도를 10배 상향(3천만원→3억원)하여 의료사고 안전망을 강화하고, 소아과·분만 전문의 및 필수과목 전공의에 대한 책임보험료 30%를 신규로 지원하여 의료진의 소송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환자대변인제 시범사업 도입 등으로 의료사고 피해자를 신속히 구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지역병원 의료역량을 높여 중증질환 수술 등 어려운 진료도 믿고 받을 수 있도록 지역 국립대병원 전용 R&D를 신설(5개소, 신규)하여 임상연구, 연구인력 채용과 함께 연구장비까지 지역병원 수요에 맞춰 지원한다. 임산부·신생아 응급진료 등 지역 관점에서 제일 시급한 의료현안에 주목하는 문제 해결형 R&D도 착수한다. 한편, 보건의료 분야 국가 난제 해결 및 초격차 기술 확보를 위해 고위험·고수익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를 지속 강화(495→701억원)하고, 의사과학자 양성을 위한 경력별 맞춤형 연구지원 트랙을 내실화(413→768억원)할 계획이다.

### 3-3 청년의 힘찬 미래도약 지원

취업 애로, 세대간 경제적 격차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이 현실 문제를 해결하고 안정적으로 미래를 설계, 성장할 수 있도록 일자리·교육·주거·복지 등 청년의 삶을 종합적으로 지원한다.

#### 일자리

최근 고용상황의 전반적 호조에도 청년층이 체감하는 어려움은 지속되고 있다. 첫 직장을 구하는 데 장기간이 소요되고(2023년 10개월→2024년 12개월), ‘쉬었음’ 청년이 증가하였다(2023년 40.1만명→2024년 42.1만명). 한편, 중소기업은 구인난을 호소하고 있어 일자리 미스매치가 지속되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과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중점 지원한다. 먼저, 기업의 경력·수시채용 선호에 따라 직무경험의 중요성이 증가한 만큼, 청년 일경험

지원인원을 4.8만명에서 5.8만명으로 대폭 확대한다. 특히, 5일 내외 초단기·체험 위주인 기업탐방형 일경험 인원은 △500명 줄이고 실질적 직무경험이 가능한 인턴형(1~5개월), 프로젝트형(2개월 내외), ESG지원형 일경험 인원을 1만명 이상 확충한다.

아울러, ‘쉬었음’ 청년이 노동시장을 이탈하지 않도록 사전에 발굴·관리하여 맞춤형 일자리를 지원한다. 고용노동부와 교육부 간 협업을 통해 미취업 졸업생을 발굴하여 구직을 포기하지 않도록 지원한다. 국가장학금 신청 단계에서 획득한 개인정보를 고용보험 DB와 연계하여 졸업생들의 취업 현황을 파악한다. 이를 통해 미취업 졸업생을 발굴하고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에서 취업특강, 자격증 교육 등 특화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또한, 자신감이 결여된 구직단념청년의 구직의욕을 고취하고 취업역량을 강화하는 청년도전지원사업 인원도 9천명에서 1만2천명으로 확대한다.

중소기업 구인난 해소를 위해서는 ‘빈일자리 채움 3종 패키지’를 신설하여 지원한다. ①국민취업지원제도 내 빈일자리 업종 특화 훈련을 신설한다. 청년이 동 프로그램에 참여해 빈일자리 업종 기업에 취업하면 훈련참여수당과 취업성공수당을 추가 지원한다(최대 320→480만원). ②또한, 빈일자리 특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신설하여 빈일자리 업종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18개월 이상 근속하면 최대 480만원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③2년 이상 재직한 청년에게는 2~6개월의 기술연수도 지원한다.

## 교육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사업을 대폭 확대한다. 국가장학금 지원 대상을 기존 8구간(기준중위소득 200% 이하)에서 9구간까지 확대하여 지원 인원을 100→150만명까지 대폭 확대한다. 또한, 근로장학금 지원인원도 현재 14만명 수준에서 20만명까지 확대하고, 저소득 청년 대상 주거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주거안정장학금을 신설하여 기초·차상위 4.2만명을 대상으로 월 20만원씩 지원한다.

아울러, 첨단산업 중 미래 모빌리티 분야 인재양성을 위해 대학과 기업이 공동으로 단기 집중교육과정을 제공하고 채용까지 연계하는 부트캠프 2개교를 신규로 지원하는 등 총 44개교를 지원하고, 산업계 수요를 바탕으로 인재양성 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특성화대학도 7개교 확대(21→28개교)할 계획이다.

## 주거·자산

사회초년생인 청년에게 큰 부담으로 다가오는 주거비용 경감을 위한 지원도 확대한다. 우선 무주택 청년의 내집마련 지원을 위해 청년주택드림 대출을 출시한다.(7,508억원, 신규) 청년주택드림 대출은 '24. 2월 출시한 주택드림청약통장과 연계하여, 주택청약 당첨 시 분양가의 80%까지 최저 2.2%의 저리로 구입자금을 지원한다. 또한, 저소득 대학생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주거안정장학금도 신설한다. 원거리 대학으로 진학한 기초·차상위 대학생 4.2만명 대상으로 월 20만원을 지원한다.

아울러, 청년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청년도약계좌 지원을 더욱 강화한다. 기존 소득구간에 따라 40만원부터 70만원까지 차등화 되어있던 정부기여금 매칭 한도를, 소득과 관계없이 7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저소득 청년의 자산형성을 더욱 강화한다. 이에 따라 연소득 2,400만원 이하 청년의 경우, 만기수령금이 최대 약 60만원 증가하게 된다.

## 복지

고립·은둔 청년이 자립할 수 있도록 발굴·지원체계를 강화한다. 우선 고립·은둔청년 1,000여명 대상으로 '24. 8월부터 시행 중인 온라인 발굴, 정서·심리치료, 자조모임 등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시범사업이 2025년에도 원활히 수행되도록 지원한다. 또한 고립·은둔 청소년을 조기 발굴하여 상담, 학습 등을 통해 일상 회복을 지원하고, 재은둔·재고립 예방을 위해 '24.3월 도입한 '고립·은둔 청소년 원스톱 패키지 지원' 시범사업을 2025년에도 지속 추진한다.

청년 고독사를 예방·관리하여 소중한 생명을 보호할 수 있도록 관련 지원도 신설한다.

고독사 위험군을 적극 발굴하여 전국 80개 내외 시·군·구 5,000여명에게 멘토링, 마음톡(안부문자) 등 청년 고독사 예방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표 2-3] 청년 미래도약 지원 관련 주요사업 현황

(단위: 억원)

구 분	'24년	'25년	비고
청년 일경험 지원	1,718	2,141	청년 일경험 인원 확대 (4.8→5.8만명)
구직단념청년 지원	428	703	졸업생 특화 지원(5만명), 청년도전지원 인원 확대 (0.9→1.2만명)
빈일자리 채움 3종 패키지	—	822	빈일자리 특화 훈련, 도약장려금, 기술연수 지원
맞춤형 국가장학금	47,205	53,050	국가장학금 9구간까지 지원
청년주택드림대출	—	7,508	최저 2.2% 금리 대출

제1부

2025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및 제안서명

제2부

2025년도 나라살림

제3부

2025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 3-4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 1) 지역 인재 · 일자리 · 산업 혁신

##### 지역주도 대학지원 및 인재양성

지자체 · 대학이 주도적으로 지역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지역 인재를 양성하는 지역혁신 중심 대학지원체계 사업을 (2024년) 1.2조원→(2025년) 2.0조원 수준으로 확충한다. 과거에는 중앙정부가 대학 재정지원 권한을 보유하고 전국단위 표준화된 방식으로 지원함에 따라 대학과 지역의 발전계획간 연계가 미흡하였다. 그러나 2025년부터는 지역혁신 중심 대학지원체계의 본격 시행에 따라 지자체가 대학 재정지원 권한을 보유하고 지자체 발전계획과 연계한 지역 맞춤형 대학지원을 통해 지역대학의 세계적 수준으로의 혁신과 성장을 유도할 예정이다.

또한, 지역발전의 구심점 역할을 수행할 경쟁력 있는 지역대학 육성을 위해 글로벌 대학 지정을 (2024년) 20개교(+10)→(2025년) 25개교(+5)로 확대하고, 지역인재전형 확대 · 고도화를 통한 지역맞춤형 전문인력 양성 지원을 위해 (2025년) 17억원 규모의 지역인재육성지원 사업도 신설하였다.

##### 지역 청년 취 · 창업 단계별 맞춤 지원

지역의 청년들이 지역 내에서 교육을 받고 취 · 창업하여 정착까지 할 수 있도록 지역대학 내 창업부터 글로벌 진출까지 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추진한다. (2025년) 75억원 규모의 지역청년 취업 · 정착 패키지 사업을 신설하여 고용애로 지역기업 및 청년 구직자 채용연계, 지역특화산업 청년 전문인력 양성, 지역기업 재직청년 대상 주거비용 지원, 인근 청년과 교류비용 등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지역별 특화산업과 연계한 대학 내 창업지원 프로그램을 (2024년) 1개→(2025년) 10개로 확대하고 글로벌 진출 역량을 갖춘 지역의 우수한 스타트업들이 해외로 진출할 수 있도록 사전준비부터 현지 입주공간 확보, 정책사업 연계까지 지원하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100개사에 신규 지원할 것이다.

 지역 산업 스케일업

수도권에 버금가는 역동적 지역경제 조성을 위해 지역으로의 투자촉진과 지역 우수기업에 대한 R&D 지원을 확대한다. 지방으로의 기업 이전과 투자유치를 확대하기 위하여 지역투자촉진보조금의 투자건당 지원한도를 (2024년) 100억원→(2025년) 150억원으로 상향한다.

나아가, 지역혁신선도기업육성(R&D) 사업을 (2025년) 216억원 규모로 신설하여 비수도권 14개 시·도를 대상으로 지역경제에 기여도가 높은 지역 특화산업 분야의 유망 중소기업들이 지역대학, 연구소, 대·중견기업과 연계하여 전략 품목에 대한 기술 애로를 해소하고 스케일업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표 2-4] 지역 인재·일자리·산업 혁신 관련 주요사업 현황

(단위: 억원)

구 분	'24년	'25년	비고
지역혁신중심 대학 지원체계	12,025	20,010	지역에 지역대학 행·재정지원 권한 위임
지역청년 취업·정착 패키지	—	75	지역 맞춤형 청년 취업
지역투자촉진보조금	2,079	2,209	투자건당 지원 한도 상향 (100→150억원)
지역혁신선도기업육성(R&D)	—	216	비수도권 주력산업 분야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

2) 3·2·1 교통혁신과 교통불편 제로(0)에 집중투자

 도시·광역 교통망으로 “출퇴근 30분” 혁신

수도권과 지역 대도시에서 거주하는 주민들의 출퇴근 편의를 개선하기 위해 GTX와 도시철도망 구축에 집중 투자한다. GTX B 노선(인천→서울역, 95분→30분)과 C노선(덕정→삼성역, 75분→29분)건설을 위해 (2025년) 3,968억원을 투자한다. 한편,

울산 1호선과 대구 엑스코선 설계 착수를 위해 199억원을 지원하며, 대전 2호선(트램) 신규 착공을 위한 예산도 (2024년) 230억원→(2025년) 587억원으로 확대한다.

### 전국토 간선망 확충으로 “전국 2시간” 생활권 조성

국토 이동성 개선을 위한 도로 및 철도 시설 확충도 지속해나간다. 특히, 상습 정체를 겪고 있는 경부고속도로 용인-양재 구간에 지하 고속도로 신설을 위한 설계비 28억원을 신규 지원하고, 철도 지하화 선도지구 기본계획 수립비 20억원도 지원한다. 병목구간이 발생중인 평택-오송구간에 대한 선로 확대를 위해 2,500억원을 투입하며, 철도 고속운행을 저해하는 노후 선로시설도 181개소 개량한다.

### 신공항 건설로 “전세계 1일” 이동 도모

전국 어디서나 편리한 공항 이용을 위해 가덕도, 대구경북, 제주제2공항 등 신공항 건설예산을 (2024년) 7,080억원→(2025년) 1조 1,752억원으로 확대한다. 뿐만 아니라, 인천공항철도를 (2024년) 28개→(2025년) 37개로 증차 편성하는 등 공항 접근성도 제고한다.

###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으로 “교통불편 Zero” 구현

대중교통 이용부담 완화를 위해 K패스 지원대상자를 (2024년) 185만명→(2025년) 360만명으로 확대하고, 다자녀 가구에 대한 할인율도 (2024년) 20%→(2025년) 30~50%으로 높인다. 아울러, 준공영제 노선을 (2024년) 214개→(2025년) 250개로 확대하고, 연안여객항로도 (2024년) 11개→(2025년) 15개로 늘리는 등 생활밀착 필수노선을 확대한다.

[표 2-5] 지역 교통혁신 관련 주요사업 현황

(단위: 억원)

구 분	'24년	'25년	비고
가덕도신공항건설	5,362	9,640	'29년 공항 개항 위한 착공소요 반영
준공영제	998	1,638	준공영제 노선 214→250개로 확대

3) 지역 건설경기 회복을 위한 투자를 확대

 지방 주택시장 회복 지원

지방을 중심으로 미분양 주택이 누적되는 상황에서, 기축매입임대 지방물량과 임대주택 리츠출자 확대를 미분양 리스크를 완화한다. 기축 매입임대 공급물량은 (2024년) 1.0만호→(2025년) 1.3만호로 확대하고, 분양물량에 대한 임대전환 지원을 위해 임대주택 리츠 물량을 (2024년) 1.0만호→(2025년) 최대 1.5만호로 확대한다.

 지역밀착형 인프라 투자 확대

지역 건설사가 참여하면서, 주민의 생활 편의를 신속하게 높일 수 있는 소규모 인프라에 대한 투자도 (2024년) 6.4조원→(2025년) 7.3조원으로 확대한다. 우선, 정주인프라 개선을 위해 노후 저층주거지 환경개선사업을 (2025년) 30개소 신규 추진하며, 농촌정비사업도 (2024년) 92개소→(2025년) 122개소로 대폭 확대한다. 또한, 교통인프라 차원에서는 국도 병목구간을 100개소 신규 개선하며, 노후 교량·터널 보수물량도 (2024년) 2,513개→(2025년) 2,698개로 확대한다. 마지막으로, 안전 인프라 차원에서는 32km 구간의 국도 배수장비를 신규 교체하며, 286개소 농촌 배수시설 보수도 진행한다.

[표 2-6]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 관련 주요사업 현황

(단위: 억원)

구 분	'24년	'25년	비고
도로병목지점 개선	2,608	2,940	신규 100개소 병목지점 개선
도로안전 및 환경개선	10,783	11,343	노후 교량·터널 보수 2,513→2,698개

## 4. 안전한 사회, 글로벌 중추 외교

### 4-1 신유형 · 고강도 재해에 대한 체계적 예방과 대응

#### 1) 복합화재 대응(0.9→1.2조원)

전기차 배터리 화재 및 사업장 화학사고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연구개발 투자 확대 및 장비보강을 위한 지원을 강화한다.

##### 장비확충

배터리 과충전 제어와 이상징후 모니터링이 가능한 전기차 스마트 제어 충전기 보급 확대(2.3→9.5만기)한다. 질식소화덮개 등 일반장비로 진압이 어려운 전기차 화재 특수진압장비 신규도입(3종 63개)하고, 전기버스, 샌드위치 패널에 효과적으로 대응가능한 무인파괴방수차를 미보유한 시도에 6대를 추가도입한다. 또한, 대용량포 방사시스템 호남권 추가 구축(2→3개 권역, +92억원)하여 3대 정유화학 단지 배치 완료로 전국 단위 대응 체계를 구축 예정이다.

##### 기술개발

전기기반 모빌리티 화재사고 등 새로운 유형의 재난사고 대비 · 대응을 위한 리튬금속 적용 소화약재 개발,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 대응 등 관련 기술투자도 확대한다.(39→129억원) 리튬기반 배터리 제조 및 저장취급시설 안전을 위한 기술개발도 신규로 소방청 · 과기부 · 국토부 · 산업부 등 다부처 사업으로 추진한다.(50억원)

#### 2) 자연재해 예방 및 대응(4.7→5.2조원)

최근 이상기후로 인해 증가하는 집중호우, 태풍, 폭염 및 지진 등 자연재난에 대비하고, 재난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인프라 시설을 지속 보강한다.

## 집중호우

재해예방사업 효과 극대화 위해 개별시설 위주의 정비에서 지역단위 생활권 종합정비 사업으로 추진체계 전환한다.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재해위험 저수지 및 급경사지 정비 등 개별 신규사업은 축소하되, 풍수해 종합정비사업은 대폭 확대한다(신규 18→35개소). 또한, 태풍·호우 시 하천범람 등 침수로 인한 인명피해 방지 위해 하상도로에 자동차단시설 설치사업을 신규 지원한다(60억).

## 폭염

여름철 폭염 시기 가속화 등 이상기후에 따라 택배·건설근로자 등 취약 근로자의 온열질환으로 인한 사망사고 지속 발생함에 따라, 옥외 및 옥내 취약 근로자를 위한 지원사업을 확대한다. 폭염질환 예방 설비(그늘막, 이동식에어컨 등) 확대지원을 통해 근로자들이 안심할 수 있는 일터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기존 3천개소→5.4천개소)

## 지진대응

지진 예방·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내진성능 인증 지원을 확대한다(60건→120건). 민간 수요가 낮은 민간건축물 내진보강 직접 지원사업은 폐지하고 체계적인 대책 수립을 위한 용역 추진한다. 또한, 지진관측망 확충 및 운영사업을 확대(95억→108억)하여 관측 조밀도 향상 및 지진 탐지시간을 단축할 예정이다.

## 4-2 첨단·과학수사와 국민 권리구제 강화

### 1) 범죄대응(0.3→0.4조원)

마약, 보이스피싱, 딥페이크 등 첨단지능범죄에 대한 대응과 범죄 피해자 지원을 강화한다.

## 마약

마약 시중유통을 근절하기 위한 예산을 확대하고, 현장단속, 예방 및 홍보에도 집중 투자한다.

마약 국내유입을 막기 위해 공항·항만 등 국경 차단, 다크웹·가상 자산 추적을 통한 감시 등 시중유통 단속 예산을 대폭 확대한다. 구체적으로 수사관 국제공조 확대, 수중드론 도입, 마약견센터 신축 등으로 공항 및 항만 유입을 차단하고, AI 다크웹 모니터링 24시간 감시체계, 가상자산 추적서비스 등을 활용하여 일상 속 유통행위 근절에 집중한다.

또한 마약 우범지대에 대한 현장단속을 강화하고, 확산 추세를 보이고 있는 10대 청소년 마약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홍보예산도 확대한다. 특히 모바일 포렌식, 휴대용 이온스캐너 등 첨단장비와 비노출차량을 활용한 현장단속을 지원하고 부처협업을 통한 예방·홍보를 강화한다.

###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

최근 서울대 N번방 사건 등 딥페이크를 활용한 디지털 성범죄가 급증하여 국민들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어, 관련 장비 도입 및 수사 지원을 위한 예산을 대폭 확대한다.

AI 기반 영상 및 음성 분석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관련 기술 개발예산을 확대하여 수사역량을 강화하고, 신속한 피해자 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뒷받침한다.

### 위해제품

코로나19 이후 세계 온라인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해외직구도 대폭 확대되어 안전, 소비자 피해 등 다양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 관련 검사 비용, 인프라 지원 및 단속인력 교육을 위한 예산을 신설·강화한다.

수입유통식품 구매검사 및 위해성분 조사·연구를 확대하며, 온라인 위조상품 모니터링 및 판매게시물 차단을 추가 지원한다.

또한 해외직구물품의 통관 단계에서 효율적으로 위해제품 차단을 위해 특송물류센터 인프라를 보강하고, X-ray 판독요원을 육성하기 위한 전문 교육센터를 설치한다.

## 2) 국민 권리구제(0.2→0.3조원)

국민들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보장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고, 국선변호인 지원을 강화하며, 피해자 보호에 집중 투자한다.

### 재판지연 해소

‘신속한 재판 구현’ 구현을 위해 사법부의 제도적·인적·물적 개선을 지원한다. 감정절차 지연 방지를 위해 감정관리위원 19명을 신규로 위촉한다. 전자소송 활성화를 위해 재판기록 전자화 예산을 대폭 확대(‘24년 146→’25년 214억원)한다. 고등·지방법원장의 재판업무 점검을 지원(월 50만원)하여 재판 Know-How를 활용한 재판처리 속도 향상을 도모한다. 재판업무를 지원하는 재판연구원을 400명에서 480명으로 80명 증원한다. 또한 재판건수가 전국 1위인 서울법원종합청사 공간 재배치를 통해 4개 법정을 추가로 확보하여 더 많은 재판을 수행할 수 있는 물적 자원도 확보한다.

### 국선변호인

피고인 전담 국선변호사 수를 확대(+20명)하고, 피해자 전담 국선변호사 보수를 경력에 따라 차등화(600/700/800만원)하여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고, 범죄 수사 및 재판 전 단계에서 피해자 권리를 보장한다.

### 피해자 지원

범죄피해자의 경제적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생계비와 장례비 지원 상한을 역대 최고 수준으로 확대(생계비: 1인가구 월 50→70만원, 장례비 400→500만원)하고, 지원기간(최대 6→12개월)도 확대한다.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밀착경호 서비스를 현재 수도권에 한정되어 있는 규모를 전국으로 확대(100→350명, +18억원)하여 피해자 신변보호에 집중 투자한다.

### 4-3 군 자금심 고취와 강한 군대 육성

2025년 국방비(일반회계) 규모는 61.2조원으로 2024년 59.4조원 대비 3.1% 증가한 규모이다. 전력운영비 규모는 43.4조원으로 2024년 대비 3.9% 증가하였으며, 병 봉급 인상, 장병 복무여건 개선, 군 간부 주거여건 개선, 장병 전투역량 강화 등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다. 방위력개선비 규모는 17.8조원으로 2024년 17.7조원 대비 1.1% 증가하였으며, 한국형 3축체계 강화 및 무인대응체계 확충 등 첨단전력 확보를 중점 추진한다.

#### 1) 군 복무여건 및 처우 개선

##### 병 봉급 인상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지급하기 위해 병 월급을 2025년 200만원 수준으로 인상한다. 병 봉급(병장기준) 월 125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인상하고(32,655→37,093억원), 병사의 적금납입원금에 일대일로 매칭하는 정부재정지원금을 최대 월 40만원에서 55만원 수준으로 인상한다.(10,191→13,277억원)

##### 장병 복무여건 개선

장병 동계 복무여건 개선 및 유사시 전투임무 수행능력 향상을 위해신형 전투피복체계를 도입한다(기존9종→기능성4종). 병사 눈높이에 맞는 병영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4인실 생활관을 확충(187동, 782억원)하고, 병영식당 리모델링(52동)도 추진한다. 또한, 전역자 침구류 세탁 민간위탁 확대 및 수통 마개 교체 등 위생 여건 개선에도 적극 투자한다. 이외 장병들에게 수준 높은 진료 여건을 제공하기 위해 수도병원 중증 외상환자 재활센터와 구리병원 치유회복센터를 신축하며, 장기군외관 응급진료보조비도 신설한다.

## 군 간부 주거여건 개선

초급간부 및 군인 가족 주거여건 개선을 위해 간부 주거시설 예산을 대폭 확대(5,260→7,863억원)한다. 퇴근 후 휴식 보장과 잦은 이사 여건을 감안해 초급간부에게 풀옵션 1인 1실 간부숙소(2,267실)를 제공한다. 다자녀 군인 가족을 위해 국민평형(전용 85㎡, 484세대) 관사 소요를 확대 반영한다. 또한, 여군의 근무여건 보장을 위해 여성 화장실(470개소), 여성샤워실·탈의실(280동) 등 여성필수시설을 확충한다.

## 2) 장병 전투역량 강화

장병들이 첨단과학화체계에 기반한 실가동·실사격 전술훈련을 할 수 있도록 과학화 훈련장을 확충(4개소→9개소)하고, 실기동모의훈련장비(마일즈장비)를 신규 도입한다. 또한, 도시지역작전훈련 간 실전적 훈련이 가능하도록 과학화훈련체계(3개소)를 신규 구축하고, 전투체육 기본여건 조성을 위해 실내전투체육관 확충(18동) 및 연병장현대화(11개소)에 집중 투자한다. 더 나아가, 최상의 전투력 발휘 및 개개인 생존성 강화를 위해 웨어러블 플랫폼 장비 보급률을 확대(54.8%→71.1%)한다.

## 3) 첨단 기반 전력 증강

### 한국형 3축체계 고도화

북 핵·미사일 위협 대비 압도적 대응능력 구축을 위해 길체인(F-35A 2차, 장보고-III Batch-II 등),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장거리지대공유도무기, 장사정포요격체계 등), 대량응정보복능력(특수작전용대형기동헬기 등) 등 무기체계 전력화 강화에 중점 투자한다(5.8조원→6.1조원).

## ☞ 첨단전력 등 전투능력 보강

인구절벽에 따른 병력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무인대응체계(중거리자폭드론, 레이저대공무기 등)를 확충하고, 미래 전장환경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우주·사이버·전자기 등 新영역 전투수행능력 강화(해상작전위성통신체계-Ⅱ 등), 국산 첨단전투기(KF-21) 도입(보라매 최초양산) 등 첨단전력 도입에 중점 투자한다(1.9조원 → 2.8조원).

## 4) 일류보훈체계 구축

### ☞ 국가유공자 보상금 3년 연속 5.0% 인상

국가를 위해 희생·헌신한 국가유공자가 영예로운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보상금을 3년 연속 5% 인상하고, 보훈대상자간 보상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지급액이 적은 7급 상이자 보상금을 2%, 6·25전몰군경 자녀 중 신규승계 자녀수당을 8.3% 추가 인상한다. 또한, 참전명예수당(월 42→45만원), 무공영예수당(월 48~50→51~53만원), 4·19혁명공로수당(월 43.1→46.1만원)을 각각 3만원 인상한다

### ☞ 보훈문화 확산 및 보훈대상 지원 강화

2025년은 광복 80주년이다. 이에 ‘범국민 감사캠페인’, ‘국민통합 문화예술축제’ 등 추진을 위해 87억원을 반영하였다. 또한, 국내 독립운동을 폭넓게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국내민족독립운동기념관 설계비 4.4억원을 반영하였다.(2027년까지 총사업비 250억원 투입) 그리고 전사·순직한 군인·경찰·소방관의 자녀를 정서적으로 지원하는 히어로즈 패밀리 사업 확대 추진을 위해 8.8억원을 반영하여 일상 속의 보훈문화를 확산한다.

제대군인의 안정적 구직활동 지원을 위해 지급하는 전직지원금을 2025년부터 장기복무 제대군인은 월 77만원에서 81만원으로, 중기복무 제대군인은 월 55만원에서 58만원으로 5% 인상하여 지원한다.

## **보훈의료서비스 제고**

고령 국가유공자가 집 가까운 곳에서 진료를 받을수 있도록 위탁병원 100개소를 추가 지정하여 1,000개소(목표)까지 확대한다. 또한, 보훈가족의 간호·간병 부담 경감을 위해 보훈병원 간호·간병 통합 병상을 전체 병상의 50%인 1,127개까지 확대한다.

## **국립묘지 안장능력 확대 및 접근성 강화**

보훈대상자에게 마지막까지 예우를 다하기 위한 국립묘지 안장능력 확충을 위해서도 지난 2018년부터 총사업비 1,301억원을 투입하여 추진 중인 이천·영천·임실호국원의 안장시설 확충(9.5만기) 사업을 2025년에 완료함으로써 보훈대상자의 고령화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안장 수요 대비에도 만전을 기할 것이다.

### **4-4 전략적 외교·ODA로 국익 창출**

우리나라는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제사회에 대한 기여를 확대하고 국제사회의 주요 의제를 선도할 것이다. 우선 공적개발원조(ODA) 규모를 경제 위상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확대하여 수원국에서 공여국으로 전환한 우리나라의 경험을 적극 공유하고, ODA를 통해 우리 기업과 청년들의 해외진출 및 공급망 확보 등 국익과 연계하여 추진할 것이다. 또한 20년 만에 우리나라에서 개최되는 경주 APEC 정상회의를 적극 지원하는 한편,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금 인상 등 북한 인권 제고를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 **1) ODA 확대 및 우리기업·청년 해외진출 강화**

### **경제적 위상에 걸맞은 기여를 위해 ODA 확대(6.3→6.6조원)**

2025년 ODA 예산은 전년대비 4.2% 증가한 6.6조원 수준이다. 그간 ODA 규모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ODA 순위는 OECD DAC 회원국 31개국 중 14위(31억달러), ODA/

GNI 비율은 전체 28위(0.18%)로 국격에 부합하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 세계 주요국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ODA 규모를 지속 확대하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국제위상 및 국제사회에서의 책임과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2025년 ODA 유·무상 지원을 확대하였다.

금번 ODA 확대로 작년에 이어 2030년까지 2019년(3.1조원) 대비 2배 확대한다는 기존 목표를 조기 달성한다. 또한, 확대된 ODA를 바탕으로 우리 기업과 청년들의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성장잠재력이 높고 자원이 풍부한 아프리카, 중앙아시아 등 전략지역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가 강점을 가진 그린·보건·디지털 분야 등 전략분야에도 집중 지원할 것이다.

### ODA를 활용한 우리 기업·청년의 해외진출 연계

유상 ODA 지원을 위한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대개도국 차관 예산을 5.8% 확대(20,320→21,500억원)하여 우리 기업들이 해외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높인다. 특히, 우리 금융기관을 활용하여 개도국 현지의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민간협력전대차관을 신설(1,297억원)하고, 개발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현지에서 ODA 사업의 전체적인 과정을 밀착 관리하는 컨설턴트(48억원)도 지원한다.

또한, 우수한 청년 인재들의 글로벌 진출 기회를 확대하고, 외국인 우수인재도 적극 양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해외봉사단을 5천명에서 6천명으로 확대하여 개도국을 지원함과 동시에 청년들의 해외경험을 지원하고, 외국인 장학생도 6천명에서 7천명으로 확대하여 해외 우수인력을 적극적으로 유치할 계획이다.

### 유·무상 연계를 위한 협업 ODA 확대

부처별 유·무상 사업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협업 ODA를 강화한다. 이를 위해 이집트 철도 현대화 패키지, 가나 농업 패키지 등 협업 프로젝트 6개를 추진(1,447억원)하여 사업기획 단계부터 현지 중심으로 다수 부처의 협업을 지원하고, 유·무상 연계를 통한 사업 효과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TIPS 우수기업의 현지실증 ODA 지원을 강화하고, 수원국 학생들의 직무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현지 한국어교육 및 국내 현장실습 지원도 확대한다.

(단위: 억원, %)

구 분	2024년 (a)	2025년 (b)	증감률 ((b-a)/a)
■ ODA 규모	63,181	65,835	4.2
- EDCF 대개도국차관(기재부)	20,320	21,500	5.8
- 협업 패키지(다부처)	—	1,447	순증

## 2) 글로벌 중추국가 역할 강화

### 2025 APEC 정상회의

2005년 부산 APEC 정상회의 개최 이후 20년 만에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의 의장국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25→1,008억원)함으로써 글로벌 중추국가 역할을 강화하고, 개최지인 경상북도 경주시 및 관계부처와의 긴밀한 협업 체제를 유지·강화하여 내년도 APEC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할 계획이다.

### 2025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 등

2024년 6월 발표한 ‘한-중앙아시아 K 실�크로드 협력구상’의 일환으로 2025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를 개최(69억원)하여 중앙아시아와의 호혜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협력 관계를 강화함으로써, 2023년 한-태평양도서국 정상회의, 2024년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에 이어 전략지역과의 외교지평을 확대하고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국가 간 연대와 협력을 강화한다. 또한 2025년도에 수임예정인 므타(MIKTA\*) 의장국 활동을 지원(1.6→2.4억원)하여 전략적 소다자 무대 영향력을 확대한다.

\* MIKTA : 멕시코, 인도네시아, 한국, 튀르키예, 호주 5개국으로 구성된 중견국간 협의체

(단위: 억원 %)

구 분	2024년 (a)	2025년 (b)	증감률 ((b-a)/a)
2025 APEC 의장국	25	1,008	3,998.8
2025 한-중아시아 정상회의	—	69	순증
MIKTA 중견국 외교	1.6	2.4	50.0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강화**

북한이탈주민 정착기본금 제도 도입('05~) 이후 1인당 지원 단가를 역대 최대폭으로 인상(전년대비 50%, 1천만원→1천5백만원)하여 국내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의 초기 정착 지원을 강화한다. 또한, 탈북청소년 교육기관 환경개선(4억원), 탈북대학생 한미연수프로그램 지원(2억원), 제3국 출생자녀 한국어 교육 지원(1억원) 등을 통해 탈북청소년의 교육 지원을 확대하고, 탈북민 창업보육센터 운영(6억원)을 통해 북한이탈주민의 취업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사회 협력**

북한주민의 인권 보호 및 개선을 위한 국제사회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북한인권 국제회의」를 확대 개최(2→3회, 10→12억원)하고,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정부, 민간, 시민사회(NGO) 협력의 핵심 인프라로서 「국립북한인권센터」 건립을 추진한다. 또한, 광복 80주년 기념사업으로 매년 주요국 정부 인사와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한반도 국제포럼(KGF)을 국제한반도포럼(GKF)으로 확대·개편(8→16억원)하여 북한인권, 북한 핵문제, 한반도 통일 등 다양한 의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6.25 전시 및 전후 납북자 피해 관련 공감대 확산을 위한 국제행사 개최 등(0.6→2억원)을 통해 북한 인도적 문제해결을 위한 국제사회 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단위: 억원 %)

구 분	2024년 (a)	2025년 (b)	증감률 ((b-a)/a)
북한이탈주민 정책 및 지원체계 운영	160	169	5.6
북한인권 개선 정책수립	58	124	113.8

## 03

## 주요 분야별 자원배분



(단위: 조원)

구 분	'24년 본예산 (A)	'25년 본예산 (B)	증감 (B-A)	증감율
총지출	656.6	673.3	16.7	2.5%
1. 보건·복지·고용	237.6*	248.7	11.1	4.7%
2. 교 육	95.2*	98.5	3.3	3.5%
3. 문화·체육·관광	8.7	8.8	0.1	0.6%
4. 환 경	12.5	13.0	0.5	3.8%
5. R&D	26.5	29.6	3.1	11.5%
6. 산업·중소기업·에너지	28.0	28.2	0.2	0.7%
7. SOC	26.4	25.4	△1.0	△3.8%
8. 농림·수산·식품	25.4	25.9	0.5	1.8%
9. 국 방	59.4	61.2	1.8	3.1%
10. 외교·통일	7.5	7.7	0.2	2.3%
11. 공공질서·안전	24.4	25.0	0.6	2.3%
12. 일반·지방행정	110.5	110.7	0.1	0.1%

\* 유보통합에 따라 '24년 보육사업 예산을 복지분야에서 교육분야로 이관한 후의 규모

# 제 3 장

## 분야별 투자계획

- |                   |                  |
|-------------------|------------------|
| 1. 보건·복지·고용 분야    | 7. SOC 분야        |
| 2. 교육 분야          | 8. 농림·수산·식품 분야   |
| 3. 문화·체육·관광 분야    | 9. 국방 분야         |
| 4. 환경 분야          | 10. 외교·통일 분야     |
| 5. R&D 분야         | 11.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
| 6.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 | 12. 일반·지방행정 분야   |



2025

나라살림 「예산개요」

## 01

## 보건·복지·고용 분야



## 1-1 재정지원 방향

2025년 보건·복지·고용분야 재정투자 규모는 248.7조원이며, 총지출 대비 비중이 37% 수준으로 12대 분야 중 가장 비중이 크다. 저소득층·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더욱 두텁게 지원하고, 초저출생 반전을 위해 일·가정양립, 양육·돌봄, 주거 등 3대 핵심분야에 집중 투자한다. 아울러, 의료개혁을 차질없이 뒷받침하기 위해 필수·지역의료에 대한 지원도 획기적으로 확대한다.

 기초수급자·노인·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맞춤형 보호 강화

기초수급자를 더욱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기준중위소득을 3년 연속 역대 최대인 6.42% 인상하여 4인 가구 기준 연간 최대 생계급여 지급액을 2,200만원→2,341만원으로 확대한다. 또한, 부양의무자 예외 적용기준 완화, 노인 근로소득공제 확대 등을 통해 3만가구를 추가로 지원한다. 의료급여의 경우 부양비를 인하하여 사각지대를 완화하는 한편, 외래 진료시 이용 가능한 건강생활유지비 지원을 월 6,000원에서 월 12,000원으로 2배 인상한다.

노인일자리 수는 103만명에서 110만명으로 확대하여 노인인구의 10% 이상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기초연금은 월 33.4만원에서 34.4만원으로 인상하여 소득안정을 뒷받침하고, 고령자 맞춤형 복지주택 공급을 연간 1천호에서 3천호 수준으로 확대한다.

장애인의 경우 최중증 발달장애인 가족의 돌봄부담 경감을 위해 긴급돌봄센터를 2개소 신설하고, 의료집중형 거주시설도 시범 도입한다. 한편, 장애인 돌봄 수요 충족을 위해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도 12.4만명에서 13.3만명까지 확대한다.

한부모 가족에 대해서도 안정적인 양육 환경 조성 등을 위해 양육비 미이행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구에 국가가 양육비를 선지급하는 양육비 선지급제(자녀 1인당 월 20만원 지원)를 도입하고,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단가를 월 21만원에서 23만원으로 인상 지원한다.

### 일·가정양립, 양육·돌봄, 주거 등 3대 출생장벽 완화 지원

유례없는 초저출생 상황을 반전시키기 위해 청년들의 희망하는 일·가정양립, 양육·돌봄, 주거 등 3대 분야에 집중 투자한다.

먼저, 충분한 육아시간 보장을 위해 육아휴직급여 상한을 150만원에서 최대 250만원까지 대폭 상향하고, 단기 육아휴직(연 1회, 2주)을 신규 도입한다. 남성 맞돌봄 활성화를 위해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지원도 5일에서 20일까지 대폭 확대한다. 사업주와 동료의 부담도 경감할 수 있도록 대체인력지원금을 월 8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인상하고, 육아휴직 업무분담지원금(월 20만원)도 신설한다.

또한, 양육·돌봄 부담 경감을 위해 아이돌봄서비스의 지원기준과 비율을 대폭 확대한다. 지원대상을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에서 200% 이하까지 확대하고, 정부 지원비율도 5~10%p 수준 상향한다. 또한, 맞벌이 가구의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직장어린이집 긴급돌봄서비스도 신설한다.

신혼·출산가구의 주거부담 경감을 위해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 요건을 1.3억원 이하에서 2.5억원 이하로 완화하고, 시세 대비 저렴한 비아파트 전세주택을 3만호 공급한다.

### 전공의 지원, 필수·지역의료 강화 등 의료개혁 뒷받침

먼저 필수과목 전공의에 대한 수련비용을 0.3조원 규모로 신규 지원하고, 월 100만원의 전공의 수당 대상을 1개과(소아과)에서 8개과(소아과, 내과, 외과, 산부인과, 응급의학과, 흉부외과, 신경과, 신경외과)로 확대하여 필수과목 의료진 양성을 적극 뒷받침한다.

소아, 응급, 암 등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투자도 확대한다. 야간 진료가 가능한 달빛어린이병원을 2배 수준 확대(45→93개소)하고, 응급헬기와 특수목적 음압구급차를 확충한다. 또한, 소아암센터 장비를 확충하고, 양성자 암치료를 도입한다

지역의료기반 확충을 위해서는 17개 권역책임의료기관, 지방의료원 및 적십자병원의 시설·장비 현대화하고, 중앙-권역-지역간 협진을 위한 운영비도 지원한다.

한편,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을 위해 분만사고 보상한도를 0.3억원에서 3억원까지 확대하고, 필수과목 관련 의료진에 대한 보험료도 신규로 지원한다.

[표 1-1] 보건·복지분야 재정투자 계획

(단위: 억원, %)

구 분	2024년 (a)	2025년 (b)	증감률 ((b-a)/a)
합 계	2,376,050	2,487,466	4.7
기초생활보장	208,225	218,616	5.0
취약계층지원	55,018	58,322	6.0
사회복지일반	10,554	10,820	2.5
아동·보육	55,585	52,304	△5.9
여성·가족·청소년	16,861	17,383	3.1
노인	256,483	274,413	7.0
주택	374,239	355,911	△4.9
공적연금	808,644	883,794	9.3
보훈	64,798	65,375	0.9
건강보험	137,070	141,277	3.1
보건의료	44,125	47,958	8.7
식품의약품안전	7,237	7,544	4.2
고용	222,983	235,801	5.7
노동	107,712	111,048	3.1
고용노동일반	6,516	6,899	5.9

※ '24년 보육예산 이관(복지→교육분야)하여 통계 산출

## 1-2 부문별 주요 지원내용

## 기초생활보장 부문

기초생활보장제도 보장성을 높이고, 제도개선을 통해 지원 범위를 넓혀 사각지대를 완화하고, 자활·자산형성 지원 등을 통해 탈수급·자립기회를 확대한다.

☞ (2024년) 20조 8,225억원→(2025년) 21조 8,616억원 (5.0% 증가)

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 선정 기준이자 생계급여 최대지급액에 영향을 주는 기준중위소득이 3년 연속 역대 최고 수준인 4인가구 기준 6.42% 인상된다. 특히, 수급자의 80%를 차지하는 1인 가구는 가중치 상향에 따라 전년 대비 7.34% 인상된다.

## 〈 기준중위소득 및 급여별 선정기준(원) 〉

구분		'24년	'25년	증가율	비고
■ 기준중위소득(4인 가구)		5,729,913	6,097,773	+6.42%	
(1인 가구)		(2,228,445)	(2,392,013)	(+7.34%)	
4인 가구	생계급여 (기준중위소득 32%)	1,833,572	1,951,287	+6.42%	선정기준 = 월 최대급여액
	의료급여 (기준중위소득 40%)	2,291,965	2,439,109	+6.42%	건강생활유지비 0.6→1.2만원/월
	주거급여 (기준중위소득 48%)	2,750,358	2,926,931	+6.42%	기준임대료 4인 (1급지): 52.7→ 54.5만원/월
	교육급여 (기준중위소득 50%)	2,864,956	3,048,887	+6.42%	고교생 교육 활동지원비: 72.7→76.8만원

생계급여는 기준중위소득을 3년 연속 역대 최고 수준인 6.42%를 인상하여 4인가구 기준 연간 최대 생계급여액을 2,200만원에서 2,341만원으로 141만원 확대한다. 또한,

부양의무자 예외 적용 기준 완화(소득 1.0→1.3억원, 재산 9→12억원), 노인근로소득 공제 확대(30%→20만원+30%), 일반재산 환산율 적용 자동차 기준 완화등을 통해 3만 가구를 추가로 지원한다.

의료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를 통해 저소득층의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지원한다. 부양의무자의 소득 중 수급자에 소득으로 이전된다고 간주하는 비율인 부양비를 15~30%에서 10%로 인하하여 0.3만명에게 신규로 의료급여를 지원한다. 한편, 외래 이용시 활용 가능한 건강생활유지비를 월 6,000원에서 월 12,000원으로 상향한다.

주거급여의 경우 임차 가구에 대해서는 기준임대료를 지역·가구별 3.2~7.8% 수준 인상하고, 자가가구의 경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20년 이후 동결된 수선유지급여를 29% 수준 대폭 확대한다.

교육급여는 초·중·고 교육활동지원비가 평균 5.0% 인상된다.

[표 1-2] 기초생활보장 부문 주요 변동내역

(단위: 억원, %)

구 분	2024년 (a)	2025년 (b)	증감률 ((b-a)/a)	비 고
부문 계	208,225	218,616	5.0	
생계급여	75,411	84,900	12.6	4인가구 최대급여액 6.42% 인상, 부양의무자 예외적용 기준 완화
의료급여	89,377	86,880	△2.8	부양비 인하, 건강생활유지비 2배 인상
주거급여	27,424	30,368	10.7	수선유지급여 29% 인상
교육급여	1,604	1,652	3.0	교육활동지원비 초·중·고 평균 5.0% 인상
긴급복지	3,585	3,501	△2.3	생계지원금 2.1%
자활사업	7,499	8,206	9.4	지원인원 6.9→7.2만명 확대

## 취약계층지원 부문

최중증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 신설 등 사각지대 없는 장애인 돌봄 체계를 구축하고, 미등록 장애아를 위한 발달재활서비스 연령을 상향하여 지원을 강화한다.

☞ (2024년) 5조 5,018억원→(2025년) 5조 8,322억원 (6.0% 증가)

최중증 장애인과 발달장애인은 보호자 긴급상황 발생시 돌봄지원 체계가 미비하고, 24시간 치료 가능한 거주시설이 부재하여 돌봄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이에, 긴급돌봄 센터를 신설(2개소)하여 보호자 부재시 안심 돌봄을 제공한다.

또한 장애인 활동지원 바우처의 이용 시간(131→135시간)과 지원인원(12.4→13.3만명)을 확대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가족의 돌봄 부담을 줄인다.

아울러 미등록 장애아동에게 제공하는 발달재활 서비스를 기존 6세에서 9세까지 상향하여 성장기 장애아동의 행동 발달을 지원한다. 또한, 24시간 의료지원이 필요한 최중증 장애인에게 간호인력과 의료장비가 도입된 맞춤형 의료집중형 거주시설도 신규 지원한다.

장애인이 개인별 이용계획에 따라 활동지원액의 일부(20%)를 일상생활에 필요한 재화·서비스를 선택해 활용할 수 있는 개인예산제 시범사업을 전국으로 확대(8→17개 시도)한다. 또한, 온·오프라인 동시 신원확인이 가능한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을 도입하여 생활 편의성을 대폭 강화한다.

[표 1-3] 취약계층지원 부문 주요 변동내역

(단위: 억원, %)

구 분	2024년 (a)	2025년 (b)	증감률 ((b-a)/a)	비 고
부문 계	550,118	58,322	6.0	
발달장애인지원	3,577	4,030	12.6	돌봄확대(2.1→2.3만명) 최중증 긴급돌봄센터 2개소 신설
장애인활동지원	22,846	25,323	10.8	인원(12.4→13.3만명), 시간(131→135시간)
장애아동가족지원	1,940	2,327	10.4	미등록 장애아 지원 확대 (6세→9세 미만)

 사회복지일반 부문

고독사 위험군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일상돌봄·긴급돌봄 지원, 사례관리사 처우개선 등을 통해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복지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 (2024년) 1조 554억원→(2025년) 1조 820억원 (2.5% 증가)

청년층의 경우 중장년·노인과 달리 장기화 가능성이 높아 조기 개입이 필요한 점을 감안, 기존 고독사 위험군 지원과 분리하여 맞춤형 지원을 신설한다. 약 5천명을 대상으로 대한 심리상담, 멘토링 프로그램, 자조모임, 취업지원 등을 실시하여 청년들이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한다.

가족돌봄청년,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 등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일상돌봄 서비스와 질병·사고 등으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분들을 지원하기 위한 긴급돌봄 사업을 지속 지원한다.

또한, 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취약계층을 발굴하여 지속적인 상담을 통해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연계·제공하고,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수행하는 사례관리사 인건비를 3% 인상한다.

[표 1-4] 사회복지일반 부문 주요 변동내역

(단위: 억원, %)

구 분	2024년 (a)	2025년 (b)	증감률 ((b-a)/a)	비 고
부문 계	10,554	10,820	2.5	
고독사 예방 관리체계 구축	29	66	131.3	청년고독사위험군 지원(0.5만명) 신설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433	390	△9.7	일상돌봄 6,000명 긴급돌봄 10,000명
사례관리 전달체계 개선	1,650	1,709	3.6	사례관리사 인건비 3.0% 인상

## 아동·보육 부문

출생아 수 감소 전망 등에 따른 아동 부문 총 예산은 감소하나, 돌봄지원 강화 및 취약아동 사각지대 해소를 추진한다.

☞ (2024년) 5조 5,585억원→(2025년) 5조 2,304억원 (5.9% 감소)

출생아 수 감소 전망 등에 따라 부모급여(영아수당), 아동수당, 첫만남이용권 예산은 감소하나, 다함께돌봄센터 개소수 확대(1,306→1,484개, +178개) 등 아동 돌봄 지원은 강화한다.

취약계층 아동 지원의 사각지대 해소를 추진한다. 취약아동의 자산 형성을 위한 디딤씨앗통장의 대상을 기존 기초생활수급 가구에서 차상위 가구까지 확대(20.6→27.3만명, +6.7만명)하고, 18세 이후 위탁가정·아동복지시설에 보호 중인 보호연장아동에 대한 심리검사·치료 및 자립지원 프로그램 대상자를 대폭 확대(1,000→1,500명, +500명)한다. 또한, 「입양특별법」 시행(25. 7월)을 감안하여 예비양부모 발굴·조사 인력 및 인프라 확충 등 입양 관련 지원을 강화한다.

[표 1-5] 아동·보육 부문 주요 변동내역

(단위: 억원, %)

구 분	2024년 (a)	2025년 (b)	증감률 ((b-a)/a)	비 고
부문 계	55,585	52,326	△5.9	
부모급여 지원	28,887	21,353	△26.1	출생아 수 감소 반영
아동수당	21,115	19,588	△7.2	출생아 수 감소 반영
첫만남이용권	3,804	3,593	△5.5	출생아 수 감소 반영
다함께돌봄센터 지원	577	651	12.9	지원 개소수 확대(+178) 및 종사자 처우개선(2.5%)
지역아동센터 지원	2,518	2,775	10.2	종사자 처우개선(2.6%)
아동발달지원계좌	1,267	1,532	20.9	대상 확대(+6.7만명)
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 체계 구축	177	175	△1.1	보호연장아동 프로그램 확대 (+500명)
공적 입양체계 관리·운영	21	36	71.4	예비양부모 발굴 등

 여성·가족·청소년 부문

경력단절여성, 맞벌이가정 및 한부모가족 등 취약계층에 대한 정부지원을 확대하고, 폭력 피해자의 지원체계 구축 및 청소년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 지원을 강화한다.  
☞ (2024년) 1조 6,861원→(2025년) 1조 7,383원 (3.1% 증가)

저출생 극복을 위해 양육 등으로 인한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 및 양성평등 문화 확산을 지원한다.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 지원을 위해 여성새로일하기센터(새일센터) 직업훈련 과정 참여시 최대 40만원(총 4개월, 월 10만원)의 참여수당을 신규 지원하고, 새일여성인턴의 취업 및 장기고용 유지를 위해 고용유지장려금을 80만원 추가 지원(총 380→460만원) 한다. 한편, 일가정양립 및 양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해 양성평등주간 기념식 개최, 공공부문 조직진단 및 개선이행 지원을 지속 추진하며, 기업 인사담당자

제1부

2025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및 제안설명

제2부

2025년도 나라살림

제3부

2025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대상으로 일·생활균형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맞춤형 교육을 강화(100→400개 기업)한다.

폭력 피해 대응 및 피해자 지원 체계를 강화한다. 교제폭력·스토킹·디지털성범죄 등 복합피해에 대한 원스톱 통합지원을 제공하는 ‘1366통합지원단’을 확대(5→11개소)하고,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상담 및 삭제지원 등 맞춤형 서비스를 근접에서 지원하는 지역특화상담소를 확대(14→15개소)한다. 폭력예방교육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교제폭력·스토킹·성적허위영상물 등 신종 범죄 예방 및 아동·청소년 온라인 성착취 예방을 위한 맞춤형 교육 콘텐츠 개발을 강화한다. 한편, 여성폭력방지정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여성폭력통계 구축·운영 및 가정폭력·성매매·성폭력·인신매매 관련 실태조사를 추진하고, 여성폭력피해자 지원 서비스 점검 및 환류체계 구축을 위한 시설평가도 실시한다.

맞벌이, 한부모 등 취약가구의 안정적인 양육 지원을 강화한다. 맞벌이 부부 등의 돌봄공백 해소 및 양육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 지원대상을 기존 중위소득 150% 이하에서 200% 이하로 완화하여 150~200% 소득구간 서비스 비용을 신규로 지원(서비스 이용요금의 10~15%)하고, 소득구간별 정부지원율을 5~10%p 인상 지원한다.

양육비 미이행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부모가족에 국가가 양육비를 선지급하는 ‘양육비 선지급제를 도입’하여 월 20만원의 양육비를 신규 지원한다. 저소득 한부모가족(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에게 지원하는 아동양육비 단가를 인상(월 21→23만원)하고, 학용품비 지원대상을 초등학교까지 확대(중·고등학생→초·중·고등학생)한다. 한편, 무주택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안전한 주거환경 제공을 위해 노후화된 한부모가족복지시설 3개소에 대해 신·증축을 추진한다.

취약·위기 청소년의 사회안전망 및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 보호활동을 강화한다. 청소년쉼터 퇴소 청소년의 자립을 돕는 자립수당 단가를 인상(월 40만원→50만원)하고, 취약계층 여성청소년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생리용품 지원단가를 인상(월

1.3만원→1.4만원) 지원한다. 고립·은둔 청소년의 일상 회복을 위해 대상 발굴, 상담,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는 ‘고립·은둔 청소년 원스톱 패키지’ 시범사업과 정서행동 문제 청소년의 종합적·전문적 치료·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청소년치료재활센터’ 지원도 지속 추진한다.

한편,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환경 조성 및 활동 활성화를 위해 인구감소지역 청소년 대상 자기주도 활동프로그램 및 지역특색프로그램 등 맞춤형 프로그램을 신규 지원하고, 늘봄학교와 연계한 맞춤 교육과정 개발 및 전문강사 양성을 통해 청소년 활동 기반을 지속 강화한다.

[표 1-6] 여성·가족·청소년 부문 주요 변동내역

(단위: 억원, %)

구 분	2024년 (a)	2025년 (b)	증감률 ((b-a)/a)	비 고
부문 계	16,861	17,383	3.1	
여성경제활동 촉진지원	752	877	16.7	- 새일센터 직업훈련 참여수당 신설 (4개월간, 월 10만원) - 고용유지장려금 확대 (12개월 고용유지시, +80만원)
양육비이행관리원 지원	-	287	(순증)	-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 * 양육비 미이행 한부모가족에 월 20만원 지원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등 지원	5,356	5,528	3.2	- 아동양육비 지원단가 인상 (월 21→23만원) - 학용품비 지원대상 확대 (중·고생→초·중·고생)
아이돌봄지원	4,679	4,750	1.5	- 지원대상 확대 (기준중위소득 150%→200% 이하) - 소득구간별 정부지원율 확대(+5~10%p)
가정폭력· 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 지원	415	432	4.0	- ‘1366통합지원단’ 확대 (5→11개소)
청소년복지시설 운영지원	309	331	7.2	- 쉼터퇴소 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월 40→50만원)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148	164	10.8	-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단가 인상 (월1.3→1.4만원)

## 노인 부문

천만 노인시대에 맞춰 노인일자리를 노인인구의 10% 이상으로 확대하여 110만개 제공하고 기초연금을 인상하여 노인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뒷받침한다.

☞ (2024년) 25조 6,483억원→(2025년) 27조 4,413억원 (7.0% 증가)

2025년 초고령화 시대와 노인 상대적 빈곤율\*을 고려하여 노인일자리를 노인 인구의 10% 이상으로 확대(103→110만명)한다. 경험·역량이 높은 신노년세대 수요에 맞춘 사회서비스형·민간형 일자리는 40%이상으로 확대하여 노인일자리의 질과 지속가능성을 높인다.

\* 노인 상대적 빈곤율(%) : ('19) 43.2 ('20) 40.4 ('21) 39.3 ('22) 39.7

또한 물가상승을 감안하여 65세 이상 노인의 70%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기초연금 단가를 인상(33.4→34.4만원)하고 지원대상도 701만명에서 736만명으로 늘려 노인 소득보장을 지원한다. 급속한 고령화 및 가족돌봄 약화로 인한 노인돌봄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노인맞춤돌봄서비스도 지속 지원한다.

높은 물가상승세로 인한 전기·가스요금 인상 등을 감안하여, 지역사회 노인에 대한 생활지원 강화를 위해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단가를 각각 6만원, 21만원 상향한다.

[표 1-7] 노인 부문 주요 변동내역

(단위: 억원 %)

구 분	2024년 (a)	2025년 (b)	증감률 ((b-a)/a)	주요내용
부문 계	256,483	274,413	7.0	
기초연금	202,015	218,646	8.0	기초연금 단가 인상 (33.4→34.4만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20,264	21,847	7.8	노인일자리 확대 (103→110만개)
노인단체 지원	884	957	8.2	경로당 냉·난방비(6만원) 및 양곡비(21만원) 지원단가 인상

## 주택 부문

주거공급 로드맵 상 공공주택 100만호(공공임대 50만호, 공공분양 50만호) 공급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25년에는 역대 최대규모 공공주택 공급을 통해 서민층 주거안정 지원 도모  
 ☞ (2024년) 37조 4,239억원→(2025년) 35조 5,911억원 (4.9% 감소)

'25년 예산에는 무주택 서민층 주거안정을 뒷받침하기 위해 주택공급 확대 및 주거금융 지원을 대폭 확대했으며, 주거공급 로드맵에 따른 공공주택 100만호(공공임대 50만호, 공공분양 50만호) 공급도 차질없이 수행한다.

서민 주거안정 및 내집마련 지원을 위해 공공주택 공급물량은 '24년 11.5만호에서 '25년 25.2만호(공공임대 15.2만호+공공분양 10.0만호)로 대폭 확대하여 역대 최대규모를 공급한다. 공공임대의 경우,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해 건설, 매입, 전세 각 유형별로 공급을 확대했으며 특히 비아파트 시장 침체를 고려하여 매입임대 물량을 '24년 4.0만호에서 '25년 6.7만호로 대폭 확대한다. 또한, 과다 집행되어 불용되어 오던 신축매입임대 집행방식을 기존 1년차 일시지급에서 건설기간을 고려한 3년 분할 지급방식으로 개선하여 역대 최대수준 공공주택 공급에도 예산은 2.7조원 절감했다.

주택유형별 공급장애 해소를 위한 맞춤형 기반조성도 추진한다. 우선 비아파트의 경우, 아파트 수준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주민선호를 반영한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뉴:빌리지를 신규 추진한다. 주택정비와 연계하여 주차장, 공원 등 주민이 선호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개소당 국비 총 150억원을 지원하며, '25년에는 30개소를 선정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전세사기로 인한 낮은 비아파트 입주 선호를 감안하여 2년간 안전한 공공 비아파트 16만호 공급을 통해 전세사기 리스크를 해소할 계획이다.

공사비 인상으로 착공실적이 저조한 아파트의 경우에도 공급속도 제고를 위한 기반조성을 추진한다. 수도권 공공택지 대상 22조원 수준 매입확약을 신규 추진해 착공 지연 사업장의 '25년 조기 착공을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재정비 조합에 대한 초기사업비용자 신설('25년 400억원)을 통해 노후 도심 내 주택공급 속도를 제고한다.

아울러 소득·계층별 빈틈없는 주거복지 지원도 확대한다. 청년 대상 사회초년생의 내집마련 지원을 위해 3.3조원 수준의 청년주택드림대출을 출시한다. 청년주택드림대출은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과 연계하여 주택·약 당첨 시, 분양가의 80%까지 최저 2.2%의 주택구입대출을 지원한다. 또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강화를 위해 전세사기 매입주택 공급도 '24년 5,000호에서 '25년 7,500호로 대폭 확대한다.

신혼부부의 경우, 출산가구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신생아·다자녀가구 대상 시세대비 90% 저렴한 든든전세 3만호를 우선공급한다. 또한, 신생아 가구 주거부담 경감을 위해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요건을 1.3억원에서 2.5억원으로 대폭 완화하여 보다 많은 가구에 주택구입, 전세자금 대출을 지원한다.

저소득 고령층 대상 고령자복지주택 공급을 연 1천호에서 3천호로 확대하여 주거안정을 지원하고, 주거급여 수선유지급여도 5년만에 대폭 인상(+29%)하여 저소득 가구 안전사고 예방을 지원한다.

[표 1-8] 주택 부문 주요 변동내역

(단위: 억원 %)

구 분	2024년 (a)	2025년 (b)	증감률 ((b-a)/a)	비 고
부문 계	374,239	355,911	△4.9	
다가구매입임대 출·용자	60,463	33,175	△45.1	4.0→6.7만호
전세임대 용자	45,469	51,141	12.5	4.0→3.5만호
통합공공임대 출·용자	26,174	31,241	19.4	3.5→4.0만호
분양주택(용자)	20,153	14,716	△27.0	9.0→10.0만호
주택구입·전세자금 용자	123,645	140,572	13.7	신생아특례, 주택드림대출

 **공적연금 부문**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의 안정적인 지급을 통해 국민의 노후 소득을 보장하고 지속 가능한 공적연금 체계를 강화한다.

☞ (2024년) 80조 8,644억원→(2025년) 88조 3,794억원 (9.3% 증가)

공적연금 부문에서는 국가가 주체가 되어 국민의 노후 기본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일반 국민, 공무원, 사립학교 교원·교직원 등의 퇴직, 사망, 공무상 부상·질병·장해 등에 대한 안정적인 급여 지급을 지속한다.

연금제도의 성숙 및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로 인해 연금 수급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연금급여 지출도 확대된다. 국민연금 수급자는 732→793만명으로 약 61만명 증가함에 따라 급여지급액도 5.04조원 증가할 전망이며, 직역연금인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수급자수도 각각 69.5→72.1만명, 14.3→15.1만명, 12.1→12.3만명으로 증가하여 연금지출이 확대될 전망이다.

[표 1-9] 공적연금 부문 주요 변동내역

(단위: 억원, %)

구 분	2024년 (a)	2025년 (b)	증감률 ((b-a)/a)	주요내용
부문 계	808,644	883,794	9.3	
국민연금	442,908	492,904	11.3	732→793만명
공무원연금	264,294	282,530	6.9	69.5→72.1만명
사립학교교직원연금	60,619	64,010	5.6	14.3→15.1만명
군인연금	40,411	43,822	8.4	12.1→12.3만명

## 보훈 부문

국가를 위한 헌신과 희생에 책임지고 영웅을 기억하고 예우하는 보훈문화를 확산시켜 국민통합에 기여한다.

☞ (2024년) 6조 4,798억원→(2025년) 6조 5,375억원 (0.9% 증가)

국가를 위해 희생·헌신한 국가유공자가 영예로운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보상금을 3년 연속 5% 인상하고, 보훈대상자간 보상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지급액이 적은 7급 상이자 보상금을 2%, 6·25전몰군경 자녀 중 신규승계 자녀수당을 8.3% 추가 인상한다. 또한, 참전명예수당(월 42→45만원), 무공영예수당(월 48~50→51~53만원), 4·19혁명공로수당(월 43.1→46.1만원)을 각각 3만원 인상한다.

2025년은 광복 80주년이다. 이에 ‘범국민 감사캠페인’, ‘국민통합 문화예술축제’ 등 추진을 위해 87억원을 반영하였다. 또한, 국내 독립운동을 폭넓게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국내민족독립운동기념관 설계비 4.4억원을 반영하였다.(2027년까지 총사업비 250억원 투입) 그리고 전사·순직한 군인·경찰·소방관의 자녀를 정서적으로 지원하는 히어로즈 패밀리 사업 확대 추진을 위해 8.8억원을 반영하여 일상 속의 보훈문화를 확산한다.

제대군인의 안정적 구직활동 지원을 위해 지급하는 전직지원금을 2025년부터 장기복무 제대군인은 월 77만원에서 81만원으로, 중기복무 제대군인은 월 55만원에서 58만원으로 5% 인상하여 지원한다.

보훈의료서비스상에서는 고령 국가유공자가 집 가까운 곳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2025년에 위탁병원 100개소를 추가 지정하여 1,000개소까지 확대하고, 보훈가족의 간호·간병 부담 경감을 위해 보훈병원 간호·간병 통합 병상을 전체 병상의 50%인 1,127개까지 확대한다.

그리고 보훈대상자에게 마지막까지 예우를 다하기 위한 국립묘지 안장능력 확충을

위해서도 지난 2018년부터 총사업비 1,301억원을 투입하여 추진 중인 이천·영천·임실호국원의 안장시설 확충(9.5만기) 사업을 2025년에 완료함으로써 보훈대상자의 고령화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안장 수요 대비에도 만전을 기할 것이다.

[표 1-10] 보훈 부문 주요 변동내역

(단위: 억원 %)

구 분	2024년 (a)	2025년 (b)	증감률 ((b-a)/a)	비 고
부문 계	64,798	65,375	0.9	
보상금	34,681	35,628	2.7	－ 기본 보상금 5% 인상 (7급상이자 2% 추가인상)
6·25자녀수당	4,033	4,287	6.3	－ 6·25전몰신규승계자녀수당 8.3% 추가인상
참전명예수당 등	6,785	6,345	△6.5	－ 월 3만원 인상 * 참전: 42만원→45만원 * 무공: 48~50만원→51~53만원 * 4·19: 43.1만원→46.1만원
광복80주년기념사업	－	87	순증	－ 범국민 감사캠페인 － 국민통합문화예술축제
현충시설 건립 (국내민족독립운동 기념관)	－	4	순증	－ 다양한 국내민족독립운동 알리기 위한 기념관 신규 건립
히어로즈 패밀리 사업	6	9	41.8	－ 전몰·순직군경 미성년 자녀 교류 지원 확대 추진
제대군인 전직 지원금	70	74	5.4	－ 5% 인상 * 중기복무 月55만원→58만원 * 장기복무 月77만원→81만원
위탁병원 진료	2,563	2,491	△2.8	－ 위탁병원 확대(900→1,000개)
보훈병원진료 (간호·간병 통합병상 확대)	13	25	92.3	－ 간호·간병 통합 병상 확대 (현행 40%→50%)
국립묘지조성 및 관리	944	1,067	13.0	－ 안장여력 +9.5만기 * 이천호국원 +5만기 * 영천호국원 +2.5만기 * 임실호국원 +2만기

## 건강보험 · 보건 의료 및 식품의약품안전 부문

건강보험 재정 안정 및 공공의료 확충을 도모한다.

☞ (2024년) 18조 8,432억원→(2025년) 19조 6,780억원 (4.4% 증가)

국민건강 보장 강화를 위해 건강보험(12.2→12.6조원), 노인장기요양보험(2.2→2.3조원)에 대한 국고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필수·지역의료 복원 및 고령화 시대 등 미래 대비를 위해 2024년 대비 2배 이상 확대된 1.9조원을 집중 투자한다.

우선 전공의 및 의대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소아청소년과 전공의를 대상으로 지급하던 수련수당을 필수의료분야 전공의 전체로 확대하고, 전임의 지원 대상도 기존 소아청소년과에서 분만 전임의까지 확대(140명→300명)한다. 필수의료 분야 전공의에 대한 수련비용(전공의 정원 9천명 대상) 및 수련병원(192개소) 시설 개선도 지원하여 전공의 수련교육의 질을 제고할 예정이다.

국민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 역량 강화를 위해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를 확충(12→14개소)하고, 소아환자 야간휴일진료센터(달빛 어린이병원) 지원도 2배 확대(45개소→93개소)할 예정이다. 지역암센터 지원 확대(1→3개소) 및 소아암센터(5개소)에 대한 최신 시설·장비비 25억원을 지원하며, 양성자 암치료를 신규로 도입(179억원)하여 암 치료 고도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의료격차 불균형을 해소하고, 가까운 곳에서도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역의료 확충도 지원한다. 지역医료를 총괄하는 권역책임의료기관(17개소)의 수술실 인프라 첨단화 및 중환자실 시설·장비 개선에 815억원을 신규 지원하고, 지역거점 공공병원(지방의료원 35개소, 적십자병원 6개소)에 대해서도 시설·장비 현대화 및 운영비 지원에 총 1,784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심뇌혈관질환·외상·고위험 산모·신생아 관련 협진 운영비 903억원을 지원하고, 중환자실 원격 협진을 위한 시스템 구축을 신규로 추진한다. 한편, 취약지 의료기관(응급·분만·소아청소년과·인공신장실)의 시설·장비·운영비도 총 446억원을 지원한다. 아울러,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 도입(4개 시도 96명 전문의 대상 지역근무 수당 월 4백만원 지급)을 통해 지역 내 필수 의료인력 확보도 추진한다.

무과실 분만사고 보상한도 10배 상향(3천만원→3억원) 및 소아과·산부인과 전문의 및 필수과목 전공의에 대한 책임보험료 30% 신규 지원을 통해 필수의료 분야 의료진의 의료사고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환자대변인제 시범사업 추진을 통해 의료사고 피해자를 신속히 구제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지역 국립대병원 전용 R&D 신설, 신생아 응급진료 등 지역 내 시급한 의료현안에 주목하는 문제 해결형 R&D 등 의료 R&D를 대폭 확대하여 필수·지역의료 연구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식품의약품안전 부분의 재정투자도 확대한다. 식중독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운영하는 이동식 식중독 검사차량을 추가로 배치하고, 노후 검사차량을 교체하여 권역별 신속한 식중독 검사 대응 체계를 지원한다. 한편,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청소년 마약중독 근절을 위해 청소년 맞춤형 콘텐츠 제작·홍보(45억원), 전국 초·중·고 학생 대상 마약류 오남용 예방 교육 확대(33%→40%) 등도 강화한다.

「디지털의료제품법」 제정에 따라 새로운 제품군, 새로운 규제 영역에 대한 전주기 안전관리망 구축을 목표로 디지털 의료제품 특성에 맞는 안전성·유효성 평가 기준을 개발하고, 인증업무를 수행하는 대행기관을 지정·운영하며, 규제지원센터를 통한 제품화 지원도 체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표 1-11] 건강보험·보건의료 및 식품의약품안전 부문 주요 변동내역

(단위: 억원, %)

구 분	2024년 (a)	2025년 (b)	증감률 ((b-a)/a)	주요내용
합 계	188,432	196,780	4.4	
건강보험	137,070	141,278	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강보험가입자자원 (일반: 10.3→10.6조원) (기금: 1.9→2.0조원)</li> </ul>
보건의료	44,125	47,958	8.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료인력 양성 및 적정 수급관리(291→2,991억원)</li> <li>- 지역거점병원 혁신지원 (신규 2,370억원)</li> <li>- 병원 필수의료 역량 강화 지원(융자) (신규 1,201억원)</li> </ul>
식품의약 안전	7,182	7,489	4.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식중독 예방 및 관리 (78→93억원)</li> <li>- 마약류 안전관리 강화 (76→90억원)</li> <li>- 마약퇴치운동본부 지원 (159→165억원)</li> <li>- 디지털의료제품 안전관리 강화 (0→22억원)</li> </ul>

## 〈참고1〉 일자리 분야

### 참고1-1 재정지원 투자방향

2025년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예산 규모는 총 30.4조원으로 2024년 29.2조원 대비 4.2% 증가한 수준이다.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으로 양질의 민간일자리 창출을 뒷받침하고, 취업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으로 사회이동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일자리 사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한다.

☞ (2024년) 29조 1,914억원→(2025년) 30조 4,089억원 (4.2% 증가)

2025년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은 청년·중장년·고령층 등 연령별 맞춤형 일자리 지원, 부모 맞돌봄 등 일·가정 양립 지원, 노동약자에 대한 적극적 보호에 집중 투자한다. 실효성이 낮은 현금성 지원 및 유사중복 사업은 구조조정하고, 직업훈련 및 컨설팅 사업을 전면 재편하는 등 사업 운영을 내실화하였다. 일자리 사업 총량은 3년만에 증가 전환(4.2%)되었다.

유형별로 보면, 취업 취약계층에 한시적 일자리를 제공하는 직접일자리사업은 저소득층·노인 중심으로 대폭 확대한다. 노인일자리를 대폭 확대하고(103→110만명), 자활근로 인원도 늘린다(6.9→7.2만명). 직업훈련 사업은 사업주 직업훈련 중 훈련 실효성이 낮은 원격훈련 비중을 대폭 축소하고 내일배움카드 국기훈련-일반훈련 간 유사중복을 정비하는 등 효율화하는 반면, 첨단분야는 대학·기업 장비를 활용한 K-하이테크 트레이닝 확대(4.4→4.5만명) 등 적극 지원한다. 고용서비스 사업은 청년일경험 지원을 1만명 대폭 확대하고(4.8→5.8만명) 쉬었음. 청년을 적극 발굴·지원하는 졸업생 특화 프로그램을 신설하였다(120개교). 또한, '특화훈련-장려금-기술연수'의 빈일자리 특화 3종 패키지를 신설하고(5.8만명), 부처·기관간 협업을 통해 고용-금융-복지 서비스를 원스톱 제공하는 고용서비스 통합네트워크를 추가 확대한다(6→8개소).

고용장려금 사업은 부모 맞돌봄 지원 등 일·가정양립 투자를 역대 최대규모로 확대(+1.7조원)하면서 전년대비 32.3% 증가했다. 육아휴직 급여 상한을 인상하고(월 150→최대 250만원),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원기간도 연장한다(5→20일). 창업지원 사업은 융자사업은 구조조정을 통해 효율화하되, 민간투자와 연계하여 초기 창업기업을 성장단계별로 지원하는 TIPS(3,411→4,777억원) 사업과 폐업 소상공인 지원은 확대한다. 구직급여(158→162만명), 조기재취업수당(10→12만명) 등 실업소득 유지·지원사업을 확대하여 고용안전망을 지속 확충하고, 장애인의 양질의 민간일자리를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장애인고용장려금(63.3→75.6만명) 등 지원고용 및 재활 사업은 확대한다.

[표 참고1-1] 일자리 분야 재정투자 계획

(단위: 억원 %)

구 분	2024년 (a)	2025년 (b)	증감률 ((b-a)/a)
합 계	291,914	304,089	4.2
직접일자리	35,569	36,824	3.5
직업훈련	26,112	22,628	△13.3
고용서비스	16,389	17,120	4.5
고용장려금	43,123	57,046	32.3
창업지원	31,147	28,762	△7.7
실업소득 유지·지원	129,172	130,954	1.4
지원고용 및 재활	10,401	10,754	3.4

## 참고1-1 주요 지원내용

### 청년·중장년 연령별 맞춤형 일자리 지원

인구구조 변화로 노동시장에서 청년층 비중은 감소하고 중장년층 비중은 증가할 전망이다. 이에 정부는 청년들의 노동시장 진입을 촉진하는 한편, 중장년층의 은퇴 후 재취업을 중점 지원한다.

청년층에 대해서는 노동시장 진입 촉진, 빈일자리 해소를 지원한다. 먼저, 청년들이 취업 전 직무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인턴형(1~5개월), 프로젝트형(2개월 내외) 중심으로 일경험 지원 인원을 대폭 확대한다(4.8→5.8만명). 또한, '쉬었음'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을 촉진하기 위해 미취업 졸업생을 발굴하여 취업특강, 자격증 교육 등 특화 프로그램을 제공한다(신규 5만명).

중소기업의 청년 구인난 해소를 위해서는 '빈일자리 채움 3종 패키지'를 신설하여 지원한다. ①국민취업지원제도 내 빈일자리 특화 훈련을 이수하고 빈일자리 업종 기업에 취업하면 훈련참여수당과 취업성공수당을 추가 지급한다(최대 320→480만원). ②또한, 특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신설하여 빈일자리 업종 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18개월 이상 근속 시 최대 480만원을 지원한다. ③2년 이상 재직한 청년에 대해서는 2~6개월의 기술연수도 지원한다.

한편, 중장년층에 대해서는 주된 일자리 퇴직 후 양질의 일자리에 재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중장년 내일센터를 확충하고(35→38개소) 생애경력설계, 전직스쿨 등 내일패키지 인원을 확대한다(6.1→6.5만명). 중장년 구직자 역량강화를 위해서는 폴리텍 신중년 특화학과(신규 5개과), 뿌리산업교육센터(신규 3개소), 인턴제(신규 910명) 등 직업훈련·직무경험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아울러, 청년 도달 근로자의 일부를 재고용한 사업주도 계속고용장려금을 받을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해 계속고용 제도의 자율적 확산을 촉진한다.

## ☞ 부모맞돌봄, 육아휴직·유연근무 등 일가정양립 지원 강화

필요한 시기에 충분한 육아시간을 보장하도록 육아휴직급여 상한을 월 최대 100만원 인상한다. (급여 상한 월 150→1~3개월250, 4~6개월200, 이후160만원) 어린이집·유치원 임시 휴원, 초1 신학기 등 단기 돌봄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단기 육아휴직(연1회, 2주)을 신설한다. 맞벌이 가정 등에서 자녀의 돌봄 공백이 발생한 경우(예: 일시돌봄, 병원동행, 하원지도 등)에 대응하여 직장어린이집을 통해 긴급돌봄서비스를 제공(65개소, 13억원)한다. 출산 초기 맞돌봄 확대를 위해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지원을 확대한다(5→20일).

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도 사용 활성화를 위해 단축급여 상한을 인상한다(200→220만원). 육아기 유연근무제도 활용 활성화를 위해 유연근무 장려금을 인상한다(월 10~40만원→20~60만원).

사업주 부담 경감을 위해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을 재신설하고 파견근로자의 경우도 지원하며 지원 수준도 인상한다(월 80만원→120만원). 대체인력채용이 어려운 기업 근로자의 육아휴직 사용에 따른 동료 부담 경감을 위해 사업주가 업무대행자에게 보상 지급시 지원금을 월 20만원 지급하는 육아휴직 동료업무 분담지원금을 신설한다.

## ☞ 노동약자 보호, 이중구조 개선 등 노동개혁 뒷받침

노동개혁 완수를 뒷받침하기 위해 노동약자 보호 및 이중구조 개선을 적극 추진한다. 특히, 근로기준법 사각지대에 있어 임금과 복지 등이 열악한 미조직근로자 및 노무제공자를 지원하기 위해 노동약자지원 사업을 신설(160억원)하고, 근로자 이음센터를 2배 수준 확대한다(6→10개소). 또한, 기업이 도산하여 임금채불을 겪는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8.8→10.5만명)과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생활안정자금 용자(1.6→3.6만명) 대상도 대폭 늘린다. 대·중소기업, 원·하청간 이중구조 개선을 위해 공동근로복지기금(86→154개) 및 2·3차 협력사 상생협력 복지증진기금(3→4개 업종)도 확대한다.

## 02 | 교육 분야



### 2-1 재정지원 방향

2025년 교육분야 재정투자 규모는 98.5조원으로, 2024년 95.2조원 보다 +3.5조원, +3.7% 증가했다. 증가분의 대부분은 내국세와 연동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72.3조원, 전년 대비 +3.4조원 증가)이 차지하고 있으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제외할 경우 △0.4% 감소한 수준이다. 2025년 교육 분야 투자를 통해 전 생애에 걸친 교육비 부담 경감 및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지역·대학 협력체계 개편으로 미래 핵심분야를 집중적으로 양성한다. 또한 의대증원과 관련된 소요를 포함한 대학 인프라 지원을 강화하고, 이와 함께 디지털 혁신 및 글로벌 역량강화를 적극 지원한다.

#### 생애주기별 교육비 부담 경감 및 교육격차 해소

유보통합 및 늘봄학교 지원 등을 통해 국가의 교육·돌봄 책임을 강화하고, 저소득층 및 장애학생 등 소외계층을 포용한다. 대학생들의 학비부담 경감을 위해 국가장학금 지원을 9구간까지 대폭 확대(100→150만명, +50만명)하고, 근로장학금 지원 대상을 확대(14→20만명, +6만명)할 뿐만 아니라 주거안정장학금 신설을 통해 저소득 대학생의 주거환경 개선을 적극 지원한다. 이와 함께 거점학교 확대(17→24개교, +7개교)를 통해 직업계고 졸업생의 취업을 강화하고, 평생교육바우처를 확대(8→11.5만명, +3.5만명)하는 등 직업·평생교육 지원도 확대한다.

#### 국립대 및 사립대 시설·기자재 소요 등 의대 교육환경 개선 지원

의대 증원이 의대 교육의 질 저하로 이어지지 않도록 의대 교육 여건 개선 및 교육혁신을 적극 지원한다. 의과대학을 보유한 9개 거점 국립대학을 대상으로 시설개선 및 실험실습 기자재 확충에 사용할 수 있도록 2025년 1,508억원을 신규로 지원하고, 사립대학에는 교육환경 개선 비용 충당이 가능하도록 기존 융자사업에 우대금리(1.5%)를 적용하여 지원한다. 한편, 정원이 증원된 32개 의과대학을 대상으로 대학별 특화 프로그램 개발 지원을 통해 의대 교육혁신을 촉진한다.

##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본격 시행 및 첨단분야 인재양성

지역대학에 대한 지자체의 권한을 대폭 확대하기 위해 지자체·대학이 주도적으로 지역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지역 인재를 양성하는 RISE 사업을 (2024년) 1.2조원→(2025년) 2.0조원 수준으로 대폭 확대하고, 지역발전의 구심점 역할을 수행하는 혁신역량을 보유한 지역대학을 육성하는 글로벌대학도 (2024년) 20개교(+10개교)→(2025년) 25개교(+5개교) 지속 확대한다.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등 첨단산업 분야 미래인재 양성을 위해 미래 모빌리티 분야 부트캠프를 신규로 지원(+2개교)하고, 반도체(설계분야)(+2개교), 바이오(+3개교), 이차전지(+2개교) 등 특성화대학 추가 지정을 통해 각 분야 인프라 구축을 위한 재정지원도 대폭 확대한다.

## 디지털 교육 강화 및 국내외 우수인재 글로벌 역량 확충

성인 디지털 직무역량 함양을 위해 17개 대학에 AI·Digital 집중교육과정을 신설하고 K-MOOC 디지털 도약강좌 30개를 추가적으로 개설한다. 국비유학생 선발 지원을 강화(58명→70명, +12명)하고, 우수한 역량을 갖춘 외국인 유학생 유치도 확대(6,000명→7,000명, +1,000명)한다.

[표 2-1] 교육 분야 재정투자 계획

(단위: 억원 %)

구 분	2024년 (a)	2025년 (b)	증감률 ((b-a)/a)
합 계	951,552	984,633	3.5
영유아및초중등교육	790,600	813,807	2.9
(지방교육재정교부금)	688,732	722,794	4.9
고등교육	146,713	157,600	7.4
평생·직업교육	12,636	11,588	△8.3
교육일반	1,603	1,638	2.1

## 2-2 부문별 주요 지원내용

###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

세수여건에 연동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증가, 복지부의 보육업무 이관에 따른 유보통합 추진 등으로 영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 예산은 전년대비 2.3조원, 2.9% 증가한다. 0~5세 영유아 교육·보육, 늘봄학교 프로그램 개발 지원 등 국가교육·돌봄 책임을 강화한다. 디지털 교육혁신을 위한 초·중·고 디지털 교과서 도입을 지원하고, 저소득층·장애학생 등 소외계층 교육지원을 확대한다.

☞ (2024년) 79조 600억원→(2025년) 81조 3,807억원 (2.9% 증가)

복지부의 보육업무를 '24.6월부터 교육부로 이관하며, 유보통합을 추진한다. 2023년 1월과 2024년 6월에 발표한 유보통합 추진 방안 및 실행계획에 따라 기존 보육·유아교육 예산은 유지하되, 추가 소요 예산은 지방교육재정에서 부담할 예정이다. 2025년 예산에는 0~2세 영아 보육료, 3~5세 유아 누리과정을 반영하여, 영유아의 기본적인 교육·보육을 지속 지원한다.

기존의 초등학교 방과후와 돌봄을 통합·개선한 단일체제인 늘봄학교는 '25년부터 초등학교 2학년까지 확대하고, 학생의 성장·발달에 맞는 재미있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도록 다부처 협업으로 늘봄학교 프로그램 개발 및 강사 양성을 지원(108억원)한다. 또한, RISE를 통해 대학의 인적자원 등 대학 인프라를 활용하여 지역별 수요에 맞는 늘봄학교 프로그램(212억원)도 개발될 예정이다.

디지털 교육혁신의 일환으로 2025년부터 AI 디지털교과서를 도입한다. AI디지털교과서 구독료, AI디지털교과서 검정심사, 예비교원 AI디지털 교육 지원 등 AI디지털교과서가 교육현장에서 차질없이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디지털 교육 지원을 위해 2024년 신설된 디지털교육혁신 특별교부금은 2024년과 마찬가지로 인공지능 기반 교수학습 역량 강화 및 방과후 교육 등 디지털 혁신을 위한 교육개혁 과제에 집중 투자될 예정이다.

영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세수여건 변동에 따라 전년대비 4.9% 증가한 72조 2,794억원이 교육청에 교부된다. 초·중등교육 부문의 기본 교육 지원과 유보통합, 늘봄학교, AI 디지털교과서 도입 등 주요 교육혁신 과제 추진에 활용될 예정이다. 특히, 2025년부터 본격 추진되는 유보통합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등 관련법안 개정안이 발의되어, 논의될 예정이다.

한편, 소외계층의 특수한 교육수요를 포용하기 위한 지원을 확대한다. 교육급여(교육활동지원비)를 평균 5% 인상하여 저소득층의 교육기회를 확대하고, 한국교원대 부설 특수학교 설립(31억원), 공주대학교 부설 특수학교 전공실습실 구축(5억원) 등 장애학생도 차별없이 교육 받을 수 있도록 지속 지원한다.

[표 2-2]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 주요 변동 내역

(단위: 억원, %)

구분	2024년 (a)	2025년 (b)	증감률 ((b-a)/a)
합계	790,600	813,807	2.9%
지방교육재정교부금	688,732	722,794	4.9%
영유아보육료 지원	32,339*	32,400	0.2%
유아교육비·보육료 지원	32,106	31,020	△3.4%
교육급여	1,604	1,652	3.0%
국립대학 부설 특수학교 설립	23	31	34.8%

\* 부모급여 내 영유아보육료 이관분 포함

## 고등교육 부문

교육부문간 투자불균형 해소를 위해 고등교육에 적극 투자하여 2025년 고등교육 부문 예산은 전년대비 +1.1조원, +7.4% 증가한다. 대학생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국가장학금 및 근로장학금을 대폭 확대하고, 주거안정장학금을 신설한다. 의대 증원에 따라 국립대와 사립대의 시설·기자재 소요를 충분히 지원하고, 의대 교육혁신도 적극 뒷받침한다.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사업을 통해 지자체의 지역대학 지원 권한을 강화하고, 세계적인 교육기관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우수한 지역대학을 전폭 지원한다. 첨단산업 분야 인재양성을 위해 미래 모빌리티 분야 부트캠프 및 반도체·바이오·이차전지 분야 특성화대학 지원을 확대한다.

☞ (2024년) 14조 6,713억원→(2025년) 15조 7,600억원 (7.4% 증가)

대학생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사업을 획기적으로 확대한다. 기존 8구간(기준중위소득 200% 이하)까지 지원하던 국가장학금을 9구간(기준중위소득 300% 이하)까지 확대하여 수혜대상을 (2024년) 100만명→(2025년) 150만명으로 대폭 확대한다. 저소득 대학생의 생활비 부담 완화를 위해 근로장학금 지원 인원도 (2024년) 14만명→(2025년) 20만명으로 확대하고, 주거 환경을 개선하여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기초·차상위 대학생(4.2만명)을 대상으로 월 20만원을 지급하는 주거안정장학금을 신설한다.

의대 증원이 의대 교육의 질 저하로 이어지지 않도록 2025년에 국립대 및 사립대 대상 4,047억원을 투자한다. 증원된 인원들이 우수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의대를 보유한 9개 거점 국립대를 대상으로 시설개선 사업비 1,432억원, 실험실습기자재 구축비 76억원을 신규 지원한다. 또한, 각 의과대학별 맞춤형 커리큘럼 개발·고도화 등을 통해 의대 교육혁신을 위한 지원(+552억원)도 뒷받침할 계획이다. 국립대와 다르게 사립대학에는 실제 수요를 바탕으로 기존 융자사업에 우대금리(1.5%)를 적용하는 등 재정지원을 대폭 강화(+1,491억원, +216%)한다.

청년층이 모이는 대학을 지역혁신의 원동력으로 활용하여 지역과 지방대학이 상생 발전하고, 지방대학을 통해 지역산업 특화 인재를 맞춤형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사업에 참여하여 직접 투자 분야와 지원대학을 선정하도록 하는 등

대학지원에서의 지방자치단체 권한을 강화한다. 기존 대학지원사업을 통합한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사업으로 통합하고, 2025년 본격 시행을 위해 (2024년) 1.2조원→(2025년) 2.0조원으로 대폭 확대한다.

지역대학 중 역량이 우수한 대학을 선정하여 세계적인 대학으로 성장하도록 집중 투자하는 글로벌대학 육성 지원도 지속 확대한다. 2026년까지 비수도권 지역대학 총 30개교를 선정하고,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사업을 활용하여 교당 5년간 약 1,00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며, 2024년 +10개교 선정에 이어 2025년 +5개교를 추가 선정한다.

반도체, 바이오, 이차전지, 미래차 등 우리나라의 미래 성장동력이 될 첨단분야를 선도할 핵심인재 양성에 집중 투자한다. 반도체 분야의 경우 기존과 차별화하여 설계분야 소규모 특성화 대학을 2개교 신규 지정하여 총 28개를 지원하고, 기업과 대학이 공동으로 단기 실무중심 집중교육과 취업을 연계하여 지원하는 인재양성 부트캠프는 미래 모빌리티 분야 신규 지정 2개교를 포함하여 총 44개교를 지원한다.

[표 2-3] 고등교육 부문 주요 변동내역

(단위: 억원, %)

구 분	2024년 (a)	2025년 (b)	증감률 ((b-a)/a)
합 계	146,713	157,600	7.4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47,205	53,050	12.4
국립대학 시설확충	10,053	10,929	8.7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12,025	20,010	66.4
사립학교 교육환경 자금융자(사학진흥기금) (융자)	690	2,181	216.0
산학연협력 고도화 지원 (부트캠프, 특성화대학)	180,500	182,700	1.2

평생·직업교육 부문

전문대학 지원사업 일부가 고등교육 부문으로 이관됨에 따라 2025년 평생·직업교육부문 예산은 전년대비 △1,048억원, △8.3% 감소한다. 전문·원격대학의 자율혁신을 유도하여 평생·직업교육 기반을 다지고, 디지털도약강좌 신설, 평생교육바우처 등 평생교육 기회를 대폭 확대한다.  
☞ (2024년) 1조 2,636억원→(2025년) 1조 1,588억원 (8.3% 감소)

평생·직업교육 기반 강화를 위해 전문대학 및 원격대학을 지속 지원한다.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해 사이버대학의 디지털 교육환경 고도화(+19억원)를 신규 지원하고, 평생교육과정으로 AI·Digital 집중교육과정(+26.5억원) 및 디지털 도약강좌(+15억원)를 신설한다. 학생교육교류(+3억원)를 확대하고 글로벌 교육지원(+20억원), 국제교육 교류 협력 활성화(+154억원) 등 교육분야 ODA 투자도 강화한다.

평생학습기회 보장을 위해 평생교육바우처 지원을 확대한다(+24억원). 총 지원 인원을 3.5만명 늘리고(8→11.5만명), 그중 노인은 별도 유형을 신설(8천명)하여 노인의 다양한 사회 참여를 지원한다. 저소득층 중심에서 성인 전체까지 단계적으로 지원대상 확대 및 현장·수요자 중심 맞춤형 지원관리를 위해 전년도 시범사업을 바탕으로 2025년부터는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사업을 운영할 예정이다.

[표 2-4] 평생·직업교육 부문 주요 변동내역

(단위: 억원, %)			
구 분	2024년 (a)	2025년 (b)	증감률 ((b-a)/a)
합 계	12,636	11,588	△8.3
국제교육 교류 협력 활성화(ODA)	1,191	1,345	12.9
평생교육바우처 지원	262	286	8.9
온라인 성인학습자 고등교육 활성화 지원	19	41	119.4

## 03 문화 · 체육 · 관광 분야



### 3-1 재정지원 방향

2025년 문화 · 체육 · 관광 분야 재정투자 규모는 8.8조원으로 2024년 8.7조원보다 0.6% 증가하였다.

계층 · 지역 · 세대간 문화격차를 해소하고 국민들의 문화예술 · 스포츠향유권을 증진하기 위한 투자를 확대하여 국민 누구나 일상에서 문화를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K-콘텐츠와 연관산업의 소비 · 수출 시너지 극대화 및 K-아트까지 한류 외연을 확장하는 예산을 대폭 확대하여 국가경제의 활력을 제고하고 세계 속에서 대한민국의 문화 위상을 제고한다.

#### 계층간 · 지역간 · 세대간 문화격차 해소 및 문화 · 체육 향유권 증진

계층간 문화격차 해소를 위해 취약계층을 위한 통합문화이용권과 스포츠강좌이용권의 1인당 지원 금액이나 지원 인원을 확대하고, ‘꿈의 스튜디오’등 취약계층 아동을 위한 문화예술교육 지원도 강화(125억원, +18억원)하여 수혜자들이 양질의 문화 · 체육 활동을 지속적으로 즐길 수 있게 돕는다. 장애예술인 창작활동 지원과 문화 · 체육 향유환경 개선 등 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지원사업도 증액(2,091억원, +101억원)했다.

지역간 문화격차 해소를 위해 광역형 · 연계형 도시발전모델인 「대한민국 문화도시」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고(400억, 신규), 문화취약지역, 혁신도시, 산업단지 등 문화 접근성이 낮은 지역 대상 문화프로그램 지원도 확대한다(108억원, +46억원). 지역의 문화예술 역량을 높이기 위해 지역대표예술단체(120억원, +30억원)와 지역의 우수예술인 · 작품에 대한 지원(48억원, 신규)을 강화하여 지역에서도 다양하고 우수한 문화예술 작품이 창작되고 즐길 수 있게 된다.

국민의 생활체육 참여를 장려하기 위한 환경도 조성된다. 운동하는 국민에게 혜택을 주는 ‘스포츠활동 인센티브’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57억원, +50억원)하고 지역별

여건과 선호에 맞는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을 돕기 위한 지역자율형 생활체육활동 지원 사업(141억원, 신규)도 새롭게 선보인다. 시니어친화형 및 유아친화형 국민체육센터 등 인구 구조변화에 대응한 맞춤형 시설 건립 사업도 집중적으로 확대했다.

세대간 문화격차 해소 및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여 어린이와 가족 친화적인 문화예술 향유 여건도 조성한다. 용산어린이정원 일대에 산발적·단편적인 어린이를 위한 문화예술 시설을 총망라한 거점 시설인 어린이 예술마을(가칭)을 조성하고(155.7억원), 국립어린이청소년극단(29억원, 신규)과 생활밀착형 시설에서 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문화예술교육 지원 사업(30억원, 신규)도 새롭게 지원할 계획이다.

## 문화·체육·관광을 통한 국가 경제의 활력 제고

2020년 약 189조원 수준이었던 콘텐츠·관광·스포츠산업의 매출액은 2년만인 2022년에 약 246조원을 기록하는 등 빠른 증가세를 보이며 대한민국의 새로운 먹거리로 자리잡고 있는 만큼,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산업 지원을 대폭 강화한다.

먼저, 세계적으로 뻗어나가고 있는 콘텐츠 산업은 전반에 해외자본 유치를 강화하기 위해 ‘글로벌 리그 펀드’를 새롭게 조성(400억원, 신규)할 계획이며, ▲콘솔게임 육성(155억원, +87억원), ▲만화·웹툰 해외진출 지원(135억원, +65억원), ▲중예산영화 제작지원(100억원, 신규) 등 K-콘텐츠 대표 장르 맞춤형 지원을 대폭 확대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한다.

특히, K-콘텐츠를 비롯한 한류의 확산으로 국내 농수산식품, 미용, 소비재 등 연관산업 제품에 대한 세계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한류IP를 활용한 신제품 기획·개발 및 홍보·마케팅 지원 강화(59억원, +20억원) 및 현지 한류박람회 개최 확대(120억원, +50억원) 등을 통해 K-콘텐츠와 연관산업의 해외 동반진출을 촉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외래관광객 유치 확대를 위해 한류와 K-콘텐츠를 활용한 마케팅 및 컨설팅 지원과 해외 현지 방한관광 집중 홍보(105억원, 신규)도 새롭게 추진한다.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지역관광도 활성화한다. 지역의 관광콘텐츠 확충을

위해 ▲크루즈&해양, ▲자전거 여행, ▲전적지 등 지역의 특색있는 관광자원을 발굴(82억원, 신규)하고, 남부권 광역관광개발 사업 확대(278→788억원)를 통해 지역 곳곳에 체류형·체험형 관광명소도 조성한다. 우리 관광산업체의 혁신성장을 뒷받침하고, 산업 전반에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금융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잠재력 있는 지역 축제를 세계인이 찾는 대표 축제로 육성하기 위한 글로벌 문화관광축제 육성 지원도 강화(25→35억원)한다.

아울러, 스포츠산업의 빠른 회복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기업에 대한 직접융자와 이차보전 등 정책금융을 역대 최대규모인 5,035억원 규모로 공급할 계획이다. 또한, 잠재력 있는 기업체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선도기업 육성지원사업(136억원, +21억원)과 글로벌 스포츠 강소기업 육성 및 방송 홍보 지원(46억원, +16억원)도 확대 편성했다.

## **한류 외연 확대 및 고도화로 세계 속에서 빛나는 대한민국**

지난 10월 한강 작가가 한국 작가 최초로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는 등 우리나라 예술가와 작품이 세계적인 인기를 얻으며, 기존 대중문화 중심의 한류의 범위를 확장해가고 있다. 이에, 한류의 중장기적인 지속성과 확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류의 외연을 넓히기 위한 예산을 중점적으로 편성하였다.

먼저, 한국예술이 국내시장을 넘어 세계시장의 주축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세계적 수준의 작품이 지속적으로 창작되고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한다. 장르별 대표 축제를 활성화하고 기존 축제를 통합한 아시아 최대 마켓형 공연예술축제를 만들어(52억원, +40억원) 세계 공연예술시장의 새로운 거점이 될 수 있도록 육성하고, 분야별 예술창작 지원도 늘린다(603억원, +62억원). 청년예술단 신설(49억원, 신규)과 청년예술인력 육성 지원 인원도 350명에서 600명으로 확대하여 예술한류를 이어갈 차세대 주역인 청년예술인의 무대 경험과 기회도 확대한다.

또한, 재외공관이나 해외 한국학과 등과 연계하여 한국문화원이 없는 국가나 지역에서도

한국문화에 대한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어울림 한국문화페스티벌을 새롭게 추진하고(30억원, 신규) 전략적 중요성이 큰 국가를 대상으로는 다양한 기관들과 협력해 다양한 분야별 행사를 집중 전개하는 '코리아 시즌'을 확대하여(40억원, +10억원) 한류 저변을 넓혀 갈 계획이다.

아울러, 세계 무대에서 기량을 펼치며 국가 위상을 높이는 미래 국가대표 육성을 위한 지원도 확대한다. 국가대표에 대한 훈련지원 확대와 함께(687억원, +117억원) 꿈나무—청소년—국가대표 후보선수로 이어지는 예비 국가대표 선수에 대한 훈련지원을 대폭 확대하고(276억원, +40억원), 저소득층 학생선수를 위한 체육 인재 장학도 늘린다.(77억원, +23억원) 체육인의 은퇴 후 제2의 삶 준비를 돕기 위한 직업안정 지원사업(50억원, 신규)도 새롭게 편성했다.

### 국가유산을 통한 복지 실현, 미래 가치 확대에 집중 투자

국가유산 체계 정립 후 국가유산 복지 실현, 국가와 지역발전 신성장동력인 국가유산 미래가치 확대, 세계 속의 K-헤리티지 확산을 통한 대한민국 국격 강화에 중점 투자한다. 사회적 약자의 국가유산 체험 기회를 확대하고, 국가유산 규제로 인한 국민들의 불편 해소 및 부담 경감을 지원한다. 자연유산 및 잠재적인 미래 유산을 발굴·육성하고, 국제 공동연구, 국제기구 세계·무형유산 신탁기금 지원 등을 통해 국제사회 대응 역량을 강화한다.

[표 3-1] 문화·체육·관광분야 재정투자 계획

(단위: 억원, %)

구 분	2024년(본예산) (a)	2025년 (b)	증감률 ((b-a)/a)
합 계	87,349	87,888	0.6
문화예술	40,628	39,857	△ 1.9
관광	13,161	13,477	2.4
체육	16,164	16,739	3.6
문화행정 일반	3,737	3,941	5.5
국가유산	13,659	13,874	1.6

### 3-2 부문별 주요 지원내용

#### 문화예술 부문

국민들의 일상 속 문화 접근성을 제고하고, 현실과 맞닿은 문화정책을 통해 사회기여도를 높이며, 전통문화 육성 등 우리 문화 정체성을 강화하고, 어린이·청소년·청년 등 미래세대 지원 및 문화예술 창제작을 활성화한다. 수도권-지역간 문화격차 해소를 위한 광역형·연계형 도시발전 모델인 '대한민국 문화도시'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K-콘텐츠 경쟁력 강화 및 OTT중심 산업구조 개편 대응 지원을 위해 모태펀드·글로벌 펀드·문화산업 보증 등 정책금융 지원과 K-콘텐츠·플랫폼의 동반 성장 및 해외진출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K-콘텐츠의 세계화와 문화예술저작권의 수출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저작권 보호와 기술개발 사업을 강화한다.

한류가 K-콘텐츠를 넘어서 문화 전반으로 확산·지속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특히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의 경주 개최를 계기로 긍정적 국가이미지 확산을 통해 글로벌 문화 선도국으로 자리매김 하도록 다채로운 문화·관광 행사 개최 및 미디어센터 운영 등을 통한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지원한다.

☞ (2024년) 4조 628억원→(2025년) 3조 9,857억원

저소득층 통합문화이용권 지원금을 연 13만원에서 14만원으로 인상하여 문화향유 장벽을 낮추고, 문화비 소득공제에 수영장·체력단련장 이용료를 신규로 도입하여 일상에 밀접한 문화소비를 지원하며, 지역과 생활 속에서의 인문 프로그램 등으로 인문 정신을 확산한다.

저출생 문제 대응의 일환으로 어린이와 가족 전용 문화공간인 어린이 예술마을을 조성하고, 게임·SNS 등 디지털 매체 과몰입 해결을 위한 인문치유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25년 8억원)하는 등 문화를 통한 사회문제 해결력을 제고한다.

인공지능 및 빅데이터 등의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한국어 학습 시스템(i-세종학당, '25년 35억원)을 구축하며, 기업-장인 협업을 통한 전통문화상품 개발 지원과 스토리텔링형 전통문화 홍보 콘텐츠 확산을 통해 전통문화 산업의 기반을 구축한다.

지역문화격차 해소를 위해 광역형·연계형 도시발전모델인 「대한민국 문화도시」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고(400억원, 신규), 문화취약지역, 혁신도시, 산업단지 등 문화 접근성이 낮은 지역 대상 문화프로그램 지원도 확대한다(108억원, +46억원).

창작 중단 위기에 있는 예술인에게 창작 안전망을 제공하기 위해 예술활동준비금을 취약계층 예술인(2만명)에 지원하며, 청년예술인 자립지원을 위해 청년예술인 예술활동 적립계좌(3천명, 월 10만원)를 도입한다. 또한, 문화 다양성의 가치 실현을 위해 장애예술인 창작 지원 및 장애인 접근성을 갖춘 전문 문화시설(공연장 및 전시장)을 통해 장애인 문화예술활동을 지원하고, 지역 거점 국공립문화시설 등의 접근성 개선 비용 지원으로 장애인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국립오페라단 등 국립예술단체에서 청년예술인들에게 무대 참여 기회와 현장 실무교육을 제공하는 청년교육단원 사업을 대폭 확대(350명→600명)하고, 어린이청소년극단 운영 활성화로 어린이청소년의 관심사와 연령별 성장단계에 맞춘 공연 제작을 통한 어린이청소년 문화감수성 제고를 도모할 계획이다.

수도권-지역간 문화격차 해소를 위해 예술가들이 지역에서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강화해 나간다. 국립예술단체와 기관들이 지역의 예술가와 협업하고 지역을 대상으로 우수한 공연·전시를 추진하는 등 지역 대상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지역에서 활동하는 우수한 지역대표예술단체를 육성(30개단체)하고, 국립청년예술단을

신설(4개단체)하는 등 지역 예술가들이 지역에서 활동할 수 있는 저변을 넓히고자 한다. 지역의 실력있는 예술가들이 더 높은 수준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지역과 연계한 후속지원을 신설하고, 우수한 공연·전시 작품의 전국 유통을 지원한다. 특히, 지역에서 하는 장르별 대표 축제를 중심으로 공연 유통 시장(B2B마켓)을 육성하여 예술에서도 시장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또한, 한국 문학, 미술 등의 관심 증대 수요에 대응하고 한국 작가 및 연구자의 국제적 입지 확장을 위해 해외에서 활발히 논의될 수 있도록 비평과 담론 형성 등 한국예술의 해외 진출을 지원한다.

K-콘텐츠의 수출 지원을 위하여 해외 현지에서 국내 콘텐츠기업의 수출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해외비즈니스센터를 확대함으로써((2024년) 25개소→(2025년) 30개소), 중동 등 신시장 진출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하고, K-콘텐츠 및 연관산업의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사업예산을 대폭 확대((2024년) 742억원→(2025년) 904억원)하여 범정부 협력을 강화하면서 민간의 자율적인 협업 증진 기반을 조성할 계획이다.

콘텐츠 분야 해외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글로벌 리그 펀드(400억원, 신규)’를 새롭게 조성하여, 세계적 경쟁력을 가진 콘텐츠 제작을 지원하고, 애니메이션 영화의 안정적인 투자 공급을 위해 ‘모태펀드 영화계정 출자액’을 확대(2024년 250억원→2025년 350억원)한다.

수교, 상호문화교류의 해 등 주요 계기를 활용한 국가 간 문화 교류를 강화((2024년) 39억원→(2025년) 94억원)하고, 전략적 중요성이 큰 국가를 대상으로 다양한 문화기관들과 협력하여 문화·예술·콘텐츠 등의 행사를 집중 전개하는 코리아 시즌도 국가별 행사의 규모를 확대((2024년) 2개국, 30억원→(2025년) 2개국, 40억원)하여 내용의 수준을 높인다.

침체된 영화시장 회복을 위해 대형 상업영화와 독립영화 사이 규모의 영화 제작 활성화를 위한 ‘중예산영화 제작지원’(100억원, 신규) 부문을 신설하여 추진한다. 게임산업의 다양화를 위해 콘솔게임 지원을 늘리고(2024년 68억원→2025년 155억원), K-콘텐츠의 세계 시장에서의 입지를 공고히 다지기 위해 장르별로 해외 진출 예산을 확대한다.(대중음악 해외진출 지원 30억원 증액, 애니메이션 해외진출 지원 9억원 증액) 또한, 디지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신기술융합콘텐츠육성 사업을 확대하고, 문화콘텐츠 R&D 전문인력 양성(R&D) 사업을 추진한다.

지역의 콘텐츠 개발 역량도 강화한다. 수도권과 지역 간의 콘텐츠 산업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지역 특화 콘텐츠 개발 지원 예산을 확대(2024년 46억원→2025년 183억원)하고, 지역콘텐츠산업 클러스터 조성 사업 예산을 확대(2024년 12억원→2025년 155억원) 하여 지역 고유의 자원을 활용한 콘텐츠 개발 경쟁력을 확충한다.

K-콘텐츠의 지속성장을 위해 저작권 보호도 강화한다. 국제 저작권 침해범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인터폴과 함께 진행하는 저작권 침해 대응 프로젝트를 연장하고(2025년~2029년), 저작권 인식 제고를 위한 공동 캠페인을 실시하는 등 규모도 확대한다.((2024년) 3억원→(2025년) 12억원) 또한 해외 진출 국내 기업의 저작권 분쟁해결을 지원하는 ‘맞춤형 해외 저작권 바우처 지원’을 확대하고((2024년) 4억원 →(2025년) 8.8억원),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저작권 문제 해결 기술 등 저작권 산업 강화를 위한 기초 기술도 집중 육성한다.

비판적 정보수용 능력 함양을 위한 미디어교육 확대 등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기반을 구축하고, 국내 OTT와 협업(공동투자) 등 토종 OTT·방송영상콘텐츠 해외 진출 지원을 통한 K-방송영상콘텐츠 산업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한다. 아울러, 노벨문학상 수상 계기 국내 독서열기 지속·확장과 함께 전세계로 해외 독자 개발 및 출판기업 수출 경쟁력 강화를 통한 K-북 글로벌 수요 확산, 디지털 시대에 걸맞는 지원 체계를 마련한다.

[표 3-2] 문화예술 부문 주요 변동내역

(단위: 억원, %)

구 분	2024년 (a)	2025년 (b)	증감률 ((b-a)/a)
합 계	6,907	8,294	20.0
전통문화 창업 및 융합 활성화	89	139	55.9
문화예술향유 지원	2,567	2,806	9.3
문화예술단체 운영지원	973	1,003	3.0
문화예술 창제작 거점 조성	514	580	12.9
함께누리 지원	291	308	5.8
미술진흥기반구축	447	469	4.8
대한민국 문화도시 조성	—	400	순증
국민문화활동 지원	256	274	7.3
국제문화정책지원	110	210	90.2
문화콘텐츠국제협력및수출기반조성	742	904	21.7
지역콘텐츠산업 균형발전 지원	404	636	57.2
출판산업 활성화	429	460	7.3
글로벌 저작권 현안 신속 대응(R&D)	85	105	23.1

## 관광 부문

방한 관광시장이 코로나 이전에 근접한 수준까지 양적 회복이 이루어진바, 최근 국내상황으로 위축된 관광분야의 활력을 제고하여 관광대국을 향한 질적 도약을 추진한다.

한국방문의 해를 잇는 K-관광의 확산 프로모션을 통해 방한관광을 활성화하는 한편, 콘텐츠 중심의 지역관광자원의 개발과 다변화로 ‘모든 산업·콘텐츠의 관광화’를 도모하고 관광으로 성장하는 지역경제를 조성한다. 또한, 중소 관광기업의 성장체계를 견고히 하기 위한 금융지원을 확대하고 기업 성장단계(예비-초기-성장)별로 집중 지원하는 등 관광기업 육성을 통해 지역관광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한다.

☞ (2024년) 1조 3,161억원→(2025년) 1조 3,477억원 (2.4% 증가)

2025년은 그간의 방한시장의 양적 회복을 바탕으로 질적 도약이 필요한 시점으로 ‘2024 한국방문의 해’ 마케팅을 잇는 코리아그랜드 세일(1~2월), 코리아 뷰티페스티벌(6월) 등 대규모 외래객 유치를 위한 프로모션을 적기에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최근 외래관광객의 K-라이프스타일에 대한 체험콘텐츠 선호 경향을 반영하여 국내 관광서비스 업체를 대상으로 해외 마케팅 교육 및 컨설팅 등 인바운드 유치를 원스톱으로 지원하고, 뷰티·패션·게임 등 K-컬처 연관산업과 연계한 해외시장별 타겟마케팅, 관광서비스업체 해외 현지 마케팅 및 홍보를 신규로 추진한다.(105억원, 신규) 또한, 시장별 수요에 맞는 고부가 방한관광 육성을 위해 마이스·의료·웰니스 관광뿐만 아니라 유학생 및 친구·친지 대상 교육여행(20억원, 신규), 해수부 협업을 통한 크루즈 기항지 관광(51억원, 신규) 등도 신규로 추진한다.

한국 관광의 홍보를 위해 12개국 20개 도시에서 개최되는 K-관광 로드쇼, 인천공항에 새롭게 조성된 K-관광·컬처존을 통해 숙성된 한류의 열기를 방한의 촉매제로 활용하고 방한관광객의 국내 지역관광의 장애요소로 지적되던 교통서비스 개선을 위해 권역별 관광교통 노선 신설을 통한 관광지 접근 편의성 개선 및 시내버스 다국어 안내 서비스 확대 등을 통해 방한 외국인의 지역관광 불편요소를 해소할 계획이다.

국내외 관광객의 일부지역 편중 한계를 극복하고 관광을 통해 지역경제가 성장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의 관광자원화’를 추진한다. 기존에 조성된 자전거길을 기반으로 다양한 지역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지역별 테마 및 세대별 맞춤 코스 발굴을 통해 자전거 여행을 활성화하고, 보훈부와 협업하여 전국에 산재한 참전국 기념시설 및 주요 전적지 등을 지역 관광자원과 연계하는 전적지 관광자원화를 신규로 추진한다. 남부권의 지역 명소를 개발하는 광역관광개발사업이 2025년부터 본격적으로 공사에 착수할 예정이며(278→788억원), 그간 광역관광개발의 집행 부진 문제 등을 완화하기 위해 성과관리 컨설팅을 추진할 계획이다.(7억원, 신규) 한편, 위케이션 인식개선 및 여행가는 달 캠페인 등을 통해 일상 속에서 쉽게 떠나는 여행문화를 조성하여 관광을 통한 내수진작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2024년 선정한 3개의 지역 축제가 한국 대표 글로벌 축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25→35억원)

최근 국내상황으로 불안정한 관광환경을 극복하고 관광산업 활력 제고를 위해 관광기금 용자는 총 6,865억원 규모로 지원하고 관광기업 육성 펀드에 330억원을 추가 출자하여 4,600억원 규모로 조성함으로써 관광업계의 성장체계를 견고히 하는 한편, 관광기업 성장단계(예비-초기-성장)별 지원 및 관광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 지원을 위한 혁신바우처(156→180개사)를 확대한다. 또한, 고부가관광 MICE 산업의 육성을 위해 지역전략산업 연계 시그니처국제회의 및 예비 국제회의지구 활성화 사업을 지원하고 新융합관광산업의 성장 모멘텀 마련을 위해 K-산업 및 문화를 담은 산업단지 연계 新산업관광 활성화(13억원, 신규)를 신규로 추진하는 한편, K-스포츠·공연 등 연계 관광 활성화, 'K-로컬 미식 여행 33선' 중심 미식관광도 지속 육성한다.

[표 3-3] 관광 부문 주요 변동내역

(단위: 억원 %)

구 분	2024년 (a)	2025년 (b)	증감률 ((b-a)/a)
합 계	13,161	13,477	2.4
관광산업 융자지원	5,417	5,918	9.3
남부권 광역관광개발	278	788	183.8
관광기업육성 펀드 조성	200	330	65.5
지역 MICE 활성화 지원	70	72	1.9
관광교통편의성 제고	32	52	60.7
코리아 그랜드세일	27	41	54.3
코리아뷰티페스티벌	16	38	138.0
외래관광객 체험콘텐츠 다변화	—	105	순증
협업기반 관광활성화	—	51	순증
자전거여행 활성화	—	28	순증
교육여행 활성화	—	20	순증
신산업관광 육성	—	13	순증
광역관광개발 성과관리 컨설팅	—	7	순증
전적지활용 관광자원화	—	3	순증

## 체육 부문

지역 자율형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 및 취약계층 생활체육 참여 기회 확대, 시니어 및 유아 친화형 국민체육센터 건립 지원 확대 등 생활 속의 체육활동 환경을 조성하고, 국가대표선수 훈련 여건 개선 및 체육인 복지 확대 등 전문체육 육성 환경을 조성한다. 아울러 신성장동력으로서 스포츠산업 육성코자 해외진출 기회를 확대하고, 국제대회 개최 등 국제스포츠 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지속 추진한다.

☞ (2024년) 1조 6,164억원→(2025년) 1조 6,739억원 (3.6% 증가)

생활체육 분야는 맞춤형 생활체육 활동지원, 신나는 주말체육 프로그램 지원 등을 지역 협력사업으로 전환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지역자율형 생활체육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스포츠활동 인센티브 수혜자를 확대(1→8만명)하는 등 생활체육 발전을 도모한다. 또한,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스포츠 참여 보장을 위해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을 확대(월10→월10.5만원)하고 취약계층 프로스포츠 경기관람권 할인 지원(1.5→2만원)을 확대한다. 이 밖에도 인구변화에 대응하고자 시니어(8→20개소) 및 유아(3→9개소) 친화형 국민체육센터 건립 지원사업을 확대하는 등 다양한 계층의 생활체육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사업을 중심으로 편성하였다.

전문체육 분야는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을 위해 국가대표 트레이너 및 전담팀의 처우를 개선하고, 후보선수·청소년대표·꿈나무선수 증원 및 훈련식비 증액 등의 지원을 확대하고, 스포츠클라이밍 훈련장 조성 등의 훈련환경 개선 사업들을 편성하였다. 또한, 저소득층 학생 선수의 체육활동 지원을 위한 ‘스포츠꿈나무 특기장려금’ 지원인원 확대(1,237명→1,800명)와 은퇴선수의 진로전환 지원을 위한 ‘체육인 직업안정지원 사업’을 신규 편성(50억)하는 등 체육인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들을 편성하였고, 체육계 비리·인권침해 전담기구인 ‘스포츠윤리센터 운영’을 위한 전문 조사관 증원으로 신속하고 전문적인 사건 조사 기능을 강화하였다.

스포츠산업 분야에서는 스포츠산업 규모를 '27년까지 100조원으로 확대하기 위해 융자, 펀드 등 스포츠산업 금융지원을 역대 최대규모로 지원하고 스포츠산업 수출 분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용자 지원('24년 1,637억원→2025년 2,481억원) 예산을 확대하여 영세 스포츠기업의 자금조달을 지원하는 한편, 스포츠 산업의 글로벌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수출중심의 펀드 투자를 강화한다.

국내 스포츠기업의 세계시장 진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글로벌 스포츠 강소기업 육성지원' 사업을 확대하였다. 해외 전시회 공동관 기획·운영 횟수를 늘리고, 개별 전시회에 참가하고자 하는 대상기업수도 확대한다. 또한, 해외 바이어를 국내에 초청하여 기업과 연결하고, 사전·사후 수출 상담까지 돕는 방식으로 내실 있는 해외 진출 지원 사업을 지속 추진한다.

장애인체육 분야에서는 장애인체육 종목별·유형별 가맹단체(30→32개소) 및 장애인체육 시군구장애인체육회(130→156개소) 지원 확대를 통해 장애인체육 행정 서비스 전달체계를 강화한다.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인원 확대(2→2.59만명), 장애인체육 리그전 확대(8→11개) 등 장애인 체육활동의 저변을 확산한다. 이외에도, 장애인 선수 경기력 향상을 위해 의과학 신규 장비 도입 및 노후장비 교체 등 스포츠과학 지원을 강화하며 이천선수촌 노후시설 보강을 통해 선수들의 훈련 환경을 개선하고, '2025년 국제패럴림픽위원회(IPC) 정기총회'를 서울에서 개최하여 대한민국 장애인체육 위상을 강화할 예정이다.

국제스포츠 분야에서는 2025 하얼빈 동계아시아경기대회 등 주요 국제대회에 우리 선수단의 안전한 참가를 지원하고, 국내에서 개최 예정인 '2026 대구세계마스터즈 육상경기대회'와 '2027 충청권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등 각종 국제대회 개최도 내실 있게 준비한다. 또한, 2025 세계도핑방지기구 총회를 부산에서 개최함으로써 스포츠 선진국으로서의 위상을 제고하고 도핑방지활동 사업 확대 지원 및 개도국 대상 스포츠 발전지원 사업을 지속 지원한다.

[표 3-4] 체육 부문 주요 변동내역

(단위: 억원, %)

구 분	2024년 (a)	2025년 (b)	증감률 ((b-a)/a)
합 계	5,033	6,393	27.0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1,203	1,313	9.01
스포츠활동 인센티브	7	56	713.5
주최단체 지원	1,297	1,545	19.1
스포츠윤리센터 운영	76	94	23.1
체육인복지사업	197	221	12.3
스포츠산업 금융지원(융자)	1,637	2,481	51.5
국제체육교류 지원	135	152	12.6
장애인체육단체 운영지원	376	410	9.0
도핑방지활동지원	105	122	16.2

국가유산 부문

국민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하는 국가유산 복지를 실현하고, 지역발전 신성장 동력인 국가유산의 미래가치를 확대하며, 세계 속의 K-헤리티지 확산을 통한 대한민국의 국격을 강화한다  
☞ (2024년) 1조 3,659억원→(2025년) 1조 3,875억원 (1.6% 증가)

기후변화 및 재난으로부터 국가유산의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 국가유산 보수정비 지원을 확대하고, 국가유산 규제로 인한 국민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매장유산 유존지역 정보 고도화 및 보전유적 관리지원을 확대한다.

K-유산의 가치 확산을 통한 국가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하여 세계유산 보존관리 및 홍보지원을 확대하고, 유네스코 세계유산 국제해석설명센터 건립 및 유네스코 세계 무형유산 신탁기금 지원을 신규로 추진하여 국제협력 및 지위강화를 도모한다.

국가유산 체계 전환에 따른 자연유산의 체계적 보호체계 확립 및 대국민 향유기회 확대를 위하여 천연기념물 동·식물 지정 확대 및 상시관리를 강화하고 지질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 명승·전통조경 정책 마련 및 제도개선 사업 등을 신규 추진한다.

[표 3-5] 국가유산 부문 주요 변동내역

(단위: 억원 %)

구 분	2024년 (a)	2025년 (b)	증감률 ((b-a)/a)
합 계	13,659	13,875	1.6
국가유산 보수정비	5,173	5,299	2.4
매장유산 보호 및 관리지원	55	115	107.9
동산문화유산보존관리	46	163	256.9
유네스코 등 국제기구 신탁기금 지원	10	23	133.2
지질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	—	23	순증

## 04 환경 분야



### 4-1 재정지원 방향

2025년 환경분야 재정투자 규모는 전년대비 3.8% 증가한 13.0조원이다.

기후위기 대비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국민안전 확보를 위한 물관리, 온실가스 감축, 녹색산업·금융 지원 등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 기후위기시대,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한 물관리 강화

도시침수의 주요 대응시설인 하수관로 정비를 위한 투자를 대폭 확대한다. 노후 하수관로를 정비하고, 도시 지역 침수 방지를 위한 대규모 인프라 사업에 착공하며, 농어촌 취약지역 하수도 보급도 촉진한다.

또한 녹조로부터 안전한 먹는물 확보와 수질오염 사고 대응을 위한 투자를 확대한다. 녹조제거선을 확충(16대→23대)하고, 수질오염 부하량이 높은 가축분뇨를 처리하기 위한 시설투자도 확대한다. 사고 발생 시 오염물질이 하천으로 유입되는 것을 초기에 차단하여 수질오염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완충저류시설 설치를 위한 투자도 대폭 확대한다.

아울러, 도서·내륙 등 상습 물부족지역의 용수 확보를 위한 노력도 강화한다. 대표적인 대체수원인 지하수를 활용하는 지하수저류댐 설치를 확대(신규 착공 5곳)한다. 첨단산업 공업용수 등 수도시설 기반시설(인프라)을 적기에 구축하기 위한 투자도 강화한다.

## 탄소중립 이행과 녹색산업 육성으로 미래성장동력 창출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달성 및 국제탄소규제 대응을 위해 온실가스 감축 지원과 기업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미세먼지 개선을 위해 무공해차 전환 지원을 확대한다. 전기차 충전 기반시설의 안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스마트 제어 충전기 설치도 대폭 확대(2.3만기→9.5만기)한다. 민간의 녹색투자 유인 확대 등으로 미래 먹거리인 녹색산업을 육성한다. 우수기술을 보유한 중소 녹색기업과 금융권과의 자금 수요·공급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해 녹색보증사업을 신설하고, 온실가스 감축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의 대출 이자비용 지원을 강화한다. 녹색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민관 합동 펀드 조성 예산도 2배로 늘린다.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을 지원하고 우리 녹색산업의 해외시장 진출의 마중물이 될 ‘녹색 공적개발원조(그린ODA)’ 예산도 올해 대비 56.6% 확대한다.

## 대국민 환경서비스 제고 및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구현

환경보건취약계층 중 환경성질환에 취약한 어린이를 중심으로 환경보건이용권 서비스를 신규로 도입(1만명, 연 10만원)한다. 실내환경진단(컨설팅), 진료지원 등 환경보건 서비스 중 원하는 것을 선택하여 제공받을 수 있다.

훼손지 복원을 통한 자연가치 증진 사업도 지속 추진한다. 토양오염 정화가 완료된 서천 옛 장항제련소 주변 부지를 복원하기 위한 장항 국가습지 복원사업과 사육곰 보호시설 설치사업의 적정소요를 반영하고, 개발제한구역(GB) 중 생태적 가치가 높으나 훼손된 지역을 국토부와 협업을 통해 체계적으로 복원하는 개발제한구역 내 자연환경복원 사업을 확대(신규 1곳)한다.

폐기물 직매립 금지가 시행(수도권 '26년, 전국 '30년)됨에 따라 소각시설 등 폐기물처리 시설에 대한 투자도 대폭 강화한다. 아울러, 다화용기 사용이 우리 생활문화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고, 일회용 택배상자를 다화용으로 대체하는 등 규제에서 자발적 참여에 기반한 일회용품 감량을 지원한다.

[표 4-1] 환경 분야 재정투자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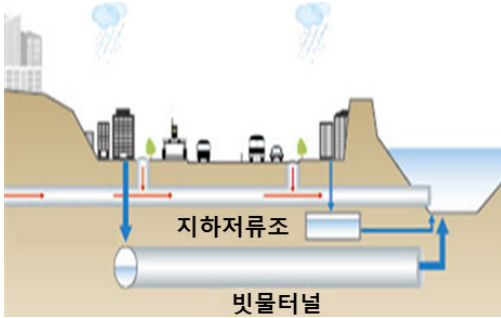
(단위: 억원, %)

구 분	2024년 (a)	2025년 (b)	증감률 ((b-a)/a)
합 계	124,943	129,717	3.8
물환경	48,640	51,223	5.3
기후대기 및 환경안전	44,528	43,592	△2.1
자원순환 및 환경경제	13,698	17,384	26.9
자연환경	9,041	8,118	△10.2
환경일반	5,522	5,671	2.7
해양환경	3,513	3,729	6.1

## 4-2 부문별 주요지원내용

### 물환경 부문

지반침하 예방을 위해 노후 하수관로를 정비하고, 도시침수시설 신·증설을 신속 추진하기 위해 하수관로정비 사업 예산은 2024년 1조 2,816억원에서 2025년 1조 6,264억원으로 대폭 늘린다. 또한 도심지에 매우 강한 강도의 집중호우가 내리는 것에 대비해 지하에 대규모 빗물을 일시 저장할 수 있는 대심도 빗물저류터널 사업 착공을 위해, 강남역(총사업비 5,386억원)과 광화문(3,298억원)에 설치비를 지원한다. 한편, 면단위하수처리장 설치 사업 예산도 2024년 345억원에서 2025년 796억원으로 2배 수준으로 투자를 대폭 확대하여 도시에 비해 인프라가 부족한 농어촌 하수도 보급을 촉진함으로써 생활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대심도 빗물터널 개념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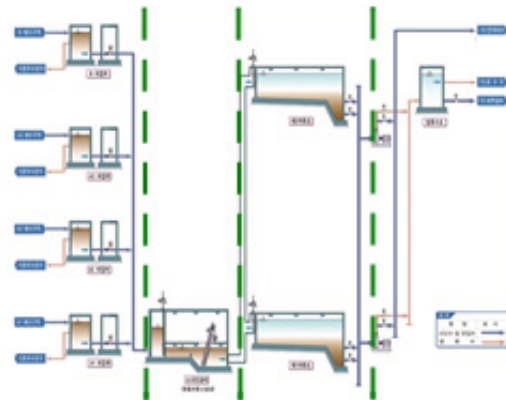


〈 대심도 빗물터널 사례(신월) 〉

또한, 산업단지·공업지역 등 공장밀집지역에서의 화재·폭발 등으로 인한 유해화학 물질 유출과 폐수배출업소의 폐수 유출 등 사고유출수의 하천 직유입 차단을 위한 완충저류시설 설치는 2024년 514억원에서 2025년 1,637억원으로 대폭 확대하여 수질사고 대응 사업을 지원한다.



〈 완충저류시설 개념도 〉



〈 사고시 완충저류시설 처리과정 〉

(평상시) 우수관→방류, (사고시) 우수관→완충저류시설→공공하·폐수처리시설→방류

더하여, 수질 및 생활환경 오염저감을 위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확충 및 개선사업 예산은 2024년 594억원에서 2025년 1,167억원으로 약 2배 확대하였다. 이는 2025~2026년 준공예정인 가축분뇨 바이오가스화시설 등을 적기에 준공(808억원)하고, '25년부터 우분 고체연료화 사업 등을 본격적으로 추진(19억원)하여 가축분뇨처리에 에너지화까지 고려한 처리시설을 조속히 확충하기 위한 것이다.



〈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 〉



〈 가축분뇨 퇴비의 무단적치 〉

또한, 노후화된 처리시설의 효율 개선, 악취처리공정 개선 등을 위해 기존 공공처리 시설의 개선과 보수를 위한 사업비(18억원)도 지원하여 기존 처리시설 운영에 따른 지역 민원 해결될 수 있도록 하였다.

[표 4-2] 물환경 분야 주요 사업 투자 계획

(단위: 억원, %)

구 분	2024년 (a)	2025년 (b)	증감률 ((b-a)/a)
합 계	48,640	51,223	5.3
하수관로정비	12,816	16,264	26.9
면단위하수처리시설	345	796	130.7
산업단지완충저류시설	514	1,637	218.5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594	1,167	96.5

## 기후대기 및 환경안전 부문



〈온실가스 감축설비〉

정부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에 참여하는 업체를 지원하기 위하여 1,154억원('25년) 규모의 탄소중립설비 교체·설치 사업을 지원한다. 탄소무배출설비, 폐열회수이용설비, 탄소포집설비 등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는 공정설비를 개선하거나, 전력 및 연료 사용 설비를 고효율 장비로 교체 또는 설치할 경우,

정부가 비용을 지원하여 기업의 탄소감축 투자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저탄소 전환을 촉진한다.

더불어, 탄소중립 100대 핵심기술을 포함한 기술수준이 낮으나 탄소중립에 필수적인 탄소혁신기술에 대하여 100억('24년)규모로 지원한다.

또한, EU CBAM 등 국제탄소규제 대상 기업에 대해 배출량 산정 컨설팅 확대('24년 60개소→'25년 100개소), 담당자 교육 등을 추진하여 기업의 대응역량을 강화한다.

한편, 탄소중립 녹색생활 실천문화 확산의 주역인 청년세대의 혜택을 강화하고 참여를 독려하고자, 2025년에는 탄소중립포인트 인센티브 지급 항목이 확대·개편(기존 10개 항목→변경 12개 항목)될 예정이며, 신규로 추가 예정인 항목은 '공영자전거 이용'과 '잔반제로 실천'이다.



〈자전거 이용〉



〈잔반제로 실천〉

정부는 초미세먼지 개선목표(2027년  $13\mu\text{g}/\text{m}^3$ ) 달성을 위한 부문별 감축노력과 함께 국민생활공간 미세먼지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산업부문의 미세먼지 감축 및 지역단위 대기질 개선을 위해 중·소 사업장을 대상으로 노후방지시설 교체(설치) 및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비용 등을 2025년 315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우리동네 맑은공기 패키지 지원 사업’으로 오염 집중관리지역 개선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대중소기업 지역대기질 개선 상생협력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지역 대기질 개선과 기업간 동반성장을 유도한다. 수송부문은 차종별 수요를 고려한 무공해차 보급사업을 추진한다. 전기차는 보급형·고성능 차량 중심으로 지원하고(‘24년 33.2만대→’25년 33.9만대), 수소차는 상용차(‘24년 1,750대→’25년 2,020대) 중심으로 보급한다.

### 【우리동네 맑은공기 패키지 지원 체계(안)】



2025년도 실내환경관리센터 운영을 통한 실내환경관리 조사·연구사업이 시작될 예정이며, 실내환경관리센터에서 추진하던 민감·취약계층 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컨설팅 사업도 대상을 확대(‘24년 600개소→’25년 650개소)할 계획이다. 또한 지하철역사 공기질 개선을 위한 보조사업을 지속 추진한다.(‘25년 170억원)



환경성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민감·취약계층 환경보건 서비스, 환경오염 취약지역 등에 대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수급자 어린이를 대상으로 실내환경 진단·컨설팅, 진료 지원, 건강나누리 캠프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환경보건이용권 사업을 개시하고, 어린이 활동공간에 대한 환경 안전진단 및 시설개선 지원을 추진한다.



〈 실내환경 개선 지원 전·후 비교 〉

또한, 시멘트공장(단양), 폐기물 재활용시설 주변지역('25년 2개소 시범조사) 등 환경오염 취약지역 관리대책 마련 등을 위한 주민 건강영향조사를 실시한다.

아울러, 살생물제 피해구제시스템, 생활보건 컨설턴트 및 어린이 환경보건 시스템 등 환경보건 관련 정보시스템을 통합하여 사용자 중심의 종합 플랫폼을 구축함으로써 보다 편리한 환경보건 서비스를 제공한다.

화학물질 동물대체시험법 활성화를 위하여 동물대체 시험시설 구축, 유해성평가를 위한 대체자료 생산 및 검증 등 화학물질 등록·평가제도를 개선하고,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화학물질 등록·신고제도 이행을 위해 시험자료 생산 등을 지원한다.

또한 화학물질정보 공동활용 플랫폼 구축을 통해 개별 법령에 따라 관리하던 시스템을 통합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화학물질 관리기반을 마련한다.

화학사고 발생 최소화를 위해 화학물질 유·누출 감시, 사고 유발 화학물질의 현장 내 발생 및 작용 예측 등 화학사고 예측·예방 및 사후 피해영향평가 기술을 개발한다.

[표 4-3] 기후대기 및 환경안전 부문 주요 사업 투자 계획

(단위: 억원, %)

구 분	2024년 (a)	2025년 (b)	증감률 ((b-a)/a)
합 계	44,528	43,592	△2.1
무공해차 보급사업	23,193	22,631	△2.4
무공해차 충전인프라 구축사업	7,344	9,284	26.4
환경보건기반 강화 협력	78	71	△8.9
환경오염 취약지역 건강보호대책	31	30	△3.1
어린이 건강보호 종합대책 추진	77	67	△13.3
화학물질 관리체계 선진화	618	617	△0.1
화학물질정보통합시스템 구축·운영	55	69	25.6
화학사고 예측·예방 고도화 기술개발사업(R&D)	30	50	70.4

 **자원순환 및 환경경제**

글로벌 녹색시장이 팽창하는 흐름에 발맞춰 이를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현지 수주지원단 파견 등 녹색산업체 해외 경쟁력 강화를 중점 지원한다. 특히, 2024년도에는 해외 녹색 인프라사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 2024~2028년 5년 간 총 4,000억 규모의 녹색 수출전용 펀드를 신규조성할 예정이다.

또한, 글로벌 녹색시장 경쟁력 확보 및 녹색산업 육성을 위해 유망 환경기업을 대상으로 한 ‘중소환경기업 사업화지원’도 2024년 781억원에서 2025년 878억원으로 증액하였다.

녹색금융 공급을 강화하여 민간의 녹색투자 활성화를 이끌어 나갈 예정이다. 대규모 녹색투자를 지원하는 한국형 녹색채권에 대한 이차보전 지원율을 상향(중소·중견기업 0.4%p→1.0%p)하고, 단독으로 녹색채권 발행이 어려운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 지원 시범사업을 2025년부터 본사업화하여 3년간 지원하는 구조로 전환하였다.

녹색분류체계에 적합한 사업을 하는 기업대상으로 이차보전을 지원하는 녹색정책금융 활성화를 319억원에서 540억원으로 대폭 증액하여 산업계의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투자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며, 중소·중견기업의 성장 및 녹색전환 지원을 위한 재정용자를 2024년 4,200억원 규모에서 2025년 4,572억원 규모로 확대한다.

또한, 산업 전반의 저탄소 기술혁신 및 시설투자 등을 지원하기 위해 담보가 열악한 중소·중견기업에 보증을 공급하는 ‘녹색전환보증’을 1,400억원 규모로 신규 편성하여 약 1.5조원의 지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생산·유통·소비·재사용 전과정에서 폐기물 발생을 줄이고, 버려지던 폐자원을 최대한 이용하는 순환경제 구현을 위한 투자를 확대한다.

영화관·장례식장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다회용기를 회수·세척·재사용하도록 지원하는 다회용기 보급 사업을 확대(‘24년 89억원→’25년 100억원)하고, 제주에서 발생한 사용후 배터리를 농기구 등으로 재활용하여 농어촌·에너지 취약지역에 보급하는 시범사업(‘25년 8억원)과 글로벌시장에서 요구하는 사용후 배터리 환경규제, 안전관리 측면의 핵심기술 확보를 위한 사용후 배터리 안전관리 및 재제조 유통순환 기술개발(‘25년 28억원) 등 사용후 배터리 순환이용 생태계 조성을 위한 예산을 고르게 반영하였다.



〈 다회용기 세척·재사용 체계 〉

폐기물을 안전하게 처리하고, 효과적으로 재활용 할 수 있도록 자원순환 기초시설에 대한 투자를 확대한다. 매립시설, 소각시설 등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를 위한 예산 지원을 2024년도 1,600억원에서 2025년 2,255억원으로 확대하고, 폐기물 재사용 활성화를 위한 업사이클센터(5개소) 설치 예산(41억원)도 지원한다.

[표 4-4] 자원순환 및 환경경제 부문 주요 사업 투자 계획

(단위: 억원, %)

구 분	2024년 (a)	2025년 (b)	증감률 ((b-a)/a)
합 계	13,698	17,384	26.9
녹색인프라 해외 수출지원 펀드	300	600	100.0
중소환경기업 사업화 지원	781	878	12.4
환경책임투자활성화	240	248	3.3
녹색정책금융 활성화	319	540	69.1
미래환경산업 육성용자	330	333	1.0
자원순환촉진지원	206	206	-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재활용체계 구축운영	123	87	△28.8
폐기물처리시설 확충	1,600	2,255	41.0

 자연환경

소외계층 없이 국민 모두가 자연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국립공원 내 무장애 탐방로(조성 1개소·정비 8개소, 18억원), 저지대 숲체험인프라(4개소, 28억원) 조성 및 취약계층 생태복지 서비스(2개 사업, 4.5억원)를 확대한다. 이와 함께, 생태적 가치가 높은 지역에 대한 관리 강화를 위해 보호지역 사유지 매입을 추진(200억원)하며, 지역특산물 상품화 지원을 위한 특화시설을 조성하고 탐방객 유입을 유도하기 위한 마을체험 프로그램도 확대('24년 18개소→'25년 20개소) 한다.

또한, 전국에 확산되어 자연생태계의 균형을 교란시키는 황소개구리, 뉴트리아, 가시박 등 생태계교란 생물을 퇴치하기 위해 58억원이 투자되며, 동물매개 질병 해외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295억원('25년 누적 투자액)을 투자해서 야생동물 검역장을 설치·운영 할 예정이다.

제1부

2025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및 제안설명

제2부

2025년도 나라살림

제3부

2025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아울러, 서천 장항 국가습지복원사업 등 국가가 선도적으로 추진하는 자연환경 복원사업과 한반도 생태축 복원, 도시생태축 복원사업 등 훼손·단절된 지역을 연결·복원하기 위해 225억원을 투자 한다.



〈 국립공원 무장애 탐방로 〉



〈 야생동물 검역시행장 조감도 〉

[표 4-5] 자연환경 부문 주요 사업 투자 계획

(단위: 억원 %)

구 분	2024년 (a)	2025년 (b)	증감률 ((b-a)/a)
합 계	9,041	8,118	△10.2
국립공원 및 지질공원사업	2,137	1,456	△31.9
생물자원보전 종합대책	291	293	0.6
국토생태네트워크구축	166	331	99.8
국토환경 녹색복원	38	34	△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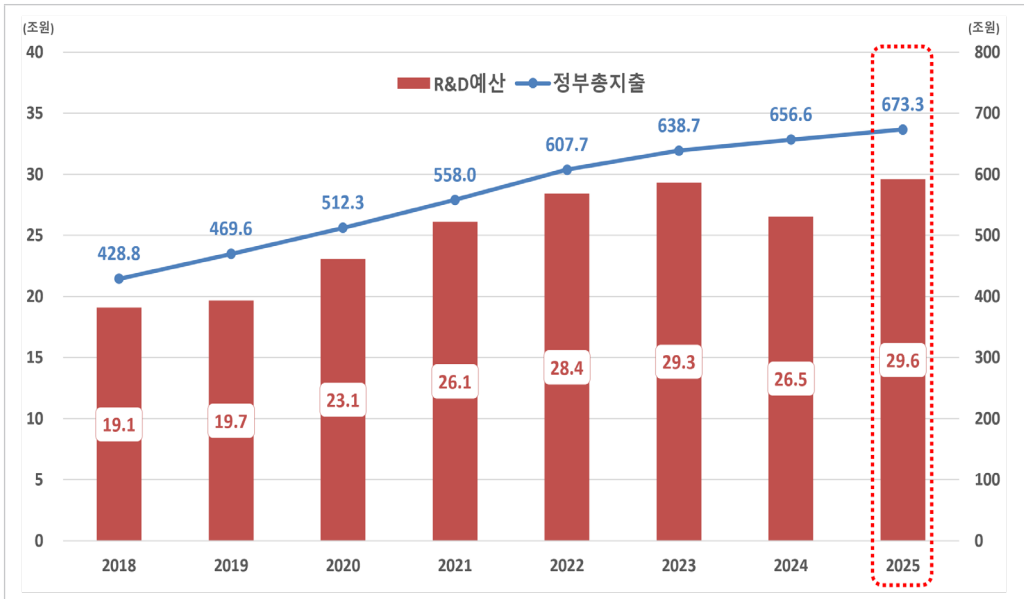
# 05 R&D 분야



## 5-1 재정지원 방향

2025년 R&D 분야에 대한 재정투자 규모는 2024년 대비 11.5% 증가한 29.6조원이다. 이는 2024년 R&D예산의 비효율·낭비요인을 구조조정한 이후, 선도형 R&D 전환을 위해 집중 투자한 결과이다. 기술패권 경쟁력 강화를 위해 3대 게임체인저(AI-반도체, 첨단 바이오, 양자)와 국가전략기술 투자를 확대하고, 수월성을 중심으로 한 기초연구 지원과 젊은 과학자 연구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을 확대한다. 또한, 선도국과의 연구동맹 구축을 위한 글로벌 R&D 확대하는 한편, 연구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하는 혁신도전형 사업을 강화한다.

### 1) 선도형 R&D 체질개선 토대로 투자 확충



\* OECD 분류체계에 따른 비R&D 이관분 제외

제1부

2025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및 제안설명

제2부

2025년도 나라살림

제3부

2025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정부 R&D 예산은 2019년 20→2023년 29조원 수준으로 최근 급격히 확대되었으나, 투자 규모에 비해 혁신적 성과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24년 전체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성과 미흡 및 관행적 사업을 구조조정하는 한편, R&D 시스템의 추격형→선도형 R&D 전환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였다. R&D 예타·일몰제 폐지, 혁신도전형 확대, 바이오 범부처 협업 체계 마련 등 연구현장에서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시스템 개편을 토대로, R&D 투자를 확충하였다.

2025년도 정부R&D 예산은 2024년 대비 11.5% 증가한 29.6조원이다. 이는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제고하기 위해 신성장·임무형 R&D를 강화를 위해 집중 활용될 계획이다. AI·반도체, 첨단 바이오, 양자 등 3대 게임체인저 기술 및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우주, 차세대원자력 등 국가전략기술 집중 투자를 통해 시스템 개편 기반의 선도형 R&D로 전환한다. 또한 젊은 과학자가 안정적·도전적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기초연구 및 연구자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선도국과의 연구동맹 구축 및 파급력이 높은 연구성과 창출을 위해 글로벌R&D 투자를 확대한다.

[표 5-1] R&amp;D 분야 재정투자 계획

(단위: 억원 %)

구 분	2024년 (a)	2025년 (b)	증감률 ((b-a)/a)
합 계	265,369	295,968	11.5
과학기술·통신 분야	92,663	108,576	17.2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	65,548	71,806	9.5
교육 분야	13,802	14,864	7.7
보건·복지 분야	12,078	13,992	15.8
SOC 분야	8,379	9,892	18.1
기타 부문	72,899	76,837	5.4

## 5-2 부문별 지원 내용

### 1) 3대 게임체인저 및 국가전략기술

미래기술 신시장 선점 및 기술주권 확보를 위해 3대 게임 체인저('24년 2.7→'25년 3.4조원) 및 12대 국가전략기술('24년 5.0→'25년 6.4조원) 투자를 확대한다.

3대 게임 체인저(AI-반도체, 첨단바이오, 양자) 글로벌 3대 강국(G3) 도약을 위해 정부 R&D 예산을 집중 투자한다. ((2024년) 2.7조원→(2025년) 3.4조원). AI-반도체 분야에서는 세계적인 수준의 메모리 반도체 기술을 바탕으로 차세대 AI 생태계를 구축하고, 첨단바이오 분야에서는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 데이터와 바이오 제조 역량을 활용하는 협업·혁신 연구를 지원한다. 마지막으로, 양자 기술 분야에서는 기존 과학 인프라 경쟁력을 기반으로 핵심 기술을 빠르게 추격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과학기술 주권 확보를 위해 반도체·디스플레이, 차세대 원자력, 이차전지, 우주항공·해양, 차세대 통신 등 12대 국가전략기술은 전년대비 29.6% 증액된 6.4조원 규모로 투자를 대폭 확대·강화한다.

먼저, AI 혁명에 따른 AI 반도체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NPU, PIM 등 고집적·고효율 반도체 초격차 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AI 컴퓨팅 성능 향상을 위한 이종집적 칩렛 패키징 등 반도체 후공정 기술 역량 강화를 추진한다. 디스플레이는 기존 OLED의 성능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무기발광 디스플레이(iLED) 원천기술 및 공정 개발에 집중 투자하여 경쟁국의 추격을 저지하고 차세대 신규 시장 선점을 지원한다.

다음으로, 데이터센터, 전기차 등 사용 확대에 따른 전력 소비 급증에 대응하고, 에너지 안보 강화를 위해 저비용·고안전의 차세대 혁신형 소형모듈 원자로(iSMR) 기술개발 관련 투자를 확대한다. iSMR 개발성과 상용화를 위해 민관협력도 강화하며 다양한 차세대 원자력 성공가능 모델의 국제 연구 협력체계 구축을 지원한다.

한편, 이차전지 주도권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우리 기술의 비교우위 확보를 위해 기존 리튬이온 전지의 핵심소재 기술 고도화·자립화를 지속 지원하는 한편, 전고체·리튬메탈, 수계아연, 나트륨이온 등의 차세대 전지 개발과 함께 재사용 이차전지 운용 안전성·시장성 관련 기술개발도 적극 강화해 나간다.

또한, 2032년 달 표면 탐사 임무 달성을 위한 핵심 역량을 확보하고, 민간 우주산업 생태계 조성을 지원한다. 누리호 반복발사를 통한 신뢰성 확보, 재사용발사체 기술개발, 위성 기술 자립화에도 투자를 강화하여 우주 전략기술 고도화를 전인한다.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핵심 기술 중 하나인 수소 분야는 부생·추출수소 중심에서 청정수소 대량 생산·공급 체계로 전환하기 위해 수전해 시스템 스케일업 기술개발 및 안전성 기반의 효율적 수소 저장·운송 수단 확보를 추진한다. 수소 연료전지의 고부가 핵심기술 국산화 및 성능 향상, 수소 혼소·전소를 통한 무탄소 발전 경쟁력 강화, 수소 모빌리티 등에도 투자하여 수소산업 생태계 육성과 활용처 다변화를 지원한다.

차세대 통신의 핵심인 위성통신은 세계 최초 Pre-6G 시연('26년) 등 6G 원천기술 및 표준 확보와 저궤도 위성통신 시스템 구축에 전략적 투자를 확대한다. 또한, AI가 융합된 첨단 산업로봇 및 자율제조 기술개발·실증으로 국가적 생산 효율성 향상을 도모하고, 로봇 핵심부품 기술 고도화·자립화와 자율이동·조작 및 인간-로봇 상호작용을 위한 기술개발을 지원한다.

[표 5-3] 12대 국가전략기술 주요 분야별 재정투자 계획

(단위: 억원)

구 분	2024년 (a)	2025년 (b)	증감 ((b-a)/a)
합 계	49,666	64,343	14,677
반도체	5,561	6,930	1,369
디스플레이	1,006	1,263	257
우주 · 항공 · 해양	10,120	12,594	2,474
차세대원자력	1,621	2,078	456
첨단바이오	9,772	12,741	2,968
이차전지	1,364	1,786	423
차세대 통신	2,113	3,127	1,013
수소	2,335	2,576	240

2) 기초연구 및 학생연구자 지원

수월성 · 전략적 · 고난도 기초연구 지원((2024년) 2.6→2.9조원, +0.3조원 (11.6%)) 및 학생연구자 연구환경 지원((2024년) 0.6→0.7조원 +0.1조원 (26.3%))을 확대한다.

혁신적인 연구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소액 · 보편성 기초연구를 축소하고 수월성 중심으로 기초연구 트랙을 개편하는 한편, 젊은 이공계 인력이 맘편히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지원을 확대한다.

기초연구 지원체계를 수월성 중심으로 개편하고, 국가 정책적 수요와 혁신적 연구의 필요성을 반영하여 전략성과 도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기초연구 투자를 확대한다. 국가 아젠다 트랙을 신설하여 전략형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신종 · 난제 해결을 위한 개척연구와 우수성과 이어달리기를 위한 도약연구를 신설하여 혁신 · 도전성을 강화한다.

제 1 부

2025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및 제안설명

제 2 부

2025년도 나라살림

제 3 부

2025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또한 젊은 과학자의 안정적 연구환경 조성을 위하여 학생연구자의 우수 논문 과제 연구비를 지원하는 석·박사과정생 연구장려금을 확대하고, R&D 참여 학생의 인건비를 적정수준 보장하는 한국형 Stipend사업(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을 신설한다.

### 3) 글로벌 R&D

세계 최상위 연구 기관과의 공동연구를 통한 기술패권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글로벌 R&D 투자를 확대한다. (2024년) 1.8→(2025년) 2.2조원 (0.3조원 증가, 17.3%)

세계 최고수준의 연구기관과의 글로벌 공동연구를 지속 확충한다. 기술 선도국과의 다자협약체, 3자 동맹 등 공동연구 외연을 확대하는 한편, 플래그십·전략적 연대도 적극 강화하고, 현장 수요 적기 대응을 위한 특화트랙도 신설한다.

「보스틴코리아 프로젝트」를 통해 바이오 분야 글로벌 TOP 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를 추진함으로써 선진기술 접목 및 핵심인력 양성을 선도한다. 또한, 아시아 최초로 준회원국에 가입한 「호라이즌-유럽」 내에서의 우수연구를 확대하는 한편, 국내외 세계최고 그룹간 공동연구, 신진 연구자 해외선도연구 참여지원 등 국제협력 사업도 지속적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한국형 ARPA-H 프로젝트」는 전문 PM주도로 바이오 분야 난제 해결 등 핵심임무 중심의 혁신·도전적 R&D를 추진한다.

### 4) 혁신도전형 R&D

연구자의 자율성·독립성을 파격적으로 보장하는 혁신도전형 R&D 투자를 확대한다. (2024년) 0.7→(2025년) 1.0조원 (0.3조원 증가, 47.2%)

세계 최초·최고 수준의 연구를 지향하는 혁신·도전형 R&D 투자도 적극 확대한다. 혁신·도전적 연구 확대를 위해 전문 PM 중심의 개척형 연구를 활성화하는 등 연구자의 자율성·독립성을 적극 보장하는 한편, 토너먼트 방식의 경쟁형 체제도 도입·확대한다. 또한, 공모시기를 분산해 연구자들이 수요에 맞춰 연중 적시에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산업 알키미스트 프로젝트」를 통해 신기술·경쟁형 연구를 확대하고, 「차세대 6G 프로젝트」에서는 세계 최초로 차세대 통신 원천기술을 개발한다. 「한국형 ARPA-H 프로젝트」는 바이오 난제 극복 연구를 지원한다. 또한, 국가현안 해결 및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high-risk, high-return의 「한계도전 프로젝트」도 지원한다.

## 제1부

2025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및 제안설명

## 제2부

2025년도 나라살림

## 제3부

2025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 06

##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



## 6-1 재정지원 방향

2025년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 재정투자규모는 28.2조원으로 전년대비 0.7% 증가한 수준이다. 민간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수출드라이브, 스타트업 코리아 추진을 적극 뒷받침한다. 아울러, 고효율 에너지구조 전환, 핵심자원 공급망 안정화, 소상공인 경영부담 완화에도 역점을 두었다.

### 첨단산업 육성 및 선도형 R&D 개혁

반도체는 초격차 기술확보를 위해 반도체 첨단 패키징 선도기술개발 사업('25년 178억원)을 신규로 추진하고, 팹리스 기업이 칩 검증 장비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팹리스기업 첨단장비 공동이용 지원사업('25년 72억원)도 신규 지원한다.

이차전지는 국가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기반시설 구축지원 사업('25년 252억원)을 통해 4개의 이차전지 첨단전략산업 단지(포항, 청주, 새만금, 울산)의 전력공급시설, 진입도로, 배수관로 등 기반시설 구축 지원을 지원하고, 배터리카데미구축 사업 예산을 증액하여 이차전지 분야 현장인력 양성 규모를 ('24년) 870명→('25년) 1,000명으로 확대한다.

인공지능은 온디바이스 AI 반도체 설계 및 수요 현장 실증 기술개발 사업을 43억원 규모로 신규 추진하여 온디바이스 AI 반도체 설계 및 수요 현장 실증 기술개발을 지원한다.

바이오는 핵심 원천기술 확보 및 개발공정의 디지털 전환 등 제조 혁신을 위한 바이오산업 기술개발 사업을 (24년) 1,163억원→(25년) 1,283억원으로 확대한다.

디스플레이는 OLED 이후의 차세대 기술로 주목받는 무기발광 디스플레이 기술개발(25년 180억원) 신규 추진하고, 디스플레이 아카데미 사업(25년 37억원)도 신규 추진하여 신산업 혁신인재 700명을 양성한다.

혁신도전형 R&D 분야는 산업기술알키미스트프로젝트 사업을 (24년) 282억원→(25년) 481억원으로 확대하고, 미래판기술프로젝트 사업을 50억원 규모로 신규 추진하여 미래 新시장 창출을 위해 세계최초를 지향하는 원천기술 확보를 추진한다.

아울러, 40억원 규모의 기업수요기반차세대연구자도전혁신산업기술개발을 신규 추진하여 기업의 기술수요와 신진 연구자의 도전·혁신적 연구역량을 매칭하는 공동연구를 지원한다.

### 합리적 에너지믹스 및 자원·공급망 확보

신재생와 원전의 합리적 에너지 믹스를 위해 지원한다. 0.5조원 규모 무탄소에너지보증 신설 등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를 지속하면서도 정부지원 중심에서 시장중심의 자생적 생태계로 전환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원전산업 생태계 복원을 위해 1천억원 규모 원전산업성장펀드 신설 및 원전생태계금융지원(융자)을 (2024년) 1,000억원→(2025년) 1,500억원으로 확대하는 등 원전기업 대상 자금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또한 희소금속 등 대외의존도가 높은 핵심광물에 대한 공급망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핵심광물 비축기지 건설을 본격 추진하여 (2024년) 187억원→(2025년) 1,151억원으로 대폭 확대하고, 석유비축에 대한 출자도 (2024년) 666억원→(2025년) 799억원으로 확대한다. 또한, 요소수입가격이 높은 제3국에 장기계약하여 도입할 경우 차액의 50%를 지원하는 사업을 신설하는 등 요소 등 필수재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노력도 추진한다.

## 수출 모멘텀 확산과 중소·벤처기업 스케일업

무역 거래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담보하기 위해 무역보험기금출연을 (2024년) 450억원 → (2025년) 800억원으로 확대한다. 이를 통해 외국정부와 방산 수출 계약 체결 시 보증·보험을 제공하며, 선박 건조계약에 필수적인 선수금환급보증(RG)을 시중 은행을 통해 손쉽게 받을 수 있도록 특례보증 지원도 지속한다.

원전산업의 경쟁력을 높여 수출 주력산업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원전 기업들의 자금조달을 지원하는 원전 생태계 금융지원 사업 예산을 ('24년) 1,000억원 → ('25년) 1,500억원으로 확대한다.

수출직결형 해외마케팅 강화를 위해 개별참가 해외전시회 사업 예산을 ('24년) 76억원 → ('25년) 92억원으로 늘리고, 산업별 특화지원을 위한 산업글로벌 진출역량강화 수출바우처도 ('24년) 311억원 → ('25년) 361억원으로 확대 발급하였다.

수출 드라이브 추진을 위해 범부처 수출 지원사업 규모를 (2024년) 2.1조원 → (2025년) 2.9조원으로 확대한다. 수출 중소·중견기업의 수요가 매우 높은 수출바우처 4,505개사, 해외전시회 4,460개사 지원을 통해 판로 개척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한다.

수출 중소기업의 新수출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기존의 제품 수출 외에 성장 가능성이 높은 테크 서비스 수출 지원을 내년 예산에 처음으로 반영(140억원)하여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 이용 등 관련 서비스를 바우처로 지원한다. 또한, 수출 유망 기업부터 고성장 기업들의 지속적인 스케일업을 지원하는 전용 용자 규모를 전년 대비 약 0.2조원 확충한다.

'24년 5월에 발표한 「기업 성장사다리 구축방안」에 담긴 유망 중소기업의 Jump-Up 프로그램(299억원)을 신규 예산으로 반영하여 민간 전문가 매칭, 기업 자율형 오픈 바우처, 정책자금 연계 등 스케일업 전주기 과정을 지원한다.

## 📌 글로벌 창업지원, 지역벤처 활성화 등 스타트업 코리아 추진

세계를 선도하는 글로벌 대기업들과의 개방형 혁신을 확대한다. 글로벌 대기업과 K-스타트업의 오픈 이노베이션을 지원하는 글로벌 기업 협업 프로그램 예산을 확대((2024년) 430→(2025년) 530억원)한다. 2025년에는 확대된 예산을 통해 협업 글로벌 대기업을 추가로 발굴하여 유망 신산업 분야로 협업 영역을 확장한다.

차세대 성장 동력인 AI, 반도체 등에서 글로벌 유니콘으로 성장할 딥테크 스타트업 육성에 박차를 가한다. 초격차 10대 분야 스타트업을 선발하여 지원하는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의 지원대상을 2025년에는 500개사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글로벌 우위 선점 경쟁이 치열한 AI, 시스템 반도체(팹리스) 분야는 맞춤형 특화 지원 프로그램을 별도 신설하고, 국내·외 대기업 등과 협업하는 별도 지원을 새롭게 추진할 계획이다.

혁신 생태계로 민간 자본의 유입을 촉진한다. 모태펀드 정부 출자 예산 규모를 5천억원 수준으로 높여 스타트업코리아, 글로벌, M&A 등 핵심 출자 분야의 혁신 스타트업 투자를 확대한다. 특히, 지역 분야는 역대 최대 규모로 출자하여 지역 스타트업의 성장 동력을 확충할 계획이다.

## 📌 소상공인 전주기 맞춤형 지원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경영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영세 소상공인에 한하여 배달·택배비를 한시적으로 지원한다. 또한, 고금리 기조가 지속되면서 소상공인들의 자금 애로가 여전한 만큼, 소상공인 정책융자 규모를 올해보다 약 600억원 늘린 3.8조원 규모로 편성한다. 올해 추진 중인 대환대출(7% 이상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대환)은 내년에도 지원하며,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경영 애로를 겪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내년부터 일시적 경영애로자금을 지원한다. 한편, 시중 소상공인 대출에 대한 43조원 규모의 지역신용보증인 가능한 재보증 예산을 편성하면서, 기존 보증의 상환기간을 연장하는 전환보증 중도상환 수수료 예산도 함께 반영한다.

위기 소상공인의 원활한 폐업부터 재취업·재창업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희망리턴패키지 예산을 대폭 확대((2024년) 1,513→(2025년) 2,450억원)한다. 내년 점포 철거비 지원을 최대 400만원(기존 250만원)까지 확대하고, 국민취업지원제도와 연계한 특화 취업 프로그램, 재창업 전담 PM 밀착 지원 등을 새롭게 추진할 계획이다.

지역과 민간이 상권 활력 회복에 주도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민간 주도 상권기획 예산을 확대한다. 특히, 민간 상권기획자가 주도적으로 기획하고, 지자체, 관계부처 등이 함께 지원하는 협업 구조로 추진한다. 또한, 2025년 온누리상품권 예산은 운영 경비 소요, 수수료 등은 절감한 반면, 할인 관련 예산은 2024년보다 늘려 온누리상품권을 약 5.5조원 발행한다.

[표 6-1]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분야 재정투자 계획

(단위: 억원 %)

구 분	2024년 (a)	2025년 (b)	증감률 ((b-a)/a)
합 계	279,937	281,772	0.7
무역 및 투자유치	9,417	9,718	3.2
창업 및 벤처	39,225	39,505	0.7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육성	105,351	106,835	1.4
에너지 및 자원개발	51,734	46,185	△10.7
산업혁신지원	63,146	68,172	8.0
지식재산일반	3,577	3,567	△0.3
산업·중소기업일반	7,487	7,790	4.0

## 6-2 부문별 주요 지원내용

### 무역 및 투자유치 부문

2023년 하반기 이후 수출 우상향 기조 유지를 위해 범부처 수출확대를 총력 지원하고, 투자 인센티브도 확충한다.

☞ (2024년) 9,417억원→(2025년) 9,718억원 (3.2% 증가)

국내 조선사의 선박 수출에 필수적인 RG 특례보증을 신규 2,000억원 공급하는 등 무역금융을 확대하고, 서비스·소비재 등 새로운 수출 유망산업을 현지에서 뒷받침하는 거점무역관을 43개에서 47개로 확대하고, 첨단산업해외인재유치 거점을 4개소 신설한다.

수출 중소·중견기업의 현장 수요가 큰 수출바우처는 (2024년) 3,984개사→(2025년) 4,505개사로 확대하며, 단체 해외전시회 참가 지원사업은 지원기업 수를 (2024년) 4,201개사→(2025년) 4,460개사로 확대한다.

\* 수출바우처(산업부 수출지원기반활용): 2024년 694개사→2025년 765개사

\*\* 해외전시회(산업부 수출경쟁력강화지원): 2024년 4,201개사→2025년 4,460개사

新수출 동력 확보를 위해 성장 가능성이 높은 '테크 서비스 수출 바우처' 지원(클라우드, 데이터센터 이용 서비스 등) 신설 등 수출바우처 지원을 확대((2024년) 1,679억원→(2025년) 1,886억원)한다.

2023년 역대 최고치를 달성한 외국인 투자유치를 더욱 가속화하기 위해 관련 예산을 확대 편성하였다. 2024년에 대폭 확대한 현금지원 등 투자유치기반조성 사업을 내년에도 추가 증액 편성 (2023년) 1,569억원→(2024년) 79억원→(2025년) 3,642억원 하였다.

[표 6-2] 무역 및 투자유치 부문 주요 변동내역

(단위: 억원, %)

구 분	2024년 (a)	2025년 (b)	증감률 ((b-a)/a)	비 고
합 계	9,417	9,718	3.2	
수출바우처	1,679	1,886	12.3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3,213	3,293	2.5	
무역보험기금 출연	450	800	77.8	
투자유치기반조성	3,579	3,642	1.8	

## 창업 및 벤처 부문

글로벌 창업지원을 통해 스타트업 생태계의 글로벌화를 추진한다.

☞ (2024년) 3조9,225억원→(2025년) 3조9,505억원 (0.7% 증가)

세계로 도약하는 K-글로벌 스타트업 육성을 위해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을 강화한다.

대·중견기업, 공공기관 연계 민·관 협력 오픈 이노베이션 지원을 확대((2024년) 111→(2025년) 200억원)하고, 투자 유치 등 시장에서 유망성을 검증 받은 딥테크 스타트업들과 대기업들을 매칭하는 밸류업 프로그램(70억원)을 신설한다. 또한, 세계를 선도하는 글로벌 대기업과 K-스타트업의 오픈 이노베이션을 지원하는 ‘글로벌 기업 협업 프로그램’ 예산을 확대((2024년) 430→(2025년) 530억원)한다.

차세대 성장 동력인 AI, 반도체 분야에서 글로벌 유니콘을 육성하기 위해 ‘초격차 스타트업1000+ 프로젝트’의 지원을 확대((2024년) 1,031→(2025년) 1,310억원)한다. 특히, AI, 시스템 반도체(팹리스) 분야는 맞춤형 특화 지원 프로그램을 별도 신설하고, 국내·외 대기업 등과 협업하는 별도 지원을 새롭게 추진할 계획이다.

모태펀드 출자 규모를 5천억원 수준으로 확대하여 스타트업코리아, 글로벌, 지역, M&A 등 핵심 투자 분야에 집중 투자한다. 특히, 지역 분야는 역대 최대 규모로 출자하여 지역

스타트업의 성장 동력을 확충할 계획이다.

[표 6-3] 창업 및 벤처 부문 주요 변동내역

(단위: 억원, %)

구 분	2024년 (a)	2025년 (b)	증감률 ((b-a)/a)	비 고
합 계	39,225	39,505	0.7	
민관협력창업자육성	1,845	1,863	1.0	
창업사업화지원	3,591	4,036	12.4	
모태출자(중진기금·소특회계)	4,540	5,000	10.1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육성 부문**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디지털 혁신, 글로벌 인증 등을 지원, 소상공인의 경영부담 완화 및 경쟁력 강화를 지원한다.  
☞ (2024년) 10조5,351억원→(2025년) 10조6,835억원 (1.4% 증가)

지역 중소기업의 혁신 성장을 위한 바우처 지원을 확대((2024년) 558→(2025년) 614억원)하고, 지역특화 R&D 지원(216억원)을 신설하여 지역 혁신기업들을 지역 경제 활성화의 주역으로 만들 계획이다. 또한, 디지털 제조 혁신을 위해 스마트공장 지원 예산을 질적 고도화 방향으로 확대((2024년) 2,191→(2025년) 2,361억원)하며, 내년에 지역 제조AI센터 3곳(60억원)을 신설하여 AI 기반으로 제조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뒷받침한다.

지역 기업의 글로벌 진출, 네거티브 실증 등을 지원하는 ‘글로벌혁신특구 조성((2024년) 79→(2025년) 139억원) 및 전용 R&D((2024년) 20→(2025년) 154억원)’ 지원을 확대한다.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경영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재정지원을 확대한다. 영세 소상공인에 한하여 고정비 성격의 배달·택배비 한시 지원하고, 소상공인 자금 애로 해소를 위해 소상공인 정책융자를 확대((2024년) 3조7,100억원→(2025년)

3조7,700억원)한다. 43조원 규모 시중 소상공인 대출에 대한 지역신용보증 재보증 예산을 편성(2,035억원)하고 기존 보증의 상환기간을 연장하는 전환보증 중도상환 수수료 예산도 편성(74억원)한다.

위기 소상공인의 폐업 지원을 확대(점포철거비: (기존) 250→(2025년) 400만원)하고, 재취업·재창업 프로그램 신설 등 ‘희망리턴패키지’ 지원을 확대((2024년) 1,513→(2025년) 2,450억원)한다.

지역 골목 상권과 전통시장의 소비 촉진을 위해 민간 주도 상권기획 예산을 확대((2024년) 17→(2025년) 44억원)하고, 온누리상품권 발행을 확대((2024년) 5.0→(2025년) 5.5조원)한다.

[표 6-4]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육성 부문 주요 변동내역

(단위: 억원 %)

구 분	2024년 (a)	2025년 (b)	증감률 ((b-a)/a)	비 고
합 계	105,351	106,835	1.4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지원사업	558	614	10.0	
지역혁신선도기업육성(R&D)	—	216	순증	
ICT융합스마트공장보급확산	2,191	2,361	7.8	
지역특화 제조데이터 활성화	20	60	200	
규제자유특구제도 운영	124	184	48.4	
소상공인성장지원	2,925	2,651	△9.4	
소상공인지원(융자)	37,100	37,700	1.6	
지역신용보증재단재보증	1,254	2,109	68.2	
소상공인재기지원	1,663	2,748	65.2	
시장상권경영혁신지원	4,228	4,652	10.0	

## 에너지 및 자원개발 부문

신재생에너지 지속 보급, 원전사업 생태계 복원,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화 등을 통해 에너지·자원 공급망 안정을 적극 뒷받침하는 한편 에너지 취약계층을 두텁게 보호한다.

☞ (2024년) 5조 1,734억원→(2025년) 4조6,185억원 (10.7% 감소)

신재생 에너지는 정부지원 중심에서 시장중심의 자생적 생태계로 전환한다. 이를 위해 태양광에 대한 정부 지원비율 축소 등을 통해 보조사업 (2024년) 1,634억원→(2025년) 1,564억원, 용자사업 (2024년) 3,693억원→(2025년) 3,263억원으로 일부 조정하면서, 0.5조원 규모 무탄소에너지보증을 위한 사업 신설을 위해 정부재정 420억원을 투입하는 등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를 지속 지원한다. 또한, 원전산업 생태계 복원을 위해 1천억원 규모 원전산업성장펀드 신설 및 원전생태계금융지원(용자)을 (2024년) 1,000억원→(2025년) 1,500억원으로 확대하는 등 원전기업 대상 자금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또한 희소금속 등 대외의존도가 높은 핵심광물에 대한 공급망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핵심광물 비축기지 건설을 본격 추진하여 (2024년) 187억원→(2025년) 1,151억원으로 대폭 확대하고, 석유비축에 대한 출자도 (2024년) 666억원→(2025년) 799억원으로 확대한다. 또한, 요소수입가격이 높은 제3국에 장기계약하여 도입할 경우 차액의 50%를 지원하는 사업을 신설하는 등 요소 등 필수재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노력도 추진한다.

아울러 에너지바우처 지원을 5,014억원 지원하여 2023년도 예산 부족분의 보전을 위해 2024년 예산에 반영된 소요 2,407억원 제외 2024년 에너지바우처 실제 소요(4,449억원) 대비 565억원 확대 지원하며, 읍·면단위 LPG 배관망 구축을 위한 지원도 (2024년) 314억원→(2025년) 673억원으로 확대하는 등 에너지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지속한다.

제1부

2025년도 예산안 시장연설 및 제안서명

제2부

2025년도 나라살림

제3부

2025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표 6-5] 에너지 및 자원개발 부문 주요 변동내역

(단위: 억원, %)

구 분	2024년 (a)	2025년 (b)	증감률 ((b-a)/a)	비 고
합 계	51,734	46,185	△10.7	
무탄소에너지보증	—	420	순증	
원전산업성장펀드	—	350	순증	
원전생태계금융지원	1,000	1,500	50.0	
한국광해광업공단 출자	2,518	2,007	△20.3	
에너지바우처	6,856	5,014	△26.9	
읍·면단위LPG배관망구축사업	314	673	114.3	

## 산업혁신지원 부문

세계 최초·최고 수준의 기술 확보를 위해 자동차·로봇·조선 등 기존 주력산업과 함께 첨단 전략산업 전반에 대한 글로벌 협력을 강화하고, 미래 인재양성을 적극 지원한다.

☞ (2024년) 6조 3,146억원→(2025년) 6조 8,172억원 (8.0% 증가)

보조금 성격·저혁신성 사업 축소 등 R&D 구조개혁 기초를 유지하는 가운데, 글로벌 기술경쟁에 대응하고 세계 최초·최고 기술에 도전하는 선도형 R&D를 중심으로 적극 지원한다.

우선 국가 제조업 생태계 강화 및 첨단산업의 부가가치 창출 확대를 위한 초격차 기술 확보 등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경쟁력 강화 기술개발을 적극 지원한다(2024년 11,410억원→2025년 11,780억원).

이와 더불어 자동차(2024년 3,485억원→2025년 3,904억원), 로봇(2024년 1,174억원→2025년 1,486억원), 조선(2024년 772억원→2025년 1,192억원) 등 기존 주력산업과 신산업 관련 R&D를 확대하여 기존 산업의 우위와 미래기술 확보를 위한 노력을 지속한다.

또한, MIT·프라운호퍼 등 세계적 연구기관과의 글로벌 협력 공동연구를 확대하고(2024년 1,658억원→2025년 2,088억원), 첨단전략산업 특성화대학원, 에너지융합대학원 등 산업 분야별 석·박사 혁신인재 양성 지원을 강화한다(2024년 2,164억원→2025년 2,377억원).

[표 6-6] 산업혁신지원 부문 주요 변동내역

(단위: 억원, %)

구 분	2024년 (a)	2025년 (b)	증감률 ((b-a)/a)	비고
합 계	63,146	68,172	8.0	
소재부품기술개발(R&D)	11,410	11,780	3.2	
자동차산업기술개발(R&D)	3,485	3,904	12.0	
로봇산업기술개발(R&D)	1,174	1,486	26.6	
조선해양산업기술개발사업(R&D)	772	1,192	54.3	
산업기술국제협력(R&D)	1,658	2,088	25.9	
산업혁신인재성장지원(R&D)	1,575	1,662	5.5	
에너지인력양성사업(R&D)	589	715	21.4	
무기발광디스플레이기술개발및생태계구축사업(R&D)	—	180	순증	
반도체첨단패키징선도기술개발사업(R&D)	—	178	순증	

 지식재산일반 부문

지식재산을 기반으로 미래 신성장동력을 발굴하고,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의 지식재산 보호를 강화한다.  
☞ (2024년) 3,577억원→(2025년) 3,567억원 (0.3% 감소)

특히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국가 R&D 기획을 객관적·효율적으로 지원(44억원)하고, R&D 수행단계에서 IP-R&D를 확대(2024년 368억원→2025년 387억원)하여 미래 유망기술 발굴 및 개발을 집중 지원한다. 또한, 혁신형 중기·스타트업이 지식재산을 기반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지식재산 가치평가 지원을 확대(2024년

118억원→2025년 136억원)하고, 지역별 유망기업을 대상으로 지식재산 종합서비스 지원을 강화(2024년 93억원→2025년 113억원)한다.

지식재산 분쟁 예방 및 대응지원도 강화한다. 수출기업의 지식재산권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진출국 맞춤형 분쟁대응 전략을 지원(26억원)한다. 위조상품으로 인한 우리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K-브랜드 분쟁대응 지원을 확대(2024년 68억원→2025년 75억원)하고, AI를 활용하여 온라인 위조상품의 유통을 차단(7억원)한다.

신속하고 정확한 심사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능형 특허 행정을 구현한다. AI 기반 심사지원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해 학습데이터를 구축(28억원)하고, 화학분야와 관련한 이미지 데이터를 구축(10억원)한다.

[표 6-7] 지식재산일반 부문 주요 변동내역

(단위: 억원 %)

구 분	2024년 (a)	2025년 (b)	증감률 ((b-a)/a)	비 고
합 계	3,577	3,567	△0.3	
IP-R&D 전략지원(R&D)	395	417	5.6	
지식재산 활용(사업화, 거래, 평가) 지원	241	269	11.6	
해외 지식재산권 보호활동 강화	242	250	3.6	
특허정보활용 인프라구축(정보화)	116	158	36.2	

## 07 SOC 분야



### 7-1 재정지원 방향

2025년 SOC 분야 재정투자 규모는 도로·철도 완공 소요로 인해 2024년 26.4조원 대비 △3.8% 감소한 25.4조원 규모이다. SOC 분야는 출퇴근 등 교통편의 개선, 교통비용 부담 완화, 공간 혁신 지원, 미래 교통수요 대응 등에 중점 투자할 계획이다.

#### 국토 연결성 극대화

‘출퇴근 30분, 전국 2시간, 전세계 1일내 출국’이라는 교통 정책 방향 하에, 국민들의 이동 편의를 높일 수 있도록 다양한 교통망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출퇴근 30분을 위해서는, 수도권과 지방권 대도시를 중심으로 도시철도망과 광역교통망을 더욱 촘촘히 구축할 계획이다. 현재 개통을 앞두고 있는 GTX B·C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는 한편, 광주 도시철도 2호선·대전도시철도 2호선 등 지역 대도시권 도시철도도 적기 개통될 수 있도록 재정 투자를 지속해나간다. 뿐만 아니라, 지방 대도시와 주변도시를 연결하는 핵심 도로망인 광역도로에 대한 투자도 강화한다.

전국 2시간 생활권 구축을 위해서는 도서 산간지역, 국토 최남단 등 지역간 이동에 불편을 겪고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교통망을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특히, 고속철도 병목현상을 겪고 있는 평택~오송 구간에 선로를 확대하는 한편, 수도권 진출입시 상습 정체를 겪고 있는 용인~서울 구간(경부 고속도로) 등 교통량이 많은 주요 구간에 지하고속도로 설치를 늘려나간다. 아울러, 도서지역을 연결하는 국도 77호선 등 교통 벽지 접근성을 높여주는 간선망들에 대한 개량·확장사업을 지속한다.

전세계 1일 이동을 위해서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8개 신공항이 적기 개통될 수 있도록 재정투자를 강화한다. 한국공항공사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등 신공항 건설을 추진하는 공공기관의 투자 여력을 함께 활용하여, 가덕도, 대구경북, 새만금신공항 등 착공을 앞두고 있는 주요 신공항들에 대한 공사비 지원을 지속한다.

## 교통불편 해소

고물가 시대에서 국민들의 교통요금 부담을 낮추고, 교통 취약계층 및 교통벽지에 대한 지원을 지속해나가는 등 교통 서비스에 대한 진입 장벽을 지속적으로 낮춰나갈 예정이다.

우선 K 패스 제도를 통해 출퇴근시 대중교통 요금을 지속 낮춰나간다. 특히, '25년부터는 추가적으로 다자녀에 대한 할인율을 일반 가구 대비 2배 수준으로 확대한다. (일반 20% → 다가구 30~50%) 또한 준공영제 노선을 지속 늘려나가, 수익성이 나지 않는 노선에 거주하는 주민들도 더욱 광범위한 대중교통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한다.

교통혼잡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지역에 대한 교통서비스 개선도 추진한다. 국도 병목구간에 교차로를 설치하거나 도로폭을 확장하는 등 소규모 교통 정비를 통해 교통정체를 해소하고, 김포 골드라인 등 도시철도 과밀구간에 대해서는 차량 증차를 지원한다.

교통 소외계층에 대한 교통서비스 지원도 지속한다. 장애인 이동편의를 높이기 위해 장애인 콜택시 등 특별교통수단 도입을 지속하며, 저상버스도 보급을 확대해나간다.

도로·철도 등 주요 SOC 노후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시설유지·보수 등 안전 관련 예산도 확대한다. 특히 안전시설에 민감한 교량·터널 등 도로 특수시설에 대한 점검 및 보수를 지속하고, 집중호우 등 최근 기상이변에 따른 도로 침수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배수시설에 대한 선제적 투자를 강화한다.

## 공간 혁신 지원

도심지 노후화 및 공간단절 등 주민들의 삶의 질을 낮추고 지역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을 해소하기 위한 투자를 강화한다. 우선, 빌라 등 저층주거지 주거환경을 아파트 수준으로 개선하기 위해 '25년부터 뉴빌리지 사업을 신규 추진한다. 저층 주거지역 내 주차장, 공원 등 주민편의시설을 설치하는 등 '25년에 30개소에 대한 환경개선을 진행한다.

또한, 그간 도시 단절을 초래해왔던 도심지 철도시설을 지하화하여 주민들이 보다 수월하게 도심 내 이동할 수 있도록 한다. '25년부터 신규 2개소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비 반영을 시작으로, 철도 부지에 대한 현물출자, 채권발행, 설계 및 공사를 거쳐 부지 매각까지 진행한다. 부지 매각에 따른 개발이익은 공사비에 충당하여 재정부담 없이 철도 지하화를 완료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미래 모빌리티 확산

차세대 모빌리티에 대한 투자도 확대한다. 드론은 국가 드론산업 발전 중장기계획을 마련하여 관련 기술개발 지원을 위한 인프라 구축 투자를 지속하고, 도시교통문제의 대안으로 추진중인 UAM(Urban Air Mobility)은 실증 및 시범사업을 본격 추진하는 동시에 환승시설 등 관련 인프라 구축과 제도기반 마련작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자율주행차는 도심지 도로 실증, 차세대 지능형교통체계(C-ITS) 구축등을 통해 자율주행 자동차의 상용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전기·수소자동차 등 친환경 차량의 보급·확산을 유도하고, 안정적인 차량 운행 기반 마련을 위해 정비·검사·인증 관련 시설의 확충에도 투자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표 7-1] SOC 분야 재정투자 계획

(단위: 억원, %)

구 분	2024년 (a)	2025년 (b)	증감율 ((b-a)/a)
합 계	264,422	254,344	△3.8
도로	79,779	71,922	△9.8
철도	81,021	70,016	△13.6
항공 · 공항	8,906	13,533	51.9
물류등기타	30,729	33,467	8.9
지역및도시	18,512	19,860	7.3
산업단지	3,080	2,779	△9.8
수자원	21,994	21,878	△0.5
해운 · 항만	20,401	20,889	2.4

## 7-2 부문별 주요 지원내용

### 도로 부문

주요 병목구간 교통체증 개선을 위한 도로 건설을 지속하는 한편, 도로 시설 노후화에 따른 안전문제에 선제 대응하기 위한 유지 · 관리를 강화하고 ITS 등 도로분야 디지털화를 가속화한다.

☞ (2024년) 7조 9,779억원→(2025년) 7조 1,922억원 (9.8% 감소)

도로 건설 부문의 경우, 주요 정체지역 교통 개선을 위한 교통 인프라 투자에 집중한다. 상습정체를 겪고 있는 경부고속도로 내 용인-서울 구간에 대한 지하고속도로 신설을 '25년부터 신규 추진하고, 주요 대도시와 주변도시 간 교통혼잡이 발생하고 있는 광역도로에 대한 확장 및 도로 신설을 지속해 나간다. 또한, 지역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는 소규모 병목지점에 대한 도로 개선을 위해 교차로 설치, 도로 확장 등 사업도 병행한다.

도로 관리 부문의 경우, 도로 안전성 제고를 위한 유지·관리 부문에 대한 투자를 강화한다. 그간 점검 사각지대 있던 단구간 교량 등 3종 교량·터널에 대한 정기점검을 '25년부터 본격 시작하고, 노후 교량·터널에 대한 보수 및 개축을 확대해나간다. 또한 운전자 안전을 위협하는 블랙 아이스, 비탈면 붕괴 등에 대비하여 제설대책에 대한 재정투자를 늘리고 비탈면 IOT 시스템 구축 및 운영을 위한 지원도 지속한다.

도로 분야의 디지털화를 위한 사업들도 지속한다. 차세대 ITS 시스템 구축을 통해 자율주행 자동차가 다닐 수 있는 도로 기반을 조성하고, 국도를 포함한 전 도로에 대한 디지털 도로대장 구축을 추진한다.

[표 7-2] 도로 부문 주요 변동내역

(단위: 억원, %)

구 분	2024년 (a)	2025년 (b)	증감률 ((b-a)/a)
합 계	79,779	71,922	△9.8
고속도로	18,272	10,445	△42.8
국도	18,530	17,731	△4.3
민자도로	10,165	11,715	15.3
도로관리	27,350	27,415	0.2
지자체도로건설지원	5,462	4,617	△15.5

 철도 부문

지역간 이동성 개선을 위해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비수도권 광역철도 투자에 집중하는 한편, 지역간 간선망 역할을 하는 일반철도 건설도 차진없이 추진한다. 또한, 철도시설 노후화에 대응하기 위한 시설개량 및 유지보수 투자도 지속한다.  
☞ (2024년) 8조 1,021억원→(2025년) 7조 16억원 (13.6% 감소)

철도건설 분야는 출퇴근 시간 단축에 기여하기 위해 GTX 등 광역급행철도 및 지방의 도시철도 건설 사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 나간다. 또한, 고속철도의 편리한 운영을 위해

수도권 고속철도와 경부고속철도가 만나는 병목 구간인 평택-오송 구간을 2복선화하고, 호남권 고속철도 구축을 위한 투자를 지속한다. 한편, 월곶-판교, 보성~임성리, 문경~김천, 춘천~속초 등 지역간 간선망 역할을 하는 일반철도 건설도 차질 없이 구축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철도안전 분야의 경우, 철도시설의 지속적인 노후화에 따라 지속적으로 투자가 증가하고 있다. 다만, 스마트 SOC, 재해예방시설 등 계속사업의 일부 완공 등에 따라 '25년 시설투자 관련 소요는 감소하나, 시스템 개량에 대해서는 노후화 심화 등을 감안하여 투자를 확대한다.

일반철도 유지보수의 경우, 첨단장비를 도입하여 안전성 및 유지보수의 효율성을 강화해 나가며, 철도 관제의 일원화와 제2관제센터 구축 등을 통한 전산화·자동화에 지속 투자하는 등 안전관련 투자를 강화해나갈 예정이다.

[표 7-3] 철도 부문 주요 변동내역

(단위: 억원 %)

구 분	2024년 (a)	2025년 (b)	증감률 ((b-a)/a)
합 계	81,021	70,016	△13.6
고속철도	5,182	4,654	△10.2
일반철도	20,751	12,586	△39.3
광역철도	12,156	9,131	△24.9
철도안전및운영	37,475	37,146	△0.9
도시철도	5,434	6,499	19.6

✎ 항공·공항 부문

8개 신공항 개항을 위한 재정지원을 지속하는 한편, 미래 항공교통시장 선도를 위해 UAM 및 드론 등 차세대 비행장치 개발·실증 지원도 강화한다.  
☞ (2024년) 8,906억원→(2025년) 1조 3,533억원 (51.9% 증가)

현재 추진중인 8개 신공항이 적기 개항될 수 있도록 재정 지원을 지속한다. 가덕도 신공항·제주 제2공항 등 공항건설 사업이 대규모 재정투입을 요하는 국책 사업임을 감안하여, 공항공사와 가덕도 신공항 건설공단의 투자여력까지 총 동원하여 공항이 당초 계획된 시점에 개항될 수 있도록 공사 소요를 지속 지원한다.

항공산업 부문은 향후 빠른 성장이 예상되는 미래 항공교통시장 선도를 위해 투자를 대폭 확대한다. UAM 상용화를 위한 실증지원을 확대하고, 드론 산업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비즈니스모델 발굴, 드론 활용 유망분야 실용화 및 해외진출 지원 등을 강화한다.

[표 7-4] 항공·공항 부문 주요 변동내역

(단위: 억원, %)

구 분	2024년 (a)	2025년 (b)	증감률 ((b-a)/a)
합 계	8,906	13,533	51.9
공항건설 및 관리	7,374	11,878	61.1
항공발전, 운영지원	1,532	1,655	8.0

✎ 물류 등 기타 부문

대중교통 이용부담 완화를 위한 K-패스 지원을 확대하고, 다자녀 가구에 대한 할인유형도 신설하여 저출산 대응에 기여한다.  
☞ (2024년) 30,729억원→(2025년) 33,515억원 (9.1% 증가)

최근 고물가 상황에서 서민들의 교통요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4년 K-패스를 도입하였다. K-패스는 대중교통을 월 15회 이상 이용하는 정기이용자를 대상으로 월

최대 60회 이용분까지 지출한 교통요금의 일정비율을 환급해주는 제도이다. 동 제도를 통해 청년은 30%, 저소득층은 53.3%, 그 외 일반인은 20%의 교통요금 할인지원을 받을 수 있다. K-패스 제도 도입 후 가입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으나, 관련 예산도 대폭 확대하여 차질 없이 지원할 예정이다. '25년부터는 다자녀 유형을 추가하여, 2자녀 가구는 30%, 3자녀 가구는 50%의 할인율을 적용할 방침이다.

[표 7-5] 물류 등 기타 부문 주요 변동내역

(단위: 억원, %)

구 분	2024년 (a)	2025년 (b)	증감률 ((b-a)/a)
합계	30,729	33,467	8.9
대중교통육성	4,645	6,591	41.9
자동차및교통정책	2,223	1,920	△13.6

## 지역 및 도시·수자원 등 기타 부문

노후도심지 환경개선 및 스마트시티 확산을 위한 재정투자를 확대하며, 국가하천 등 수자원관리 및 미래 해운·항만산업 육성에도 집중 투자한다.

☞ 지역및도시 : (2024년) 18,512억원→(2025년) 20,188억원 (9.1% 증가)

☞ 수자원 : (2024년) 21,994억원→(2025년) 21,878억원 (0.5% 감소)

노후도심지 환경개선 및 스마트도시 관련 첨단기술 확산을 위한 투자를 지속한다. 노후저층주거지 대상으로 주택정비사업과 연계한 새로운 형식의 도시재생인 뉴·빌리지를 추진한다. 주민선호에 따라 주차장, 공원 등 공동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하고, 소규모 주택 정비와 연계하여 노후 저층지를 아파트 수준으로 환경개선을 추진한다.

스마트시티 분야 확산 및 해외진출지원을 지원한다. 스마트시티 확산사업 신규 유형으로 특화단지형을 신설하고, 과기부 반도체 AI 실증사업과 연계 추진한다. 또한, 스마트시티 분야 국내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타당성조사 지원사업도 8건에서 10건으로 확대하는 등 스마트시티 분야 첨단기술확산을 적극 지원한다.

홍수피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최근 지방하천에서 국가하천으로 승격된 하천에 대한 제방정비 등을 위한 시설투자를 확대하는 한편, 홍수시 국가하천의 수위상승에 영향을 받는 지방하천 구간에 대한 하천정비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목감천(경기 광명), 원주천(강원 원주), 도림천(서울) 등 도심지의 홍수피해 저감을 위한 대규모 정비사업도 본격적으로 진행한다. 하천에 대한 시설투자와 더불어 홍수위험을 국민에게 사전에 알려주는 홍수예보 부분도 더욱 강화하여 인명·재산피해의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고, 인공지능(AI)홍수예보의 정확도 향상노력과 함께 댐-하천 디지털 트윈(DT), 하천의 지능형 CCTV 연계를 추진하는 등 하천의 안전을 한층 강화한다.

[표 7-6] 지역 및 도시 등 기타 부문 주요 변동내역

(단위: 억원, %)

구 분	2024년 (a)	2025년 (b)	증감률 ((b-a)/a)
지역및도시	18,512	20,188	9.1
산업단지	3,080	2,779	△9.8
수자원	21,994	21,878	△0.5

 **해운·항만 부문**

글로벌 항만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항만 인프라 투자를 확대하는 한편, 친환경선박 전환 등 해운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고, 도서지역 주민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권 보장을 보다 강화한다.

☞ (2024년) 2조 401억원→(2025) 2조 889억원 (2.4% 증가)

항만 자동화, 선박 대형화 등 세계 물류 흐름에 대응하고, 지역 핵심 기간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신항만·주요항 등 거점항만에 대한 인프라 투자를 확대한다. 또한 항만서비스 산업의 선진화를 위한 투자를 신규 지원하고, 드론테러 등 신종 보안위협에 대응하여 안티드론시스템을 확충한다. 아울러 기후변화로 복잡·다양화 양상의 자연재해에 대비하여 항만 외곽시설 보강 및 재해취약지구 정비도 실시한다.

해운업계의 국제 환경규제 대응과 탄소배출 감축을 위해 외항선박과 연안화물선의 친환경선박 대체 건조 지원을 지속하고, 미래선박 시장 선도 기반 마련을 위한 기술 개발(R&D)과 자율운항선박 실증화 지원을 위한 상용화 기반도 구축한다. 또한 경력단절 해기사의 승선 복귀를 지원하는 등 국적선원의 공급기반을 확대한다.

섬 지역 주민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여객선을 이용하는 섬 주민 여객운임 보조, 국가보조항로 결손보상금 지원, 국고 여객선 운영 등 관련 사업을 지속 지원하는 한편, 민간자본을 활용하는 국고여객선 펀드를 새롭게 조성하여 노후 국고여객선의 적기 대체를 추진한다. 또한 선상 전기차 화재에 대응하기 위해 모든 국고여객선에 전기차 화재 대응장비를 보급하고, 교통약자의 승하선 편의시설을 확충하는 등 안전하고 편리한 연안교통을 위한 투자도 확대한다.

[표 7-7] 해운·항만 부문 재정투자 계획

(단위: 억원 %)

구 분	2024년 (a)	2025년 (b)	증감률 ((b-a)/a)
해운·항만	20,401	20,889	2.4

## 08

## 농림·수산·식품 분야



## 8-1 재정지원 방향

2025년 농림·수산·식품 분야 재정투자 규모는 25.9조원으로 2024년 25.4조원 대비 0.5조원, 1.8% 증가하였다. 농어민의 소득·경영 안정을 위해 직불 관련 예산을 대폭 확대하고, 농어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스마트화·청년농어업인 육성·수출산업화 지원을 강화하였다. 또한 유통구조 개선 및 선제적 수급관리로 먹거리 물가를 안정시키고, 농어촌 정주여건 개선 및 농어업인 삶의 질 제고에도 대폭 지원 예정이다.

### ☑ 농업인 소득·경영안정망 확충을 위한 농업직불 관련 예산 확대

농업직불 관련 예산을 역대 최고 수준인 3.4조원으로 확대하였다. 기본형직불의 면적직불금 단가를 '20년 제도 도입 이후 최초로 상향(진흥지역 논·밭 평균 직불금 단가 197→207만원/ha)하여 농가 소득안정을 지원하고자 하였다. 농가 평년수입의 일정수준(최대 85% 수준)을 보장하는 수입안정보험의 대상 품목(9→15개) 및 가입인원 확대(가입률 1→25%)를 위해 관련예산을 (2024년) 81억원→(2025년) 2,078억원으로 대폭 확대하였다. 또한 쌀 수급안정 및 식량자급률 제고를 위한 전략작물직불 재배면적을 (2024년) 156.5천ha→(2025년) 176천ha로 확대하고 단가 인상(밀 50→100만원/ha) 및 깨에 대한 지원도 추가하였다. 한편 친환경 농업확산과 2030 NDC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친환경·탄소중립직불 단가 인상, 대상물량 확대 등 지원도 강화하였다.

### ☑ 농어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스마트화, 청년농어업인 육성

농어업 생산성 정체 및 기후변화 등으로 인한 농어업의 지속가능한 성장 및 안정적 농수산물공급 저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스마트화, 청년농어업인 육성, 수출산업화를

통해 농어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한다. 10ha 이상 규모의 대규모 임대형 스마트팜을 4개소, 스마트 과수원 특화단지 3개소, 스마트 가두리 양식장 2개소를 신규 조성하고자 한다. 청년 농어업인에 대한 주거, 자금 등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청년 보금자리 주택 10개소, 청년 귀어종합타운 3개소, 청년창업·임대형 양식장 3개소를 신규로 지원하고 청년 영농정착지원금 대상자도 5천명 신규 추가한다. 농수산물 수출기업 육성 및 수출시장 개척 지원을 위한 수출바우처, 글로벌 박람회 참가 지원도 강화한다.

### 물가안정을 위한 유통구조 개선 및 선제적 수급관리 강화

농수산물 물가안정을 위한 사전적 수급관리 강화를 위해 농산물 비축물량을 (2024년) 28.6만톤→(2025년) 33.4만톤으로 확대한다. 또한, 계약재배 물량을 (2024년) 101.4만톤→(2025년) 105.0만톤으로 늘리고, 사과에 대해서는 출하처와 출하시기까지 조절할 수 있는 지정출하 제도를 신규 도입하여 2만톤을 시범 운영한다.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 및 유통비용 절감을 위해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시장 활성화를 지원한다. 온라인 도매시장을 통한 산지-소비자 간 온라인 거래 물류비를 신규 지원(67억원)하고, 온라인 도매시장 내에서 거래시 활용가능한 정산·결제자금 지원을 확대(2024년 520억원→2025년 705억원)하는 등 투자를 강화할 계획이다. 농축산물 할인지원 사업도 1,080억원 규모로 지속 지원하여 국민들의 장바구니 물가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국산 밀·콩 재배를 활성화하기 위한 전략작물 전문 생산단지를 (2024년) 405개소→(2025년) 440개소로 늘리고, 제품화 및 판로확보, 가공지원도 함께 확대 (2024년 453억원→2025년 533억원)하여 식량주권 확보를 위한 사업도 강화한다.

### 농어촌 정주여건 개선 및 농어업인 삶의질 제고 지원

난개발된 농어촌을 쾌적한 환경으로 재구조화하고 거점위주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투자를 강화한다. 농촌공간정비재생 30개소 및 어촌신활력증진사업 26개소를 신규로 추진한다. 또한 농촌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해 빈집을 리모델링하여 창업·업무공간

등으로 활용(3개소)하고 농촌 생활인구 유입을 위한 농촌체류형 복합단지 조성사업도 신규로 3개소 추진한다. 방문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한 농촌 왕진버스 운영(12→15만명)과 여성농어업인의 특수건강검진 지원(4.6→6.1만명)을 확대한다.

[표 8-1] 농림·수산·식품 분야 재정투자 계획

(단위: 억원 %)

구 분	2024년 (a)	2025년 (b)	증감률 ((b-a)/a)
합 계	254,285	258,878	1.8
농업·농촌	185,578	189,155	1.9
수산·어촌	31,228	31,931	2.3
임업·산촌	28,540	28,408	△0.5
식품업	8,939	9,383	5.0

8-2 부문별 주요 지원내용

농업·농촌 부문

농업인의 소득·경영 안정망 강화, 농촌소멸 대응 및 공간재생, 농식품산업 성장동력 확충, 농축산물 수급안정 및 식량안보 강화 등 주요 과제의 성과창출을 위한 분야에 2025년 예산을 중점 투자할 계획이다.  
☞ (2024년) 18조 5,578억원→(2025년) 18조 9,155억원 (1.9% 증가)

2020년 공익직불제 도입 이후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단가를 최초로 5% 수준 인상하고, 비진흥 발 지급단가는 비진흥 논·밭의 80% 수준(현행 65%수준)까지 상향하여 농업인의 기초 소득안정망을 강화한다. 또한, 수입안정보험 본사업을 추진한다. 대상품목은 9품목에서 벼·무·배추를 포함한 15품목으로 늘리고, 지원대상 면적은 품목별 재배면적의 1% 수준에서 최대 25% 수준으로 확대(81억원→2,078억원)한다. 선택직불제도 대폭 확대한다. 밀과 하계조사료의 지급단가를 인상하는 등

전략작물직불제를 확대(1,865억원→2,440억원)한다. 친환경농업직불 논 지급단가를 인상(70만원/ha→95만원)하고, 유기인증 6년차 이상 농가에 지급하는 지속직불 지원율도 상향(50%→60%)한다. 아울러, 저탄소농업 프로그램을 확대(90억원→233억원)하여 환경친화적 영농활동을 적극 지원한다.

축산농가의 사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사료구매자금 1조원을 지속 지원하고, 한우가격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는 한육우 농가가 2025년 내 상환해야 하는 사료구매자금 6,387억원은 상환을 1년 유예한다. 담보력이 부족한 농업인에게 안정적으로 자금을 공급하기 위해 농신보 출연을 대폭 확대(300억원→1,500억원)한다. 공공형 계절근로를 70개소에서 90개소로 확대하여 농업인력 부족문제 해소를 지원한다.

농촌공간계획에 따라 농촌지역을 재구조화하는 농촌공간정비를 대폭 확대한다(98개소, 680억원→128개소, 1,045억원). 농촌지역 내 빈집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빈집실태 조사를 강화하고, 빈집밀집지역 내 빈집은 리모델링하여 주민 공동이용 시설 등으로 재활용한다(신규 3개소, 3년간 19억원). 농촌 생활인구 유치를 위해 주거, 영농체험공간 및 지역주민과의 교류 프로그램을 갖춘 체류형 복합단지를 신규로 조성할 계획이다(신규 3개소, 3년간 45억원). 농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청년들이 농촌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해 창업할 수 있도록 창업자금, 네트워크 등을 신규 지원한다(9개소, 10억원). 또한, 지역 내 선도 민간기업을 중심으로 전후방산업을 연계하는 농산업 혁신벨트 1개소를 새로 조성한다.

농업·농촌분야 청년유입을 확대하기 위한 자금·주거·농지 지원을 강화한다. 소득이 불안정한 영농 초기에 필요한 정착자금 지원 대상자를 신규 5천 명 선발할 계획이다(957억원→1,136억원). 보육·문화시설을 갖춘 임대주택 단지를 10개소 추가 조성(152억원→308억원)하고, 농지구입 자금이 부족한 청년 대상 선임대·후매도 지원도 늘린다(40ha, 171억원→50ha, 193억원). 지자체 부지를 활용한 임대형 스마트팜 단지를 2개소 추가 조성하고, 새로 도입된 스마트농업 육성지구와 연계한 장기 임대형 스마트팜 단지를 4개소 새로 조성한다(370억원→407억원). 축산분야 스마트팜

확산을 위해 노후·난립한 축사시설을 스마트축사로 재편하는 스마트 축산단지도 1개소 추가 조성한다.

신성장산업 육성을 위해 정부자금을 마중물로 농식품기업에 투자하는 모태펀드에 550억원을 지속 출자하고, 수직농장·그린바이오 등 미래 성장 가능성이 높은 분야 중심으로 연구개발(R&D) 투자를 늘린다(2,159억원→2,267억원). 푸드테크 기업들이 공동으로 활용 가능한 연구지원센터도 2개소 새로 구축한다(42억원).

과수 수급안정을 위해 생산성이 높고, 재해예방시설을 갖춘 스마트 과수원 특화단지를 3개소 신규로 조성(13억원)한다. 냉해예방을 위해 농기계임대사업소에 이동형 열풍 방상팬을 구비, 농가에 지원할 계획이다(신규, 12억원). 과수 계약재배를 확대(12.5만톤→14.4만톤)하고, 사과를 출하처·출하시기까지 관리할 수 있는 지정출하물량을 시범 운영(2만톤, 258억원)한다.

사전적 수급안정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실측조사 품목을 확대(5품목→7품목)하는 등 농업관측을 강화한다. 아울러, 일시적 수급불안에 대비해 농산물 비축을 확대(7,249억원→8,125억원)하고, 장바구니 물가부담 경감을 위한 농축산물 할인지원에도 1,080억원을 투입한다. 온라인도매시장 활성화를 위해 거래 인센티브 제공 등 지원을 확대(104억원→149억원)하고, 소매판매자가 소분·재포장없이 바로 판매할 수 있도록 전용상품 개발을 지원하는 등 소매시장과의 연계를 강화한다. 산지유통의 규모화·효율화를 위해 스마트 산지유통센터를 30개소에서 60개소로 확대하고, 공동선별비 지원을 확대(86억원→129억원)하는 등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투자를 확대한다.

쌀 수급을 안정화하기 위해 2025년에도 정부양곡 비축물량을 45만톤으로 유지하는 한편(17,322억원), 쌀의 해외원조 물량을 10만톤에서 15만톤으로 확대(1,120억원→1,901억원)한다. 전략작물 재배를 활성화하기 위해 전문생산단지 육성을 405개소에서 440개소로 확대하고, 전략작물 생산량 확대에 대응하여 제품화·판로확보·가공 지원도 늘린다(453억원→533억원).

자연재해 대응능력을 높이기 위해 재해대응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를 강화(11,996억원→12,469억원)한다. 재해복구비 단가를 높이고 복구비 지원에서 배제되었던 농기계와 축사·시설하우스 내 설비를 지원대상에 포함하여 재해로부터 농업인을 보다 두텁게 보호한다.

취약계층 대상 농식품바우처 지원을 전국으로 확대(148억원→381억원)한다. 생계급여 수급가구(기준중위소득 32% 이하) 중 임신부, 영유아, 초·중·고등학생이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농식품바우처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농촌 지역주민의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찾아가는 왕진버스 지원을 12만명에서 15만명으로 확대하고, 농작업에 따른 근골격계 질환에 취약한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지원을 3만명에서 5만명으로 늘린다. 보육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농촌형 보육시설 지원도 확대(193개소→263개소)한다.

한편, 「개식용종식법」에서 규정한 종식 기한(27. 2월) 내 원활한 개식용 종식 이행을 위해 업계 전·폐업 지원방안을 마련하였다.(2025년 신규) 개사육 농장주를 대상으로 폐업이행촉진지원금을 지원하고, 농가 및 도축장에 대한 시설물 잔존가액, 잔여견 보호·관리비용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표 8-2] 농업·농촌 부문 주요 변동내역

(단위: 억원, %)

구 분	2024년 (a)	2025년 (b)	증감률 ((b-a)/a)
합 계	185,578	189,155	1.9
공익기능증진직불	28,702	29,536	2.9
맞춤형농지지원(용자)	12,413	11,134	△10.3
수리시설개보수	7,462	7,617	2.1
농업자금이차보전	5,577	6,819	22.3
개식용종식폐업전업지원	—	544	순증
배수개선	4,535	4,852	7.0
수리시설유지관리	1,653	1,566	△5.2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	957	1,137	18.7

 수산·어촌 부문

지역경제에 활력을 더하는 바다생활권 조성, 해양수산 역동경제 구현을 위한 체질 개선, 안심 수산물 환경 조성과 어가 경영안전망 확충 등에 중점 투자한다.

수산물 수출 관련 예산을 역대 최대로 편성하는 등 수산물 수출·창업 지원을 적극 강화하고, 연근해·양식어업 구조개선을 위한 지원을 확대한다.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어촌신활력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청년의 귀어 활성화 및 소득·복지 안전망도 지속 확충한다.

☞ (2024년) 3조 1,228억원→(2025년) 3조 1,931억원 (2.3% 증가)

어촌 일자리 확대를 위하여 스마트양식 실습장 신규 조성(1개소, 20억원)하고 임대형 스마트양식단지를 신규 구축(3개소, 50억원)한다. 이에 더해 어촌에 청년을 유입시키기 위해 어항 인근에 청년귀어종합타운을 신규 조성(3개소, 30억원)하고 귀어 정착지원금 수혜대상을 확대(290→355명, 25→30억원)한다. 또한 어촌 특성별 맞춤형 지원을 통한 생활공간 혁신을 지원하는 어촌신활력증진 사업을 지속 확대 추진(962→2,257억원)한다.

제1부

2025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및 제안설명

제2부

2025년도 나라살림

제3부

2025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K-Seafood’의 수출·창업 지원을 위한 예산을 대폭 확대한다. 수산식품 수출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수산물 수출바우처 지원을 확대(62→100개사, 77→116억원)한다. 또한 K-블루푸드 소비저변 확대를 위해 K-콘텐츠와 연계한 인바운드 마케팅 사업을 신규 추진(8억원)한다. 수산물 유통혁신을 위해 수산물 직매장 창업지원사업을 신규 추진(30개소, 14억원)하고, 양식장 임대 사업도 확대 지원(10→20개소)한다.

연근해·양식어업 구조개선을 위한 지원을 확대한다. 어선 감척 규모를 대폭 확대(295→454척, 1,626→2,206억원)하고, 감척어선 공공 활용한 중국어선 불법어구 상시 철거체계를 신규 구축(30억원)한다. 또한 스마트 양식 표준화 모델 개발에 신규 착수(5억원)하고, 양식 품종별 스마트·자동화 설비 지원을 신규 확대(58억원)한다. 이에 더해 양식 수산물 생산성 향상을 위한 종자중간육성단지를 신규 조성(2개소, 30억원)한다.

유통비용 절감을 위해 온라인 도매시장을 활성화하고 유통시설의 규모·효율화를 추진한다. 온라인 도매시장의 정산·결제자금을 신규 지원(105억원)하고, 수산물 산지유통시설을 확대(9→11개소, 4→32억원)하고, 소비지유통시설을 신규 증축(4억원)한다. 또한 부산 공동어시장(360억원) 및 통영 거점 위판장(28억원), 제주 거점 위판장(신규, 5억원) 등 노후화된 거점 위판장을 현대화한다.

[표 8-3] 수산·어촌 부문 주요 변동내역

(단위: 억원, %)

구 분	2024년 (a)	2025년 (b)	증감률 ((b-a)/a)
합 계	31,228	31,931	2.3
수산물해외시장개척	515	546	5.9
연근해어선 감척	1,626	2,206	35.6
어촌신활력 증진	962	2,257	134.7

 임업·산촌 부문

일상화, 대형화되는 산림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임업인 소득안정 및 산림산업 경쟁력 제고를 추진한다.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으로 탄소중립과 녹색성장에 기여하며 산림복지서비스를 확대한다.

☞ (2024년) 2조 8,540억원→(2024년) 2조 8,408억원 (0.5% 감소)

연중·대형·동시다발 발생하는 산림재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산불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산사태 예방체계를 구축한다.

산불의 조기 진화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산림헬기 도입(계속 3대, 신규 2대), 국산 고성능 산불진화차(16대) 등 진화장비를 확충하고, 산불진화임도(409→500km) 대폭 확대, 산림 내 송전탑을 활용한 산불감시망 확충(100개소), 산불예보시스템 고도화 등 산불 예방을 위한 투자도 지속한다.

선제적 산사태 재난 대비를 위해 산사태 우려지역 기초조사(33천→46천개소)를 확대하고, 토석류 조기감지를 위해 산림수계지도 구축을 추진(19억원)하며, 사방댐을 대폭 확충 (510→1,000개소)한다.

기후변화에 따른 병해충 피해 확산 저지와 효율적 방제를 위해 소나무재선충병 특별방제구역 방제(245억원), 일반병해충 드론 방제(23억원) 등을 실시한다.

임업인의 소득안정 및 임업의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임업직불금(517억원), 임업인 정책자금 지원을 위한 산림사업종합자금(이자보전)(132억원)을 지속 추진하고, 임업인의 안정적인 산림경영과 소득창출 지원을 위한 교육사업(11억원)을 실시한다.

목재산업 육성 및 목재이용 촉진을 위해 목재건축 실연사업을 확대(12→24개소)하고, 목재에 대한 대국민 인식제고를 위해 목재교육을 실시(5억원)하며, 미래세대의 목재 친숙도 향상을 위해 어린이 이용시설 목조화(20개소)와 목공체험관(42억원) 조성을 추진한다.

산림휴양 수요에 대한 국민 수요 증가를 고려하여, 동서트레일(3차년도, 20km)을 조성하고, 거점센터 건립(67억원)과 우선 개통 구간에 편의시설 설치(24억원)를 추진한다.

[표 8-4] 임업·산촌 부문 주요 변동내역

(단위: 억원 %)

구 분	2024년 (a)	2025년 (b)	증감률 ((b-a)/a)
합 계	28,540	28,408	△0.5
숲가꾸기	2,516	2,392	△4.9
사방사업	2,510	2,784	10.9
임도시설	1,828	1,900	4.0
조림	1,173	1,077	△8.2
산림헬기 도입·운영	1,123	939	△16.5
산불방지대책	624	579	△7.3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	620	576	△7.1
산림휴양등산증진	169	257	52.5

 **식품업 부문**

식품 분야 농식품 수출 실적 상승세를 이어가기 위해 수출바우처 등 수출기업 지원을 확대하고, 수출 농식품 제품의 신선도 및 품질 경쟁력 제고를 지원한다. 아울러, 푸드테크 산업 육성도 지원한다.

☞ (2024년) 8,939억원→(2025년) 9,383억원 (5.0% 증가)

2024년 11월말 기준 농식품(K-Food) 수출은 지난해보다 8.1% 증가한 90.5억불로 역대 최고 실적을 달성했다. 이러한 수출 증가세를 지속적으로 이어나가기 위해 경쟁력 있는 우수 농식품 수출기업 육성 및 경쟁력 강화 등 투자를 확대한다. 구체적으로 농수산물식품 수출기업이 희망하는 지원사업을 맞춤형으로 선택할 수 있는 수출바우처 사업의 지원 대상을 (2024년) 387개사→(2025년) 460개사로 확대하고, 수출기업의 홍보·투자유치를 지원하기 위한 글로벌 박람회 참가 지원 규모도 (2024년) 1,333개사→(2025년) 1,573개사로 확대한다.

또한, 수출 농식품의 신선도 및 품질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해외공동물류센터 및 콜드체인 활용을 지원하는 우수농식품콜드체인구축사업도 (2024년) 47억원→(2025년) 52억원으로 확대한다. 한편, 푸드테크 산업 발전을 위한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를 (2025년) 신규 2개소 추가하는 등 K-푸드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미래성장 산업 육성에도 힘을 쏟을 계획이다.

[표 8-5] 식품업 부문 주요 변동내역

(단위: 억원, %)			
구 분	2024년 (a)	2025년 (b)	증감률 ((b-a)/a)
합 계	8,939	9,383	5.0
농식품해외시장진출	493	513	4.0
농식품글로벌비대면마케팅지원	91	99	8.8
한식진흥 및 음식관광활성화	105	166	58.5
식품외식종합자금(융자)	1,446	1,634	13.0

## 09 | 국방 분야



### 9-1 재정지원 방향

2025년 국방비(일반회계) 규모는 61.2조원으로 2024년 59.4조원 대비 3.1% 증가한 규모이다. 장병들의 눈높이에 맞는 군 복무환경 보장에 집중적으로 투자한다. 아울러, 장비·물자 획득을 통한 전투역량 강화와 첨단 ICT 기술을 활용한 과학기술 강군 육성 등 스마트 국방혁신 강화에 중점을 두었다.

북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3축체계 전력을 강화하고, 무인대응체계 확충 등 첨단전력 보강에 집중적으로 예산을 투자한다.

#### 장병 복무여건 및 처우 개선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제공하기 위해 병 봉급 및 장병내일준비적금 정부지원금 인상을 통해 국가지원을 강화한다. 또한, 병사 눈높이에 맞는 복무환경 조성을 위해 2~4인실 병영생활관 확충 하고, 병영식당 리모델링을 추진한다. 군 간부 대상으로는 주거시설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집중 투자한다. 군인 가족을 고려한 국민평형(전용 85㎡) 관사와 초급간부를 위한 풀옵션 1인 1실 간부숙소를 확충한다.

#### 전투역량 강화 및 스마트 국방혁신 강화 지속 추진

위리어플랫폼 장비 보급 확대, 신형 전투피복 도입, 과학화 훈련체계 및 실기동모의 훈련장비(마일즈장비) 신규도입, 과학화 훈련장과 전투체육시설 확충을 통해 장병 전투역량도 강화한다. 첨단과학기술강군 전환 가속화를 위해 스마트 국방혁신을 지속 추진한다. 소초 경계근무 무인화에 대비해 AI 해안경계 탐지장비를 신규 도입하고, 첨단 과학기술을 활용해 효과적인 작전 지원이 가능하도록 스마트 부대 구축 사업투자를 확대한다.

## 3축체계 고도화 및 첨단무기체계 도입을 위한 투자 확대

북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능력 강화를 위해 전자전기(R&D), L-SAM (장거리 지대공유도무기), 해상작전헬기-II 등 신규전력 소요를 반영하였고, 3축체계(킬체인, 한국형미사일방어, 대량응징보복체계) 고도화를 위한 전반적인 투자를 확대한다.

또한, 인구절벽에 따른 병력 감소 문제 해결을 위한 무인대응체계 확충을 위해 중거리자폭드론, 폭발물 탐지 및 제거 로봇 등 신규전력 소요를 반영하였다. 아울러 한국형 첨단전투기(KF-21) 도입 및 우주·사이버 등 新 영역 작전수행능력 강화를 위한 무기체계 도입 등 첨단전력 보강을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 9-2 부문별 주요 지원내용

### 전력운영 부문

병역의무에 상응하는 보상을 위해 병 봉급 및 사회진출금 인상을 통해 국정과제 이행을 완료하고, 군 복무에 지극심을 갖도록 장병 복무여건을 개선한다.

아울러, 장병들의 생존성·전투력 제고를 위한 전투역량 강화에 집중 투자한다. 첨단 ICT 기술을 활용한 AI 기반 과학기술 강군 육성 지원 등 스마트 국방혁신 강화를 위해 지속 투자한다.

☞ 전력운영비 : (2024년) 41.8조원→(2025년) 43.4조원 (3.9% 증가)

### 1) 장병 복무여건 및 처우 개선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위해 병 봉급 및 사회진출지원금을 인상하고 예비군 훈련비·교통비 지급대상을 확대한다. 병 봉급을 월 150만원(병장 기준)으로 인상하며(37,093억원), 전역 후 목돈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장병내일준비적금 재정지원금은 월 55만원 수준으로 인상한다(13,277억원).

미래세대 장병들이 만족하고, 본연의 임무에 집중할 수 있는 복무환경을 조성한다. 장병 동계 복무여건 개선 및 유사시 전투임무 수행능력 향상을 위해 신형 전투피복 체계를 도입한다. 기존 9종의 방한피복·우의류를 활동성·기능성이 향상된 고품질의 피복 4종으로 통합·개선하여 보급한다.

병사 눈높이에 맞는 병영환경 조성을 위해 2~4인실 생활관을 확충(187동, 782억원)하고, 병영식당 리모델링(52동)을 추진한다. 그외에 전역자 침구류 세탁 민간위탁 확대 및 수통 마개 교체 등 장병 위생여건 개선에도 적극 투자한다.

아울러, 장병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군 의료여건도 개선한다. 수도병원 중증외상환자 재활센터와 구리병원 치유회복센터를 신축하며, 군의관 위탁교육 확대(12→20명) 및 장기군의관 응급진료보조비(월 최대 150만원) 신설을 통해 군 의료의 질을 높인다.

특히, 군 간부 주거여건 개선을 위한 시설 투자를 대폭 확대한다. 군인 가족을 고려한 국민평형 관사(전용 85㎡, 484세대)와 초급간부를 위한 폴옵션 1인 1실 간부숙소(2,267실) 신규 보급에 집중 투자한다. 더 나아가, 여성 화장실·탈의실 등 여군 기본시설을 확충(750개 부대, 417억원)한다.

## 2) 전투역량 강화와 스마트 국방혁신 지속 추진

장병들이 첨단과학화체계에 기반한 실기동·실사격 전술훈련을 할 수 있도록 과학화 훈련장을 확충(4개소→9개소)하고, 실기동모의훈련장비(마일즈장비)도 신규 도입한다. 또한, 도시지역작전훈련 간 실전적 훈련과 입체적인 훈련통제·분석·사후검토가 가능한 과학화훈련체계를 신규 반영(3건, 71억원)한다. 장병들의 전투 현장 임무수행 및 전투체력단련 기본여건 조성을 위해 실내전투체육관을 확충(18동)하고, 연병장현대화(11개소)에 적극 투자한다. 장병들의 전투력 발휘와 생존성 강화를 위해 모듈형

방탄헬멧, 청력보호 헤드셋, 고성능 확대경 등 위리어플랫폼 장비 보급률을 제고 (54.8→71.7%)한다.

또한, 첨단기술을 적용한 AI과학기술 강군 육성 지원 등 스마트 국방혁신 강화에도 지속 투자한다. 소초 경계근무 무인화에 대비해 AI 해안경계 탐지장비를 신규 도입(20억원)하고, 육·해·공 스마트 부대 구축사업(311→406억원) 투자를 확대하는 등 첨단 지능형 국방전력화를 위해 지원을 강화한다.

[표 9-1] 전력운영비 주요 변동내역

(단위: 억원, %)

구 분	2024년 (a)	2025년 (b)	증감률 ((b-a)/a)
합 계	417,712	434,013	3.9
급여정책	179,815	188,134	4.6
군인·공무원연금기금전출금	37,176	40,088	7.8
급식 및 피복	26,302	25,294	△3.8
군수지원및협력	64,448	66,119	2.6
군사시설건설및운영	51,118	50,986	△0.3
정책기획및국제협력	15,477	15,845	2.4
국방행정지원	6,971	7,019	0.7
군인사및교육훈련	8,701	8,653	△0.5
국방정보화	7,610	8,068	6.0
장병보건및복지향상	15,171	17,890	17.9
예비전력관리	2,415	2,646	9.6
책임운영기관	2,509	2,600	3.7
군인복지기금 전출금	—	671	순증

## 방위력 개선 부문

복합적 안보 여건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한국형 3축체계 고도화, AI기반 유무인 복합 및 무인대응체계 확충 등 첨단전력을 보강하고, 국방R&D와 방위산업의 첨단전략산업화 육성에도 투자를 확대한다.

☞ 방위력 개선 : (2024년) 17.7조원→(2025년) 17.8조원 (1.1% 증가)

### 1) 3축체계 고도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압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①킬체인(장보고-III Batch-II(1,961→3,322억원), F-35A 2차(4,249→6,763억원)), ②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신규장거리지대공유도무기(52억원), 장사정포 요격체계(702→1,127억원)), ③대량응징보복능력(특수작전용대형기동헬기(2→14억원), 특임여단전력보강-II(2→9억원)) 등 한국형 3축체계에 대한 투자를 확대한다(5.8→6.1조원).

### 2) 첨단전력 등 전투능력 보강

①국산 첨단전투기(KF-21) 도입(보라매 최초양산(2,387→11,495억원)), ②무인대응체계(신규중거리자폭드론(50억원), 레이저대공무기(15→706억원)), ③新영역 전투수행능력 강화(해상작전위성통신체계-II(64→396억원)) 등 첨단전력 보강을 위한 지원도 대폭 확대한다(1.9→2.8조원).

또한, 국방R&D는 AI, 유무인 복합, 국방반도체 등 첨단기술 필수분야에 집중 투자한다.(4.6→4.9조원)

### 3) 방위산업 육성지원

K-방산 수출 글로벌 4강 기반구축을 위해 방산수출 관련 예산을 대폭 확대한다.(853→1,047억원, +22.8%)

특히 중소기업의 독자적 수출 능력 강화에 필요한 지원을 마련하고자 했다. 국내 방산 중소기업이 글로벌 체계기업 공급망으로의 진입을 지원하기 위한 신규 사업(77억원)과 방산 수출 중소기업의 사업자금 지원을 위해 모펀드에 재정 200억원을 출자하여 방산수출 전용 펀드를 신규로 조성할 예정이다.

[표 9-2] 방위력 개선 부문 주요 변동내역

(단위: 억원, %)

구 분	2024년 (a)	2025년 (b)	증감률 ((b-a)/a)
합 계	176,532	178,462	1.1
무기체계 획득	138,384	138,394	0.1
국방기술개발 등	32,130	34,172	6.4
방위산업 육성	1,862	2,047	9.9
획득지원, 행정지원 등 기타	4,156	3,848	△7.4

# 10 | 외교·통일 분야



## 10-1 재정지원 방향

2025년 외교·통일분야 재정투자 규모는 7.7조원으로 전년 대비 2.3% 증가하였다. 2025년은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국제 기여를 강화하기 위해 ODA 예산을 6.6조원 수준으로 확대(4.2%)하여 우리기업 및 청년의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한다. 또한, 20년 만에 우리나라에서 개최되는 2025년 경주 APEC 정상회의를 전방위적으로 지원하는 등 글로벌 중추외교를 뒷받침한다. 한편, 자유를 찾아 목숨을 걸고 넘어온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정착지원금을 50% 인상하고, 탈북민 자녀들의 교육과 취업 등도 적극 지원한다.

### ODA 규모 확대 및 우리기업·청년 해외진출 강화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에 걸맞은 기여를 추진하기 위해 ODA 규모를 4.2% 확대(63,181→65,835억원)한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기업·청년들의 해외 진출을 강화하고, 아프리카, 중앙아시아 등 성장잠재력이 높은 주요 국가와의 협력을 확대한다.

우리 기업들이 해외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대개도국차관 예산을 5.8% 확대한다(20,320→21,500억원). 특히, 우리 금융기관을 활용하여 개도국 현지의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민간협력전대차관을 신설(1,297억원)하고, 개발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현지에서 사업을 관리하는 컨설턴트(48억원)도 지원한다.

또한, 우리 인력의 해외진출을 위해 해외봉사단을 5천명에서 6천명으로 확대하여 청년들의 해외경험을 지원하고, 외국인 장학생도 6천명에서 7천명으로 확대하여 해외 우수인력을 적극 유치한다.

유·무상 연계를 위한 협업 ODA도 강화한다. 이집트 철도 현대화 패키지 등 협업 프로젝트 6개를 추진(1,447억원)하여 사업기획 단계부터 현지 중심의 다부처 협업을 지원하고, 사업 효과성을 강화한다.

### 글로벌 중추국가 역할 강화 및 청년의 해외진출 확대

20년 만에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의 의장국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1,008억원)함으로써 글로벌 중추국가 역할을 강화한다. 또한 2025 한-중양아시아 정상회의를 개최(69억원)하여 중양아시아와의 호혜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협력 관계를 강화하고 전략지역과의 외교지평을 확대한다.

해외 진출을 꿈꾸는 우리 청년들의 해외 개발협력 업무 참여 기회를 확대(1,288→1,430억원)하고, 재외공관으로 청년들을 파견 공공외교 현장 체험 기회를 제공(12→19억원)하며, 아프리카 소재 국제기구 파견 인력도 확대(2→4억원)하는 등 우리 청년들의 국제역량 강화에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강화 및 북한인권 공감대 확산

북한이탈주민 정착기본금 제도 도입('05) 이후 1인당 지원 단가를 역대 최대폭으로 증액(전년대비 50% 인상, 1천만원→1천5백만원)하고, 탈북청소년 교육지원(48→51억원), 탈북민 의료비 및 건강검진 지원(6→12억원) 예산을 증액하여 국내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이 안정적으로 우리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북한인권 실상에 대한 인식 개선 및 '자유·인권' 가치에 대한 국내외 공감대 확산을 위해 북한인권 국제회의를 확대하고(10→12억원), 북한인권 실상 알리기의 핵심 인프라로서 '국립북한인권센터' 건립(46→107억원)을 추진할 예정이다.

[표 10-1] 외교·통일 분야 재정투자 계획

(단위: 억원, %)

구 분	2024년 (a)	2025년 (b)	증감률 ((b-a)/a)
합 계	75,445	77,218	2.3
외교·통상 부문	64,130	66,563	3.8
통일 부문	11,315	10,654	△5.8

## 10-2 부문별 주요 지원내용

### 외교·통상 부문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국제사회 책임과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공적개발원조(ODA)를 확대하고, APEC 정상회의 등 글로벌 중추 외교를 적극 뒷받침하기 위해 6조 6,563억원으로 편성하였다.

☞ (2024년) 6조 4,140억원→(2025년) 6조 6,563억원 (3.8% 증가)

#### 1) ODA 확대 및 우리기업·청년 해외진출 강화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책임 있는 역할을 수행하고, 우리 기업과 청년의 해외진출, 공급망 등 국익확보를 위해 ODA 규모를 6.6조원 수준으로 4.2% 확대한다. 우리나라 ODA 순위는 OECD DAC 회원국 31개국 중 14위(31억달러), ODA/GNI 비율은 전체 28위(0.18%)로 국격에 부합하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 세계 주요국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ODA 규모를 지속 확대하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국제적 위상에 걸맞는 기여를 추진하고 국제사회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2025년 ODA 규모를 확대한다.

우선, 우리기업의 해외참여 기회를 높일 수 있는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예산(20,320→21,500억원)을 5.8% 확대한다.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2개국을 대상으로 우리 금융기관을 활용하여 현지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민간협력전대차관을 신설(1,297억원)한다. 이를 통해 개도국 민간부문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고 개도국의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또한, ODA 규모가 확대되는 만큼 개발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현지에서 ODA 사업의 전체적인 과정을 밀착 관리하는 컨설턴트(48억원)를 지원한다. 개발협력 전문가 양성을 위한 EDCF 아카데미 교육과정을 신설(12억원)하여 EDCF에 대한 지식을 전파하고, 개도국과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한편, 우리 청년들의 해외경험을 쌓는 기회를 제공하고, 전문역량을 확보하는 지원을 강화한다. 해외봉사단 규모를 5천명에서 6천명으로 확대하여 청년들의 글로벌 경험을 지원하는 한편, 외국인 장학생 규모도 6천명에서 7천명으로 확대하여 해외 우수인력을 적극 유치해 나갈 계획이다.

아프리카, 중아시아 등 성장잠재력이 높은 주요 국가와 협력을 강화하고, 공급망 확보 등 경제안보를 뒷받침하기 위한 전략적 협력기반을 강화한다. 특히, 대아프리카 협력을 위해 대규모 인프라 지원을 위한 차관지원을 확대하고, 쌀 원조 물량을 10만톤에서 15만톤으로 확대하는 등 무상원조 지원도 강화한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가 강점을 가진 그린·보건·디지털 분야 ODA 지원도 주력한다.

또한, 부처별 유·무상 연계를 위한 협업 ODA를 확대한다. 사업 기획 단계부터 현지 수요를 반영한 다수 부처의 협업을 지원하여 이집트 철도 현대화 패키지, 가나 농업 패키지 등 협업 프로젝트 6개를 추진(1,447억원)한다. 이 외에도 TIPS 우수기업의 현지실증 ODA 지원을 강화하고, 수원국 학생들의 직무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현지 한국어교육 및 국내 현장실습을 지원한다.

[표 10-2] ODA 주요 변동내역

(단위: 억원, %)

구 분	2024년 (a)	2025년 (b)	증감률 ((b-a)/a)
ODA 규모 * 외교·통일 분야 외 타분야 포함	63,181	65,835	4.2
EDCF 대개도국차관	20,320	21,500	5.8
해외봉사단 및 개발협력인재	1,288	1,430	11.1
협업 패키지	—	1,447	순증

## 2) 글로벌 중추국가 강화 및 청년들의 해외진출 확대

2005년 부산 APEC 정상회의 개최 이후 20년 만에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의 의장국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25→1,008억원)함으로써 글로벌 중추국가 역할을 강화하고, 개최지인 경상북도 경주시 및 관계부처와의 긴밀한 협업 체제를 유지·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2024년 6월 발표한 ‘한-중앙아시아 K 실�크로드 협력 구상’의 일환으로 2025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를 개최(69억원)하여 중앙아시아와의 호혜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협력 관계를 강화함으로써, 2023년 한-태평양도서국 정상회의, 2024년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에 이어 전략지역과의 외교지평을 확대하고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국가 간 연대와 협력을 강화한다.

한편, ‘다가가는 경제·민생외교’ 실천의 일환으로, 청년들의 미래 준비를 뒷받침하기 위해 해외 진출을 꿈꾸는 우리 청년들의 해외 개발협력 참여 기회를 확대(1,288→1,430억원)하고, 재외공관으로 청년들을 파견하여 공공외교 현장체험 기회를 제공(12→19억원)한다. 인공지능 기반의 지능형 외교안보 데이터 플랫폼 구축(106억원)하여 외교업무 수행방식을 혁신하고, 외교정보 분석 역량을 강화한다.

[표 10-3] 외교·통상 부문 주요 변동내역

(단위: 억원, %)

구 분	2024년 (a)	2025년 (b)	증감률 ((b-a)/a)
외교·통상 부문	64,140	66,563	3.8
2025 APEC 의장국	25	1,008	3,998.8
2025 한-중아시아 정상회의	-	69	순증
공공외교 현장실습원	12	19	58.3
지능형 외교안보 플랫폼 구축	-	106	순증

 통일 부문

북한인권 공감대 확산 및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강화 등을 위해통일 부문 총지출은 1조 654억원으로 편성하였다.

- ☞ 통일 : (2024년) 1조 1,315억원→(2025년) 1조 654억원 (5.8% 감소)
- ☞ 남북협력기금 : (2024년) 8,745억원→(2025년) 8,008억원 (8.4% 감소)

1)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강화

북한이탈주민 정착기본금 제도 도입('05~) 이후 1인당 지원 단가를 역대 최대폭으로 인상(전년대비 50%, 1천만원→1천5백만원)하여 국내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의 초기 정착 지원을 강화한다. 또한, 탈북청소년 교육기관 환경개선(4억원), 탈북대학생 한미연수프로그램 지원(2억원), 제3국 출생자녀 한국어 교육 지원(1억원) 등을 통해 탈북청소년의 교육 지원을 확대하고, 탈북민 창업보육센터 운영(6억원)을 통해 북한이탈주민의 취업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 2) 북한인권 실상에 대한 대국민 공감대 확산

북한주민의 인권 보호 및 개선을 위한 국내외 공감대 확산을 위해 「북한인권 국제회의」를 확대 개최(2→3회, 10→12억원)하고, 북한 경제·사회 실상 심층조사(3.4억원)를 통해 북한 경제·사회 변화상을 분석하고 보고서 발간을 통해 실상을 국내외에 알릴 계획이다. 또한, 북한인권 실상을 알리고 ‘자유·인권’ 가치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확산을 위한 핵심 인프라로서 「국립북한인권센터」 건립(46억원→107억원) 및 「통일정보 자료센터」 확대·이전(88억원→129억원)을 추진한다.

## 3) 납북자·이산가족 등 인도적 문제 해결 지원 확대

6.25 전시 및 전후 납북자 문제해결 및 국내외 공감대 형성을 위한 국내외 홍보를 강화(0.6→2억원)하고, 귀환 납북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지원 용역(15→50백)을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전후납북자 가족단체 활동 지원(2억원)을 통해 납북피해가족들의 권익을 보호 증진하고 북한 주민, 사체 송환 업무 지원을 통해 남북 간 인도적 문제 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다.

## 4) 최근 남북관계 등을 감안한 남북협력기금 감액 편성

최근 경직적 남북관계로 5년 평균 기금 집행률이 4% 이내로 저조한 점을 감안하여, 남북협력기금은 전년대비 △8.4% 감액 편성하였다. 다만, 남북협력기금은 통일·대북정책의 주요한 재원으로 규모자체가 남북 교류협력의 의지로 작용하므로 미국 新행정부 출범에 따른 남북관계 변화 등 고려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편성하였다. 구체적으로, 인도적 문제해결 분야의 경우 전년대비 2% 증액한 6,015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대북제재 등으로 당면하여 추진이 어려운 남북관계 기반구축 분야의 경우 전년대비 △30.9%를 감액한 1,811억원을 편성하였다. 다만, 사업규모(8,261억원)는 기금 설치 이후(91년~) 최대 집행실적(03년 7,707억원)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편성된 것으로 문제없이 사업추진이 가능할 전망이다.

[표 10-4] 통일 부문 주요 변동내역

(단위: 억원, %)

구 분	2024년 (a)	2025년 (b)	증감률 ((b-a)/a)
통일 부문	11,315	10,654	△5.8
북한이탈주민 정책 및 지원체계 운영	160	169	5.6
북한인권 개선 정책수립	58	124	113.8
남북피해자문제 해결 및 인도적 송환업무 지원	4	6	50.0
남북경제협력기반조성	2,484	1,762	△29.1

## 11

##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 11-1 재정지원 방향

2025년도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의 재정투자규모는 25.0조원으로 2024년도 24.4조원 보다 2.3% 증가하였다. 특히 2025년에는 마약·딥페이크 등 첨단지능범죄 예방·대응과 범죄피해자 지원, 재난·안전 사고 예방에 집중적으로 투자하였다.

### 첨단지능범죄 근절

마약·딥페이크 등 기술발달에 따라 지속적으로 고도화되어 가는 첨단지능범죄 예방·대응을 강화한다. 우선 마약범죄 대응을 위해 시중유통 근절 예산을 확대하고, 현장단속과 마약범죄 예방 및 홍보에도 집중적으로 투자한다. 또한 경찰에 대한 훈련 강화, 신형장비 보급 등을 통해 현장 대응력을 제고한다.

### 범죄피해자 지원

범죄피해자에 대한 생계비·장례비 지원 상한을 인상하여 경제적 지원을 강화하고,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에 대해서는 보호소 퇴소시 지급하는 자립지원금을 인상하고 자립지원수당을 신설한다. 또한 범죄피해자를 신변보호하는 밀착 경호서비스의 대상 지역을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대한다.

### 재난·안전사고 최소화

이상기후로 인한 극한호우, 잦은 태풍 등 풍수해의 강도가 커짐에 따라 재난피해를 최소화하고 사전에 대비하기 위한 재해위험지역정비·우수저류시설설치 등 예방 인프라 투자를 지속 확대한다. 특히, 재해위험이 높은 지역의 재해위험요인 일괄 정비를 위한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 사업을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소방·해경 등 대형재난에 대응하는 현장 대응기관의 안전하고 효과적인 임무수행을 위해 장비를 확충·고도화하는 한편, 민간자원의 재난대응력 강화를 위해 풍수해보험 지원을 확대한다.

[표 11-1]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재정투자 계획

(단위: 억원 %)

구 분	2024년 (a)	2025년 (b)	증감률 ((b-a)/a)
합 계	244,295	250,031	2.3
법원 및 헌재	23,242	24,621	5.9
법무 및 검찰	45,546	46,212	1.5
경찰	133,486	139,078	4.2
해양경찰	19,292	20,060	4.0
재난관리	22,728	20,062	△11.7

11-2 부문별 주요 지원내용

법원 및 헌법재판소 부문

‘신속한 재판 구현’을 위해 감정절차 개선, 재판기록 전자화 등을 추진하고, 법정 확대 등 재판 수행을 위한 물적 시설도 확충한다. 또한 재판연구원 증원 등 인력도 확대해나간다. 추가로 법원장 직접재판 도입, 장기근속 유도 등을 통해 재판 지연 원인 해소와 함께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한 노력도 병행한다.

한편 국선변호 서비스 확대를 위해 국선전담변호사를 20명 증원한다. 그리고 법정 내 보복성 물리력 행사를 방지하기 위해 위험물품 반입을 차단할 수 있는 X-Ray 투시기와 스피트게이트를 확대 설치한다.

최근 심각해진 재판지연 문제에 대해 사법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개선을 지원한다. 감정절차 지연으로 인한 장기미제사건이 누적되지 않도록 감정관리위원 제도를 신설한다. 그리고 문서감정에 대한 신뢰성 강화를 위해 문서감정인

숙련도 평가제도를 신규 도입한다. 한편 전자소송 활성화 및 형사전자소송 전면 도입('25. 6월)을 철저히 준비하기 위해 재판기록 전자화 예산을 대폭 확대('24년 146→'25년 214억원)한다.

사건조사 등 재판기초 업무를 지원하는 재판연구원을 400명에서 480명으로 증원하여 高난이도 사건에 소요되는 심리기간을 단축한다. 추가로 법관 인사이동으로 인한 재판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보제한 기간을 연장한다(재판장 2→3년, 일반법관 1→2년). 또한 사법행정만 전담하던 고등법원장 및 지방법원장에게 재판업무도 겸임하도록 하여 장기미제사건의 신속한 해결과 더불어 출신수범의 리더십을 통해 조직내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한다.

형사재판에서 변호사를 선임할 수 없는 피고인을 대상으로 국선변호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국선전담변호사를 234명에서 254명으로 20명 증원한다. 또한 최근 법정 내 피고인 피습사건 등 위해사건을 예방하기 위하여 법정 보안을 대폭 강화한다. 위험물품 반입 차단을 위한 X-Ray 소형화물투시기 보급을 확대(3→13대)하고, 스피드게이트(3→20set), 스크린도어(신규, 85개) 등 출입시 위험물 검색장치도 대폭 확대하여 설치한다. 또한, 노후·저화질 CCTV 교체 및 신규설치로 보안관제 역량도 강화한다.

[표 11-2] 법원 및 헌법재판소 부문 주요 변동내역

(단위: 억원, %)

구 분	2024년 (a)	2025년 (b)	증감률 ((b-a)/a)	비 고
합 계	23,242	24,621	5.9	
감정관리위원 위촉	-	30	순증	- 감정관리위원 19명 위촉 및 사무실 조성 비용
문서감정인 숙련도 평가	-	3	순증	- 문서감정인 숙련도 평가 시험 수행 소요
재판기록 전자화	149	214	79.0	- 사건기록 스캔물량 확대
서울법원종합청사 공간재배치	-	38	순증	- 법정 4개 추가 설치 등 공간 재배치
국선변호료 지원	699	780	11.6	- 국선전담변호사 +20명 증원
X-Ray 소형화물 투시기 보급	8	31	293.6	- 3→13대로 확대
스피드게이트 설치	2	8	292.5	- 3→20set로 확대
스크린도어 설치	-	12	순증	- 법원 사무공간에 민원인 진입 차단(신규 85개 과)
CCTV 교체 · 신규 설치	3	26	753.0	- 법원 내 CCTV 확충

제1부

2025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및 제안설명

제2부

2025년도 나라살림

제3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 법무 및 검찰 부문

첨단지능범죄 대응을 위해 AI 증거분석장비 등 첨단장비를 확충하고, 범죄피해자 및 유가족 생활안정을 위해 생계비·장례비 등 경제적 지원을 확대한다. 또한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우수한 외국인력 유입을 촉진하기 위한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도 확대한다.

☞ 범죄피해자보호기금 : (2024년) 1,371억원→(2025년) 1,449억원

☞ 사회통합프로그램이수제운영 : (2024년) 108억원→(2025년) 139억원

첨단기술 발달에 따라 범죄기법이 지속적으로 고도화 되어 가는 마약 범죄에 대응해 마약의 시중유통 근절예산을 확대하고, 현장 단속과 예방 및 홍보에도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특히 마약의 국내유입을 막기 위해 공항·항만 등 국경을 차단하고, 다크웹·가상자산 추적감시 등과 관련되는 시중유통 단속예산을 확대한다.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청소년 대상 마약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관련부처가 협업해서 시행하는 마약 홍보 예산도 확대한다.

또한,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 및 보이스피싱을 막기 위해 AI 기반 증거분석 장비를 신규로 도입한다. 이를 통해 범죄의 수사속도를 높이고, 범죄 피해자가 신속히 구제 받을 수 있는 환경도 조성한다.

수사·재판 과정에서 구금되었던 자가 검사로부터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법원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구금 일수만큼 보상해주는 형사보상 예산을 확충('24: 400→'25: 420억원)한다. 이러한 지원을 통해 대상자의 정신적 피해 및 경제적 손실을 보상하는 한편, 빠른 생활 안정에도 기여하도록 한다.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강력범죄지도를 운영하고, 전자감독시스템-지자체 스마트 CCTV간 연계지역 확대 등을 통해 범죄 위험으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한다. 또한 정신질환자 등 고위험군 재범 우려자를 대상으로 심리치료 및 입원치료를 강화하여 강력범죄로부터 국민안전을 확보한다.

또한 저소득층, 한부모가족, 전세사기 피해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이 신속하고 편리하게 법률구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1:1 맞춤형 법률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신속한 법률구조를 위해 상담 및 접수부터 서비스 매칭 결과까지 확인이 가능한 법률구조 서비스 플랫폼을 구축한다.

범죄로 인해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범죄피해자 및 그 유가족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강화한다. 피해자 및 유가족을 위한 생계비(1인가구 기준 50→70만원) 및 장례비 지원 상한액을 인상(400→500만원)하고 생계비의 최대 지원기간도 확대(6→12개월)하여, 일상생활에 신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확대한다.

범죄피해자 중에서도 가해자가 가족 구성원인 경우 등 원가정으로 복귀가 어려워 경제적 지원이 절실한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첫째, 기 지원 중인 자립지원금(500만원)을 2배 수준(1,000만원)으로 인상하고, 자립지원수당(월 50만원, 총 5년간 지원)을 신설하여 보호소 퇴소 후에도 경제적 어려움을 겪지 않고, 학업·취업 등을 준비할 수 있도록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한다.

경제적 지원 뿐만 아니라 신체적 위협에 대해서도 범죄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한다. 스토킹 등 범죄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현재 수도권에 한정된 밀착경호 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100→350명, +18억원)한다.

법무부 중심으로 운영되던 「취업비자 사전공표제」\*를 각 부처 전문성을 활용하는 부처협업 체계로 전환한다. 기존에는 법무부 자체조사만을 토대로 운영되어 왔으나, 고용부 등 관련 부처에서 시행하고 있는 분야별 실태조사들을 모두 포괄하여 법무부에서 검증 후 통합·활용하는 방식으로 개선한다.

\* 고용부 등 정부기관 실태조사+법무부 검증→산업계 외국인력 수요 산출

또한 지역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장기체류 외국인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특히, 단순노무인력 중심의 외국인력 수급구조를 현장 수요에 맞게 숙련기능인력 중심으로

재편한다. 이를 위해 단순노무인력(E-9)이 숙련기능인력(E-7-4)으로 전환하기 위한 요건인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이수할 수 있도록 숙련기능인력 특별반(한국어 교육에 중점)을 신설한다.

\* 숙련기능인력 양성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 : ('25) 13,400명 (신규)

입국 초기에 외국인들이 한국사회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외국인의 조기적응 프로그램을 확대한다. 또한 산업안전 및 범죄예방 과정을 추가하여 국내 사회에서 안전한 사회 일원이 될 수 있도록 추가적인 교육과정을 신설한다.

\* 입국초기 외국인 조기적응프로그램 : ('24) 42천명, 3시간→('25) 69천명 (+27천명), 5시간

국가배상 사건에서 국가의 불법행위로 인한 책임이 인정되어 피해 국민이 국가배상금을 청구할 경우, 이를 신속하게 집행함으로써 피해 국민의 재산을 보장할 수 있도록 국가배상금 예산을 확대한다.

[표 11-3] 법무 및 검찰 부문 주요 변동내역

(단위: 억원 %)

구 분	2024년 (a)	2025년 (b)	증감률 ((b-a)/a)	비 고
합 계	45,546	46,212	1.5	
형사보상	400	420	5.0	- 형사보상금
범죄피해자 치료 및 자립 지원	211	214	1.6	- 생계비·장례비 지원 확대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제운영	108	139	29.3	- 숙련기능인력 양성 사회통합프로그램
외국인사회통합지원	154	176	14.3	- 이민자 조기적응프로그램 확대운영 - 취업비자 발급규모 사전공표제 - 창업이민 인재양성프로그램 지자체 확대
국가배상금 지급	1,000	1,318	31.8	- 고액 국가배상사건 증가

## 경찰 부문

딥페이크·악성사기·마약 등 민생침해 범죄를 근절하고 범죄피해자·아동·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보호활동을 강화한다. 법과 상식에 기반한 공정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법질서 확립 및 안보·대테러 역량강화에도 투자를 확대한다.

또한 국민기대에 부응하는 든든한 경찰이 되기 위해 물리력 훈련 강화, 각종 신형장비 보급 등을 통해 현장 대응력을 제고하고 수사의 신속성을 위해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시스템 구축도 추진한다.

마약·보이스피싱·디지털성범죄 등 국민의 일상을 위협하는 민생침해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수사 장비 시스템을 첨단화하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활동을 강화한다. 일선 경찰관의 현장 대응역량을 획기적으로 제고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 및 국민편의 증진을 위한 시설·장비 확충 등도 추진한다.

우선, 딥페이크 등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신속수사 및 확산방지를 위해 수사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피싱이용 전화번호를 기존 2일에서 10분내 신속 차단하는 긴급차단 서비스를 도입한다. 마약범죄에 대한 가상자산 분석 지원을 확대하고, 고위험 운전자 스스로 운전능력을 점검할 수 있는 자가진단시스템도 전국 운전면허시험장에 시범 운영한다.

또한 일선 현장 경찰관들에게 경찰착용기록장치를 신규 도입하여 현장 대응력을 강화하고, 인파 밀집지역에 대한 안전관리를 위해 무인비행장치 등 장비도 확충한다. 그리고 산업기술 유출 방지를 위한 수사장비와 대테러 대응역량 제고를 위한 훈련장비도 도입을 확대한다.

국민 기대에 부응하는 경찰역량 제고를 위해 실감형 가상훈련(VR)과 물리력 대응훈련을 강화하고 차세대 외근조끼·신형 전자충격기 등 장비를 현대화한다. 또한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한 AI 수사도우미와 영상분석 시스템을 신규 도입하고 원격화상시스템 및 음성인식 조서 작성 시스템을 주요관서에 확대 설치한다.

[표 11-4] 경찰 부문 주요 변동내역

(단위: 억원, %)

구 분	2024년 (a)	2025년 (b)	증감률 ((b-a)/a)	비 고
합 계	133,486	139,078	4.2	
범죄예방 및 생활질서유지	122	131	7.4	－ 유실물 관리 · 즉결심판시스템 개선
범죄대응 및 치안상황관리	279	343	22.7	－ 경찰착용기록장치 도입 등
과학수사역량강화	379	443	16.8	－ DNA 감정시약 확충 등
경비경찰활동	659	831	26.0	－ APEC 정상회의 안전관리 등
장비관리유지	382	437	14.4	－ 현장대응 장비 확충 등

## 해양경찰 부문

단속전담함정, 수중드론, CCTV 영상 분석 프로그램 등 신규 장비 도입을 통해 중국어선 불법 조업 및 해상 마약 밀반입의 단속을 강화하고, 구조정·철탐·안테나 등 노후 구조장비·시설 대폭 개선과 동해권 광역 VTS 구축, 청산도 관제 레이더 신규 설치 등 선박관제서비스 제공 범위 확대를 통해 해양 사고에 대한 대응 역량을 제고한다.

코로나19 이후 중국 어선의 우리 해역 불법조업이 증가 추세로 전환하였고 불법조업 형태도 대규모 집단어선단의 해양경찰 단속함정 직접 충돌 및 고의적 시간벌기(조종실 철문 봉인 후 NLL 이북 도피 등)로 진화함에 따라 효과적인 단속을 위해 불법조업 어선에 직접 계류가 가능하도록 단속함정 높이를 상향하고, 충격흡수 시설을 갖춘 단속전담함정(300~500톤급) 도입을 개시한다.

한편 선박을 통한 대규모 마약 밀반입 및 유통 근절을 위해 잠수사 대비 장시간·고화질로 선저 마약 탐색이 가능한 수중드론, 효율적 외부 첩보 수집 분석을 위한 CCTV 영상 축약·분석 프로그램\* 등 신종 단속장비를 도입한다.

\* 30분 길이 CCTV 영상을 53초로 요약, 1주일 분량을 7시간만에 분석 가능

또한 해상 사고 발생시 신속하고 효과적인 구조를 위해 노후 구조정 교체 규모(2→16척)와 구조거점파출소\* 개소(26→33개소)를 확대하고, 조난통신 송수신 철탑(30개)·안테나(32개) 등 노후·미비한 조난 무선통신 시설을 교체·재구축할 예정이다.

\* 구조대와 원거리에 위치한 해역에서 사고 발생시 신속 대응을 위해 잠수구조요원을 배치한 해양경찰 파출소

아울러 개별 레이더 단위 관제서비스 제공에서 벗어나 쏘 연안 해역에 대한 연속적 관제서비스 제공\*을 위해 동해권(동해·포항) 광역 VTS (Vessel Traffic Service, 해상교통관제센터) 구축을 '25년 마무리하고, 연안 해역 내 관제 음영구역 완전 해소를 위해 현재 유일하게 관제 음영이 존재하는 청산도에 관제 레이더를 설치할 계획이다.

\* '22년 서해권(목포·군산), '23년 제주권 광역 VTS 구축 완료

[표 11-5] 해양경찰 부문 주요 변동내역

(단위: 억원, %)

구 분	2024년 (a)	2025년 (b)	증감률 ((b-a)/a)	비 고
합 계	19,292	20,060	4.0	
단속전담함정	—	3	순증	1년차 설계비
범죄수사활동	69	79	14.4	마약수사활동 장비 지원 등
연안구조장비도입	103	120	16.8	구조정 대체건조 확대
연안안전사고예방활동	61	74	20.4	구조거점파출소 확대 등
통신위성장비관리	185	213	15.1	노후 레이더, 통신망 교체
VTS 구축·운영	264	411	55.4	동해광역 VTS 구축
서부정비창 신설·운영	671	949	41.3	서부정비창 완공('25. 7)

## 재난관리 부문

기후변화로 인한 극한호우·태풍 등 풍수해 예방을 위해 재해위험지역 정비, 하상으로 자동차단시설 및 우수저류시설 등을 추가 설치하고, 민간차원의 재난대응력 강화를 위해 풍수해보험 투자를 확대한다.

☞ 재해위험지역 정비 : (2024년) 8,766억원→(2025년) 8,803억원

☞ 풍수해보험 : (2024년) 380억원→(2025년) 490억원

지진 등 대형재난 대응력 강화를 위하여 소방 장비·훈련 투자를 강화하는 한편, 소방공무원 마음건강의 예방, 관리를 위해 찾아가는 상담실 사업을 확대 운영한다. 또한 국립소방병원, 국립소방박물관의 차질 없는 개원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한다.

☞ 소방공무원 보건안전지원 : (2024년) 42억원→(2025년) 47억원

☞ 국립소방박물관 건립 : (2024년) 11억원→(2025년) 82억원

이상기후로 인한 극한호우·잦은 태풍으로 발생하는 재난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예방사업을 지속 확대 지원한다. 위험저수지·급경사지 등 붕괴위험지역을 사전에 정비하는 재해위험지역정비사업을 전국 917개소 대상으로 확대 추진(+37억원)한다. 특히, 풍수해 위험이 높은 지역의 하천·펌프장·하수도 등 각각의 개별시설을 통합하여 재해위험 요인을 일괄 정비하는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을 대폭 확대(신규 18→35개소)하였다.

한편, 정부는 '25년부터 5년간 전국 316개소(연간 60개소) 하상도로에 하천 수위계 센서에 연계하여 자동으로 출입을 통제하는 시설을 신규 구축한다. 이는 '23~'24년간 추진한 침수우려 취약도로 자동차단시설 270개소 구축 완료 이후,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수위상승으로 하상도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추가로 자동차단시설을 확대 구축하는 것이다. 아울러, 대규모 강우시 빗물을 일시에 저장하여 도심 저지대 침수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우수저류시설도 신규 설치(+6개소)하는 등 재해예방 투자를 지속 확대한다.

또한, 대형화·장기화·빈번화 되는 재난에 대한 민간차원의 사전적 재난대응 역량강화를 위해 풍수해보험 가입 지원을 지속 확대한다. 정부는 풍수해보험에 가입하는 국민이 부담할 보험료의 70% 이상을 지원하고 있으며, 특히 취약계층의 경우에는 보험료의 100%를 지원하고 있어, 예측치 못한 재난으로 발생한 재산피해를 실질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지속 확충하고 있다.

지진 등 대형재난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소방장비 및 훈련시설 보강 사업을 중점 추진한다. 샌드위치 패널 건축물 및 전기차버스 화재에 효과적인 무인파괴방수차를 보유하지 못한 6개 시도 소방본부에 지원하고, 중앙119구조본부에 질식소화덮개, 이동식 수조, 방사장치 등 화재 진압장비를 도입한다. 또한, 대형유류저장탱크 화재 및 최근 발생하고 있는 침수사고를 대응하기 위해 여수화학방재센터에 대용량포방사시스템(1세트)을 신규로 도입한다.

소방공무원의 직무 특성상 처참한 재난 현장에 상시 노출됨에 따라 발생하는 정신적 장애와 부상 치료를 위해 소방공무원 처우개선 투자를 확대한다.

소방공무원 마음건강의 예방, 관리를 위해 찾아가는 상담실 사업을 확대 운영한다. 소방서를 직접 방문하여 쉼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정신건강 관리 및 상담·치유헌동을 수행하는 전문 심리상담사를 확대채용하여 소방공무원 보건안전사업을 집중투자한다. 또한, 정신적 장애와 부상 치료를 위한 소방 특화 종합병원인 '국립소방병원'이 '25년 6월에 준공될 예정이며,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통해 본격 정식개원 절차에 돌입할 예정이다.

[표 11-6] 재난관리 부문 주요 변동내역

(단위: 억원, %)

사 업	2024년 (a)	2025년 (b)	증감률 ((b-a)/a)	비 고
합 계	22,728	20,062	△11.7	
재해위험지역 정비	8,766	8,803	0.4	－ 전국 917개소 정비
침수위험 하상도로 자동차단 시설구축	－	60	순증	－ 60개소 신규 구축
풍수해보험	380	490	28.8	－ 풍수해보험 (주택, 온실, 소상공인) 가입지원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지원	42	47	12.3	－ 찾아가는 상담실 확대운영
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 시설장비지원	90	185	105.1	－ 대용량포 방사시스템 도입 등
국립소방박물관 건립	11	82	619.6	－ 공사비
우수소방장비 확산 기반조성	4	43	1,076.7	－ 전기차 화재대응 진압장비 지원 등

# 12 일반·지방행정 분야



## 12-1 재정지원 방향

2025년 일반·지방행정분야 재정투자 규모는 110.7조원으로 전년대비 0.1% 증가한 수준이다. 2025년에는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 지역 주도 지역균형발전 추진, 취약계층 금융지원 강화, 사회통합을 위한 과거사 해결 등에 중점을 두었다.

### 지역 주도 지역균형발전 추진

지방소멸 대응을 위해 '21년부터 연 1조원을 출연하여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조성,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투자 중이다. 보다 효과적인 기금 운용을 위해 일정규모 이상의 중점사업에 대한 비중을 확대하고, 기금배분잔액을 활용하여 인구감소지역 중소기업,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인구감소지역 기업투자 벤처펀드를 조성한다.

접경지역, 주한미군 공여구역 등에 대한 지역별 맞춤형 투자도 지속하고, 서해 5도 주민에 대한 정주지원금 및 농어촌 및 도시의 빈집 정비를 예산도 대폭 확대하여 낙후지역에 대한 지원을 통한 지역균형발전을 추진한다.

###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금융 투자 확대

취약계층 금융지원을 위해 햇살론15 및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에 대한 한시적 재정 지원을 지속한다. 취약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채무부담 경감을 위해 새출발기금 지원을 확대하고, 청년층 자산형성을 위한 청년도약계좌 지원도 확대하는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금융의 역할을 강화한다.

## ☞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

정부부문에 초거대 AI를 도입하여 대국민 서비스 향상 및 행정 효율화를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국민들이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민원사무를 처리할 수 있는 서비스를 확대하고, 실직 등 나의 상황을 시스템이 자동 인식하여 스스로 찾지 않더라도 이용 가능한 공공서비스를 알아서 추천하는 혜택알리미 서비스를 지속 추진한다. 또한, 중앙행정기관의 노후장비를 개선하는 등 행정시스템의 안정성 강화를 위해 인프라 투자를 확대한다.

## ☞ 국회의사당 건립 50주년 기념행사 추진

광복 80주년 및 국회의사당 건립 50주년을 맞아 기념행사 개최 및 기념공간을 조성을 추진한다. 또한 '26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시행에 앞서 선거 종합관리지침 개정 등 체계적인 선거 준비를 위한 사전 작업을 실시한다.

## ☞ 사회통합을 위한 과거사 해결 추진

제주4.3, 광주5.18 등 과거사 및 민주화운동 관련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명예회복 및 보상을 실시하고, 제주4.3평화공원 활성화 사업, 5.18 기록물 보존시설, 민주인권기념관 등 건립을 지원하여 국민화해와 통합의 기틀을 마련한다.

[표 12-1] 일반·지방행정 분야 재정투자 계획

(단위: 억원 %)

구 분	2024년 (a)	2025년 (b)	증감률 ((b-a)/a)
합 계	1,105,395	1,106,710	0.1
지방행정·재정지원	715,685	689,216	△3.7
재정·금융	320,668	351,390	9.6
입법 및 선거관리	16,430	11,666	△29.0
정부자원관리	10,833	11,165	3.1
일반행정	35,142	36,527	3.9
국정운영	6,636	6,745	1.6

## 12-2 부문별 주요 지원내용

### 지방행정 · 재정지원 부문

지역균형발전 지원 · 공동체 회복 등 지역사회 현안 해결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을 추진한다.

☞ (2024년) 71조 5,685억원→(2025년) 68조 9,216억원 (3.7% 감소)

지방교부세는 2024년 66.8조원에서 2025년 67.0조원으로 0.4% 증가하였으나, 한시사업인 지방채 인수(2.6조원→0.1조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3,000억원→종료) 축소 등으로 지방행정 · 재정지원 부문 전체규모는 71.6조원에서 68.9조원으로 △2.7조원 감소하였다.

주요 투자내용을 보면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위한 지방소멸대응기금 연 1조원을 지속 투자하되, 보다 효과적인 기금 운용을 위해 일정규모 이상의 중점사업에 대한 지원 비중을 확대하고, 기금배분잔액을 활용하여 인구감소지역 중소기업,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인구감소지역 기업투자 벤처펀드를 조성하여 지역내 기업 투자도 실시할 예정이다.

북한의 군사적 위협으로 어려움을 겪는 서해5도 주민을 위해 정주생활지원금을 4년 연속 인상(10년 미만 월 10→12만원, 10년 이상 16→18만원)했고, 포항지진, 세월호 사고로 인한 지역의 공동체 회복을 위한 거점시설 건립을 본격화(4억원→98억원)하고, 지자체 빈집정비 지원(50억원→100억원), 2026 여수세계 박람회 개최를 위한 지원(9→23억원)도 확대 하였다.

[표 12-2] 지방행정·재정지원 부문 주요 변동내역

(단위: 억원, %)

구 분	2024년 (a)	2025년 (b)	증감률 ((b-a)/a)
합 계	715,685	689,216	△3.7
지방교부세	667,593	670,385	0.4
지방소멸대응기금 출연금	10,000	10,000	—
활력 복합시설 건립	4	98	2,354.50
섬 발전 협력사업 추진	109	115	5.5

## 재정·금융 부문

서민·취약계층·미래 성장동력 금융지원, 청년·지역경제 지원 등을 위해 재정·금융부문에 35조 1,390억원을 편성하였다.

☞ (2024년) 32조 668억원→(2025년) 35조 1,390억원 (9.6% 증가)

서민·취약계층 지원 관련하여, 새출발기금의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감면율을 상향하는 등 취약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채무상환 부담 경감 지원을 강화한다. 저신용·저소득자에 대한 금융지원을 위해 한시적으로 재정을 지원했던 햇살론15 및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에 대해서 재정지원을 연장한다.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금융지원도 확대한다. 반도체 설비투자 지원 특별 프로그램과 반도체생태계펀드 예산을 신규 반영하여 반도체 생태계 전반에 경쟁력 강화를 지원한다. 혁신산업 육성 지원 및 중소·벤처기업의 성장자금 공급을 위하여 3조원 규모의 혁신성장펀드 조성도 지속한다.

마지막으로 청년의 자산형성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청년도약계좌의 정부기여금 지급을 확대 개편하고, 지역의 대규모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지역활성화투자펀드 조성을 지속하여 청년의 자산형성 및 지역경제활성화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표 12-3] 재정·금융 부문 주요 변동내역

(단위: 억원, %)

구 분	2024년 (a)	2025년 (b)	증감률 ((b-a)/a)
합 계	320,668	351,390	9.6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3,300	5,000	51.5
반도체 설비투자지원 프로그램	—	2,500	순증
반도체생태계펀드	—	300	순증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1,000	1,000	—

 입법 및 선거관리 부문

광복 80주년·국회의사당 건립 50주년 기념 행사를 실시하고 친환경 국회 조성을 추진하며, 안정적인 선거환경 조성에 기여한다.  
☞ (2024년) 1조 6,430억원→(2025년) 1조 1,666억원 (29.0% 감소)

입법 부문의 경우 광복 80주년 및 국회의사당 건립 50주년을 맞아 기념행사 개최 및 기념공간을 조성을 추진한다. 그리고 친환경 국회 운영을 위해 다화용기 사용 환경 구축, 탄소중립형 국회 조성을 위한 국회 어린이집 대상 친환경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구축 시범사업 등을 시행한다.

선거관리 부문의 경우 '26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시행에 앞서 선거 종합관리지침 개정 등 체계적인 선거 준비를 위한 사전 작업을 실시한다. 또한 공공요금, 공무원 처우개선 등 필수 행정경비소요를 증액 반영하였다.

[표 12-4] 입법 및 선거관리 부문 주요 변동내역

(단위: 억원, %)

구 분	2024년 (a)	2025년 (b)	증감률 ((b-a)/a)
합 계	16,430	11,666	△29.0
광복80주년 및 국회의사당 건립 50주년 기념 사업	—	19	순증
탄소중립형 국회어린이집 구축	—	41	순증
전국동시지방선거관리	—	0.5	순증
중앙위원회 청사 민원동 신축	—	0.1	순증

## 정부자원관리 부문

국정과제인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에 투자를 확대하여 행정시스템의 안정성을 강화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편익을 증진한다.

☞ (2024년) 1조 833억원→(2025년) 1조 1,165억원 (3.1% 증가)

대국민 서비스 향상 및 행정 효율화를 위해 각 정부기관이 특화된 데이터를 활용하여 AI 서비스를 신속히 구현·운영할 수 있도록 정부부문에 초거대 AI를 도입하는 공통기반을 마련(신규, 99억원)한다.

공공·행정기관 등에서 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를 다른 기관에서도 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이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민원사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에 투자를 확대(17→24억원)한다. 또한, 실직·출산 등 나의 상황을 시스템이 자동 인식하여, 스스로 찾지 않더라도 이용 가능한 공공서비스를 알아서 추천하는 혜택알리미 서비스 구축도 지속 추진(34→53억원)한다.

마지막으로, 행정전산망 개선 대책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노후장비 통합구축(1,436→1,733억원)’, ‘범정부 신규장비 통합구축(747→831억원)’ 등 인프라 투자도 확대하여 행정시스템의 안정성을 강화한다.

[표 12-5] 정부자원관리 부문 주요 변동내역

(단위: 억원, %)

구 분	2024년 (b)	2025년 (b)	증감률 ((b-a)/a)
합 계	10,833	11,165	3.1
범정부 인공지능 공통기반 구현	-	54	순증
행정정보공동이용(구비서류 제로화)	17	24	41.2
지능형 서비스 확대 및 운영(혜택 알리미)	34	53	55.9
중앙행정기관 등 노후장비 통합구축	1,518	1,733	14.2
범정부 신규장비 통합구축	747	831	11.3

 일반행정 부문

과거사 명예회복 및 보상 지원으로 국민 화해와 통합의 기틀을 마련하고 청사시설 유지·관리  
등로 안정적 근무환경을 조성한다.  
☞ (2024년) 3조 5,142억원→(2025년) 3조 6,527억원 (3.9% 증가)

국민통합을 위한 발전적 과거사 해결을 도모한다. 4.3 사건 희생자에 대한 피해보상  
(2,262억원→2,419억원), 제8차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45억원→179억원) 예산을  
확대하고 5.18 기록물 보존시설 확충(5억원→23억원), (가칭)민주역사기념관(5억원  
→17억원) 건립도 차질 없이 지원한다.

이외에도 광복 80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경축식 예산 대폭 확대(4→35억원)하고, 인구주택  
총조사 소요(263억원→1,158억원)를 반영하여 정부의 기본적인 운영을 지원하고,  
정부청사 등의 유지·관리 및 노후시설 보강 등을 통해 안정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한다.

제1부

2025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및 제언설명

제2부

2025년도 나라살림

제3부

2025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표 12-6] 일반행정부문 주요 변동내역

(단위: 억원, %)

구 분	2024년 (a)	2025년 (b)	증감률 ((b-a)/a)
합 계	35,142	36,527	3.9
제주4.3피해보상(보상금 등)	2,262	2,419	6.9
국경일 등 정부행사	18	49	172.8
인구주택 총조사	263	1,158	340.0
청사시설관리 및 위탁	1,352	1,391	2.9
청사시설 유지보수	593	628	5.8

# 제 3 부

## 2025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 계획

| 제1장 |  
2025년도 예산

| 제2장 |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 별첨 |  
작성자 및 편집자 명단

2025

나라살림 「예산개요」

제 1 장

# 2025년도 예산

1. 2025년도 예산총칙
2. 일반회계
3. 특별회계규모 및 개요
4. 계속비
5. 명시이월비
6. 국고채무부담행위



2025

나라살림 「예산개요」

## 01

## 2025년도 예산총칙



■ 제1조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 총액을 각각 다음과 같이 정한다.

① 일반회계	473,659,421,117,000 원
②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15,017,289,000,000 원
③ 교통시설특별회계	15,557,181,000,000 원
④ 등기특별회계	278,574,000,000 원
⑤ 교도작업특별회계	123,680,000,000 원
⑥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6,305,822,000,000 원
⑦ 환경개선특별회계	7,346,834,000,000 원
⑧ 소재부품장비경쟁력강화및공급망안정화특별회계	2,284,287,000,000 원
⑨ 우체국보험특별회계	1,105,924,000,000 원
⑩ 주한미군기지이전특별회계	572,137,000,000 원
⑪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회계	220,483,000,000 원
⑫ 국방·군사시설이전특별회계	1,500,274,000,000 원
⑬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204,936,000,000 원
⑭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특별회계	120,079,000,000 원
⑮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14,744,002,000,000 원
⑯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3,102,013,000,000 원
⑰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16,663,592,000,000 원
⑱ 양곡관리특별회계	2,792,542,000,000 원
⑲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1,267,739,000,000 원
⑳ 조달특별회계	737,698,000,000 원
㉑ 우편사업특별회계	5,378,351,000,000 원
㉒ 우체국예금특별회계	5,786,760,000,000 원

- 제2조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세입·세출예산」과 같다.
- 제3조 2025년도 계속비는 별첨「계속비」와 같다.
- 제4조 계속비 예산으로 총공사 계약이 체결되었을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사전에 협의된 한도액 범위 내에서 연부액을 초과하여 시공할 수 있다.
- 제5조 2025년도 명시이월비는 별첨「명시이월비」와 같다.
- 제6조 2025년도 국고채무부담행위는 별첨「국고채무부담행위」와 같다.
- 제7조 국가재정법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해복구 국고채무 부담행위 한도액은 1,500,000,000,000 원으로 하며, 일반회계 재해대책예비비 사용에 준하여 집행한다.
- 제8조 2025년도에 한국은행으로부터 일시차입 또는 재정증권을 발행할 수 있는 연도 중 최고한도액은 다음과 같다.

① 통합계정 (일반회계 및 18개 특별회계 적용, 우체국보험·우체국예금·양곡관리특별회계는 제외)	40,000,000,000,000 원
② 양곡관리특별회계	2,000,000,000,000 원
③ 공공자금관리기금	8,000,000,000,000 원
④ 국유재산관리기금	200,000,000,000 원

- 제9조 2025년도 중 국가의 차입금 한도액 또는 국채발행한도액(액면가 기준)은 다음과 같다. 다만, 당해연도에 발행한 국채를 차환하기 위한 국채발행액은 그 한도액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① 주택도시기금	19,000,000,000,000 원
② 공공자금관리기금	199,300,000,000,000 원
③ 외국환평형기금	1,200,000,000 달러(미합중국화폐)
④ 외국환평형기금(원화)	20,000,000,000,000 원

■ 제10조 ① 다음 경비 또는 비목에 부족이 생겼을 경우에는 국가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당해 소관내의 타 비목으로부터 이용할 수 있다.

1. 공무원의 보수, 기타직 보수, 상용임금, 일용임금
2. 공공요금 및 제세, 급식비, 임차료
3. 배상금, 국선번호금, 법정보상금, 법정포상금(민간)
4. 국공채 및 재정차관관리금 상환금과 금리변동으로 인한 이자지출(국고금관리법 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51조에 따른 조달자금에 대한 이자지출 포함) 경비
5. 국제부담금, 환율변동으로 인한 원화경비 부족액
6. 국제유가 변동으로 인한 군 및 해양경찰의 유류경비 부족액
7. 기업특별회계의 양곡관리비용, 우체국예금 지급이자, 우편운송료
8. 재해대책비(전염병 예방·대책비 포함)
9. 반환금
10. 선거 및 국민투표 관련경비
11.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기초연금급여, 장애인연금급여, 아동수당, 부모급여, 장병내일준비적금 재정지원금

② 방위사업청 소관 지휘정찰사업·기동화력사업·함정사업·항공기사업·유도무기사업은 긴급 소요, 정산결과 증액 등 사전에 예측할 수 없는 사정변경이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상호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연구개발 관련사항은 이용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11조** 정부기업예산법 제19조, 우정사업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4조 규정에 의한 수입금 마련 지출은 다음 범위내에서 할 수 있다.

회 계	수 입	지 출
우체국예금특별회계	금융영업수입	지급이자
우체국보험특별회계	부가보험료수입	보험보상금

- **제12조** 일반회계 예비비 중 1,600,000,000,000원은 재해대책비(재해복구 국고채무 부담행위 상환액 포함), 인건비(국민건강보험 부담금, 연금부담금 등 연동경비 포함), 환율변동으로 인한 원화부족액 보전 경비, 법적 의무지출의 전년도 미지급금 및 당해연도 지급 부족액,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시 고등학교 무상교육 사업 소요경비, 5세 무상교육 추진을 위한 유아교육비 보육료 지원 사업 소요경비 (268,090,000,000원), 전염병 대책 관련 경비, 국제부담금, 국제적 재난·위기국가에 대한 긴급구호, 법률개정으로 인한 정부조직개편에 소요되는 경비 이외에는 지출할 수 없다

- **제13조** 각종 선거 및 국민투표 경비에 따른 예비비 지출은 제12조 규정에 의한 예비비 용도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 **제14조** 정부기업예산법 제14조 및 제21조 단서 규정에 의한 기업특별회계의 전출금은 다음과 같다.

① 우체국예금특별회계의 우편사업특별회계 전출금	1,105,602,000,000 원
② 우체국예금특별회계의 공적자금상환기금 전출금	85,000,000,000 원
③ 조달특별회계의 일반회계 전출금	137,716,000,000 원
④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의 일반회계 전출금	102,579,000,000 원

■ **제15조** 정부기업예산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특별회계의 전입금은 다음과 같다.

① 양곡관리특별회계의 일반회계 전입금	2,271,549,000,000 원
②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의 일반회계 전입금	325,752,000,000 원
③ 우편사업특별회계의 일반회계 전입금	15,278,000,000 원
④ 우편사업특별회계의 우체국보험특별회계 전입금	506,015,000,000 원
⑤ 우편사업특별회계의 우체국예금특별회계 전입금	1,105,602,000,000 원
⑥ 우체국예금특별회계의 우체국보험특별회계 전입금	92,250,000,000 원

■ **제16조** 원자력손해배상 보상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2025년도 원자력손해배상 보상계약금액의 합계액은 3,319,934,000,000원 이내로 한다. 다만, 보상금 지급한도는 원자력사업자가 체결한 보험계약에 의한 지급 받은 보험금을 공제한 금액 이내로 한다.

■ **제17조** 각 중앙관서의 장은 재해복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각 회계별로 제10조 제1항 제8호의 재해대책비 비목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 **제18조** 민간투자사업의 토지보상비는 기획재정부장관과 사전에 협의된 한도액 범위 내에서 당해 연도 토지보상비 예산을 초과하여 집행할 수 있다.

02

일반회계  
General Accounts



2-1 세입예산 (Revenue Budget)

가. 총괄표

구 분 Classification	2024년도 본예산 FY 2024 Main Budget		2024년도 추경예산 FY 2024 Supplementary Budget	
	금 액 Amount	구성비(%) Composition	금 액 Amount	구성비(%) Composition
1. 내국세 (Internal Taxes)	321,613,600	71.5	321,613,600	71.5
2. 관세 (Customs Duties)	8,906,500	2.0	8,906,500	2.0
3. 교통·에너지·환경세 [Transportaion-Energy-Environment Tax]	15,325,800	3.4	15,325,800	3.4
4. 교육세 (Educational Tax)	6,162,500	1.4	6,162,500	1.4
5. 종합부동산세 (Gross Real Estate Tax )	4,109,800	0.9	4,109,800	0.9
6. 세외수입 (Non-Tax Revenues)	93,408,507	20.8	93,408,507	20.8
• 국채발행 (Borrowing from Bonds)	81,676,517	18.2	81,676,517	18.2
• 기타수입 (Others)	11,731,990	2.6	11,731,990	2.6
합 계 (Total)	449,526,707	100	449,526,707	100

※ 일반회계 세입 규모임.

(단위: 백만원, In million won)

2025년도 예산 FY 2025 Budget		본예산 대비 증감 Change		추경예산 대비 증감 Change	
금 액 Amount	구성비(%) Composition	금 액 Amount	증감률(%) Rate	금 액 Amount	증감률(%) Rate
338,129,200	71.4	16,515,600	5.1	16,515,600	5.1
8,409,300	1.8	△497,200	△5.6	△497,200	△5.6
15,104,800	3.2	△221,000	△1.4	△221,000	△1.4
6,040,200	1.3	△122,300	△2.0	△122,300	△2.0
4,121,500	0.9	11,700	0.3	11,700	0.3
101,854,421	21.5	8,445,914	9.0	8,445,914	9.0
82,765,297	17.5	1,088,780	1.3	1,088,780	1.3
19,089,124	4.0	7,357,134	62.7	7,357,134	62.7
473,659,421	100	24,132,714	5.4	24,132,714	5.4

구 분 Classification	2024년도 본예산 FY 2024 Main Budget
1. 국세 (Tax Total)	356,118,200
가. 내국세 (Internal Taxes)	321,613,600
나. 관세 (Customs Duties)	8,906,500
다. 교통·에너지·환경세 (Transportation-Energy-Environment Tax)	15,325,800
라. 교육세 (Educational Tax)	6,162,500
마. 종합부동산세 (Gross Real Estate Tax)	4,109,800
2. 세외수입 (Non-Tax Revenues)	93,408,507
가. 재산수입 (Property Income)	2,882,733
나. 경상이전수입 (Current Transfer)	6,913,277
다. 재화 및 용역판매수입 (Sales of Goods & Services)	1,041,837
라. 수입대체경비수입 (Receipts Tied to Expenses)	227,031
마. 관유물매각대 (Sales Proceeds of Government Owned Properties)	129,488
바. 융자 및 전대차관원금회수 (Treasury Loan & Sub-Lease Loan)	373
사. 정부내부수입및기타 (Trust from Other & Others from Other A/C)	82,213,768
(국채발행) (Government Bonds Floatation)	81,676,517
합 계 (Total)	449,526,707

(단위: 백만원, In million won)

2024년도 추경예산 FY 2024 Supplementary Budget	2025도 예산 FY 2025 Budget	본예산 대비 증감 Change		추경예산 대비 증감 Change	
		금 액 Amount	증감율(%) Rate	금 액 Amount	증감율(%) Rate
356,118,200	371,805,000	15,686,800	4.4	15,686,800	4.4
321,613,600	338,129,200	16,515,600	5.1	16,515,600	5.1
8,906,500	8,409,300	△497,200	△5.6	△497,200	△5.6
15,325,800	15,104,800	△221,000	△1.4	△221,000	△1.4
6,162,500	6,040,200	△122,300	△2.0	△122,300	△2.0
4,109,800	4,121,500	11,700	0.3	11,700	0.3
93,408,507	101,854,421	8,445,914	9.0	8,445,914	9.0
2,882,733	5,554,167	2,671,434	92.7	2,671,434	92.7
6,913,277	8,062,410	1,149,133	16.6	1,149,133	16.6
1,041,837	1,054,294	12,457	1.2	12,457	1.2
227,031	213,062	△13,969	△6.2	△13,969	△6.2
129,488	3,818,802	3,689,314	2,849.2	3,689,314	2,849.2
373	424	51	13.7	51	13.7
82,213,768	83,142,762	928,994	1.1	928,994	1.1
81,676,517	82,765,297	1,088,780	1.3	1,088,780	1.3
449,526,707	473,659,421	24,132,714	5.4	24,132,714	5.4

제1부

2025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및 제안설명

제2부

2025년도 나라살림

제3부

2025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 나. 국세수입 내역 (Tax Revenues)

구 분 Classification	2024년도 본예산 FY 2024 Main Budget
가. 내국세 (Internal Taxes)	321,613,600
(1) 소득세 (Income Tax)	125,760,500
(가) 신고분 (Not Withheld Income Tax)	45,471,700
(나) 원천분 (Withheld Income Tax)	80,288,800
(2) 법인세 (Corporation Tax)	77,664,900
(3) 상속세 (Inheritance Tax)	14,656,600
(가) 상속세 (Inheritance Tax)	8,594,700
(나) 증여세 (Gift Tax)	6,061,900
(4) 부가가치세 (Value Added Tax)	81,406,800
(5) 개별소비세 (Special Consumption Tax)	10,194,500
(6) 증권거래세 (Security Transaction Tax)	5,382,900
(7) 인지세 (Stamp Tax)	850,500
(8) 기타내국세 (Other Internal Tax)	5,696,900
나. 관세 (Customs Duties)	8,906,500
다. 교통·에너지·환경세 (Transportation-Energy-Environment Tax)	15,325,800
라. 교육세 (Educational Tax)	6,162,500
마. 종합부동산세 (Gross Real Estate Tax)	4,109,800
합 계 (Total)	356,118,200

(단위: 백만원, In million won)

2025년도 예산 FY 2025 Budget	증 감 Change	
	금 액 Amount	증감률(%) Rate
338,129,200	16,515,600	5.1
126,819,207	1,058,707	0.8
41,469,831	△4,001,869	△8.8
85,349,376	5,060,576	6.3
88,254,358	10,589,458	13.6
14,505,872	△150,728	△1.0
8,463,696	△131,004	△1.5
6,042,176	△19,724	△0.3
87,638,775	6,231,975	7.7
9,666,300	△528,200	△5.2
3,845,400	△1,537,500	△28.6
883,646	33,146	3.9
6,515,642	818,742	14.4
8,409,300	△497,200	△5.6
15,104,800	△221,000	△1.4
6,040,200	△122,300	△2.0
4,121,500	11,700	0.3
371,805,000	15,686,800	4.4

제 1 부

2025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및 제안설명

제 2 부

2025년도 나라살림

제 3 부

2025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 다. 소관별 세입예산 (Revenues Budget by Agencies)

소 관 Agency	2024년도 본예산 FY 2024 Main Budget			
	일반세입 General Rev.	국 채 Government Bonds	차관수입 Foreign Borrowing	합 계 Total
01.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Office of the President & Office of National Security)	297	—	—	297
02. 대통령경호처 (Presidential Security Service)	532	—	—	532
03. 국회(National Assembly)	4,345	—	—	4,345
04. 대법원 (Supreme Court)	610,500	—	—	610,500
05. 헌법재판소(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641	—	—	641
06. 중앙선거관리위원회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10,017	—	—	10,017
07.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The National Unification Advisory Council)	5	—	—	5
08. 감사원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745	—	—	745
09. 국가정보원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7,176	—	—	7,176
10.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Office for Government Policy Coordination & Prime Minister's Secretariat)	23	—	—	23
11. 기획재정부 (Ministry of Economy and Finance)	359,133,715	81,676,517	—	440,810,232
① 내국세 (Internal Taxes)	321,613,600	—	—	321,613,600
② 관세 (Customs Duties)	8,906,500	—	—	8,906,500
③ 교통·에너지·환경세 (Transportation-Energy-Environment Tax)	15,325,800	—	—	15,325,800
④ 교육세 (Educational Tax)	6,162,500	—	—	6,162,500
⑤ 종합부동산세 (Gross Real Estate Tax)	4,109,800	—	—	4,109,800
⑥ 세외수입 (Non-Tax Revenues)	3,015,515	81,676,517	—	84,692,032
12. 교육부 (Ministry of Education)	342,903	—	—	342,903
1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Ministry of Science and ICT)	376,780	—	—	376,780
14. 외교부 (Ministry of Foreign Affairs)	277,323	—	—	277,323
15. 통일부 (Ministry of Unification)	1,448	—	—	1,448
16. 법무부 (Ministry of Justice)	1,324,930	—	—	1,324,930
17. 국방부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241,897	—	—	241,897
18. 행정안전부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295,470	—	—	295,470
19. 국가보훈부 (Ministry of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9,851	—	—	9,851
20. 문화체육관광부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76,857	—	—	76,857
21. 농림축산식품부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21,216	—	—	21,216
22. 산업통상자원부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157,872	—	—	157,872
23. 보건복지부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943,949	—	—	943,949

2025년도 예산 FY 2025 Budget				증 감 Change			
일반세입 General Rev.	국 채 Government Bonds	차관수입 Foreign Borrowing	합 계 Total	일반세입 General Rev.	국 채 Government Bonds	차관수입 Foreign Borrowing	합 계 Total
297	—	—	297	—	—	—	—
547	—	—	547	15	—	—	15
4,518	—	—	4,518	173	—	—	173
502,770	—	—	502,770	△107,730	—	—	△107,730
244	—	—	244	△397	—	—	△397
1,299	—	—	1,299	△8,718	—	—	△8,718
13	—	—	13	8	—	—	8
770	—	—	770	25	—	—	25
9,093	—	—	9,093	1,917	—	—	1,917
279	—	—	279	256	—	—	256
381,049,480	82,765,297	—	463,814,777	21,915,764	1,088,780	—	23,004,544
338,129,200	—	—	338,129,200	16,515,600	—	—	16,515,600
8,409,300	—	—	8,409,300	△497,200	—	—	△497,200
15,104,800	—	—	15,104,800	△221,000	—	—	△221,000
6,040,200	—	—	6,040,200	△122,300	—	—	△122,300
4,121,500	—	—	4,121,500	11,700	—	—	11,700
9,244,480	82,765,297	—	92,009,777	6,228,964	1,088,780	—	7,317,744
371,737	—	—	371,737	28,834	—	—	28,834
392,267	—	—	392,267	15,487	—	—	15,487
273,679	—	—	273,679	△3,644	—	—	△3,644
1,507	—	—	1,507	59	—	—	59
1,543,683	—	—	1,543,683	218,753	—	—	218,753
329,476	—	—	329,476	87,579	—	—	87,579
143,392	—	—	143,392	△152,078	—	—	△152,078
9,861	—	—	9,861	10	—	—	10
107,390	—	—	107,390	30,533	—	—	30,533
21,333	—	—	21,333	117	—	—	117
188,767	—	—	188,767	30,895	—	—	30,895
1,279,754	—	—	1,279,754	335,805	—	—	335,805

소 관 Agency	2024년도 본예산 FY 2024 Main Budget			
	일반세입 General Rev.	국 채 Government Bonds	차관수입 Foreign Borrowing	합 계 Total
24. 환경부 (Ministry of Environment)	13,852	—	—	13,852
25. 고용노동부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323,517	—	—	323,517
26. 여성가족부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36,815	—	—	36,815
27. 국토교통부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189,914	—	—	189,914
28. 해양수산부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53,279	—	—	53,279
29. 중소벤처기업부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195,171	—	—	195,171
30. 인사혁신처 (Ministry of Personnel Management)	42,016	—	—	42,016
32. 식품의약품안전처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37,564	—	—	37,564
34. 국가인권위원회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27	—	—	27
36. 방송통신위원회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30,844	—	—	30,844
37. 공정거래위원회 (Korea Fair Trade Commission)	450,162	—	—	450,162
38. 금융위원회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89,629	—	—	89,629
39. 국민권익위원회(Anti-Corruption & Civil Rights Commission)	892	—	—	892
40. 원자력안전위원회(Nuclear Safety and Security Commission)	1,840	—	—	1,840
41. 개인정보보호위원회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Commission)	40,834	—	—	40,834
42. 국세청 (National Tax Service)	364,074	—	—	364,074
43. 관세청 (Korea Customs Service)	120,072	—	—	120,072
45. 통계청 (Statistics Korea)	3,610	—	—	3,610
47. 재외동포청 (Overseas Korean Agency)	9	—	—	9
48. 병무청 (Military Manpower Administration)	336	—	—	336
49. 방위사업청 (Defense Acquisition Program Administration)	345,418	—	—	345,418
50. 경찰청 (National Police Agency)	1,279,380	—	—	1,279,380
51. 소방청 (National Fire Agency)	4,349	—	—	4,349
52. 국가유산청 (Korea Heritage Service)	52,515	—	—	52,515
53. 농촌진흥청 (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	11,722	—	—	11,722
54. 산림청 (Korea Forest Service)	97,004	—	—	97,004
56. 질병관리청 (Korea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gency)	203,304	—	—	203,304
57. 기상청 (Korea Meteorological Administration)	8,505	—	—	8,505
59. 새만금개발청 (Saemangeum Development and Investment Agency)	8,828	—	—	8,828
60. 해양경찰청 (Korea Coast Guard)	6,216	—	—	6,216
합 계 (Total)	367,850,190	81,676,517	—	449,526,707

(단위: 백만원, In million won)

2025년도 예산 FY 2025 Budget				증 감 Change			
일반세입 General Rev.	국 채 Government Bonds	차관수입 Foreign Borrowing	합 계 Total	일반세입 General Rev.	국 채 Government Bonds	차관수입 Foreign Borrowing	합 계 Total
65,228	—	—	65,228	51,376	—	—	51,376
325,397	—	—	325,397	1,880	—	—	1,880
32,942	—	—	32,942	△3,873	—	—	△3,873
200,971	—	—	200,971	11,057	—	—	11,057
423,100	—	—	423,100	369,821	—	—	369,821
249,821	—	—	249,821	54,650	—	—	54,650
62,005	—	—	62,005	19,989	—	—	19,989
42,671	—	—	42,671	5,107	—	—	5,107
27	—	—	27	—	—	—	—
30,951	—	—	30,951	107	—	—	107
539,426	—	—	539,426	89,264	—	—	89,264
101,107	—	—	101,107	11,478	—	—	11,478
912	—	—	912	20	—	—	20
2,167	—	—	2,167	327	—	—	327
41,010	—	—	41,010	176	—	—	176
296,420	—	—	296,420	△67,654	—	—	△67,654
100,291	—	—	100,291	△19,781	—	—	△19,781
3,579	—	—	3,579	△31	—	—	△31
1,026	—	—	1,026	1,017	—	—	1,017
256	—	—	256	△80	—	—	△80
424,172	—	—	424,172	78,754	—	—	78,754
1,465,264	—	—	1,465,264	185,884	—	—	185,884
4,563	—	—	4,563	214	—	—	214
54,534	—	—	54,534	2,019	—	—	2,019
12,023	—	—	12,023	301	—	—	301
98,504	—	—	98,504	1,500	—	—	1,500
58,609	—	—	58,609	△144,695	—	—	△144,695
8,828	—	—	8,828	323	—	—	323
9,136	—	—	9,136	308	—	—	308
7,028	—	—	7,028	812	—	—	812
390,894,124	82,765,297	—	473,659,421	23,043,933	1,088,780	—	24,132,713

제1부

2025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및 제안설명

제2부

2025년도 나라살림

제3부

2025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 라. 성질별 세외수입 (Non-Tax Revenues by Objects)

구 분 Classification	2024년도 예산 FY 2024 Budget
11. 재산수입 (Property Income)	2,882,733
51. 관유물대여료 (Rent From Land & Buildings)	84,661
52. 정부출자수입 (Dividends & Profits)	982,344
53. 전대차관이자수입 (Interest from Tied Loans)	1
54. 기타이자수입 및 재산수입 (Others)	1,815,727
12. 경상이전수입 (Current Transfer)	6,913,277
56. 벌금, 몰수금 및 과태료 (Fine & Confiscation)	3,317,855
57. 변상금 및 위약금 (Indemnities & Penalties)	210,427
58. 가산금 (Penalties to Delinquency)	282,210
59. 기타경상이전수입 (Others)	3,102,785
13. 재화 및 용역판매수입 (Sales of Goods & Services)	1,041,837
62. 병원수입 (Hospital Income)	17,761
64. 입장료수입 (Admission Fee)	4,934
65. 면허료 및 수수료 (License & Commission Fee)	926,306
66. 입학금 및 수업료 (School Entrance & Tuition Fee)	1,099
67. 항공항만 및 용수수입 (Revenues from airport, Harbors & Water)	7,986
68. 실습수입 (Revenues from School Experiments)	3,308
69. 잡수입 (Other)	80,443

(단위: 백만원, In million won)

2025년도 예산 FY 2025 Budget	증 감 Change	
	금 액 Amount	증감율(%) Rate
5,554,167	2,671,434	92.7
93,408	8,747	10.3
1,045,447	63,103	6.4
1	—	—
4,415,311	2,599,584	143.2
8,062,410	1,149,133	16.6
3,818,232	500,377	15.1
126,872	△83,555	△39.7
207,218	△74,992	△26.6
3,910,088	807,303	26.0
1,054,294	12,457	1.2
17,498	△263	△1.5
5,613	679	13.8
907,438	△18,868	△2.0
1,132	33	3.0
8,390	404	5.1
3,312	4	0.1
110,911	30,468	37.9

제 1 부

2025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및 제안설명

제 2 부

2025년도 나라살림

제 3 부

2025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구 분 Classification	2024년도 예산 FY 2024 Budget
14. 수입대체경비수입 (Receipts Tied to Expenses)	227,031
49. 책임운영기관사업수입 (Executive Agency Management)	—
51. 관유물대여료 (Sales of Gov't Properties)	2,423
64. 입장료수입 (Admission Fee)	11,350
65. 면허료 및 수수료 (License & Commission Fee)	183,732
66. 입학금 및 수업료 (School Entrance & Tuition Fee)	428
69. 잡수입 (Other)	29,098
15. 관유물매각대 (Sales Proceeds of Government Owned Properties)	129,488
71. 고정자산매각대 (Sales of Capital Assets)	9,542
72. 토지 및 무형자산매각대 (Sales of Land & Intangible Assets)	66,272
73. 재고자산매각대 및 유동자산 (Sales of Inventory & Current Assets)	53,674
20. 융자 및 전대차관원금회수 (Treasury Loan & Sub-Lease Loan)	373
75. 융자원금회수 (Collection of Principals A/C's)	373
77. 전대차관원금회수 (Collection of Counterpart Sub-Loan)	—
31. 차입금및여유자금회수 (Borrowing & Excess Fund)	—
84. 유가증권매각대 (Sales of State-holding Stocks)	—
40. 정부내부수입 및 기타 (Trust from Other & Others from Other A/C)	82,213,768
91. 전입금 (Transfer from Gen. A/C)	537,251
94. 예수금 (Collection of Trust Fund)	81,676,517
합 계 (Total)	93,408,507

2025년도 예산 FY 2025 Budget	증 감 Change	
	금 액 Amount	증감율(%) Rate
213,062	△ 13,969	△ 6.2
2,701	278	11.5
12,708	1,358	12.0
171,054	△ 12,678	△ 6.9
428	—	—
24,997	△ 4,101	△ 14.1
3,818,802	3,689,314	2,849.2
6,466	△ 3,076	△ 32.2
67,864	1,592	2.4
3,744,472	3,690,798	6,876.3
424	51	13.7
368	△ 5	△ 1.3
56	56	순증
8,500	8,500	순증
8,500	8,500	순증
83,142,762	928,994	1.1
377,465	△ 159,786	△ 29.7
82,765,297	1,088,780	1.3
101,854,421	8,445,914	9.0

제 1 부

2025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및 제안설명

제 2 부

2025년도 나라살림

제 3 부

2025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2-2 세출예산 (Expenditure Budget)

가. 총괄표

구 분 Classification	2024년도 본예산 FY 2024 Main Budget	
	금 액 Amount	구성비(%) Composition
1. 일반 · 지방행정 (General & Local Administration)	101,719,441	22.6
2. 공공질서 및 안전 (Public Order and Safety)	22,426,772	5.0
3. 통일 · 외교 (National Unification & Foreign Affairs)	4,493,414	1.0
4. 국방 (National Defense)	59,836,311	13.3
5. 교육 (Education)	95,739,478	21.3
6. 문화 및 관광 (Culture & Tourism)	4,608,344	1.0
7. 환경 (Environmental Protection)	5,822,604	1.3
8. 사회복지 (Social Welfare)	78,706,031	17.5
9. 보건 (Health)	15,016,160	3.3
10. 농림수산 (Agriculture, Forestry, Maritime Affairs & Fisheries)	9,332,999	2.1
11. 산업 · 중소기업 및 에너지 (Industry & Small and Medium Enterprise & Energy)	11,777,607	2.6
12. 교통 및 물류 (Traffic and Physical Distribution )	18,110,013	4.0
13. 통신 (Communication)	902,391	0.2
14. 국토 및 지역개발 (Land & Regional Development)	9,087,625	2.0
15. 과학기술 (Science & Technology)	7,747,517	1.7
16. 예비비 (Reserve Fund)	4,200,000	0.9
합 계 (Total)	449,526,707	100

(단위: 백만원, In million won)

2024년도 추경예산 FY 2024 Supplementary Budget		2025년도 예산 FY 2025 Budget		본예산 대비 증감 Change		추경예산 대비 증감 Change	
금 액 Amount	구성비(%) Composition	금 액 Amount	구성비(%) Composition	금 액 Amount	증감률(%) Rate	금 액 Amount	증감률(%) Rate
101,719,441	22.6	112,786,758	23.8	11,067,317	10.9	11,067,317	10.9
22,426,772	5.0	22,969,245	4.8	542,473	2.4	542,473	2.4
4,493,414	1.0	4,693,510	1.0	200,096	4.5	200,096	4.5
59,836,311	13.3	61,720,102	13.0	1,883,791	3.1	1,883,791	3.1
95,739,478	21.3	99,381,483	21.0	3,642,005	3.8	3,642,005	3.8
4,608,344	1.0	4,554,631	1.0	△53,713	△1.2	△53,713	△1.2
5,822,604	1.3	6,124,201	1.3	301,597	5.2	301,597	5.2
78,706,031	17.5	81,831,646	17.3	3,125,615	4.0	3,125,615	4.0
15,016,160	3.3	15,973,595	3.4	957,435	6.4	957,435	6.4
9,332,999	2.1	10,783,042	2.3	1,450,043	15.5	1,450,043	15.5
11,777,607	2.6	12,321,526	2.6	543,919	4.6	543,919	4.6
18,110,013	4.0	19,187,205	4.1	1,077,192	5.9	1,077,192	5.9
902,391	0.2	1,142,269	0.2	239,878	26.6	239,878	26.6
9,087,625	2.0	8,920,793	1.9	△166,832	△1.8	△166,832	△1.8
7,747,517	1.7	8,869,415	1.9	1,121,898	14.5	1,121,898	14.5
4,200,000	0.9	2,400,000	0.5	△1,800,000	△42.9	△1,800,000	△42.9
449,526,707	100	473,659,421	100	24,132,714	5.4	24,132,714	5.4

## 나. 소관별 세출예산 (Expenditure Budget by Agencies)

구 분 Classification	2024년도 예산 FY 2024 Budget
01.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Office of the President & Office of National Security)	103,102
02. 대통령경호처 (Presidential Security Service)	134,096
03. 국회 (National Assembly)	767,653
04. 대법원 (Supreme Court)	1,864,618
05. 헌법재판소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56,766
06. 중앙선거관리위원회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857,227
07.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The National Unification Advisory Council)	34,974
08. 감사원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146,167
09. 국가정보원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892,100
10.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Office for Government Policy Coordination & Prime Minister's Secretariat)	648,919
11. 기획재정부 (Ministry of Economy and Finance)	32,031,687
• 예비비 (Contingency)	4,200,000
• 일반경비 (General Adm. )	27,831,687
12. 교육부 (Ministry of Education)	95,692,015
1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Ministry of Science and ICT)	8,195,506
14. 외교부 (Ministry of Foreign Affairs)	4,029,753
15. 통일부 (Ministry of Unification)	322,027
16. 법무부 (Ministry of Justice)	4,293,578
17. 국방부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41,771,198
18. 행정안전부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69,758,818
19. 국가보훈부 (Ministry of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6,256,190
20. 문화체육관광부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3,347,258
21. 농림축산식품부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5,804,217
22. 산업통상자원부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5,545,535
23. 보건복지부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67,905,436
24. 환경부 (Ministry of Environment)	7,874,785
25. 고용노동부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5,552,020
26. 여성가족부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687,239
27. 국토교통부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22,131,164

(단위: 백만원, In million won)

2025년도 예산 FY 2025 Budget	증 감 Change	
	금 액 Amount	증감률(%) Rate
95,628	△7,474	△7.2
139,048	4,952	3.7
776,135	8,482	1.1
1,977,639	113,021	6.1
58,424	1,658	2.9
363,407	△493,820	△57.6
35,764	790	2.3
141,656	△4,511	△3.1
929,000	36,900	4.1
659,106	10,187	1.6
40,931,020	8,899,333	27.8
2,400,000	△1,800,000	△42.9
38,531,020	10,699,333	38.4
99,322,129	3,630,114	3.8
8,593,081	397,575	4.9
4,221,776	192,023	4.8
328,907	6,880	2.1
4,340,427	46,849	1.1
43,400,743	1,629,545	3.9
69,720,872	△37,946	△0.1
6,309,226	53,036	0.8
3,293,191	△54,067	△1.6
7,259,351	1,455,134	25.1
6,084,286	538,751	9.7
71,004,819	3,099,383	4.6
8,187,343	312,558	4.0
5,718,293	166,273	3.0
714,248	27,009	3.9
23,421,254	1,290,090	5.8

제1부

2025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및 제안설명

제2부

2025년도 나라살림

제3부

2025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구 분 Classification	2024년도 예산 FY 2024 Budget
28. 해양수산부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3,447,126
29. 중소벤처기업부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6,193,643
30. 인사혁신처 (Ministry of Personnel Management)	5,805,296
31. 법제처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45,418
32. 식품의약품안전처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714,374
33.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Corruption Investigation Office for High-ranking Officials)	20,680
34. 국가인권위원회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41,303
35. 국가교육위원회 (National Education Commission)	10,279
36. 방송통신위원회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49,118
37. 공정거래위원회 (Korea Fair Trade Commission)	158,429
38. 금융위원회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4,003,018
39. 국민권익위원회 (Anti-Corruption & Civil Rights Commission)	111,592
40. 원자력안전위원회 (Nuclear Safety and Security Commission)	136,045
41. 개인정보보호위원회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Commission)	65,377
42. 국세청 (National Tax Service)	1,951,242
43. 관세청 (Korea Customs Service)	662,375
45. 통계청 (Statistics Korea)	425,267
46. 우주항공청 (Korea AeroSpace Administration)	—
47. 재외동포청 (Overseas Korean Agency)	106,660
48. 병무청 (Military Manpower Administration)	411,873
49. 방위사업청 (Defense Acquisition Program Administration)	17,653,240
50. 경찰청 (National Police Agency)	12,949,393
51. 소방청 (National Fire Agency)	340,389
52. 국가유산청 (Korea Heritage Service)	1,206,701
53. 농촌진흥청 (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	1,004,622
54. 산림청 (Korea Forest Service)	2,144,531
56. 질병관리청 (Korea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gency)	625,637
57. 기상청 (Korea Meteorological Administration)	446,242
58.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National Agency for Administrative City Construction)	124,796
59. 새만금개발청 (Saemangeum Development and Investment Agency)	47,702
60. 해양경찰청 (Korea Coast Guard)	1,896,654
61.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The May 18 Democratization Movement Truth Commission)	6,888
62.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Truth and Reconciliation Commission)	16,749
합 계 (Total)	449,526,707

(단위: 백만원, in million won)

2025년도 예산 FY 2025 Budget	증 감 Change	
	금 액 Amount	증감률(%) Rate
3,420,330	△26,796	△0.8
6,171,553	△22,090	△0.4
6,408,567	603,271	10.4
45,733	315	0.7
745,075	30,701	4.3
25,268	4,588	22.2
42,414	1,111	2.7
10,342	63	0.6
48,738	△380	△0.8
163,370	4,941	3.1
4,183,766	180,748	4.5
105,090	△6,502	△5.8
148,765	12,720	9.3
64,548	△829	△1.3
2,004,000	52,758	2.7
658,250	△4,125	△0.6
562,765	137,498	32.3
961,414	961,414	순증
107,063	403	0.4
473,196	61,323	14.9
17,846,163	192,923	1.1
13,488,033	538,640	4.2
331,129	△9,260	△2.7
1,214,364	7,663	0.6
940,866	△63,756	△6.3
2,188,082	43,551	2.0
471,706	△153,931	△24.6
468,435	22,193	5.0
211,837	87,041	69.7
112,759	65,057	136.4
1,992,265	95,611	5.0
—	△6,888	순감
16,763	14	0.1
473,659,421	24,132,714	5.4

제1부

2025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및 제안설명

제2부

2025년도 나라살림

제3부

2025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 다. 기능별 세출예산 (Expenditure Budget by Function)

기 능 Function	2024년도 예산 FY 2024 Budget	
	금 액 Amount	구 성 비(%) Composition
1. 일반 · 지방행정 (General & Local Administration)	101,719,441	22.6
1) 입법 및 선거관리 (Legislation & Election Administration)	1,624,880	0.4
2) 국정운영 (National Administration)	652,135	0.1
3) 지방행정 · 재정지원 (Support for Local Administration & Finance)	66,990,427	14.9
4) 재정 · 금융 (Budget & Finance)	28,241,310	6.3
5) 정부자원관리 (Management of Government Resources)	1,028,357	0.2
6) 일반행정 (General Administration)	3,182,332	0.7
2. 공공질서 및 안전 (Public Order and Safety)	22,426,772	5.0
1) 법원 및 헌재 (Law Court & Constitutional Court)	1,921,384	0.4
2) 법무 및 검찰 (Justice & Prosecution)	4,314,258	1.0
3) 경찰 (Police)	13,015,719	2.9
4) 해경 (Maritime Police)	1,880,782	0.4
5) 재난관리 (Disaster Management)	1,294,629	0.3
3. 통일 · 외교 (National Unification & Foreign Affairs)	4,493,414	1.0
1) 통일 (National Unification)	357,001	0.1
2) 외교 · 통상 (Foreign Affairs & Trade)	4,136,413	0.9
4. 국방 (National Defense)	59,836,311	13.3
1) 병력운영 (Military Personnel Management)	24,329,179	5.4
2) 전력유지 (Maintenance of Military Force)	17,442,019	3.9
3) 방위력개선 (National Defense Improvement)	17,653,240	3.9
4) 병무행정 (Military Affairs Administration)	411,873	0.1
5. 교육 (Education)	95,739,478	21.3
1) 유아 및 초중등교육 (Pre/Primary/Secondary School Education)	78,091,414	17.4
2) 고등교육 (College & University Education)	16,955,456	3.8
3) 평생 · 직업교육 (Lifelong & Vocational Education)	532,268	0.1
4) 교육일반 (General Education)	160,340	0.0

(단위: 백만원, In million won)

2025년도 예산 FY 2025 Budget		증 감 Change	
금 액 Amount	구성비(%) Composition	금 액 Amount	증감률(%) Rate
112,786,758	23.8	11,067,317	10.9
1,139,542	0.2	△485,338	△29.9
662,302	0.1	10,167	1.6
67,147,094	14.2	156,667	0.2
39,413,712	8.3	11,172,402	39.6
1,075,496	0.2	47,139	4.6
3,348,613	0.7	166,281	5.2
22,969,245	4.8	542,473	2.4
2,036,063	0.4	114,679	6.0
4,365,695	0.9	51,437	1.2
13,556,285	2.9	540,566	4.2
1,965,216	0.4	84,434	4.5
1,045,986	0.2	△248,643	△19.2
4,693,510	1.0	200,096	4.5
364,671	0.1	7,670	2.1
4,328,839	0.9	192,426	4.7
61,720,102	13.0	1,883,791	3.1
25,351,601	5.4	1,022,422	4.2
18,049,142	3.8	607,123	3.5
17,846,163	3.8	192,923	1.1
473,196	0.1	61,323	14.9
99,381,483	21.0	3,642,005	3.8
81,010,325	17.1	2,918,911	3.7
17,686,706	3.7	731,250	4.3
520,680	0.1	△11,588	△2.2
163,772	0.0	3,432	2.1

제1부

2025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및 제안설명

제2부

2025년도 나라살림

제3부

2025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기 능 Function	2024년도 예산 FY 2024 Budget	
	금 액 Amount	구성비(%) Composition
6. 문화 및 관광 (Culture & Tourism)	4,608,344	1.0
1) 문화예술 (Culture & Arts)	3,081,042	0.7
2) 관광 (Tourism)	7,201	0.0
3) 체육 (Sports)	6,059	0.0
4) 문화재 (Cultural Properties)	1,206,701	0.3
5) 문화 및 관광일반 (General Culture & Tourism)	307,341	0.1
7. 환경 (Environmental Protection)	5,822,604	1.3
1) 해양환경 (Marine Environment)	156,875	0.0
2) 환경일반 (General Environment)	5,665,729	1.3
8. 사회복지 (Social Welfare)	78,706,031	17.5
1) 기초생활보장 (Basic Livelihood Guarantee)	20,822,507	4.6
2) 취약계층지원 (Support for the Underprivileged)	5,076,849	1.1
3) 공적연금 (Public Pension)	5,632,890	1.3
4) 보훈 (Patriots & Veterans Affairs)	6,256,190	1.4
5) 주택 (Housing)	3,497,906	0.8
6) 사회복지일반 (General Social Welfare)	568,108	0.1
7) 아동·보육 (Children and Child Care Centers)	5,777,030	1.3
8) 노인 (Senior)	24,835,292	5.5
9) 여성·가족·청소년 (Women, Family, and Youth)	687,239	0.2
10) 고용 (Employment)	4,763,732	1.1
11) 노동 (Labor)	146,812	0.0
12) 고용노동일반 (Employment and Labor (General))	641,476	0.1
9. 보건 (Health)	15,016,160	3.3
1) 보건의료 (Healthcare)	2,496,973	0.6
2) 건강보험 (Health Insurance)	11,804,813	2.6
3) 식품의약품안전 (Food & Drug Safety)	714,374	0.2
10. 농림수산 (Agriculture, Forestry, Maritime Affairs & Fisheries)	9,332,999	2.1
1) 농업·농촌 (Agriculture & Farming Villages)	6,808,839	1.5
2) 임업·산촌 (Forestry & Mountain Villages)	2,144,531	0.5
3) 수산·어촌 (Fisheries & Fishing Villages)	379,629	0.1

(단위: 백만원, In million won)

2025년도 예산 FY 2025 Budget		증 감 Change	
금 액 Amount	구성비(%) Composition	금 액 Amount	증감률(%) Rate
4,554,631	1.0	△53,713	△1.2
3,006,629	0.6	△74,413	△2.4
6,210	0.0	△991	△13.8
6,148	0.0	89	1.5
1,214,364	0.3	7,663	0.6
321,280	0.1	13,939	4.5
6,124,201	1.3	301,597	5.2
141,518	0.0	△15,357	△9.8
5,982,683	1.3	316,954	5.6
81,831,646	17.3	3,125,615	4.0
21,861,616	4.6	1,039,109	5.0
5,446,608	1.1	369,759	7.3
6,236,892	1.3	604,002	10.7
6,309,226	1.3	53,036	0.8
3,467,064	0.7	△30,842	△0.9
586,502	0.1	18,394	3.2
4,851,839	1.0	△925,191	△16.0
26,639,358	5.6	1,804,066	7.3
714,248	0.2	27,009	3.9
4,853,708	1.0	89,976	1.9
192,996	0.0	46,184	31.5
671,589	0.1	30,113	4.7
15,973,595	3.4	957,435	6.4
3,088,951	0.7	591,978	23.7
12,139,569	2.6	334,756	2.8
745,075	0.2	30,701	4.3
10,783,042	2.3	1,450,043	15.5
8,200,217	1.7	1,391,378	20.4
2,188,082	0.5	43,551	2.0
394,743	0.1	15,114	4.0

제1부

2025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및 제안설명

제2부

2025년도 나라살림

제3부

2025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기 능 Function	2024년도 예산 FY 2024 Budget	
	금 액 Amount	구성비(%) Composition
11. 산업 · 중소기업및에너지 (Industry & Small and Medium Enterprise & Energy)	11,777,607	2.6
1) 무역 및 투자유치(Trade & Investment Inducement)	893,430	0.2
2) 에너지 및 자원개발(Development of Energy & Resources)	6,350	0.0
3) 산업 · 중소기업일반(General Industry & Small and Medium Enterprise)	3,505,012	0.8
4) 산업혁신지원(Support for Industrial Innovation)	4,711,295	1.0
5) 창업 및 벤처(Start-up and Venture)	716,217	0.2
6)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육성(Small and Medium Enterprises Support )	1,945,303	0.4
12. 교통 및 물류 (Traffic and Physical Distribution )	18,110,013	4.0
1) 도로 (National Road)	5,186,230	1.2
2) 철도 (Railroad)	8,127,672	1.8
3) 해운 · 항만 (Marine Transportation & Ports)	1,828,267	0.4
4) 항공 · 공항 (Aviation & Airport)	921,227	0.2
5) 물류 등 기타 (Distribution & Others)	2,046,617	0.5
13. 통신 (Communication)	902,391	0.2
1) 방송통신 (Broadcasting and Communications)	251,489	0.1
2) 정보통신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650,902	0.1
14. 국토 및 지역개발 (Land & Regional Development)	9,087,625	2.0
1) 수자원 (Water Resources)	2,199,411	0.5
2) 지역 및 도시 (Region & City)	6,885,314	1.5
3) 산업단지 (Industrial Complex)	2,900	0.0
15. 과학기술 (Science & Technology)	7,747,517	1.7
1) 과학기술연구지원 (Support for Science & Technology Research)	3,247,169	0.7
2) 과학기술일반 (General Science & Technology)	629,021	0.1
3) 과학기술인력 및 문화 (Science and Technology - Human Resources and Culture)	125,025	0.0
4) 과학기술연구개발 (Science and Technology - Research Development)	3,746,302	0.8
16. 예비비 (Reserve Fund)	4,200,000	0.9
1) 예비비 (Reserve Fund)	4,200,000	0.9
합 계 (Total)	449,526,707	100.0

(단위: 백만원, In million won)

2025년도 예산 FY 2025 Budget		증 감 Change	
금 액 Amount	구성비(%) Composition	금 액 Amount	증감률(%) Rate
12,321,526	2.6	543,919	4.6
931,925	0.2	38,495	4.3
2,250	0.0	△4,100	△64.6
3,338,713	0.7	△166,299	△4.7
5,259,564	1.1	548,269	11.6
813,538	0.2	97,321	13.6
1,975,536	0.4	30,233	1.6
19,187,205	4.1	1,077,192	5.9
6,790,544	1.4	1,604,314	30.9
7,373,964	1.6	△753,708	△9.3
1,838,594	0.4	10,327	0.6
1,119,568	0.2	198,341	21.5
2,064,535	0.4	17,918	0.9
1,142,269	0.2	239,878	26.6
274,609	0.1	23,120	9.2
867,660	0.2	216,758	33.3
8,920,793	1.9	△166,832	△1.8
2,187,795	0.5	△11,616	△0.5
6,732,768	1.4	△152,546	△2.2
230	0.0	△2,670	△92.1
8,869,415	1.9	1,121,898	14.5
3,678,415	0.8	431,246	13.3
701,124	0.1	72,103	11.5
137,394	0.0	12,369	9.9
4,352,482	0.9	606,180	16.2
2,400,000	0.5	△1,800,000	△42.9
2,400,000	0.5	△1,800,000	△42.9
473,659,421	100.0	24,132,714	5.4

제1부

2025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및 제안설명

제2부

2025년도 나라살림

제3부

2025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 라. 성질별 세출예산 (Expenditure Budget by Functions)

구 분 Classification	2024년도 예산 FY 2024 Budget
100 인건비 (Personnel Expenses)	42,328,148
110 인건비 (Personnel Expenses)	42,328,148
200 물건비 (Goods Services)	25,416,336
210 운영비 (Office Operation)	20,484,675
220 여비 (Travel Expenses)	589,577
230 특수활동비 (Special Operation Expenses)	122,836
240 업무추진비 (Management Expenses)	174,744
250 직무수행경비 (Work Operation Expenses)	1,043,918
260 연구용역비 (Research and Service Expenses)	1,965,495
270 안보비 (National Security Expenses)	892,100
280 정보보안비(Intelligence Security Expenses)	142,990
300 이전지출 (Current Transfers)	261,604,311
310 보전금 (Compensation)	24,344,153
320 민간이전 (Transfers to Private Sector)	10,792,590
330 자치단체이전 (Transfers to Local Gov't)	198,699,241
340 해외이전 (Transfers to Abroad)	2,389,947
350 일반출연금 (General Funds)	7,969,016
360 연구개발출연금 (Research and Development Funds)	17,409,363
400 자산취득 (Asset Acquisition)	22,869,975
410 건설보상비 (Compensation Cost for Construction & Facilities)	346,104
420 건설비 (Construction & Facilities Assets)	7,046,862
430 유형자산 (Tangible Assets)	13,815,095
440 무형자산 (Intangible Assets)	30,497
460 출자금 (Investment)	1,631,416
500 상환지출 (Repayment of Loans)	18,361,215
510 상환지출 (Repayment of Loans)	18,361,215
600 전출금등 (Transfers)	74,744,631
610 전출금등 (Transfers and Others)	74,744,631
700 예비비 및 기타 (Contingency & Others)	4,202,091
710 예비비 및 기타 (Reserve Fund and Others)	4,202,091
합 계 (Total)	449,526,707

(단위: 백만원, In million won)

2025년도 예산 FY 2025 Budget	증 감 Change	
	금 액 Amount	증감율(%) Rate
44,078,931	1,750,783	4.1
44,078,931	1,750,783	4.1
25,499,316	82,980	0.3
20,637,953	153,278	0.7
619,243	29,665	5.0
97,808	△25,028	△20.4
179,194	4,450	2.5
996,824	△47,094	△4.5
1,881,302	△84,193	△4.3
929,000	36,900	4.1
157,992	15,002	10.5
270,481,680	8,877,369	3.4
25,012,378	668,224	2.7
11,102,543	309,953	2.9
204,126,495	5,427,253	2.7
2,562,525	172,578	7.2
7,892,755	△76,262	△1.0
19,784,985	2,375,622	13.6
22,735,503	△134,472	△0.6
428,248	82,144	23.7
6,802,915	△243,947	△3.5
13,416,527	△398,568	△2.9
31,049	551	1.8
2,056,764	425,348	26.1
29,091,646	10,730,431	58.4
29,091,646	10,730,431	58.4
79,370,863	4,626,232	6.2
79,370,863	4,626,232	6.2
2,401,482	△1,800,609	△42.9
2,401,482	△1,800,609	△42.9
473,659,421	24,132,714	5.4

제1부

2025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및 제안설명

제2부

2025년도 나라살림

제3부

2025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 마. 2025년도 세출예산 일반회계의 기능별 성질별 분류

구 분 Classification	인건비(100) Personnel Expense					
	계 Total	보수(110-01) Wages	기타직보수(110-02) Wages for Non-Public Officials	상용임금(110-03) Wages for Fixed-Term Contract Employees	일용임금(110-04) Wage for Daily Employees	연가보상비(110-05) Stipends for Non-Used Vacations
1. 일반 · 지방행정 (General & Local Administration)	3,892,989	3,429,331	83,505	273,427	80,970	25,755
2. 공공질서 및 안전 (Public Order and Safety)	16,108,034	15,407,593	176,882	400,376	14,449	108,734
3. 통일 · 외교 (National Unification & Foreign Affairs)	696,317	470,279	3,471	213,220	8,049	1,298
4. 국방 (National Defense)	18,920,879	18,352,377	22,565	333,851	5,885	206,200
5. 교육 (Education)	256,727	239,729	1,109	14,610	474	804
6. 문화 및 관광 (Culture & Tourism)	550,475	309,807	15,476	216,517	6,430	2,245
7. 환경 (Environmental Protection)	364	187	—	177	—	—
8. 사회복지 (Social Welfare)	1,073,255	747,446	135,481	165,956	18,546	5,826
9. 보건 (Health)	362,901	259,674	5,392	93,707	2,080	2,049
10. 농림수산 (Agriculture, Forestry, Maritime Affairs & Fisheries)	987,583	693,231	71,335	166,594	51,188	5,234
11. 산업 · 중소기업 및 에너지 (Industry & Small and Medium Enterprise & Energy)	263,637	233,694	14,122	12,013	2,231	1,577
12. 교통 및 물류 (Traffic and Physical Distribution)	560,552	470,072	64,490	16,865	5,678	3,446
13. 통신 (Communication)	106,596	95,044	8,121	2,422	270	740
14. 국토 및 지역개발 (Land & Regional Development)	45,486	36,267	359	8,499	67	294
15. 과학기술 (Science & Technology)	253,136	212,092	8,238	28,816	2,333	1,658
16. 예비비 (Reserve Fund)	—	—	—	—	—	—
합 계 (Total)	44,078,931	40,956,824	610,545	1,947,051	198,651	365,859

(단위: 백만원, In million won)

물건비(200) Goods Service	이전지출(300) Current Transfer	자산취득(400) Asset Acquisition	상환지출(500) Repayment of Loans	전출금등(600) Transfers	예비비및기타(700) Contingency & Others	합 계 Total
3,338,002	69,766,274	1,547,850	29,091,646	5,148,783	1,215	112,786,758
3,864,511	1,565,603	1,291,345	—	139,587	165	22,969,245
785,181	3,046,073	65,939	—	100,000	—	4,693,510
13,934,291	8,091,847	16,686,716	—	4,086,369	—	61,720,102
198,736	78,364,458	37,958	—	20,523,604	—	99,381,483
605,916	2,654,338	597,180	—	146,709	13	4,554,631
15,543	100,705	24,906	—	5,982,683	—	6,124,201
501,840	69,967,723	124,812	—	10,163,934	82	81,831,646
440,060	14,696,546	53,712	—	420,376	—	15,973,595
673,229	1,548,820	528,830	—	7,044,573	7	10,783,042
162,858	6,701,157	26,066	—	5,167,806	1	12,321,526
336,316	3,916,442	176,556	—	14,197,339	—	19,187,205
72,004	923,019	25,372	—	15,278	—	1,142,269
294,769	971,888	1,443,488	—	6,165,161	—	8,920,793
276,059	8,166,787	104,772	—	68,661	—	8,869,415
—	—	—	—	—	2,400,000	2,400,000
25,499,316	270,481,680	22,735,503	29,091,646	79,370,863	2,401,482	473,659,421

제1부

2025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및 제안설명

제2부

2025년도 나라살림

제3부

2025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 바. 2025년도 세출예산 일반회계의 성질별 기능별 분류

구 분 Classification	일반 · 지방행정 General & Local Administration	공공질서 및 안전 Public Order and Safety	외교 · 통일 Foreign Affairs & National Unification	국 방 National Defense	교 육 Education	문화 및 관광 Culture & Tourism
100 인건비 (Personnel Expenses)	3,892,989	16,108,034	696,317	18,920,879	256,727	550,475
110 보수 (Wages)	3,429,331	15,407,593	470,279	18,352,377	239,729	309,807
110 기타직보수 (Wages for non-public Officials)	83,505	176,882	3,471	22,565	1,109	15,476
110 상용임금 (Wages for fixed-term employees)	273,427	400,376	213,220	333,851	14,610	216,517
110 일용임금 (Daily wages)	80,970	14,449	8,049	5,885	474	6,430
110 연가보상비 (Stipends for Non-Used Vacation)	25,755	108,734	1,298	206,200	804	2,245
200 물건비 (Goods Services)	3,338,002	3,864,511	785,181	13,934,291	198,736	605,916
210 운영비 (Office Operation)	1,862,985	2,721,911	678,905	12,719,693	173,669	521,592
220 여비 (Travel Expenses)	163,872	112,801	64,117	159,600	5,861	15,128
230 특수활동비 (Special Operation Expenses)	13,822	81,126	2,513	—	—	—
240 업무추진비 (Management Expenses)	49,989	37,932	18,993	47,952	1,357	3,226
250 직무수행경비 (Work Operation Expenses)	124,471	799,082	2,425	38,154	1,079	2,553
260 연구용역비 (Research and Service Expenses)	193,863	100,019	18,228	828,194	16,770	63,416
270 안보비 (National Security Expenses)	929,000	—	—	—	—	—
280 정보보안비 (Intelligence Security Expenses)	—	11,640	—	140,698	—	—
300 이전지출 (Current Transfers)	69,766,274	1,565,603	3,046,073	8,091,847	78,364,458	2,654,338
310 보전금 (Compensation)	337,783	197,075	28,342	1,994,866	142,617	20,855
320 민간이전 (Transfers to Private Sector)	348,372	555,457	684,193	785,980	223,673	1,673,542

(단위: 백만원, In million won)

환 경 Environmental Protection	사회복지 Social Welfare	보 건 Health	농림수산 Agriculture, Forestry, Maritime Affairs & Fisheries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Industry & Small and Medium Enterprise & Energy	교통 및 물류 Traffic and Physical Distribution	통 신 Communication	국토 및 지역개발 National Land & Regional Development	과학기술 Science & Technology	예비비 Reserve Funds	합 계 Total
364	1,073,255	362,901	987,583	263,637	560,552	106,596	45,486	253,136	—	44,078,931
187	747,446	259,674	693,231	233,694	470,072	95,044	36,267	212,092	—	40,956,824
—	135,481	5,392	71,335	14,122	64,490	8,121	359	8,238	—	610,545
177	165,956	93,707	166,594	12,013	16,865	2,422	8,499	28,816	—	1,947,051
—	18,546	2,080	51,188	2,231	5,678	270	67	2,333	—	198,651
—	5,826	2,049	5,234	1,577	3,446	740	294	1,658	—	365,859
15,543	501,840	440,060	673,229	162,858	336,316	72,004	294,769	276,059	—	25,499,316
6,698	425,929	229,029	561,883	125,188	199,118	58,528	141,355	211,471	—	20,637,953
205	21,764	12,173	21,939	14,879	14,464	2,312	1,951	8,175	—	619,243
—	—	—	—	—	—	—	—	348	—	97,808
13	6,011	1,343	2,729	3,697	2,738	446	514	2,253	—	179,194
489	13,804	2,069	3,967	2,230	3,252	683	324	2,242	—	996,824
8,138	34,333	195,447	82,711	16,393	116,744	5,171	150,626	51,250	—	1,881,302
—	—	—	—	—	—	—	—	—	—	929,000
—	—	—	—	471	—	4,864	—	319	—	157,992
100,705	69,967,723	14,696,546	1,548,820	6,701,157	3,916,442	923,019	971,888	8,166,787	—	270,481,680
7	11,176,270	11,106,649	7,438	168	166	2	5	136	—	25,012,378
61,945	1,629,745	1,844,110	466,931	1,552,356	775,623	16,275	426,295	58,045	—	11,102,543

제1부

2025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및 제안설명

제2부

2025년도 나라살림

제3부

2025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구 분 Classification	일반 · 지방행정 General & Local Administration	공공질서 및 안전 Public Order and Safety	외교 · 통일 Foreign Affairs & National Unification	국 방 National Defense	교 육 Education	문화 및 관광 Culture & Tourism
330 자치단체이전 (Transfers to Local Gov't)	67,073,706	424,226	61,328	129,970	77,622,913	754,270
340 해외이전 (Transfers to Abroad)	429,732	11,382	907,723	638,146	101,857	10,228
350 일반출연금 (General Funds)	1,028,171	163,780	1,364,486	34,627	172,753	37,570
360 연구개발출연금 (Research and Development Funds)	548,511	213,682	—	4,508,258	100,644	157,873
400 자산취득 (Asset Acquisition)	1,547,850	1,291,345	65,939	16,686,716	37,958	597,180
410 건설보상비 (Compensation Cost for Construction & Facilities)	3,500	3,324	10,035	89,565	—	14,360
420 건설비 (Construction & Facilities Assets)	99,814	460,394	25,668	4,598,702	30,512	229,305
430 유형자산 (Tangible Assets)	250,308	815,215	29,513	11,996,949	7,426	57,603
440 무형자산 (Intangible Assets)	3,028	12,412	722	1,501	20	912
460 출자금 (Investment)	1,191,200	—	—	—	—	295,000
500 상환지출 (Repayment of Loans)	29,091,646	—	—	—	—	—
510 상환지출 (Repayment of Loans)	29,091,646	—	—	—	—	—
600 전출금 등 (Transfers)	5,148,783	139,587	100,000	4,086,369	20,523,604	146,709
610 전출금 등 (Transfers and Others)	5,148,783	139,587	100,000	4,086,369	20,523,604	146,709
700 예비비 및 기타 (Contingency & Others)	1,215	165	—	—	—	13
710 예비비 및 기타 (Reserve Fund and Others)	1,215	165	—	—	—	13
합 계 (Total)	112,786,758	22,969,245	4,693,510	61,720,102	99,381,483	4,554,631

(단위: 백만원, In million won)

환 경 Environmental Protection	사회복지 Social Welfare	보 건 Health	농림수산 Agriculture, Forestry, Maritime Affairs & Fisheries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Industry & Small and Medium Enterprise & Energy	교통 및 물류 Traffic and Physical Distribution	통 신 Communication	국토 및 지역개발 National Land & Regional Development	과학기술 Science & Technology	예비비 Reserve Funds	합 계 Total
6,088	56,415,182	516,676	556,939	24,495	64,469	—	476,232	—	—	204,126,495
1,845	66,613	34,596	310,201	7,839	8,982	5,665	3,128	24,587	—	2,562,525
30,820	679,914	108,170	36,804	1,360,525	2,475,877	273,306	66,228	59,724	—	7,892,755
—	—	1,086,346	170,506	3,755,774	591,325	627,771	—	8,024,295	—	19,784,985
24,906	124,812	53,712	528,830	26,066	176,556	25,372	1,443,488	104,772	—	22,735,503
—	1,594	—	75,776	—	—	—	230,044	50	—	428,248
4,311	97,126	14,912	326,542	20,096	76,098	805	735,641	82,989	—	6,802,915
20,596	22,098	37,854	119,866	5,093	22,727	3,161	6,640	21,478	—	13,416,527
—	3,994	945	1,645	878	4,330	406	—	255	—	31,049
—	—	—	5,000	—	73,400	21,000	471,164	—	—	2,056,764
—	—	—	—	—	—	—	—	—	—	29,091,646
—	—	—	—	—	—	—	—	—	—	29,091,646
5,982,683	10,163,934	420,376	7,044,573	5,167,806	14,197,339	15,278	6,165,161	68,661	—	79,370,863
5,982,683	10,163,934	420,376	7,044,573	5,167,806	14,197,339	15,278	6,165,161	68,661	—	79,370,863
—	82	—	7	1	—	—	—	—	2,400,000	2,401,482
—	82	—	7	1	—	—	—	—	2,400,000	2,401,482
6,124,201	81,831,646	15,973,595	10,783,042	12,321,526	19,187,205	1,142,269	8,920,793	8,869,415	2,400,000	473,659,421

제1부

2025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및 제안설명

제2부

2025년도 나라살림

제3부

2025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 03

# 특별회계규모 및 개요

## Special Accounts



회 계 별 Account	2024년도 본예산 FY 2024 Main Budget
(15) 농어촌구조개선 (Agriculture & Fisheries Structure Adjustment S/A)	15,511,557
(17) 교통시설 (Transportation Facilities S/A)	16,566,482
(18) 등기 (Registration S/A)	383,140
(20) 교도작업 (Prison Labor S/A)	120,529
(24) 에너지 및 자원사업 (Energy & Resources Project Management S/A)	6,471,155
(25) 환경개선 (Environment Improvement S/A)	7,047,573
(26) 소재부품장비경쟁력강화및공급망안정화 (Competitiveness Enhancement of Materials, Components and Equipments S/A)	2,168,117
(29) 우체국보험 (Postal Insurance Service S/A)	1,061,590
(34) 주한미군기지이전 (Relocation of Military Bases of U.S. Armed Forces in Korea S/A)	642,621
(35)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Construction of Administrative City S/A)	136,303
(36) 국방 · 군사시설이전(Relocation of National Defense and Military Installation S/A)	576,701
(37) 혁신도시건설 (Construction of Innovative City S/A)	585,906
(38)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 (Construction of Cultural Hub City of Asia S/A)	117,980
(39) 지역균형발전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S/A)	13,868,920
(40) 유아교육지원 (Early Childhood Education Support S/A)	3,232,168
(41) 고등 · 평생교육지원 (Higher-lifelong Education Support S/A)	15,792,267
(51) 양곡관리 (Grain Management S/A)	2,746,019
(52) 책임운영기관 (Agency)	1,275,336
(56) 조달 (Public Procurement S/A)	802,688
(57) 우편사업 (Postal Business S/A)	5,439,617
(58) 우체국예금 (Postal Office deposit S/A)	5,940,827
총계 (Gross Total of Special Accounts)	100,487,496
순계(회계간, 계정간거래 제외) (Net Total of Special Accounts)	91,000,962
순계(계정간거래 제외) (Net Total of Special Accounts)	96,106,587
순계(일반지출) (Net Total of Special Accounts)	81,740,619

(단위: 백만원, In million won)

2024년도 추경예산 FY 2024 Supplementary Budget	2025년도 예산 FY 2025 Budget	본예산대비 증감 Change		추경예산대비 증감 Change	
		금 액 Amount	증감율(%) Rate	금 액 Amount	증감율(%) Rate
15,511,557	15,017,289	△494,268	△3.2	△494,268	△3.2
16,566,482	15,557,181	△1,009,301	△6.1	△1,009,301	△6.1
383,140	278,574	△104,566	△27.3	△104,566	△27.3
120,529	123,680	3,151	2.6	3,151	2.6
6,471,155	6,305,822	△165,333	△2.6	△165,333	△2.6
7,047,573	7,346,834	299,261	4.2	299,261	4.2
2,168,117	2,284,287	116,170	5.4	116,170	5.4
1,061,590	1,105,924	44,334	4.2	44,334	4.2
642,621	572,137	△70,484	△11.0	△70,484	△11.0
136,303	220,483	84,180	61.8	84,180	61.8
576,701	1,500,274	923,573	160.1	923,573	160.1
585,906	204,936	△380,970	△65.0	△380,970	△65.0
117,980	120,079	2,099	1.8	2,099	1.8
13,868,920	14,744,002	875,082	6.3	875,082	6.3
3,232,168	3,102,013	△130,155	△4.0	△130,155	△4.0
15,792,267	16,663,592	871,325	5.5	871,325	5.5
2,746,019	2,792,542	46,523	1.7	46,523	1.7
1,275,336	1,267,739	△7,597	△0.6	△7,597	△0.6
802,688	737,698	△64,990	△8.1	△64,990	△8.1
5,439,617	5,378,351	△61,266	△1.1	△61,266	△1.1
5,940,827	5,786,760	△154,067	△2.6	△154,067	△2.6
100,487,496	101,110,197	622,701	0.6	622,701	0.6
91,000,962	91,683,729	682,767	0.8	682,767	0.8
96,106,587	97,936,709	1,830,122	1.9	1,830,122	1.9
81,740,619	82,087,699	347,080	0.4	347,080	0.4

04

계속비

Multiyear Expenditure

(단위: 천원)

회계 및 소관	사    항	금    액		
		2024예산	2025예산	증    감
-	-	-	-	-

05

명시이월비  
Authorized Carryover Expenses



(단위: 천원)

회계 및 소관	사    항	금    액		
		2024예산	2025예산	증    감
-	-	-	-	-

제1부

2025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및 제안설명

제2부

2025년도 나라살림

제3부

2025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06

국고채무부담행위  
Debts from National Treasury



(단위: 천원)

회계 및 소관	사    항	금    액		
		2024예산	2025예산	증    감
-	-	-	-	-

## 제 2 장

#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1. 기금요약
2. 기금운용규모 및 조성규모
3. 기금 수입
4. 기금 지출



2025

나라살림 「예산개요」

## 01

# 기금요약

## Summary of Funds



구 분 Classification	기 금 명 Name of Fund
사회보험성기금 Social Security Fund (6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고용보험기금 (Employment Insurance Fund)</li> <li>공무원연금기금 (Government Employees Pension Fund)</li> <li>국민연금기금 (National Pension Fund)</li> <li>군인연금기금 (Military Pension Fund)</li> <li>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Teacher's pension fund)</li> <li>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Industrial Worker's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nd Prevention Fund)</li> </ul>
계정성기금 Account Fund (5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공자금관리기금 (Public Capital Management Fund)</li> <li>공적자금상환기금 (Public Fund Repayment Fund)</li> <li>복권기금 (Lottery Fund)</li> <li>양곡증권정리기금 (Food Grain Stock Consolidating Fund)</li> <li>외국환평형기금 (Foreign Exchange Equalization Fund)</li> </ul>
금융성기금 Financial Fund (8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술보증기금 (Korea Technology Guarantee Fund)</li> <li>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Credit Guarantee Fund for Farmers and Fishermen)</li> <li>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Saving Encouragement Fund for Property of Agricultural &amp; Fishing Houses)</li> <li>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Korea Infrastructure Credit Guarantee Fund)</li> <li>무역보험기금 (Trade Insurance Fund)</li> <li>신용보증기금 (Korea Credit Guarantee Fund)</li> <li>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Deposit Insurance Fund Bond Redemption Fund)</li> <li>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Housing Finance Credit Guarantee Fund)</li> </ul>
사업성기금 Project Fund (48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과학기술진흥기금 (Science and Technology Promotion Fund)</li> <li>관광진흥개발기금 (Tourism Promotion and Development Fund)</li> <li>국가유산보호기금 (National Heritage Preservation Fund)</li> <li>국민건강증진기금 (National Health Promotion Fund)</li> <li>국민체육진흥기금 (National Sports Promotion Fund)</li> <li>국유재산관리기금 (Government Properties Management Fund)</li> <li>국제교류기금 (Fund for International Exchanges)</li> <li>군인복지기금 (Military Welfare Fund)</li> <li>근로복지진흥기금 (Labour Welfare Promotion Fund)</li> <li>금강수계관리기금 (Fund for Management of Geum River)</li> </ul>

구 분 Classification	기 금 명 Name of Fund
사업성기금 Project Fund (48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후대응기금 (Korea Climate Action Fund)</li> <li>- 낙동강수계관리기금 (Fund for Management of Nakdong River)</li> <li>- 남북협력기금 (Inter-Korean Cooperation Fund)</li> <li>- 농산물가격안정기금 (Fund for Agricultural Marketing &amp; Price Stabilization)</li> <li>-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 (Agricultural and Fishery Disaster Re-insurance Fund)</li> <li>- 농업·농촌공익기능증진직접지불기금 (Direct Payment Fund for the Promotion of Public Functions of Agriculture and Rural Communities)</li> <li>- 농지관리기금 (Farmland Management Fund)</li> <li>- 대외경제협력기금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li> <li>- 문화예술진흥기금 (Culture and Arts Promotion Fund)</li> <li>-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Radioactive Waste Management Fund)</li> <li>- 방송통신발전기금 (Broadcasting &amp; Communications Development Fund)</li> <li>- 범죄피해자보호기금 (Crime Victim Protection Fund)</li> <li>- 보훈기금 (Patriots and Veterans Fund)</li> <li>- 사법서비스진흥기금 (Judicial Service Promotion Fund)</li> <li>- 사학진흥기금 (Fund for the Promotion of Private School)</li> <li>- 산업기술진흥및사업화촉진기금 (Fund for Promotion of Development and Commercialization of Industrial Technology)</li> <li>- 석면피해구제기금 (Asbestos Damage Relief Fund)</li> <li>-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Micro Enterprise &amp; Market Promotion Fund)</li> <li>- 수산발전기금 (Fisheries Development Fund)</li> <li>-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 (Fund for the Patriotic Martyrs and Patriots)</li> <li>- 언론진흥기금 (Korea Press Fund)</li> <li>- 양성평등기금 (Gender Equality Fund)</li> <li>-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기금 (Fund for Management of Yeongsan and Seomjin River)</li> <li>- 영화발전기금 (Korean Film Development Fund)</li> <li>- 원자력기금 (Atomic Energy Fund)</li> <li>- 응급의료기금 (Emergency Medical Service Fund)</li> <li>- 임금채권보장기금 (Wage Claim Guarantee Fund)</li> <li>- 자동차사고피해지원기금 (Auto Accident Victim Support Fund)</li> <li>-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 (Agricultural Fund for Performance of Free Trade Agreement)</li> <li>-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 (The Fund for Employment Promotion and Vocational Rehabilitation for the Disabled)</li> <li>- 전력산업기반기금 (Electrical Industry Foundation Fund)</li> <li>- 정보통신진흥기금 (Information Technology Promotion Fund)</li> <li>- 주택도시기금 (National Housing &amp; Urban Fund)</li> <li>- 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 (Small &amp; Medium Enterprise's Start-up and Promotion Fund)</li> <li>- 지역신문발전기금 (Local Press Development Fund)</li> <li>- 청소년육성기금 (Youth Fostering Fund)</li> <li>- 축산발전기금 (Livestock Development Fund)</li> <li>- 한강수계관리기금 (Fund for Management of Han River)</li> </ul>
합 계	총 67개 기금

02

기금운용규모 및 조성규모  
Size of Fund Management



(단위: 조원, In trillion won)

구 분 Classification		운용규모 Fund Operation		
		2024년도 FY 2024	2025년도 FY 2025	증감률(%) Rate
운용규모 (Total)		1,023.3	955.0	△6.7
수 입	■ 자체수입 (Self-generated Revenues)	231.8	247.0	6.6
	■ 정부내부수입 (Inter-government Revenues)	287.9	208.0	△27.8
	■ 차입금 (Borrowings)	198.7	237.7	19.6
	■ 여유자금회수 등 (Surplus Asset Collection)	305.0	262.2	△14.0
지 출	■ 사업비 (Project Cost)	199.2	205.4	3.1
	• 사회보험성 (Social Security Fund)	105.9	114.9	8.5
	• 사업성 (Project Fund)	78.0	76.2	△2.3
	• 금융성 · 계정성 (Financial/Account Fund)	15.3	14.2	△7.2
	■ 기금운영비 (Fund operation)	2.7	2.7	—
	■ 정부내부지출등 (Inter-government Expenditures)	507.9	449.0	△11.6
	■ 여유자금운용 (Surplus Asset Management)	313.5	298.0	△4.9

제1부

2025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및 제안설명

제2부

2025년도 나라살림

제3부

2025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 03 기금 수입

## Fund Revenues



(단위: 억원, In hundred million won)

기금명 Name of Fund	자체수입 Self-generated Revenues	정부내부 수입 Inter-government Revenues	차입금 Borrowings	여유자금 회수 등 Surplus Asset Collection	합 계 Total
총 계 (Total)	2,470,492	2,080,355	2,377,317	2,622,009	9,550,172
고용보험기금 [Employment Insurance Fund]	213,068	5,500	—	58,387	276,955
공공자금관리기금 [Public Capital Management Fund]	5,824	1,065,099	1,975,525	1,852	3,048,300
공무원연금기금 [Government Employees Pension Fund]	231,365	71,889	—	34,483	337,737
공적자금상환기금 [Public Fund Repayment Fund]	38,198	26,186	—	—	64,384
과학기술진흥기금 [Science and Technology Promotion Fund]	57	1,374	—	555	1,986
관광진흥개발기금 [Tourism Promotion and Development Fund]	13,641	75	—	3,426	17,142
국가유산보호기금 [National Heritage Preservation Fund]	109	1,530	—	51	1,690
국민건강증진기금 [National Health Promotion Fund]	32,517	10,585	—	2,304	45,405
국민연금기금 [National Pension Fund]	957,922	113	—	817,660	1,775,695
국민체육진흥기금 [National Sports Promotion Fund]	23,619	4,941	—	1,811	30,372
국유재산관리기금 [Government Properties Management Fund]	20,429	9,783	—	4,608	34,820
국제교류기금 [Fund for International Exchanges]	597	3	—	459	1,059
군인복지기금 [Military Welfare Fund]	5,326	681	—	4,111	10,118
군인연금기금 [Military Pension Fund]	8,531	37,021	—	500	46,052
근로복지진흥기금 [Labour Welfare Promotion Fund]	2,092	1,448	—	2,122	5,661

(단위: 억원, In hundred million won)

기금명 Name of Fund	자체수입 Self-generated Revenues	정부내부 수입 Inter-government Revenues	차입금 Borrowings	여유자금 회수 등 Surplus Asset Collection	합 계 Total
금강수계관리기금 (Fund for Management of Geum River)	1,337	—	—	571	1,908
기술보증기금 (Korea Technology Guarantee Fund)	14,654	466	—	17,960	33,080
기후대응기금 (Korea Climate Action Fund)	3,630	22,587	—	—	26,217
낙동강수계관리기금 (Fund for Management of Nakdong River)	2,366	—	—	10	2,376
남북협력기금 (Inter-Korean Cooperation Fund)	439	13,119	—	881	14,438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Credit Guarantee Fund for Farmers and Fishermen)	4,777	1,500	—	16,374	22,651
농산물가격안정기금 (Fund for Agricultural Marketing & Price Stabilization)	23,608	—	—	2,370	25,978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Saving Encouragement Fund for Property of Agricultural & Fishing Houses)	244	241	—	25	511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 (Agricultural and Fishery Disaster Re-insurance Fund)	1,561	—	—	2,498	4,059
농업·농촌공익기능증진직접지불기금 (Direct Payment Fund for the Promotion of Public Functions of Agriculture and Rural Communities)	71	29,872	—	1,102	31,045
농지관리기금 (Farmland Management Fund)	13,924	7,111	—	2,254	23,289
대외경제협력기금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3,541	19,513	—	473	23,527
무역보험기금 (Trade Insurance Fund)	12,386	800	—	44,621	57,807
문화예술진흥기금 (Culture and Arts Promotion Fund)	937	3,977	—	863	5,777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Radioactive Waste Management Fund)	11,249	39,725	—	53,088	104,062
방송통신발전기금 (Broadcasting & Communications Development Fund)	6,388	1,773	—	544	8,705
범죄피해자보호기금 (Crime Victim Protection Fund)	56	888	—	505	1,449
보훈기금 (Patriots and Veterans Fund)	1,969	1,451	—	3,541	6,962

제1부

2025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및 제안설명

제2부

2025년도 나라살림

제3부

2025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단위: 억원, In hundred million won)

기금명 Name of Fund	자체수입 Self-generated Revenues	정부내부 수입 Inter-government Revenues	차입금 Borrowings	여유자금 회수 등 Surplus Asset Collection	합 계 Total
복권기금 (Lottery Fund)	77,645	2,205	—	8,834	88,685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Teacher's pension fund)	73,440	9,693	—	54,000	137,133
사법서비스진흥기금 (Judicial Service Promotion Fund)	2,308	310	—	1,285	3,903
사학진흥기금 (Fund for the Promotion of Private School)	1,763	3,573	—	315	5,650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Korea Infrastructure Credit Guarantee Fund)	385	100	—	7,534	8,019
산업기술진흥및사업화촉진기금 (Fund for Promotion of Development and Commercialization of Industrial Technology)	616	1,148	—	588	2,352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Industrial Worker's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nd Prevention Fund)	111,858	50,836	—	71,487	234,181
석면피해구제기금 (Asbestos Damage Relief Fund)	383	120	—	120	623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Micro Enterprise & Market Promotion Fund)	37,347	33,513	—	—	70,860
수산발전기금 (Fisheries Development Fund)	6,890	1,000	—	314	8,204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 (Fund for the Patriotic Martyrs and Patriots)	88	926	—	478	1,491
신용보증기금 (Korea Credit Guarantee Fund)	33,832	—	—	81,294	115,125
양곡증권정리기금 (Food Grain Stock Consolidating Fund)	3	5,309	—	197	5,509
양성평등기금 (Gender Equality Fund)	188	7,769	—	453	8,410
언론진흥기금 (Korea Press Fund)	305	—	—	203	508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기금 (Fund for Management of Yeongsan and Seomjin River)	995	—	—	703	1,697
영화발전기금 (Korean Film Development Fund)	26	645	—	266	937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Deposit Insurance Fund Bond Redemption Fund)	35,302	—	—	12,194	47,496

(단위: 억원, In hundred million won)

기금명 Name of Fund	자체수입 Self-generated Revenues	정부내부 수입 Inter-government Revenues	차입금 Borrowings	여유자금 회수 등 Surplus Asset Collection	합 계 Total
외국환평형기금 (Foreign Exchange Equalization Fund)	19,595	380,663	216,560	786,076	1,402,894
원자력기금 (Atomic Energy Fund)	3,830	—	—	2,602	6,432
응급의료기금 (Emergency Medical Service Fund)	3,182	3,019	—	200	6,401
임금채권보장기금 (Wage Claim Guarantee Fund)	7,257	1,076	—	809	9,142
자동차사고피해지원기금 (Auto Accident Victim Support Fund)	474	1,553	—	564	2,592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 (Agricultural Fund for Performance of Free Trade Agreement)	3,416	—	—	1,410	4,826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 (The Fund for Employment Promotion and Vocational Rehabilitation for the Disabled)	9,635	7,194	—	5,001	21,829
전력산업기반기금 (Electrical Industry Foundation Fund)	30,625	1,027	—	7,100	38,752
정보통신진흥기금 (Information Technology Promotion Fund)	6,103	2,879	—	1,028	10,010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Housing Finance Credit Guarantee Fund)	21,178	—	—	26,913	48,092
주택도시기금 (National Housing & Urban Fund)	259,014	165,689	140,000	469,212	1,033,915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Small & Medium Enterprise's Start-up and Promotion Fund)	54,867	15,406	45,232	90	115,595
지역신문발전기금 (Local Press Development Fund)	5	85	—	10	100
청소년육성기금 (Youth Fostering Fund)	110	1,513	—	91	1,714
축산발전기금 (Livestock Development Fund)	6,349	3,855	—	50	10,254
한강수계관리기금 (Fund for Management of Han River)	5,049	—	—	577	5,626

## 04

기금 지출  
Fund Expenditures

(단위: 억원, In hundred million won)

기금명 Name of Fund	사업비 Project Cost	기금운영비 Fund operation	정부내부 지출 등 Inter-government Expenditures	여유자금 운용 Surplus Asset Management	합 계 Total
총 계 (Total)	2,053,675	27,190	4,489,732	2,979,575	9,550,172
고용보험기금 (Employment Insurance Fund)	176,888	1,178	15,048	83,842	276,955
공공자금관리기금 (Public Capital Management Fund)	111	32	3,047,265	892	3,048,300
공무원연금기금 (Government Employees Pension Fund)	281,871	656	659	54,550	337,737
공적자금상환기금 (Public Fund Repayment Fund)	—	1	64,360	23	64,384
과학기술진흥기금 (Science and Technology Promotion Fund)	996	7	49	935	1,986
관광진흥개발기금 (Tourism Promotion and Development Fund)	10,687	6	2,025	4,423	17,142
국가유산보호기금 (National Heritage Preservation Fund)	1,433	1	138	117	1,690
국민건강증진기금 (National Health Promotion Fund)	35,348	1	7,491	2,565	45,405
국민연금기금 (National Pension Fund)	487,370	5,535	—	1,282,790	1,775,695
국민체육진흥기금 (National Sports Promotion Fund)	16,388	312	7,756	5,916	30,372
국유재산관리기금 (Government Properties Management Fund)	10,826	27	13,500	10,467	34,820
국제교류기금 (Fund for International Exchanges)	424	147	197	292	1,059
군인복지기금 (Military Welfare Fund)	5,639	—	1,715	2,764	10,118
군인연금기금 (Military Pension Fund)	43,819	4	—	2,229	46,052

(단위: 억원, In hundred million won)

기금명 Name of Fund	사업비 Project Cost	기금운영비 Fund operation	정부내부 지출 등 Inter-government Expenditures	여유자금 운용 Surplus Asset Management	합 계 Total
근로복지진흥기금 (Labour Welfare Promotion Fund)	1,844	160	1,147	2,510	5,661
금강수계관리기금 (Fund for Management of Geum River)	1,197	26	—	685	1,908
기술보증기금 (Korea Technology Guarantee Fund)	16,173	2,265	—	14,642	33,080
기후대응기금 (Korea Climate Action Fund)	23,226	27	500	2,464	26,217
낙동강수계관리기금 (Fund for Management of Nakdong River)	2,210	39	—	128	2,376
남북협력기금 (Inter-Korean Cooperation Fund)	7,981	27	5,487	943	14,438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Credit Guarantee Fund for Farmers and Fishermen)	4,640	573	—	17,439	22,651
농산물가격안정기금 (Fund for Agricultural Marketing & Price Stabilization)	21,303	593	159	3,923	25,978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Saving Encouragement Fund for Property of Agricultural & Fishing Houses)	501	—	—	10	511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 (Agricultural and Fishery Disaster Re-insurance Fund)	500	6	—	3,553	4,059
농업농촌공익기능증진직접지불기금 (Direct Payment Fund for the Promotion of Public Functions of Agriculture and Rural Communities)	29,949	2	—	1,094	31,045
농지관리기금 (Farmland Management Fund)	17,621	644	2,000	3,024	23,289
대외경제협력기금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22,098	268	871	291	23,527
무역보험기금 (Trade Insurance Fund)	5,284	1,314	—	51,209	57,807
문화예술진흥기금 (Culture and Arts Promotion Fund)	4,360	214	223	981	5,777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Radioactive Waste Management Fund)	1,975	15	40,163	61,909	104,062
방송통신발전기금 (Broadcasting & Communications Development Fund)	7,279	41	461	924	8,705
범죄피해자보호기금 (Crime Victim Protection Fund)	945	—	22	480	1,449

(단위: 억원, In hundred million won)

기금명 Name of Fund	사업비 Project Cost	기금운영비 Fund operation	정부내부 지출 등 Inter-government Expenditures	여유자금 운용 Surplus Asset Management	합 계 Total
보훈기금 (Patriots and Veterans Fund)	1,160	8	905	4,888	6,962
복권기금 (Lottery Fund)	54,872	7	25,399	8,407	88,685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Teacher's pension fund)	63,694	316	499	72,624	137,133
사법서비스진흥기금 (Judicial Service Promotion Fund)	1,045	1	300	2,557	3,903
사학진흥기금 (Fund for the Promotion of Private School)	3,698	80	1,626	246	5,650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Korea Infrastructure Credit Guarantee Fund)	1,143	89	—	6,787	8,019
산업기술진흥 및 사업확충진기금 (Fund for Promotion of Development and Commercialization of Industrial Technology)	1,409	12	558	374	2,352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Industrial Worker's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nd Prevention Fund)	95,695	4,481	48,500	85,505	234,181
석면피해구제기금 (Asbestos Damage Relief Fund)	462	19	—	142	623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Micro Enterprise & Market Promotion Fund)	53,213	612	17,035	—	70,860
수산물발전기금 (Fisheries Development Fund)	7,949	7	51	197	8,204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 (Fund for the Patriotic Martyrs and Patriots)	1,009	1	—	481	1,491
신용보증기금 (Korea Credit Guarantee Fund)	44,119	3,742	—	67,264	115,125
양곡증권정리기금 (Food Grain Stock Consolidating Fund)	—	—	5,249	260	5,509
양성평등기금 (Gender Equality Fund)	7,769	—	260	381	8,410
언론진흥기금 (Korea Press Fund)	209	2	85	212	508
영산강 · 섬진강수계관리기금 (Fund for Management of Yeongsan and Seomjin River)	883	18	—	796	1,697
영화발전기금 (Korean Film Development Fund)	562	126	—	249	937

(단위: 억원, In hundred million won)

기금명 Name of Fund	사업비 Project Cost	기금운영비 Fund operation	정부내부 지출 등 Inter-government Expenditures	여유자금 운용 Surplus Asset Management	합 계 Total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Deposit Insurance Fund Bond Redemption Fund)	27	31	38,000	9,438	47,496
외국환평형기금 (Foreign Exchange Equalization Fund)	—	14	585,609	817,271	1,402,894
원자력기금 (Atomic Energy Fund)	3,191	13	122	3,106	6,432
응급의료기금 (Emergency Medical Service Fund)	2,973	2	3,151	274	6,401
임금채권보장기금 (Wage Claim Guarantee Fund)	6,115	169	10	2,848	9,142
자동차사고피해지원기금 (Auto Accident Victim Support Fund)	553	3	1,500	535	2,592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 (Agricultural Fund for Performance of Free Trade Agreement)	2,872	17	—	1,937	4,826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 (The Fund for Employment Promotion and Vocational Rehabilitation for the Disabled)	8,513	859	7,000	5,457	21,829
전력산업기반기금 (Electrical Industry Foundation Fund)	20,006	77	15,426	3,241	38,752
정보통신진흥기금 (Information Technology Promotion Fund)	8,255	236	1,070	449	10,010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Housing Finance Credit Guarantee Fund)	15,482	596	—	32,013	48,092
주택도시기금 (National Housing & Urban Fund)	337,066	3	464,828	232,018	1,033,915
중소벤처기업창업및진흥기금 (Small & Medium Enterprise's Start-up and Promotion Fund)	53,352	1,416	60,826	—	115,595
지역신문발전기금 (Local Press Development Fund)	83	6	—	12	100
청소년육성기금 (Youth Fostering Fund)	1,554	—	80	79	1,714
축산발전기금 (Livestock Development Fund)	9,071	19	408	757	10,254
한강수계관리기금 (Fund for Management of Han River)	4,784	87	—	754	5,626

제1부

2025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및 제안설명

제2부

2025년도 나라살림

제3부

2025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2025

나라살림 「예산개요」

별첨

## 작성자 및 편집자 명단



2025

나라살림 「예산개요」

## 작성자 및 편집자 명단



성명	소속 및 직급	작성 부분
박환조	예산관리과 과장	종합 편집
정혁주	예산관리과 사무관	"
고병국	예산관리과 사무관	"
최인선	예산관리과 주무관	"
최진광	지역활성화 투자팀 팀장	제2부 제3장 일반·지방행정 분야
정희진	지역활성화 투자팀 사무관	"
임유민	지역활성화 투자팀 사무관	"
황보환	지역활성화 투자팀 사무관	"
계강훈	예산총괄과 과장	제2부 제1장 2025년도 나라살림 종합
원선재	예산총괄과 서기관	"
이한결	예산총괄과 사무관	"
허정태	예산총괄과 사무관	"
송준식	예산총괄과 사무관	"
손장식	예산총괄과 사무관	"
곽정환	예산총괄과 사무관	"
이태왕	예산총괄과 사무관	"
전수민	예산총괄과 사무관	제3부 중 예산통계
이영임	예산총괄과 주무관	"
홍주연	예산총괄과 주무관	"
허장범	예산총괄과 주무관	"
김상우	예산총괄과 주무관	"
김동현	예산총괄과 주무관	"
김경국	예산정책과 과장	제2부 제1장 2025년도 나라살림 종합, 제2부 제2장 2025년도 재원배분 방향, 주요 분야별 재원배분
신경아	예산정책과 서기관	"
하치승	예산정책과 사무관	"
이상헌	예산정책과 사무관	"
유다빈	예산정책과 사무관	"
남동현	예산정책과 사무관	"
윤동형	예산정책과 주무관	"

성명	소속 및 직급	작성 부분
김현아	예산정책과 주무관	"
황희정	예산기준과 과장	제2부 제2장 중점추진과제
최창선	예산기준과 사무관	"
김재영	예산기준과 사무관	"
이재학	예산기준과 사무관	"
권민상	예산기준과 사무관	"
최 항	예산기준과 주무관	"
이재우	재정시스템개선팀 팀장	"
문강기	재정시스템개선팀 주무관	"
이근우	기금운용계획과 과장	제3부 제2장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기금통계
박재현	기금운용계획과 사무관	"
김준성	기금운용계획과 사무관	"
이도희	기금운용계획과 사무관	"
조상우	기금운용계획과 주무관	"
이원종	기금운용계획과 주무관	"
김정애	고용예산과 과장	제2부 제3장 일자리 분야
이정혁	고용예산과 사무관	"
김범석	고용예산과 사무관	"
심정민	고용예산과 사무관	"
문정민	고용예산과 사무관	"
진선홍	고용예산과 주무관	"
현민섭	고용예산과 주무관	"
권재관	교육예산과 과장	제2부 제3장 교육 분야
권혁순	교육예산과 사무관	"
남기인	교육예산과 사무관	"
이정훈	교육예산과 사무관	"
이진영	교육예산과 사무관	"
배희정	교육예산과 주무관	"
김현록	교육예산과 주무관	"
문상호	문화예산과 과장	제2부 제3장 문화·체육·관광분야
안재영	문화예산과 사무관	"
박진영	문화예산과 사무관	"
서지연	문화예산과 사무관	"
한연지	문화예산과 사무관	"
최진경	문화예산과 주무관	"
김소연	문화예산과 주무관	"
이민호	기후환경예산과 과장	제2부 제3장 환경 분야
강준이	기후환경예산과 사무관	"

성명	소속 및 직급	작성 부분
이동각	기후환경예산과 사무관	"
엄지원	기후환경예산과 사무관	"
이혜인	기후환경예산과 주무관	"
강준모	국토교통예산과 과장	제2부 제3장 SOC분야
김지수	국토교통예산과 서기관	"
박근형	국토교통예산과 사무관	"
강도영	국토교통예산과 사무관	"
김윤희	국토교통예산과 사무관	"
최나은	국토교통예산과 사무관	"
고동성	국토교통예산과 주무관	"
박정민	산업중소벤처예산과 과장	제2부 제3장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
구정대	산업중소벤처예산과 서기관	"
김기문	산업중소벤처예산과 사무관	"
신지호	산업중소벤처예산과 사무관	"
김유현	산업중소벤처예산과 사무관	"
조래혁	산업중소벤처예산과 주무관	"
임종찬	산업중소벤처예산과 주무관	"
조규산	농림해양예산과 과장	제2부 제3장 농림·수산·식품분야
이홍섭	농림해양예산과 사무관	"
고영록	농림해양예산과 사무관	"
황지은	농림해양예산과 사무관	"
심민준	농림해양예산과 사무관	"
최규원	농림해양예산과 사무관	"
이재현	농림해양예산과 주무관	"
최성호	농림해양예산과 주무관	"
이혜림	연구개발예산과 과장	제2부 제3장 R&D분야
이상후	연구개발예산과 사무관	"
박준영	연구개발예산과 사무관	"
이승민	연구개발예산과 사무관	"
조승호	연구개발예산과 사무관	"
김혜진	연구개발예산과 주무관	"
김승하	연구개발예산과 주무관	"
김혜영	정보통신예산과 과장	제2부 제2장 중점추진과제
노영래	정보통신예산과 사무관	"
김영수	정보통신예산과 사무관	"
김도희	정보통신예산과 사무관	"
이정학	정보통신예산과 주무관	"
조효숙	정보통신예산과 주무관	"

성명	소속 및 직급	작성 부분
강경표	복지예산과 과장	제2부 제3장 보건·복지 분야
정민철	복지예산과 사무관	"
고광민	복지예산과 사무관	"
송옥현	복지예산과 사무관	"
최지애	복지예산과 사무관	"
정성구	복지예산과 주무관	"
신반야	복지예산과 주무관	"
강미자	연금보건예산과 과장	제2부 제2장 중점추진과제
박민정	연금보건예산과 서기관	"
유동석	연금보건예산과 사무관	"
박재석	연금보건예산과 사무관	"
김현후	연금보건예산과 주무관	"
정성원	연금보건예산과 주무관	"
노판열	지역예산과 과장	제2부 제2장 중점추진과제
오성태	지역예산과 사무관	"
손우성	지역예산과 사무관	"
권준수	지역예산과 사무관	"
장일영	지역예산과 주무관	"
정 원	안전예산과 과장	"
주병욱	안전예산과 사무관	"
박준수	안전예산과 사무관	"
이영광	안전예산과 사무관	"
유석찬	안전예산과 주무관	"
최용호	법사예산과 과장	제2부 제3장 공공질서·안전 분야
이국희	법사예산과 사무관	"
김성용	법사예산과 사무관	"
안승현	법사예산과 사무관	"
김동훈	법사예산과 사무관	"
노은실	법사예산과 주무관	"
범진완	행정예산과 과장	제2부 제3장 외교·통일분야, 일반·지방행정 분야
이재철	행정예산과 사무관	"
이정은	행정예산과 사무관	"
배준혜	행정예산과 사무관	"
김시형	행정예산과 사무관	"
윤성경	행정예산과 주무관	"
공귀환	행정예산과 주무관	"
신명석	지방재정팀 팀장	제2부 제2장 중점추진과제
오병훈	지방재정팀 사무관	"

성명	소속 및 직급	작성 부분
박병국	지방재정팀 주무관	
권기정	국방예산과 과장	제2부 제3장 국방분야
유동훈	국방예산과 서기관	"
정채환	국방예산과 사무관	"
한현철	국방예산과 사무관	"
최동혁	국방예산과 사무관	"
최재영	국방예산과 주무관	"
임대한	방위사업예산과 과장	제2부 제2장 중점추진과제
김재오	방위사업예산과 사무관	"
이주찬	방위사업예산과 사무관	"
최현규	방위사업예산과 사무관	"
김광일	방위사업예산과 주무관	"

- 예산개요의 내용 중 의문이 있거나 의견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 예산실 예산관리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개요는 기획재정부 홈페이지([www.moef.go.kr](http://www.moef.go.kr))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

## 2025 나라살림 예산개요

---

- 발간등록번호 11-1051000-000020-10
- 발 행 처 기획재정부
- 발 행 인 기획재정부 예산실 예산관리과
- 발 행 일 2025년 2월
- 연 락 처 Tel. 044-215-7192  
Fax. 044-215-8041